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202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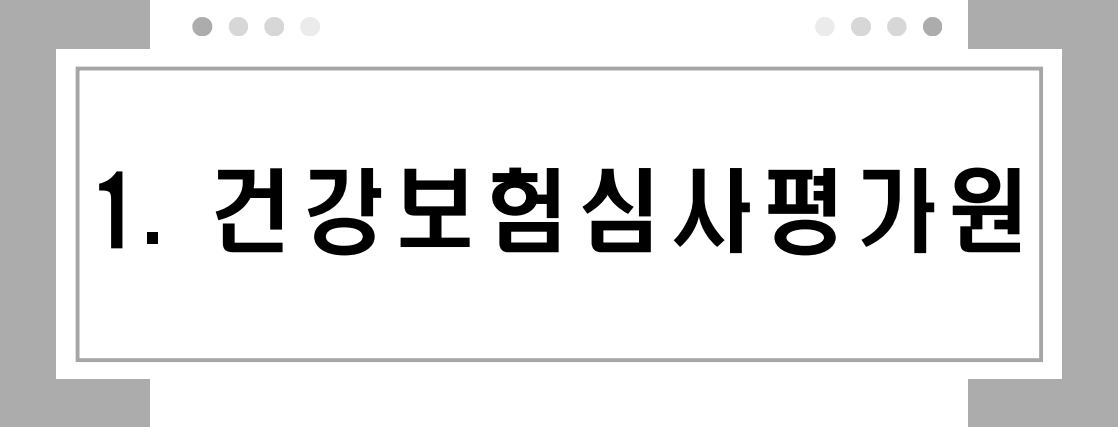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목 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3
3. 국민건강보험공단	39
4. 국민연금공단	61
5. 국립암센터	83
6. 국립중앙의료원	99
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19
8. 대한적십자사	135
9. 아동권리보장원	151
1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65
1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77
1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89
13. 한국공공조직은행	209
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23

목 차

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35
16.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57
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71
1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97
1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09
20. 한국보건의료정보원	327
2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51
2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73
23.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389
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09
25.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27
26. 한국장기조직기증원	445
27. 한국장애인개발원	463
28. 한국한의학진흥원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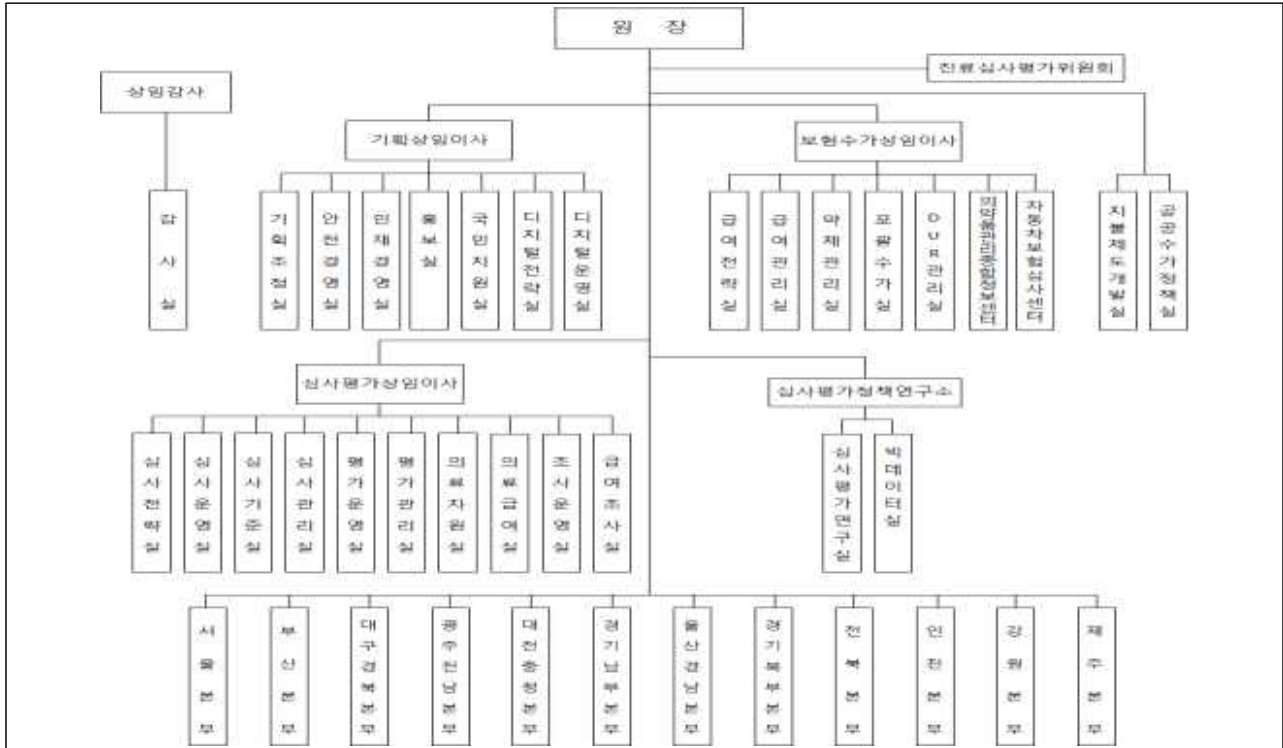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gray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brackets, there are two horizontal rows of four small gray dots each, positioned above and below the central text box.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 29실 1연구소 12본부 139부



2 인원 현황('26.1.1. 기준)

(단위: 명)

구분	직급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직	운영직	전문직
합계	정원	3,976	5	37	133	487	1,380	1,004	264	152	455	59
	현원	3,819.50	3	43	152	497.25	1,490.75	908.75	185	120.25	398.50	21
본원	정원	3,142	5	27	104	402	1,018	697	223	152	455	59
	현원	3,011	3	34	127	423.50	981.50	819	179	119.25	312.75	12
본부	정원	834	-	10	29	85	362	307	41	-	-	-
	현원	808.50	-	9	25	73.75	509.25	89.75	6	1	85.75	9

※ 현원 산정 시 근무유형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예: 주40시간→1, 주30시간→0.75, 주20시간→0.5)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553,350	650,912	97,562	17.6%
일반회계	518,818	617,655	98,837	19.1%
특별회계소계	34,532	33,257	△1,275	△3.7%
의약품관리종합정보	13,247	8,136	△5,111	△38.6%
자동차보험심사	21,285	25,121	3,836	18.0%

II.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1 '25년 성과 및 보완점

□ 의료과다이용 관리 기반 마련

- **(과다의료 관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해 '의료 과다이용 관리 방안' 마련·추진
 - 의료과다이용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사위 의결('25.11.), 본회의 통과('25.12.2.)

□ 불균형 의료수가 개선 및 합리적 심사기준 개선

- **(필수의료 강화)** 의정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의료 긴급수가 개발 등 국민에게 중증·응급 필수의료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역량 집중
 - 심장·뇌혈관수술,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전면 검토 및 개선, 분만·소아진료 지원 강화
- **(현장 중심 기준 개선)** 급속히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임상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심사기준 상시 개선체계 확립
 - '심사기준개선추진단' 신설·운영하여 의료현장의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총 758건의 의료계 의견수렴 및 검토('24.~)

□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료 체질 개선

- **(지역의료 불균형 완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해소, 지역 내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관리체계 마련
 - 지역 2차 병원 응급·야간수술 등 시범수가 신설('25.6.~)

주요 보완필요 사항

- 환자안전 및 재정건전성 동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보장 확대 관점에서의 기준 개선·신설 필요
- 지역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

□ 희귀·중증질환 약제성과평가* 제도 마련

* (약제성과평가 제도)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확실함에도 사후 평가를 조건으로 급여하여 환자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등재 후 약제성과평가를 실시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제도

- (재정건전성 확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사용 증가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환자 접근성 동시 확보를 위해 약제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확대 운영
 -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RWE* 생성 가이드라인」 위탁연구('25.3~11.)
 - * RWE(Real World Evidence): 실제 진료기반 데이터
 - 11개 약제의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레지스트리 구축, 성과평가 적용해 '25년 환자(207명) 접근성 강화, 약 700억원 부담 경감

□ 마약류 의약품 등 DUR* 확인 의무화 추진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처방·조제 시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중복되는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 및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

- (환자안전 보호) 부작용 방지, 감염병 상황 대응 등 국민건강 보호에 핵심적인 DUR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며(99.7%),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DUR 의무화' 법 개정 적극 추진
 - 마약류 처방 시 DUR시스템 확인 의무화 법안 개정안 공포('25.12.23.)

주요 보완필요 사항

- 약제성과평가 제도의 객관적 기준 수립을 위한 규정 정비 필요
- 전체 의약품 DUR 의무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 사용 선순환 구조 구축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국민 건강성과 향상

-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환자단위의 실시간 진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및 연계·점검, 데이터기반 인프라 등 마련하여 의료과다이용 관리
→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환자안전 예방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 **(심사기준 개선)** 임상현장의 환경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심사기준 개선으로 국민에게 적합한 진료환경 제공하여 의료 질 향상 도모
- **(의약품 오남용 예방)** 마약류 의약품의 DUR확인 의무화에 따라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모든 마약류 정보제공으로 환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 DUR 의무확인 범위는 전체 의약품으로 점진적 확대 추진 노력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의료 사각지대 축소

- **(희귀·난치 부담 완화)** 희귀·중증질환의 약제성과평가 제도 확대하여 치료제에 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 **(요양병원 혁신)**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선별 및 지원 강화하여 의료 중심의 요양병원 추진(단계적 지정·확대)
-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의 단계적 급여화 추진으로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 **(보상체계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보상 확대가 필요한 항목 검토 및 수가 개선
- **(관리체계 고도화)** 행위별 수가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 운영

Ⅲ. 중점 추진과제

(국정과제 24)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 AI 활용·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 (배경) 의료 영상 데이터 등 국민 의료이용 정보 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른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절차 등 개선 필요
- (영상진료 데이터) 보건의료 데이터의 AI 친화적 관리 계획 수립·추진
 - 상병별 보건의료 영상진료 데이터 관리, 데이터 정제작업 프로세스 표준화 등 비정형데이터의 관리 체계 강화
- (표본 데이터셋) 의료이용정보 표본 데이터셋* 개선 방안 마련
 - 이용자 의견 수렴 및 결과물 확인 등을 통한 데이터셋 확대 및 개선, 활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셋 제공 채널 확대

* 식별가능성 제거로 보안성 강화 및 심의 과정 생략하여 빠르게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한 표본 데이터셋
- (추진계획)
 - (영상진료 데이터) DICOM* 파일 내 불필요한 정보 제거 등 데이터 정제 작업(수시), 상병별 영상분류시스템 구축 가능성 검토(~'26.12.)
 - (표본 데이터셋) 표본 데이터셋 이용현황 모니터링('26.6.), 변수 제공 범위 검토 등 데이터셋 정비 및 개방 확대('26.9.), 표본 데이터셋 제공 채널 다각화(타기관 폐쇄망 등) 검토(~'26.12.)

(국정과제 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 혁신적 제약 육성을 위한 건강보험 약제 등재 제도 개선

○ (배경) 신약 개발을 유도하는 약가 우대 정책의 부재*

* 다만, 국내개발 신약은 평가기간 단축(120일→100일) 신속 검토하는 제도 운영 중('16.~)

○ (혁신형 제약기업 보험약가 우대) ①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② 식약처 신속심사(GIFT) 허가, ③국내 임상시험 수행을 모두 만족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25.3~)

* 임상적 유용성이 대체약제 대비 유사한 경우 :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격 → 우대적용대체 약제 최고가 vs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격 × (100/53.55)] 중 낮은 금액

○ (신약 혁신가치 반영) 신약의 '혁신성' 평가 요소를 신설하고, 혁신성이 인정되면 경제성평가 임계값* 유연 적용하여 평가('24.8~)

* 경제성평가 계량지표(ICER값)는 질병의 위중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한 기존 심의 결과를 참고해 탄력적으로 평가

○ (추진계획)

- (혁신형 제약기업 보험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 결정신청 시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 예정
- (신약 혁신가치 반영) 경제성평가 제출 신약 20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 예정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 필수의료이 충분히 공급 될 수 있도록 의료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 (배경) 지역·필수의료 기피 심화 및 보상 불균형에 따른 적정보상 필요
- (목적) 수가 적정보상으로 의료 인프라 확보 및 국민 생명 보호
- (지역·필수의료 수가 개선) 중증·응급 분야의 저평가 항목 집중 인상, 분만·소아 분야 집중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확대
 - 위험도가 높아 기피가 심한 주요 필수영역의 저평가 항목 수가 지속 개선
 - 분만 주수별 수가 차등지급 등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확대
- (수가 관리체계 개편) 보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 및 정책효과 평가기전 마련
 -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실행방안 마련(조정주기 5~7년→2년, 필요 시 수시 조정)
 - ※ 의료비용자료 기반 과보상·저보상 수가 조정 및 상대가치점수 개편 예정('26년)
 - 공공정책수가 운영현황 및 효과분석을 위한 중간평가 수행
- (추진계획)
 - (필수의료 수가 개선) 수술 등 저평가 항목 집중 인상 및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개선방안 마련(~'26.12.)
 - (수가 관리체계 개편) 비용분석결과 기반 상대가치점수 상시조정체계 확립·운영 및 공공정책수가 중간평가 수행(~'26.12.)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

- (배경) 현행 보건의료 체계상 환자의 타기관 진료 정보를 의사가 알기 어려워 여러 기관에서 동일치료를 중복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발생
- 실시간 진료정보 관리 법안* 공포('25.12.23.) 및 시행('26.12.24.) 예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 신설)

- 환자위험 과다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심사평가원에 위탁·운영
- 요양기관은 의료과다이용 항목의 진료내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출, 진료 정보 연계·확인

- (목적) 수진자 단위의 실시간 진료정보 제공·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 (제도적 기반 마련) 개정법안 관련하여 세부적인 하위법령 개정 추진, 환자단위의 급여기준 및 관리절차 등 전반적 운영체계 수립
- (실시간 공유시스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및 연계·개발, 검증 진행 후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 등 개최('27년 시스템 오픈 예정)
- (추진계획) 의료과다이용 항목 관리 체계 마련 및 시스템 구축·운영
 - (하위 법령 신설) 과다이용 항목 선정 절차, 운영 위원회 구성 등(~'26.7.)
 - (급여기준 개선) 대상 항목별 시행 횟수 등 세부 고시 개선(~'26.7.)
 - (시스템 개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시스템 구축 완료(~'26.11.)
 - (요양기관 설명회) 관리 항목 및 시스템 연계 방법 등 안내('26.7.~9.)
 - (시범 운영) 시스템 적용, 안정화 및 시범운영('26.11.~12.)

□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마약류 의약품 DUR 의무화 제도 강화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처방·조제 시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중복되는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 및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

- **(배경)**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련 사회적 이슈로 인한 집중 관리 필요
- **(현황)** 의사의 마약류 처방 시 DUR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약되고 있는 **마약류 정보의 확인 의무화 개정안 공포('25.12.)**
 - ※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로 약사의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 지연 중
- **(관련법령 정비)**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정비, 필요사항 검토 등 차질 없는 DUR 의무화 시행('26.12) 준비
- **(식약처 정보연계)** 의·약사의 확인 의무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DUR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 * 마약류취급자가 조제·투약 등 취급한 모든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하는 시스템
- **(추진계획)**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성공적 시행
 - (관련법령 정비) 약사법 개정 지원('26.1분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26.2분기)
 - (식약처 정보연계) 처방 면허번호, 환자정보 등 마약류 통합정보 연계('26.12.)

(국정과제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 지역기반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도입

- (배경) 고령인구, 복합만성질환 증가 등 단순 질환별 관리를 넘어 환자중심의 통합적 질환 관리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한국 보건의료 현실에 맞는 일차의료에서의 관리사업 개발 필요
- (목적) 국민은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의료계는 성과에 근거한 보상을 받도록 국민이 필요하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정립
- (추진계획) 시범사업 도입('26.7.~)을 위한 세부기준 및 시스템 마련
 - (세부사업 모형개발) 지역별 의료인프라 상황에 따라 4가지 모형 적용
 - (거점지원기관 有) 거점지원기관 유형에 따라 ①포괄2차 종합병원, ②공공의료기관(보건의료원 등), ③지자체 주도의 3가지 모형으로 구분
 - ※ (도시형) 포괄2차 모형, (의료취약지형) 공공의료기관, (도농복합) 지자체 주도
 - (거점지원기관 無) ④거점지원기관 운영 없이, 다직종·다학제 팀 자체 구성·운영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단독 모형
 - (보상수준 및 방법 개발) 통합수가 개발 및 성과평가 기반 보상
 - (기본 보상) 월단위 정액수가 지급(환자군별 등록환자수 × 월정액)
 - (성과 보상) 다학제 팀 구성 관련 운영지원 보상, 성과평가 기반 보상
 - (시스템 개발) 환자건강정보 요약지 자동생성, 참여기관 자료제출 기능 등

□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배경)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률 시행*에 따른 본 사업 전환 추진 및 세부 규정 마련 지원 필요

* 의료법 개정(법률 제21238호, '25.12.23. 공포, '26.12.24. 시행)

- (기반 마련) 비대면진료 법안 취지에 맞추어 시범사업 내용 개선, 관련 법안 시행·적용 대비하여 비대면진료 수가 및 기준 개발 지속

- (추진계획) 시범사업 모형 개선 및 세부 기준 마련 등 지원

-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 반영*하여 시범사업 모형 개선 검토 및 본 사업 전환 시, 수가·기준 신설, 청구·심사 연계방향 개편 등 추진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지역 제한, 처방 제한 등 의료법 개정사항

- 의약품 처방제한 사항, EMR 시스템 반영하기 위한 API 개발 등 관련 시스템 구축 (~'26.12.)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지원 및 급여화

- (배경)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 및 간병비 건강보험 미적용에 따른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 (목적)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 급여화를 통해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 및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100%→30% 내외)
- (요양병원 역량강화·성과지원)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선별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보상 강화
 -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약 500개소(10만병상, 8만명) 단계적 지정·확대
 - * 중증환자 수용 증가, 취약계층 대상 간병 서비스 제공,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하여, 객관적·합리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 방안 마련
- 의료 중심 요양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일당정액 수가 조정 및 성과보상제 신설 지원
- (간병 급여화 및 판정도구 개선)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및 간병수가 개발, 적정 부담을 위한 본인부담률 책정
 -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 선별을 위해 판정도구 개선
- (추진계획)
 -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계획 발표('26.下.) 및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27.上.~)

□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의 관리 체계 도입 및 운영

- (배경) 비급여는 시장 자율영역으로 간주되어 가격·진료기준·적정사용 등에 대한 관리 미흡하여 비급여의 과잉 팽창 및 과도한 보상을 유발

※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 1조 8,869억원(연간 보정 시 22.6조)

- (목적) 과잉 우려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하여 적정 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

- (제도운영(안)마련) 법적근거* 마련, 진료비·편차 등 모니터링으로 관리 급여 포함 항목 추출 → 치료필수성, 사회적편익, 재정적부담을 평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완료('25.11.7.~12.17.)

- (관리급여항목) 총 5개 항목을 검토하여 ①도수치료, ②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③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선정

※ 체외충격파치료는 공급자(의료계)에서 자율규제 방안 마련, 언어치료는 적응증별 치료필수성 등 세부검토 후 재논의 예정

- (추진계획)

- (제도운영(안)마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관리급여의 별도 평가기준* 신설 및 운영 규정 마련

* 치료필수성이 크지 않은 경우,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 국민의료비 부담완화가 필요한 경우

- (관리급여항목) 3개 대상항목별 수가(가격)·급여기준 등 검토 및 관련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급여전환('26.上.)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실무검토	학(협)회 의견요청 및 전문가 자문	평가 및 심의	고시 개정
문헌고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재평가 결과, 유사행위 등	진료비용 산출, 적응증 실시횟수 등	· 전문평가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수가·급여기준· 본인부담률 관련 고시 개정

□ 희귀·난치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 (배경) 희귀질환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속 등재 지원 필요
-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품목 허가^{식약처} - 급여평가^{심평원} - 협상^{건보공단} 절차 병행 시범사업 추진

※ 식약처 허가(120일) - 심평원 급여평가(150일) - 건보공단 협상(60일)

- (대상약제) 소아질환치료제 2품목(1차 시범사업)*, 희귀질환치료제 2품목 및 항암제 1품목(2차 시범사업)**

* 과지바주(신경모세포종), 빌베이캡슐(진행성 담즙 정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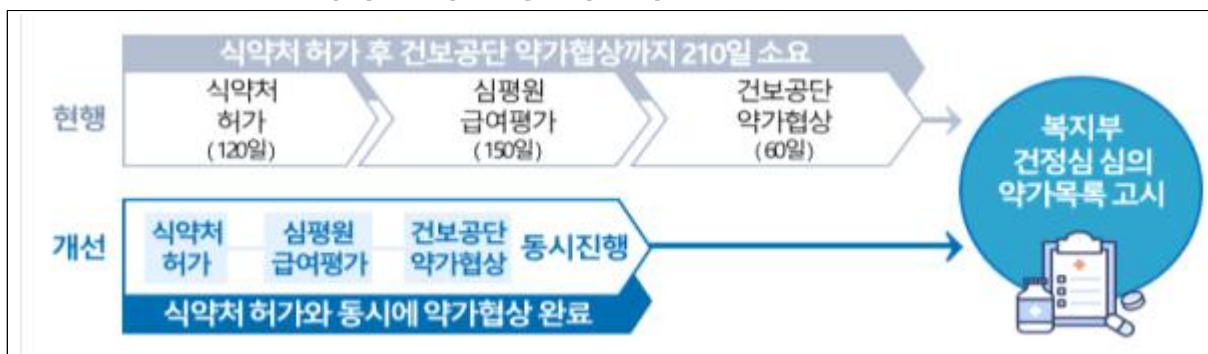
** 원레브에어주(폐동맥고혈압), 핀테플라엑(드라벳증후군), 림카토(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 등)

- (진행상황) 1차 시범사업 대상 약제 급여 등재 완료('25.10.),
2차 시범사업 대상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진행 중('26.1. 현재)

- (추진계획)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진행으로 조속 평가 추진

- (대상약제 평가) 제2차 시범사업 대상 약제 평가 지속 ('26.1.~)
- (시범사업 효과분석)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신속 등재 제도화 방안 검토 ('26.상반기~)

<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추진 흐름도 >



□ 희귀·난치 부담 완화를 위한 약제성과평가 제도 운영

- (배경) 희귀·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등재 후 임상자료를 기반으로 효과평가하여 약제의 근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약제성과평가 제도 운영
- (목적) 개발국의 신속허가 및 경제성평가생략 등재*로 근거가 불충분한 초고가 약제가 증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 이에, 환자 안전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제성과평가 운영 확대하여 고가 의약품의 사후관리를 강화

* (미국) '24년 허가신약 중 희귀질환 약 52%(50성분 중 26성분),
(한국) '24년 등재신약 중 항암·희귀질환 약 53%(32성분 중 17성분)

** 1인당 연간 소요비용 1억원 이상 5개^{'20년} → 11개^{'24년}

- (추진계획)
 - 약제성과평가 대상 약제 레지스트리 구축 및 품질관리
 -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약제의 임상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사후평가하는 방안 마련('26~)
 - RWE(실제근거) 생성 가이드라인 대내외 의견 수렴('26.上.) 및 활용('26.下.)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재해예방)**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수립·운영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경영진 주관 안전점검 및 정기적 건축물·시설·설비 점검 실시
 - 기관의 산업재해 사례 분석 기반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관리 계획’ 수립·추진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선제적 조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 운영
 - 전 종사자 참여 기반 위험성평가 실시(유해·위험요인 383건 발굴 및 개선 완료)
- **(안전교육)** 실전 및 실습형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 역량 제고
 - 종사자 및 지역주민 대상 ‘완강기 사용법’ 등 실전형 소방교육 실시
 - 전 종사자 대상 유관기관(원주소방서) 합동 재난안전 훈련 실시
- **(현장안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고위험 근로자 안전 확보
 - 기관 안전관리자 현장점검 및 공정회의 참석 등 CM단·시공사 협력 강화
 - 혹서·혹한기 대비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배포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운영 등을 위한 노력의 성과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최고등급(S) 달성 → 개인정보보호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국가정보원 주관「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최고등급(우수) 달성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상생노력)** 중소기업생산물품 등 우선구매 확대를 통한 상생협력
 - 중소기업제품 및 사회연대경제 기업 생산품 등 상생구매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판로 지원을 통한 지역 소비 선순환 구축
 - 공공기관 주도 원주혁신도시 ‘골목형상점가’ 640개소(5개 구역) 신규 지정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기대
 - 사옥 유휴공간 활용 지역 소상공인 직거래장터, 사회적경제기업 팝업스토어 확대 운영으로 총 매출액 3.7억원 달성 및 지역 소상공인 판로 지원 강화
- **(사회공헌·지역발전)** 지역사회 문제해결 중심 공동체 상생 기반 강화
 - 業 연계 공모사업 ‘농촌 어르신 건강하이(Hi)소(所)’으로 일상돌봄 및 낙상방지 시설 개선 등 농촌 거점형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분야별 사회공헌 활동 전개

분 야	추진 내용
취약계층 자립지원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88명), 저소득·다문화 육아 및 국적취득 교육 지원
교육 환경개선	지역공부방 수혜 거점지역 확대 및 장학금멘토링 지원, 돌봄아동 교육비 및 건강키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축제 운영 물품 지원 및 홍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운영

3 대국민 소통 노력

- **(국민소통참여단)** 우리원에 관심 있고 활발히 참여·활동할 수 있는 국민 100명 선정·운영(지역·성별·연령·직업 균형있게 구성)
 - 대국민서비스 개선사항 발굴, 청렴도 향상 및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국민 관점의 의견 및 아이디어 제안
 - **(대국민서비스 홍보)** 국민에게 유용한 의료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대국민서비스* 홍보 추진
 - SNS 등 디지털 소통, TV·라디오 등 전통매체 이용
 - 지역 축제 참여 등 맞춤형 현장홍보, 지역의료 활성화 캠페인 실시
- *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비급여 진료 비용 정보 공개 등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1 DUR 확인 의무화

-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DUR 확인 의무화 필요
 - 최근 수년 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행태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시 DUR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아직도 DUR 미사용 기관 다수 존재
 - DUR 확인 의무화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효과적 관리 필요
- **(개선계획)** DUR 의무화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 DUR 확인 의무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25.12.23.)
 - *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직접 조제하는 경우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26.12.24. 시행 예정)
 -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정비 및 관련 시스템 연계 검토·추진

2 리브리반트주 급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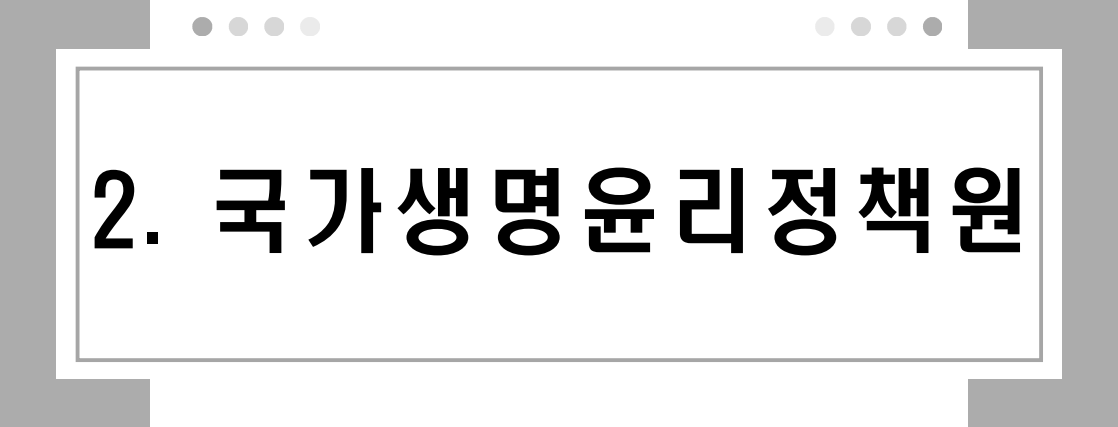
- **(주요내용)**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의 신속한 급여화 필요
 - 엑손 20 삽입변이 1차에 대한 국민청원 및 제약사의 급여 재결정 신청
 - ※ 엑손 20 삽입변이 2차 이상에 급여기준 설정('25.9월 암질환심의위원회)
- **(개선계획)** 건강보험 등재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 진행
 - 제약사에서 '25.9월 급여 재결정 신청하였으며, 급여기준 미설정된 적응증 중 일부 적응증(엑손 20 삽입변이 1차)에 대해 재심의 요청
 -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며, 이후 설정된 급여범위를 기준으로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검토 진행 예정

3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 진료내역 입력 및 연계 시스템 부재
 - 과다한 의료이용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환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개선계획)**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의료과다이용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25.12.23.)
 - *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수진자 의료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26.12.24. 시행 예정)
 -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의료과다이용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 등 추진

4 비급여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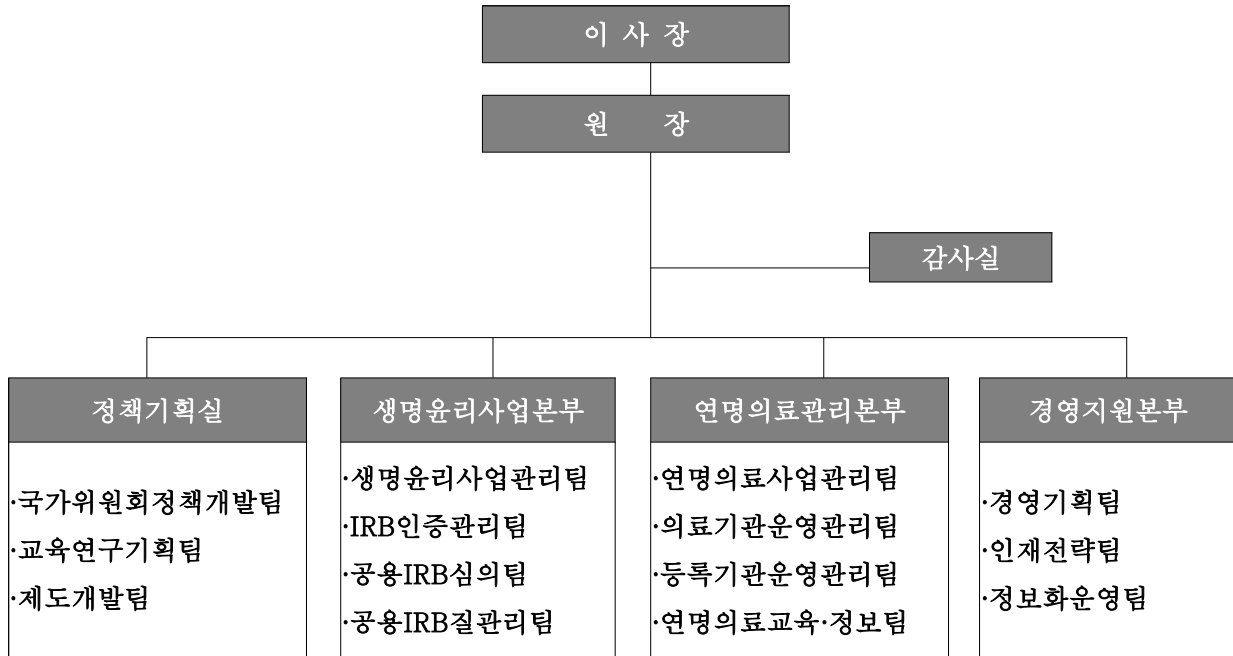
- **(주요내용)**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이 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필요
 - 비급여 진료비 가격 및 관리체계 미흡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개선계획)** 비급여 진료 관리 체계 도입 및 운영
 -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하여 적정 가격 책정 및 합리적 진료기준 설정·운영
 -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확대, 이용자 중심의 누리집 화면 개선 및 민간포털 연계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 운영 강화
 - 비급여 진료 실시 전 그 필요성, 가격, 대체 항목 등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light gray L-shaped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frame, at the top,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ay dots,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2 인원 현황

'26.1.1.기준 (단위: 명)

구 분	직급별	계	원장	별정직 (개방급)	연구직					행정직					전산직			전문직	
					1급	2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4급	5급	3급	4급	5급	갑	나
합계	정원	77	1	2	2	3	8	14	12	2	1	2	10	17	1	1	-	-	1
	현원	86	1	2	1	1	9	5	5	-	1	3	12	39	-	1	4	1	1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12,683	13,108	425	3.35
생명윤리연구체계 지원	5,757	6,218	461	8.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지원	299	299	-	-
유전자 검사 평가 및 지원	38	38	-	-
소비자대상직접시험(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지원	421	554	133	31.6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524	502	△22	△4.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등록	553	553	-	-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3,342	3,280	△62	△1.9
연명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1,364	1,364	-	-
연명의료제도화지원 대국민 홍보	385	300	△85	△22.1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1 '25년 성과 및 보완점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

- 한국의 생명윤리정책 20년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11.19.), 생명윤리정책 연구, 백서 발간, 유관 전문학회와의 MOU 체결로 선도적 생명윤리 정책 제안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생명윤리 이슈에 대한 합리적·전향적 논의와 대응을 위해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시급*

* '24년 6월 11일 임기 종료 후 구성 지연

②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전국적 기반 구축('25.12.31.기준, 누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819개소) 연 2회 지정, 노인복지관·보건소·既유입 의료기관 대상 등록기관 신규 지정으로 국민 편의성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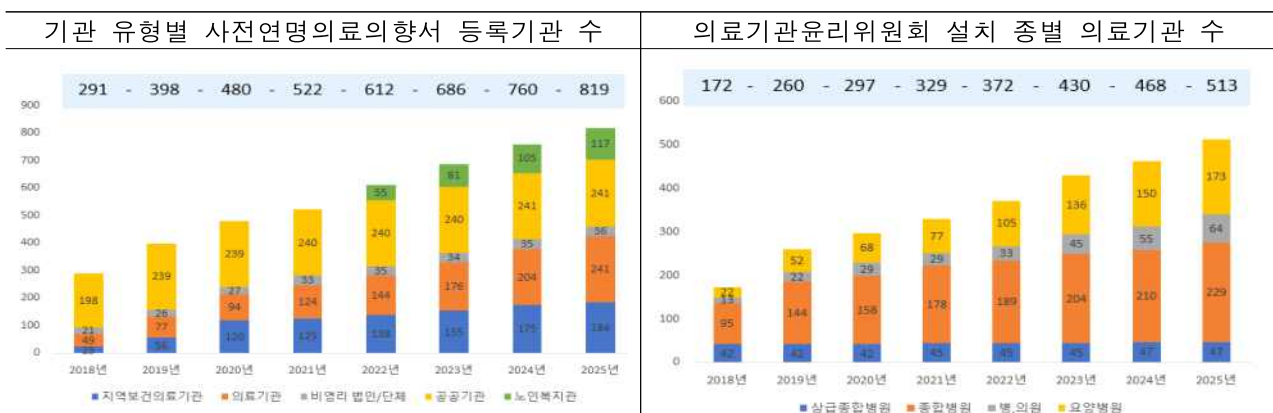
* (개수) 총 819개소, 전국 지자체별 등록기관 지정, 기초지자체별 평균 3.6개소

** (유형)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513개소) 미설치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및 요양병원협회 연계 홍보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 (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 (공용윤리위원회) 13개, 위탁협약기관 225개소



③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제 2주기 안정적 운영

- IRB 등록부터 인증까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2주기 제도 안착
 - * (등록) 996개소 (신규인증) 16개소 (재인증) 43개소 등 총 156개 인증기관 관리체계 확립
- 운영 표준화 및 평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질적 내실화
 - * 1주기 기반 표준 정립, 평가위원 재교육을 통해 평가 공정성·전문성 확보

④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심의 인프라 확충

- 심의 수요의 안정적 대응 및 제도 사각지대 해소
 - * 연구대상자 보호의 안전망 역할 수행 및 심의 수요 대응(심의 3,295건, 면제 523건)
- 현장 밀착형 지원 서비스 확대로 연구 윤리 역량 제고
 - * 연구자 상담(19,128건), 교육 이수(2만 명 이상), 찾아가는 교육(15회)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플랫폼 운영

⑤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 관리

- DTC 유전자검사기관 재인증 절차 및 기준 수립을 통해 성공적 인증 수행
 - * '22년 하반기 신규인증 시작 후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 시행, '23년부터 변경인증(수시 접수 연 4회 정기적 평가), 실태평가로 관리 중, '25년부터 인증기간(3년) 만료 기관에 대한 재인증 절차 수립 및 시행 → 13개 인증기관에서 총 217개 항목 서비스 중
- 소비자 보호는 물론, 검사기관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관 친화적이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방안 모색 노력

⑥ 생명윤리법 내 종사자 생명윤리 역량 강화

-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검사담당자, 결과분석·전달담당자, 결과정보처리 담당자,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등) 대상 교육 시행(총 4회, 128명 이수)
-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의사, 간호 인력, 배아생성 담당인력 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24년 시범 운영 후 '25년 2회 온라인 제공으로 335명 이수)

- 생명윤리 교육 추가 개발 요구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대상 간담회 진행 및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온라인 1회 제공 24명 이수)

2 향후 업무추진방향

1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거버넌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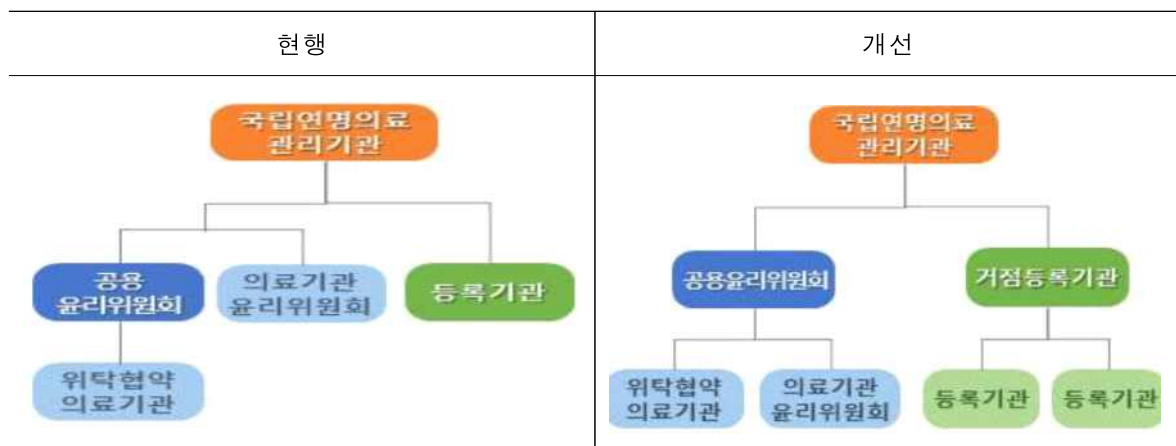
- (방향)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후 증가하는 생명윤리 이슈에 대한 합리적·전향적 논의와 대응을 위한 안정적 생명윤리 정책연구 및 지원, 공중의 참여 확대 및 정책의 공공성 확보
 - 민간위원 워크숍, 간담회, 정책토론회 및 포럼 등 다양한 쟁점별 논의 방식을 통한 논의 지원 및 활성화 등 공론화 지원
 -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회의, 국가생명윤리포럼 기획, 운영 지원과 홈페이지 운영 등 원활한 소통과 성과 등 정보공유 지원과 관리

2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강화·관리체계 고도화

○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업관리 체계 고도화

- 거점 등록기관 운영 및 지원 확대

* (‘25) 거점연구용역 진행 및 권역별 6개 거점기관 시범운영



- 서식 전자화를 위한 서식 관리 시스템 구축

* 보안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원본 종이 서식의 전자화 문서로 전환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임종돌봄 서비스 연계

-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및 요양병원 중심 윤리위원회 설치
 - * 자체 설치가 어려운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 등을 위해 공용윤리위 확대 필요
 - ** 특히 사망자 수는 많으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낮은 요양병원 대상으로 윤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 홍보·컨설팅 제공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이후 돌봄서비스 연계
 - *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 환자 지원을 위한 임종돌봄 서비스 개발, 임종실 활용, 호스피스 및 재택의료 제공 등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화 조성

-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사업 추진
 - * 공익광고 신규 제작 및 송출, 수기 공모전 개최
-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확대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추진
 - * 19세이상 성인 → 이동 약자(노년층, 지체장애인 등)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 (이동 약자 대상) 찾아가는 상담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를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확보('25년 15개 시도 740명 → '26년 15개 시도 868명)
 - *** (정보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자료 제공(시각장애인 대상 점자리플릿, 음성 지원시스템 활용 서식, 동영상 내 자막 삽입, 비문해인 대상 상담그림카드, 외국인 대상 다국어 제도 안내서 개발)
- 제도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 *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핵심 의료진인 의사 대상 교육 필수 과목 반영 추진

③ 소통 기반 IRB 운영 품질 강화 및 공용 IRB 기능 고도화

- (평가·인증 운영) 신규인증(상·하반기 자율신청), 재인증(61개 기관), 연차보고(78개 기관), 컨설팅(5개 기관, 시범운영 예정)
- (공용 IRB 기능 고도화) 전문위원 확충(신규위원 위촉), 심의 질 개선(심의표준화, 자문단 구성), 분석 기반 개선안 반영으로 전문성 중심의 공공심의 플랫폼 강화

- **(소통 강화)** 정례 간담회 개최(인증, 미인증기관 각 1회), 수요자 관점의 소통자료 제작(2종), 실무 중심 교육·워크숍 시행(1회), 찾아가는 교육 확대를 통해 기관·위원·연구자와의 지속 가능한 소통구조 구축
- **(운영 안정성과 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시스템 기능 개선, 정보 보안 강화, 인력·위원·예산 관리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확보

④ 건강한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검사 생태계 조성 및 관리

- **(방향)** 검사기관의 역량 강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 등 기관 친화적인 지원과 소비자 보호가능한 전향적 제도개선 등 **인증제 고도화**

* 인증 절차(신규(2회), 재인증(1회), 변경인증(4회) 등)의 정기적 운영과 함께 연구 용역 등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 시스템 고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예정('26년)

⑤ 생명윤리 역량 강화 위한 콘텐츠 개선 및 발굴

- **(방향)** 생명윤리법 내 감독대상기관 종사자의 생명윤리 역량 강화 위한 다양한 생명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개선 및 제공 지원
 - 유전자검사기관(연 4회 제공) 및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연 2회 제공) 프로그램의 콘텐츠 개선 등 안정적 생명윤리 역량 강화
 - 시범 운영한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대상 교육 신규 제공(상·하반기 2회 교육 제공 예정) 등 안정적인 다양한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Ⅲ. 중점 추진과제

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거버넌스 지원

□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및 운영 준비

- (현황) 지난 24년 6월 임기 종료 후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미구성으로 사회적 합의 및 조율 등 국가의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산적인 어젠다에 대한 논의의 어려움 발생
 - 한국생명윤리학회 및 한국의료윤리학회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일부 논의 보완하고 있으나, 운영의 근거 부재로 역할 한계
- (방향) 산적인 국가의 생명윤리 이슈*에 대한 원활한 논의와 정책적 과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국가위원회 구성과 국가 차원의 윤리적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마련 필요
 - *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범위(임종기→말기), 보조생식술 적용 범위(비혼 부모 등), 장기기증(뇌사→심장사(순환정지)), 유전정보 포함 바이오 정보의 안전한 활용 등 사회적 합의 및 정책 대응을 위한 논의 시급
 - 정부/유관 전문학회/이해당사자/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다부처 및 중립적 공론화

②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강화 · 관리체계 고도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실효성 확대

- (가족과 사전의사 공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행 연계*를 위해 환자-가족 간 의향서 작성 공유 구조 추가** 마련 필요, 가족 대상 안내 자료 및 교육 콘텐츠, 의사소통 도구 개발 필요
 - * 의향서를 작성했음에도 가족 반대에 따른 불이행 사례 발생
 - ** (현행) 의향서 작성 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배부하며 가족과 작성 사실 공유할 것을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업관리 체계 고도화

○ 거점 등록기관 운영 및 지원 확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거점 역할 정립 및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25)」 결과 및 거점기관 간담회 등 반영한 운영체계 개선

* 제2차 종합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과도기) 다양한 지원 역할 부여 및 선도기관으로 육성

○ 서식 전자화를 위한 서식 관리 시스템 구축

- 법 개정을 통한 전자서식의 법적 요건 및 진본성 확보 필요
- 연명의료 정보시스템 서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 전자화 문서관리 규정 및 업무매뉴얼 수립('26~)

□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및 역할 강화

○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역량이 부족한 중소 병원 및 요양 병원 지원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필요

* (기존) 권역별 공용위 운영(13개소) → ('26목표) 과대 권역 및 부재지역 신규 지정(15개소)

-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높는데 비해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현저히 낮아 공용윤리위 확대 통한 제도 접근성 확대 시급

* (윤리위원회 설치 비율) 상종(47개) 100% vs. 종병(229개) 69% vs. 요양병원(173개) 13.2%

○ 공공요양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독려

* 전국 82개소 중 설치기관 21개소, 미설치 61개소

* 전국 단위 고르게 분포된 공립요양병원 우선 설치 필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화 조성

○ 대국민 홍보 사업 추진

- (공익광고 제작) 준비된 생애말기에 대한 공익광고 송출을 통한 긍정적 공감대 확산
- (국민 참여형 캠페인) 존엄한 삶의 마무리 사례 전파를 위한 대국민 대상 수기 공모전 운영, 우수 수기 활용 콘텐츠 제작 및 송출

- (홍보 다각화) 온라인(SNS, 브랜드 검색, 인플루언서 협업), 오프라인(지면, 유관학회 등), MOU 통한 지자체 홍보, 홍보자문단 운영

○ 제도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 (등록기관 종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보수교육 관리 강화(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노인 대상 대면 교육, 7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 (의료기관 종사자) 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해 의사 교육 필수 과목 반영 추진
- (교육 접근성 강화) 야간교육, 온택트교육, 찾아가는 교육(대면) 등 다양한 방식 제공을 통해 교육 이수 증대 노력
 - * 온택트(On tact) 교육: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를 넘어, 대면은 최소화하되 온라인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교류하는 형태의 교육
- (신규 교육과정 개발) 장기 근속자 맞춤형 교육 추진을 통한 질 관리

□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한 제도 참여 확대

- (선순환 구조 마련)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이 치료의 중단이 아닌,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의료·돌봄체계 시스템 전환 필요



○ (유형별 돌봄 서비스 연계)

- (연명의료 중단) 임종실 활용 확대, 임종 돌봄* 서비스(프로토콜) 개발
 - * (임종돌봄) 환자의 통증 및 증상 완화, 정서적·심리적·영적 지지 제공, 임종환경 마련, 사별가족 상담 지원 등
- (연명의료 유보) 완화의료 제공, 가족 간병 지원, 호스피스 병동 및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의료인의 생애말기 돌봄 제공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실시

3 IRB 운영 품질 강화 및 공용IRB 기능 고도화

□ 소통 기반 IRB 평가·인증 품질 강화 및 공용 IRB 기능 고도화

- (평가인증 품질 강화) 2026년 재인증 대상 61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증가
- (컨설팅) IRB 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소규모 및 운영 경험이 부족한 기관 대상 지원을 위해 시행 계획
 - '26년 4분기 내 컨설팅 안내 및 시행, 결과통보 및 후속 관리 등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

	2023	2024	2025	2026
재 인증	-	-	43	61
연 차보고	27	87	83	78
컨설팅	-	-	-	5 (시범운영)*

* '25년 기관위원회 운영현황조사 결과, 2026년 73개, 2027년 70개, 2028년 48개, 2028년 이후 327개 컨설팅 수요 예상

- (공용 IRB 기능 고도화) 보건의료 데이터를 포함한 개인정보이용 연구의 활성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심의할 수 있는 자문단 구성 추진

	2022	2023	2024	2025
개 인정보이용연구	213	209	337	449
전 체 연구	704	745	854	1030
비율	30.3%	28.1%	39.5%	43.6%

- '26년 4분기 내 빅데이터(AI)를 포함한 개인정보 이용 연구 분석 및 연구자들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형태의 AI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단계적 운영 예정

4 건강안 DTC 유전자검사 생태계 조성 및 관리

□ 역량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DTC 관리체계 개선 등 고도화

- (현황) 피평가기관의 질 관리체계 확인을 위하여 검사 전반의 기관 계획과 계획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하는 신규인증(인증신청기관 대상, 서류 및 현장), 실태평가(인증기관, 서류 및 현장), 항목 평가(근거 논문의 적절성, 검사 결과의 정확성) 운영
 - 인증기관에 대한 합리적 관리와 제도 내 인센티브적 요소 발굴 등 기관의 시장성 확보를 위한 전향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방향) 관리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사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관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 개선하는 방안 마련
 - (자율 점검의 강화) 인증기관의 자율적 역량 관리 지원하되, 재인증 기관 대상 현장 방문 최소화 등 기관 업무 감소 유도
 - (시장 모니터링 강화) 서비스 항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수행과 결과 공유 통한 기관의 자발적 역량 강화 유도 및 소비자 불만 제보 상시 운영 등 건전한 시장 관리
 - (소통 강화) 인증기관과의 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 및 운영을 통한 인증기관 역량 강화 및 시장 지원 등 건강한 생태계 조성 노력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지역사회 안전 협력 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로 재난안전 대응 역량 확보
 - 광진소방서 및 보건복지행정타운 등 지역 유관기관 합동 훈련, 공동 정기회의 등으로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 및 대피체계 점검
- (안전 대처 능력 강화)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임직원 안전 대처 능력 제고
 - 안전모, 개인소화기 등 개인 보호장비 확보를 통해 안전 대응 역량 강화
-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강화) 공공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적용
 - 내부망 및 인터넷망 망분리 구현을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 보호 수준 강화('25.11.)
 - * 망분리 환경 구축('24.), 망분리 시범 운영 및 전직원 확대('25.)
 - 비정형파일 암호화 추진 등 연명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적용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기부 및 봉사활동)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를 위한 명절·재난 계기 기부활동 및 참여형 봉사활동 추진 등 사회 공헌 활동 추진
 - 광진구 노인 복지관 명절 기부금품 전달, 헌혈 운동(연4회), 수해 복구 지원 활동('25.8.), 가을정원 음악회를 추진하여 임직원 참여('25.9.)
- (지역사회 상생) 지역주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기반 자원 활용으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 생명윤리 관련 영화 상영, 도서관·회의실 등 공간 개방을 통해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촉진
- * 도서관(132.01㎡) 상시 개방, 대회의실(122.24㎡) 알리오 플러스 공개 후 무료 대관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사회적, 녹색, 자활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비율 평균 200% 이상 초과 달성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회적 책임과 역할, 서비스 비교 평가, 서비스 품질 등 종합 만족도에서 91.1 점으로 전년 조사 대비 1.9점 상승
 - 분야별 고객만족도는 생명윤리관련 연구와 소통 및 교육 지원 (87.9점),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93.2점)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강점은 커뮤니케이션, 고객케어, 정책 타당성 등, 최우선 개선 과제는 인적자원역량 강화 등
-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품질 제고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및 공공데이터 신뢰도 제고
 - 대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및 연명의료계획서 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24년 3개 → '25년 14개)
 - * '25년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결과 품질관리분야 만점 획득
- **(생명윤리 이슈 공유)** 최신 생명윤리 이슈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콘텐츠 공유
 - AI 윤리, 유전자검사 등 대국민 인식 개선과 소통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고 콜로키움, 홍보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공유
 - *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 온라인 콜로키움 연 6회 개최,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분기별 연 4회 발간
- **(SNS를 통한 소통 활동)** 대국민의 생명윤리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해 접근도가 높은 SNS 운영 및 관리
 -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65세 이상 사망자 연명의료중단·유보 현황 [매경이코노미, 12.23.]

- (주요내용) 10년('13~'23년) 동안 65세 이상 사망자(259만명) 중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친다고 지적

* 해당 보도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2025.12.11.발간) 인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은 2018년 2월 시작되었으므로, 2018년 이후 비율 재산정해야 할 필요 있음

- (개선계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 및 윤리위원회 확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취약지역 파악 및 균형적 확대, 운영 질 관리 체계 구축, 신규 홍보영상 제작 및 TV 송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권역별 현황 분석, 공용윤리위원회 신규 지정*, 연명의료계획서 등 서식 미작성 기관 관리 추진

* 현행 13개소에서 추가 신규 지정으로 지정기관 수 확대(중소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진입 유도)

- (위탁·협약 기관)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기관 수 확대(요양병원)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a large gray bracket on the left and right sides, enclosing a white rectangular area. Above the white area, there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ay dots,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3. 국민건강보험공단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재정관리 강화

- (지출 효율화) *급여비 지출 분석 전담조직 신설*로 급여분석 강화, *신설·인상 수가에 대한 재정소요액 대비 과다집행 항목 모니터링*
* 적정진료분석센터(TF), 적정진료추진단 및 협의체 운영 ... 과도한 의료행위 발굴·개선
- (안정적 수입확충) *소득정산제도 단계적 확대*로 소득자료의 보험료 부과 반영률 제고, *자금운용 전략 고도화** 및 *징수관리 강화***
* 대상소득(2→6개), 사유(소득 감소→소득 증가·감소)
** 채권형펀드 등 대체투자 확대, 단계별 유동성 대응체계 수립·실행 등
*** 체납 법인사업장 특성별 실태조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금 등 신규 징수자료 연계 등

- ◆ (재정위기 전망) 초저출생,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기반 악화 및 급여비 지출 증가로 보험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 건강보험 수지는 '26년에 적자 전환 후 '31년에 누적 준비금 소진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 AI·디지털·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범정부 TF 내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선정, 보험료 부과·조정 등 핵심역할* 수행
* 건보료 등 DB 1.4억건 연계, 지급대상 46백만명 선정, 5.6만건 보험료 조정 등
- (AI 대전환) AX 전담조직 신설, 직원용 'AI 업무비서' 개발 착수, AI 음성상담* 및 에이전틱 AI기반의 챗봇** 구축 등 혁신 공공기관 최초
* 시나리오와 공단 지식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 음성상담 서비스 'NHIS-CALL' 오픈
** 공단 스미싱문자 판별, 가상계좌 발급, 환급금·자동이체 신청 접수 등 수행

- **(서류 최소화)** 공단-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신고없는 근로자 연말 정산* 및 소득정산 증빙서류 전면폐지**로 국민 체감형 혁신 공단 최초

* 전체 정산대상(1,656만명) 중 약 30%(496만명)가 간이지급명세서 연계로 자동 처리

** 소득보험료 조정 시 소득자료 연계하여 프리랜서 등 약 866만명 불편 해소

- **(가족 중심 건강관리)** 건강관리가 어려운 부모·자녀의 건강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가족 모두의 건강수준과 생활습관을 개선 공공기관 최초

* (부모) 입원 등 의료이용현황, 혈압 등 건강기록, (자녀) 검진결과, 예방접종기록 등

- **(국민 밀착형 질병통계 제공)** 공단 빅데이터 활용⊕네이버 협업으로 대표 질환(125개)에 대한 질병 통계*를 제공하여 의료정보 접근성 강화

*환자수(연령대별 진료실인원, 성비), 진료비(1인당 연간 외래·입원별 총진료비 평균 및 범위)

-
- ◆ **(국가적 AX 정책 지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를 반영, 건강보험 AX 혁신으로 차별화된 대국민 서비스 적극 선도
 - 새 정부 출범 후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 「AI 기본법」 제정('26.1월 시행), '26년 AI 예산 확대 등 AI 기반의 국가 혁신 강조
-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돌봄 지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 **(통합돌봄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원*, *통합돌봄·요양병원 간병지원에 통합판정체계 적용으로 본 사업 추진동력 확보

* 통합돌봄지원 연계추진단(NHIS-PICC) 구성·운영으로 통합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

- **(재가서비스 확대)**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추진,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이용자 확대*로 내 집에서 건강한 노후 지원

* (참여기관) '24년 95개소 → '25.12월 344개소, (이용자) '24년 8,971명 → '25.11월 15,154명

- **(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로 전문성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노인요양시설(50인 미만) 및 주·야간보호기관(35~76인)으로 시범사업 확대 실시

-
- ◆ **(축소사회 가속화)** 초저출생·초고령화·지방소멸 등 축소사회가 빠르게 진행 되면서, 이에 대응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 강화 필요

- ◆ **(돌봄 패러다임 전환)** 신(新)노년층 등장으로 더욱 복잡해진 욕구를 해소 하기 위하여 분절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장기요양 품질 향상 필요
-

□ 필수의료 강화 정책 지원과 의료비 부담 완화로 국민 건강권 보호

- **(필수의료 수가인상)** 공단 자료 분석 기반으로 평균 환산지수 인상을 1.93%, 상대가치 연계 0.07%로 전 유형 수가계약 타결
- **(필수의약품 접근성 향상)**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신약)의 신속등재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강약자의 조속한 치료 지원
* 허가(식약처)-평가(심평원)-협상(공단) 시범사업 ... 소아 희귀질환치료제(2약제) 급여
- **(의료비 부담 경감)** 산정특례 및 재난적의료비 제도 개선, 본인부담 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 등으로 고액 의료비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 **(간병지원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병상 확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으로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경감
*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 신설,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공공병원 참여 등

◆ **(건강 형평성 악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심화,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 역대 최고(18.2년)에 따라, 건강 불평등 해소와 보장성 강화 필요성 증대

□ 건강검진 개선과 적정의료 이용문화 확산으로 보건의료체계 견고화

- **(검진체계 재설계)** *검진 In-Out 시스템을 활용, 의과학적 근거 기반의 검진항목 조정*, *학생 건강검진 2차 시범사업으로 검진체계 내실화
*골다공증 검사대상 확대(60세 추가), 청년층 조기정신증 검사, C형간염 검사 도입
- **(과다의료이용 관리 강화)** *‘개인별 의료영상촬영조회 서비스’ 제공 국내 최초, 외래 본인부담차등화, 다제약물 관리 확대*로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 (대상자 확대) 기존병원 입원환자, 재가노인→^{확대}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추가
- **(비급여관리 강화)**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비급여 정보공개’ 누리집 ‘비급여 정보 포털’ 신설로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
* 비급여 지역별 가격, 주요 질환·수술별 진료 정보, 안전성·효과성 평가 정보 등 공개

◆ **(예방과 건강증진 트렌드)** 변화하는 생활습관, 질병구조를 반영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건강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에 발맞춘 빅데이터 활용 확대 필요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재정관리] 강력한 자구노력과 대내외 소통 강화로 재정안정 추진

- (재정관리 기반 강화) 전사적 재정건전화 추진, 급여비 지출 모니터링 강화, 자금운용 전략 다각화 등으로 미래 재정위기 적극적 대응
- (사회적 합의 도출) 정부지원금 확대, 특사경 도입,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기반 안정화를 위해 정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소통·협력 지속

□ [AX혁신] AI 접목 및 기술혁신으로 국민과 직원 불편을 획기적 개선

- (건강보험 AX) AI 전담실 ‘NHIS인공지능실’을 신설하여 AI 상담사(NHIS-CALL)* 및 챗봇 활용 본격화, AI 업무비서(NHIS-MATE)** 도입 등으로 상담대기 등 국민불편 해소 및 업무효율성 향상

* (NHIS-CALL) Customer service using an AI Large Language model

** (NHIS-MATE) My AI Task Executor

□ [통합돌봄] 존엄한 노후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 (공단 자원 연계·활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모형을 고도화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선제적 파악하는 등 통합돌봄의 접근성·연속성 제고
- (장기요양 품질 개선)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로 초고령사회 속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 제고

□ [의료보장] 기본적 삶을 위한 국민중심 필수의료 보장 강화 및 정책 지원

-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수약품 신속등재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운영 등으로 국민 생명 보호 및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 (보건의료체계 개선 지원) 지역의료 이용지표 개발, 비급여 보고항목 확대, 진료비정보시스템* 신설 등 필수의료 중심 개선 지원

* 지역별 평균 진료비(급여)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 지원

□ [건강관리] 근거 중심의 검진제도 운영 및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 (자기주도적 관리) 검진제도 개선*,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지원, ‘건강모아**’ 오픈 및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건강증진 지원

*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폐기능 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으로 도입

** 건강관리 도우미, 가족 건강관리, 의료지원 서비스, 장기요양, 질병정보 등 제공

Ⅲ. 중점 추진과제

① 효율적·안정적 재정관리로 지속가능성 제고 (국정과제 14·83·91)

1-1. 공단 주도적·선제적 지출 효율화와 재정누수 차단

□ '26년 이행방안

- (급여분석 강화)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중심, 급여분석 자동화*로 반복적·수작업 급여분석 업무 고도화 및 이상증감 패턴 분석 등으로 적정진료를 위한 분석 강화

* 급여분석 기초 데이터 정제, 정기적 분석정보 구축 등

- (지출 모니터링) 국정과제 등 주요 보건 의료 정책과제의 집행실적 점검 및 전체 급여비에 대한 수가분류별 지출 모니터링·분석 추진
- (불법개설기관 근절 강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 직접 참여*, 특사경 제도 도입**, AI 등 신기술 활용한 현장조사 지원 강화

* 기존에는 의료인, 의료기관단체 회원만 참여 가능했으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개설심의 직접 참여 ... 「의료법」 제33조의2 개정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국회 입법 지원('26. 上), 특사경 구성 및 출범('27. 1.) 추진

□ 기대효과

- 건강보험 지출 모니터링 및 과다지출·이상증감 분석을 통한 급여기준 개선, 적정진료 유도 등 지출관리 강화로 재정건전성 제고
- 불법개설기관 사전·사후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및 재정틈새 차단

1-2.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보험료 수입기반 강화

□ '26년 이행방안

- (정부지원 안정화) 정부지원 관련 법 개정 촉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추진 기반 마련 ... 시민단체 간담회, 국민 토론회 개최 등 소통 활성화
- (부과재원 확보) 소득 중심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 및 신규 재원 발굴
 -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역진적 형태의 재산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등급제 → 정률제)을 위한 기준마련 및 시행근거 법령개정 추진
 - (시차 최소화)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점 간 시차(11~23개월) 최소화를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추진
 - (부과재원 발굴)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 모색

□ 기대효과

-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정부지원금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인 국민·기업의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재산보험료 정률부과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산정의 역진적 현상을 해소하고, 재산에 비례한 부과로 건강보험 형평성과 수용성 제고
- 실질 소득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안정적 보험재정 확충

② AI 시대 국민 중심의 디지털 혁신 (국정과제 24·25·85)

2-1. 국민과 직원의 일상을 혁신하는 DX·AX 추진

□ '26년 이행방안

- (전사적 AX 확산) 공단 AI 인프라와 모델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AI공통플랫폼' 확대, 민간 AI 기술 적용을 위한 파일럿 및 PoC 검토
- * '25년 AI공통플랫폼 및 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26년 AI모델관리 추가 등 플랫폼 고도화

- **(NHIS-CALL·AI 챗봇) 생성형 AI 기반 민원상담 서비스** 공공기관 최초
 - (AI 음성상담) 상담 처리규모와 업무범위를 넓히고, 생성형 AI 기반 답변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모델(추론모델 등) 도입으로 자연스러운 상담 구현
 - (AI 챗봇) 업무별 AI 에이전트를 추가하여 맞춤형 처리범위를 확대하고 음성상담을 포함한 대국민용 AI 서비스 관리체계 통합
- **(NHIS-MATE) 사고예방과 직원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업무비서’**
 - (서비스 오픈) 사고예방을 위한 변동사항 사전알림, 내부지식(법령, 지침 등) 검색, 범용기능(요약, 번역 등) 등 서비스 사전 오픈('26.4.)
 - (서비스 고도화)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원(GPU) 확대 등 시스템 최적화, 보고서·통계 등 내부지식 구축범위 추가 등

□ 기대효과

- 클라우드 기반 공통 AI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단 특화 AI 모델 발전으로 고부가가치 보건·의료 데이터 전산화
- AI 음성상담과 AI 챗봇으로 맞춤형 상담 범위를 확대하고,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 대국민 상담 품질 제고 및 국민 만족도 향상
- AI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반복 업무 자동화로 일의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 가능

2-2. 공단 보유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강화

□ '26년 이행방안

- **(전자처방전 공적 전달시스템)** 본 사업을 위한 BPR/ISP 추진, 시범사업 운영
 - 제도 개편 및 업무절차 마련을 위한 업무 재설계(BPR) 및 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SP)
 - 원주의료원, 일산병원 및 비대면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실시
 - ※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 공적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환자의 자격정보, 진료·처방내역 등을 의료인에게 제공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확대)** 분석환경 개선 및 데이터 가치 창출 활성화
 - (분석센터 확대구축) 연구중심병원(21개)과 데이터중심병원(43개)을 기반으로 분석협력센터 단계적 확대(5년간 20개소 확대)
 - (인공지능 인프라 증설) 서버 3대 도입을 통한 인공지능 분석환경(150명 이용) 구축으로 데이터 분석 효율성 제고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안전성 강화)** 저위험 가명데이터셋* 시범사업 추진 및 산업계 활용 지원을 위한 합성데이터** 개발
 -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의 민간 제공 1차 시범사업(~'26.6.) 후 효과성·안전성 평가를 거쳐 데이터셋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26.7~12.) 추진
 - 의료AI 연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건의료데이터 적용 가능성 검증 및 합성데이터 개발 기반 마련
- * 가명데이터셋을 추가 가명처리하여 개인정보 재식별 및 추론 가능성을 최소화
- **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여, 분석결과도 유사하도록 새롭게 생성한 가상 데이터
-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질병청·국가예방접종 데이터 추가 연계로 감염병 통합DB를 구축하고,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지표 검증·고도화*
- * 감염병 통합DB 기반 표본감시 적정성, 정합성 지표 산출·검증 및 추가 지표 개발, 타 감염병 적용 가능성 검토 등

□ 기대효과

- 처방전 위·변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으로 환자 안전성을 강화하고 종이처방전 발급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 공단 보유 공공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국정과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지원
-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한 데이터셋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우려를 해소하고, 과학적 연구, 정부 정책지원 및 평가에 활용
- 감염병 통합DB 구축을 통해 예방접종 효과 평가, 고위험군·취약지역 관리, 유행 이후 장기 영향 등 빅데이터 기반 전주기적 정책 지원

③ 살던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지원 강화 (국정과제 78)

3-1. 품격 높은 노후를 위한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원

□ '26년 이행방안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강화) 본사업 대비, 전문기관 지정 완료*에 따라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정책 및 지자체 지원 추진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완료 → 향후 지정서 발급 시(1~2월중) 공단 수행 세부역할 명시 예정 ... 정책수립·홍보, 통합판정조사 지원 등
- (통합판정체계 개편) 통합판정체계 활용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강화 및 통합판정체계 본 사업('28. 예정) 도입 기반 조성*
 * 법령 개정, 전산 개발, 공청회 등을 통한 제도 수용성 제고 등 안정적 도입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통합돌봄 지원제도의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으로 노인, 장애인 등 돌봄 필요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돕고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
-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공통의 기준(통합판정체계)을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평가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

3-2. 장기요양 내실화를 위한 서비스 다양화 및 종사자·기관 관리 강화

□ '26년 이행방안

-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기존의 월정액 수가에서 수용성이 높은 고정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新수가를 운영하고, 통합재가기관 단계적 확충*
* ('25년)201개소 → ('26년)350개소 → ('28년)1,050개소 → ('30년)1,400개소
- (타깃 홍보) 주·야간보호⊕방문요양, 방문간호⊕방문요양 등 복합 운영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제공기관 확대 추진
- **(재택의료센터 확대)** 미지정 지역 지자체,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 대상 타깃 홍보 강화로 인프라 확대, 신규모형* 추가 확대 운영
* 보건소-의료기관 협업모형: 보건소(간호사·사회복지사)-의료기관(의사·한의사) 협업형
- **(장기요양 품질 개선)**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운영) 지정갱신 부적격기관 사후관리 관련 법령 개정 지원 등으로 제도의 안정적 안착 지원
-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확대) 기존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 개선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및 35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대상 확대
-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개선) 금액 인상(최대 월 18만원), 최초 지급 시기 단축(3년 → 1년), 직종 확대 등으로 우수 인력 정착 유도

□ 기대효과

- 안정적 新수가 운영으로 통합재가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 제공·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차별성 확보
* 수급자의 욕구·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프로세스 구축 등
-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기관 입원을 감소로 삶의 질 제고
- 장기요양기관의 수준을 상향평준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로 돌봄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인력관리

4-1. 필수의료 안정적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26년 이행방안

- (지역의료 이용지표 개발) 국민 중심의 지역별 의료기관 접근성을 반영한 지표설계 및 의료이용 패턴을 반영한 의료생활권 개념 도입
 - 필수의료 영역의(응급, 심뇌혈관, 소아, 모자) 지역별 적정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 이용률, 사망률 등 핵심 지표 산출
 - 지역의료 이용지표 웹포털 개방으로 국민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수준을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알권리 보장
-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속 등재 지원,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및 필수약품 수급안정 정책 지원
- (합리적 수가 보상 및 지불제도 개편 지원) 환산지수 개편, 패널 확대 및 의료비용분석 강화
 - (환산지수 개편)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환산지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신규 진료비 관리모형 개발
 - (패널 확대) 종별·유형별 패널기관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의료비용 자료의 대표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 (보고서 발간 및 수가 조정)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의료비용분석보고서 발간 및 객관적 근거 기반의 행위별수가, 포괄수가, 일당정책수가, 공공정책수가 등 수가조정 및 다양한 지불체계 모형 적용** 정책 지원

* 건정심 산하 기구(사무국 공단)로 의료비용자료 수집·검증·계산방법 논의 및 계산 결과 도출 등의 기능 수행 ... 위원 18인(공급자단체, 가입자, 학계, 정부기관)

** 공공의료기관의 기관단위 보상, 성과보상 등을 위한 비용산정 방법, 지불단위 절차 등 모형연구 지원(건보연구원 포함)

□ 기대효과

- 정책수립 기간 단축, 수립부터 평가까지 데이터 기반의 환류체계 구축 및 의료수요 예측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등 선제적 대응 지원
-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하게 등재하여 환자의 치료 보장성 강화
- 수가결정구조 개편으로 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및 의료비용분석 결과 기반의 불균형·불공정 수가조정 및 다양한 지불제도 모형 적용으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4-2.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에 대한 의료 보장성 강화

□ '26년 이행방안

- **(간병 부담 완화)** 급성기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확대
 - 경증환자 선별입원 해소를 위한 성과 보상 강화 등 구조개선, 상급 종합병원 참여제한 단계적 완화 등 참여 병상 확대
- **(산정특례 확대 지원)** 환우회, 전문학회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질환 선정(질병청 협업)으로 산정특례 적용 확대
 - 다빈도 민원, 관련 학회 요구 등에 따라 등록기준 개선 검토(수시)
- **(상병수당 도입)** 시범사업 지속 운영 및 본사업 시행('27년 목표) 준비
 -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 분석, 대국민 홍보, 법령 개정 지원, 사업 지침 마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조직·인력·예산 등 제반사항 준비
- **(1형 당뇨병 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제도 시행 대비('26.하반기), 급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급여 확대방안 마련 및 철저한 실행준비
 - 복지부 고시·공단 공고 개정, 요양비 청구·심사·지급 프로그램 개발, 내부직원 교육 및 이해관계자(환자 단체, 준요양기관 등) 홍보

□ 기대효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급성기 입원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간병서비스 질 향상으로 입원 환경 개선
-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경감 적용(본인부담률 10%)으로 중증환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계보장 및 질병 악화 예방, 직장 조기복귀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확대로 가정에서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중요한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비 부담 경감

4-3. 건전한 의료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 '26년 이행방안

- **(비급여 모니터링 고도화)** 비급여 보고·조사 등을 통한 자료 수집 확대 및 기관별·비급여 항목별 가격편차 등 심층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비급여 발생유형 및 진료유형별 진료비 규모, 사회적 이슈 및 의료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보고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
 - * ('23년) 594개 → ('24년) 1,068개 → ('25년) 1,251개 → ('26년) 1,411개
 - 기존 목표 대비 표본기관 증가 폭 확대(매해 100개 이상 → 300개 이상) 등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강화로 신뢰도 높은 보장률 산출
-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비급여 용어 재정립 및 세부항목 목록화, 비급여 보고제도 보고항목에 대한 세부 명칭·코드 표준화
 - 비급여 항목의 세부적인 목록화·분류를 위한 연구, 상시 협의기구(비급여 분류체계 위원회*) 운영 등
 - *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한 자문기구로서 비급여 항목 분류 및 표준 명칭·코드 심의,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 등 수행
- **(정보공개 확대)**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다빈도 비급여 항목·금액 등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대내외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정보 등 신규 콘텐츠 지속 발굴, 대국민 홍보 강화로 이용 활성화

□ 기대효과

- 비급여 보고제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함으로써 비급여 관련 정책 수립 및 근거 마련 지원
- 급속하게 양산되는 비급여 공급 시장 질서를 안정화시켜 합리적인 의료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구축 기여
- 국민이 원하는 비급여 진료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비급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 부담을 해소

5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건강관리 선순환 구조 마련 (국정과제 14·85·91)

◇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체계 구축

□ '26년 이행방안

- (건강모아 서비스 오픈)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 전면 개편(웹·앱)으로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편의성 개선* 및 국민중심의 서비스 확대**
 - * AI 및 OCR 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관리
 - **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 공유, 자녀 건강정보, 구강건강 예측서비스
-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경로당, 복지관 등에 건강100세운동교실을 확대하고, 운동교실 내 노쇠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 * 복지부 연구용역('25.9.~'26.1.)을 통해 노쇠 예방 신체활동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건강검진 체계 내실화) 폐기능 검진 항목 신규 도입,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 시행, 학생건강검진 3차 시범사업 실시 등

□ 기대효과

- 국민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집대성한 내 손안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자발적 건강생활 참여 유도
- 노인 타깃형 운동교실 운영으로 신체 기능·활동 능력 및 기대수명 증진
-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 수요에 맞는 건강검진 체계 개선으로 질병 조기발견과 생존율을 높이고 국민 건강수명 향상에 기여

6 업무보고(12.16.) 지시사항

- (주요내용) 사무장병원 단속 등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잡아낼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통해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향후계획)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한 대외협력 및 효율적 제도 도입을 위한 전사적 추진체계 구축과 실행방안 마련('27년 1월 출범 목표)
 -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한 대외기관 소통 및 협력 강화(1~2월)
 - (쟁점대응) 수사 범위, 수사권 오남용, 인권침해 등 법안의 쟁점 사항 및 의료계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논리 고도화(완료)
 - (소통·협력) 국회, 관련 정부부처(법무부, 경찰청),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방문·설명을 통해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추진
 - * 지역본부와 협력하여 각 시도단위 지역의사회 등 의약단체 면담 추진
 -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운영(2~10월)
 - (TF)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전사 TF를 구성하여 제도설계, 조직·인력, 제규정, 시설·장비 등 준비
 - (자문단) 법조계, 학계, 법무부, 경찰청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제도설계 전반에 대해 의견수렴
 - (협의체)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특사경 운영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사경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 제도설계 시 반영
 - 차질없는 제도 운영을 위한 특사경 실행방안 마련(2~10월)
 - (조직·인력) 기존 업무조직과 별개의 독립조직(Wall-off)으로 설치, 행정조사 경력직원 및 외부 수사전문가(채용)로 구성
 - (규정) 특사경 직무규칙, 수사매뉴얼, 인권보호지침 등 제규정 마련
 - (교육) 수사교육과정 개발,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체계 구축
 - (인프라) 사무공간, 전산시스템, 시설장비 등 구축

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한 일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안전제일 문화 확산
 - (안전경영) 안전경영책임계획,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중대재해처벌법 종합대책, 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이행·점검
 - (집중점검) 기관장 주관 안전점검회의 실시, 경영진 현장점검 55개소, 건설현장·노후사옥 등 전문인력을 통한 안전 및 시설 점검* 실시
 - * 30년 경과 노후사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보강공사, 지사 증축 등
 - (위험개선) 위험성 평가(위험 발굴 2,329건, 100% 개선) 실시 및 개선 사례집 제작·공유, 국민·직원 대상 설문조사로 안전과제 발굴 등
 - (안전상생) 도급사업 안전강화*, 레드서클 캠페인 등 보건관리 지원
 - * 표준계약서 내 안전보건 준수사항 구체화, 안전보건 적격성 평가 781건 등
 - (안전문화) 안전 체험캠프·종합건강캠페인·자살예방캠페인(1,589명), 현장근로자 대면 안전교육(416명), 교통안전 전문가 특강(3회) 실시
 - (대국민 안전인식 확산) 고지서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안전습관 UP, 5대 중대재해 예방 수칙, 폭염안전 예방 수칙 등), 재난 대응 행동요령 퀴즈 이벤트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내부관리체계 강화로 기관 보호수준 향상
 - 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개인정보 검출 솔루션 도입,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 등 개인정보 관리·기술적 안전조치 확대
 - 개인정보 보호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단 전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대상 안전성 강화 ... '24년 연 1회 → '25년 분기별 1회
- (정보보안) NHIS 사이버보안관제센터 24시간 운영 등 정보보호체계 강화
 - 기술지원 중단된 노후장비 교체, 정보보호시스템 기능개선 및 파일 전송시스템 고도화 등 8개 사업 추진으로 신종 해킹·장애 위험 최소화
 - 사이버위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컨설팅 실시(11개 과제 수립)
 - 사이버보안관제센터 24시간 운영, 소속기관(일산병원)으로 관제범위 확대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사회적책임)**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 실천
 - **(사회공헌활동*)** 저출생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68명)이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경제적 후원과 정서적 활동 지원
 - * '하늘반창고 키즈'(아동 자립지원금⊕ 시설 운영지원금 지원 결연시설 봉사활동 1,243회 등)
 - **(지역문제해결)** 지역 네트워크 활용, 장애인 인력 커피찌꺼기 수거 업사이클링 등 4개 사업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탄소 저감 실천
 - * 원주지역 환경·사회 문제 실천단 발족(WEST 프로젝트 운영)
 - **(재난피해 대응)** 공단 인프라(이동빨래차량, 안과·이비인후과 진료차량 등) 및 의료 인적자원 활용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신속한 구호활동 전개
 - * 경남 등 대형 산불·수해 발생지역 의료봉사(4회), 이동세탁(6회), 성금모금(약 1.7억)
- **(상생협력)** 강원 지역경제 활성화·자금난 해소를 위한 구매계약 추진
 - 지역물품 우선구매 목표제 이행으로 지역구매율 6.2% 달성, 명절 전 대금 조기집행
- **(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출 역량별 맞춤 해외판로 개척 지원(수출추진액 558억 원, 전년대비 896%↑), 스마트공장 구축(5개사) 및 ESG경영 고도화 지원(8개사) 등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고객만족도)** '24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최고등급 획득으로 '우수기관' 지정 ... 3년 연속 '우수' 기관 달성
 - 종합점수 94점(전년대비 1.7점↑, 9년 연속 90점 이상 유지), 4개* 사업 전체 100% 달성, 정부경영평가 계량목표 100% 달성(3년 연속 만점)
 - * 보험금지급, 직장자격관리, 장기요양기관관리, 장기요양급여관리
- **(국민인식도)** 환경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속적인 ESG경영 실천으로 '2024년도 공공기관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종합점수 67.7점(전년대비 6.8점↑) ... '22년 국민인식도 첫 조사 실시 이후 역대 최고 점수 달성

Ⅵ.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담배소송 공단의 적극 대응 필요

- (주요내용)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지정('26.1.15.)에 따라 적극 대응 필요
- (개선계획) 판결 선고 이후 대응체계 가동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 내·외부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협력체계를 통해 전략적 대응 추진
 - WHO·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판결내용 공유 및 국제적 논의 요청

②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체계(등급별 점수제)의 역진성을 해소할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現 재산등급별 점수제는 고재산가보다 저재산가에게 보유 재산 대비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역진성* 문제 존재
 - * 재산이 적은 세대(등급)가 많은 세대보다 '재산 1만원당 보험료부담'이 더 높음
- (개선계획)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산보험료 정률제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건강보험 부과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

③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 체납액을 상계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고액·장기 체납자는 동의를 있는 경우에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보험료를 상계*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
 - *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개선계획)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26년 하반기 예상)에 대비하여 공제 기준 등 내부 업무지침 정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체계 구축 중
 -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3항 신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에게 체납보험료가 확인될 경우 체납보험료 공제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④ 산정특례 지정 기준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개선

- (주요내용)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상질환 지정 기준과 제도 구조 전반에 대한 장기적·체계적 개선 필요

- (개선계획) 질환 특성,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준 전반 재검토(재등록 절차 간소화 등)

5]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 비효율적 건강검진 항목 정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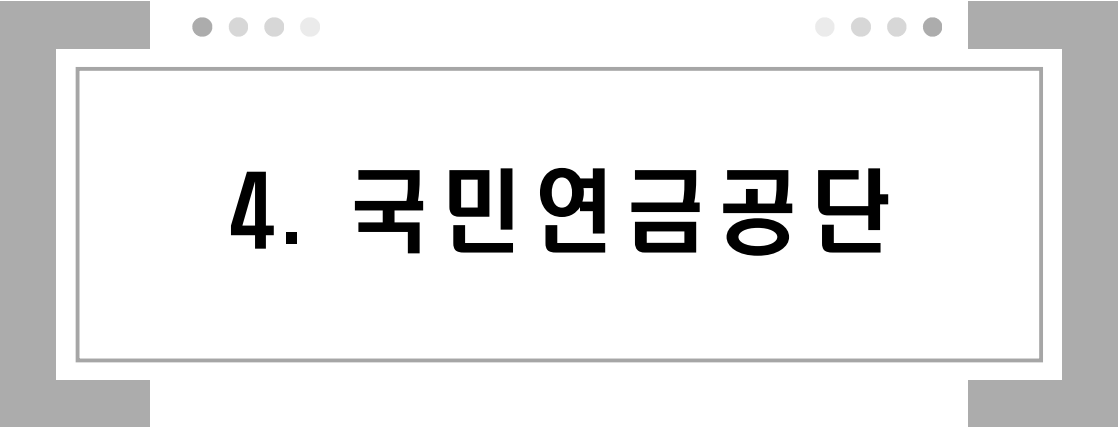
- (주요내용) 검진항목 주기적 타당성 재평가 제도화 및 항목 조정 기준 마련으로 신규 항목(COPD, 안저검사, 인공지능 유방암 판독기술 등) 도입 요구
- (개선계획) COPD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는 신규 검진항목으로 도입이 결정되어 '26년부터 시행되며,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운영 준비 과정을 거쳐 '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운영 예정
 - 안저검사,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판독기술 도입 등은 건강검진 원칙, 재정 부담,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와 도입 여부 검토

6] 중증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제한 제도개선 필요

- (주요내용) 現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수준은 중증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어, '중증환자 전담병실'('24.7.)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참여가 미미한 상황(종합병원 8개소, 108병상)
- (개선계획) 모든 국민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회의('25.9.~12.) 등을 통해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및 추진('26.1.~)
 - * 상급종합병원 병동 참여 제한 완화,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기준 확대, 병동지원 인력 배치 강화, 전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시 성과평가 보상 확대 등

7]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환수 관련 대책 마련

- (주요내용) 기관의 착오가입 등 위반사항에 비해 과도한 환수조치 시정
- (개선계획) 점검대상 기간 축소(기존 '23.1.1.~'25.6.30.에서 변경 '25년)하여 기관부담 완화, '26년부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규모(10% 미만 ~ 30% 이상)에 따른 감액기준 차등화 시행(급여비용 3% ~ 10%)



4. 국민연금공단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공단 주요 성과

□ 18년 만의 '연금개혁' 달성 및 후속조치 적극 이행

- '연금개혁 소통협의체(복지부-공단)', '연금개혁 지원 TF(공단)' 운영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원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25.3.20)

<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사항('26.1.1. 시행) >

- 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율 9%에서 13%로 '26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법제88조), 소득대체율 41.5%에서 '26년부터 43%로 상향(법제51조)
- ② **(크레딧 확대)** 출산은 둘째 12개월, 셋째 이후 18개월씩 최대 50개월 가입기간에 산입한 것을 첫째부터 12개월로 확대하고 상한 폐지(법제19조)
 - 군 복무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한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법제18조)
- ③ **(보험료지원 확대)** 납부재개 요건을 삭제하고, 일정 소득금액* 미만의 지역가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법제100조의 4, 시행령제73조의 4)
 - *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소득월액80만 원)
- ④ **(지급보장 명확화)** 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만 규정한 것을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확히 규정(법제3조의 2)

- 공단은 법률 개정 이후 '연금개혁 시행 지원 TF'를 구성('25.5.~)하여 후속조치* 적기 시행 및 정부·국회의 구조개혁 적극 지원

*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규칙·지침 개정, 전산 개발, 대국민 소통 및 민원대응 등

□ 안정적 국민연금 제도운동을 통한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 18~59세 인구 중 2,115만 명(71.5%)이 국민연금 가입('25.10월) 중,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소득신고율* 및 연금수급권 확보자** 지속 확대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소득신고율: ('21) 86.2% → ('23) 86.8% → **(‘25.10) 87.3%**

** 18~59세 연금수급권 확보자: ('21) 1,005만 명 → ('23) 1,075만 명 → **(‘25.10) 1,131만 명**

- 수급자 746만 명에게 매월 4.1조 원의 연금을 정확하게 지급('25.10.), 65세 이상 인구(1,075만 명)의 55.2%(593만 명)가 국민연금 수급 중

* 6단계(접수단계, 지급단계, 지급 후 모니터링 등) 검증시스템으로 적기에 정확한 연금지급

□ 투자 다변화 및 운용전략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주요 연기금으로의 도약

- 美 관세정책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도 국내증시 반등과 양호한 해외주식 성과 등으로 수익률 16.6%, 적립금 1,428조 원 달성('25.10.)

* 기금적립금: ('22) 890조 원 → ('23) 1,036조 원 → ('24) 1,213조 원 → **(‘25.10.) 1,428조 원**

- 해외투자·대체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 지속 및 주식·채권 투자전략 고도화** 등을 통한 초과성과 창출 기반 마련

* 해외투자 비중: ('22) 47.9% → ('23) 51.6% → ('24) 57.9% → **(‘25.10.) 58.0%**

** 국내주식 신규 전략펀드 도입, 해외주식 스마트베타 직접운용 도입 및 펀더멘털 리서치펀드 확대, 해외채권 고수익 유형 직접확대 및 신규 국공채 섹터 위탁집행 등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국민 기본생활 안정 지원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25.10.~) 및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25.7.~) 등 장애인 복지 지원체계 강화

* (시범사업) 대전 대덕·유성, 광주 북구·서구, ('26년 본사업 예산·대상자) 18.9억, 약12,600명

- 청년 대상 재무 상담 확대* 등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활성화 및 대상별 (고령층 등) 기초연금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과 연계한 금융특화 서비스로 맞춤형 재무 상담 시범 제공('25.下) → 본사업 추진 및 대상 확대 예정('26.~)

□ 디지털·AI 기반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ESG 경영 선도로 사회적 책임 이행

- 효율적 디지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분야별 AI 서비스 개발* 및 국민 연금 데이터를 활용한 협업 기관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 지능형 규정 정보비서 IRIS('25.8.), 연금상담비서 LILY('25.9.), 감사비서 LILAC('25.10.) 등

** 64개 협업기관 대상 표준형 데이터 14종, 맞춤형서비스 50종 제공('25.10. 기준)

- ESG 경영위원회 확대 등 추진체계 고도화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지속적 실천 노력을 통해 대외 ESG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도약

* 전자신문·두이에스지 주관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2년 연속 종합 1위 달성('25.5.)

2 대내외 여건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외부환경

- (정책) 연금개혁 지속추진(개혁과제) 및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 * 국민연금 관련 국정과제로 '튼튼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90)' 등
- (경제) 관세전쟁 등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증가 속 국내경제 회복세 지속*
 - * 소비 개선세 및 수출이 양호함에 따라 성장률 소폭 상승(0.8%^{'25.5월}→0.9%, 한국은행)
- (사회) 초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 여전**
 - *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24) 70.2→('72) 45.8% 고령인구 구성비: ('24) 19.2→('72) 47.7%
 - ** 전국 대학생 1,400명 대상 94.6%가 연금개혁안 '부정적' 응답('25 국민연금 전국 대학생 설문)
- (기술) AI 대전환(대중화*)에 따른 공공부문 AI 활용 활성화 요구 증가
 - * 'AI 서비스 이용률' 및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 모두 지속 증가('2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내부역량

- (전략)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제도운영 및 기금수익률 제고 집중
 - * 연금개혁, 초고령사회 진입, 정부 국정과제 등 경영 환경변화 반영
- (사업구조) 연금관리(제도·기금) 및 통합형 복지서비스(고유·수탁) 제공
 - * 법령상 설립목적(제1조) 및 주요 업무(제25조)를 반영하여 기관 역할 제시
- (자원) 38년의 제도운영 노하우 보유 및 지능형 IT 인프라* 도입
 - * 연금·복지·기금운용 전 분야에 걸친 차세대 정보시스템 재구축('25.5)으로 업무효율 향상
- (조직) 연금제도·기금운용 분야의 체계적인 조직구조 확보
 - * 112개 지사 등 전국 현장 조직 보유, 7개 지역본부의 역할과 비중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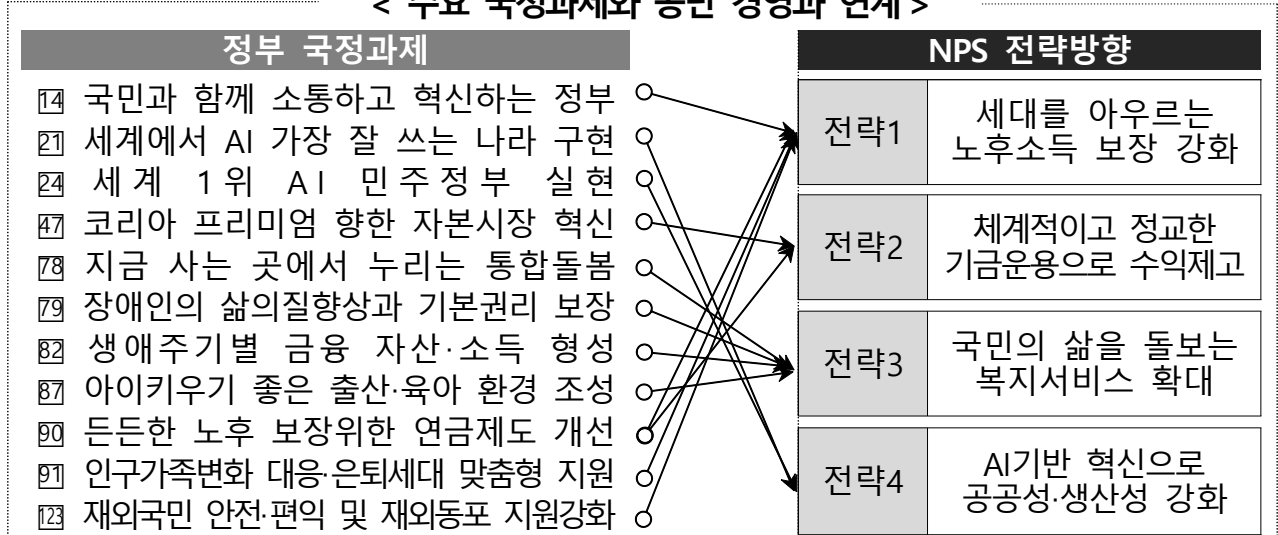
< 대내외 환경분석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 >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기금수익 제고를 통한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
- 가속화되는 초고령사회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단 역할을 고려 필요
-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과 AI 적극 활용을 통한 공공성·생산성 제고 필요

3 향후 정책방향

□ (기본방향)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정부 정책 이행력 강화”

< 주요 국정과제와 공단 경영과 연계 >



□ (전략1) 세대를 아우르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14 90 91 123

- 모수개혁의 성과를 바르게 알리고, 연금개혁 특위의 구조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모든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기틀 마련

* 사각지대 완화와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연금 수급권 강화 등

□ (전략2) 체계적이고 정교한 기금운용으로 수익제고 47 90

- 투자 다변화 및 기금의 ESG 운영강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로 국민 연금 장기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선

* AI 기반 기금운용지원 등 운용인프라 심화, 선제적·체계적 리스크관리 등

□ (전략3)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 확대 78 79 82 87

- 맞춤형(장애인·노인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초고령사회 대응 신규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 확대

* 전국민 금융자산·소득형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노후준비지원 강화, 통합돌봄 등

□ (전략4) AI기반 혁신으로 공공성·생산성 강화 21 24

- AI·디지털 기반 업무·서비스 혁신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공공성·생산성 강화

* AI 기반 업무추진, 디지털 업무환경 강화,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등

Ⅲ. 중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내용

□ 과제선정 기준

- (국정·개혁과제) 공단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국정과제*와 6대 구조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을 선정
 - * 국정과제 90번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 (신규사업) 정부로부터 법령 또는 예산에 근거해 위탁받은 사업으로 '26년 이후 시행 예정인 사업
- (현안사업) 국민연금 제도 및 기준변경 사항 중 대국민 관심과 이해관계가 큰 사안

□ 중점추진과제 세부내역

구분	중점 추진과제	비고
국정 과제 · 신규 사업	①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국정과제90 개혁과제
	②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국정과제90
	③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관련 후속조치	국정과제90
	④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추진	국정과제90
	⑤ 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국정과제90
	⑥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국정과제91 신규사업
	⑦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행	국정과제78 신규사업
	⑧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공단의 AX전략 추진	국정과제21
현안 사업	⑨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관심 사안

1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90개혁과제)

- (개요) 정부는 잠재성장을 반등을 위한 6대 핵심 분야(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 의지 표명 ⇨ 국민연금 제도개선 적극 뒷받침

< 6대 구조개혁 연금분야 추진 방향, 국정브리핑(11.13.) >

-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 기틀 마련
-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체적 개편안을 논의하고 정부에서 적극 지원
-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 필요

- (그간의 경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18년 만에 연금 개혁* 성사('25.4), 후속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특위 운영 中('25.4~)

- *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1.5 → 43% ▲출산·군 크레딧 강화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 ▲청년·저소득층 가입지원 확대 ▲어르신 실질소득 강화 ▲다층체계 확립 ▲수익률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 수립('25.9)

□ 예상쟁점

- (구조개혁)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 및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는 여전히 한계(2071년 기금소진 전망)
- (국민 신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수급에 대한 우려 존재

□ 극복방안

- (구조개혁 지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및 기초·퇴직·개인 등 다층 연금체계 확립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특위 및 정책당국 지원('25.4~)

- * 복지부-공단 협의체인 '연금개혁 추진단'과 공단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국제동향 (NPS 포럼, 아태 회의), 해외사례 등 기초자료 및 ▲재정추계 데이터 제공

- (소통 강화) 대학교·군 부대 등 청년타깃 현장 교육·설명회('국민연금 바로알기') 강화하여 제도에 대한 정확·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신뢰 제고
- 대학생 홍보대사·청년 미디어랩 운영 등 청년층과 양방향 소통 강화

②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90)

- (개요) '25.4월 법률개정으로 '26.1월부터 지원대상이 납부예외 중 납부재개자에서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

-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의 50% 지원

< 지역가입자 지원수준 >

현행	'26.1월 이후
▶ 기준소득 103만원 - 이하 : 보험료의 50% 지원(정률) - 초과 : 정액(103만원 보험료의 50%) 지원	▶ 기준소득 80만원 미만 - 보험료의 50% 지원

- (그간의 경과) 개정법 시행을 위한 면밀한 사전 준비

- ('22.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 최초 시행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 ① 농어업인 ('95.7월~) ② 두루누리 (근로자, '12.7월~) ③ 실업크레딧 ('16.8월~)

- ('25.9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국정과제로 선정

* [국정과제 90번]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 ('25.12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고시 개정 등 시행 준비

* '25년 519억원 → '26년 824억원 (305억 ↑)

- (예상쟁점) 소득 기준(월소득 80만 원) 설정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 극복방안

- (경과조치) 종전법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계속 지원

- (홍보) 지원대상 확대*와 제도의 취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26.1분기)

* (현행) 납부재개자 19만 명 → ('26.1월~) 저소득 가입자 74만 명

- (제도개선) 지원요건 완화(기준소득 상향 등)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당국 적극 실무지원('26.3분기)

③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관련 후속조치(90)

- (개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인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감액 기준 >

- 노령연금 수급자가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다른 소득은 무관)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6년 기준 319만원
-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수급연령으로부터 5년간 적용)
※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 감액

□ 그간의 경과

- ('25.9.) “튼튼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국정과제로 선정
- ('25.11.)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관련 개정법 **국회 본회의 의결**
 - (개정내용) '25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 및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 * '23년 기준, 감액대상자 15.1만명 중 약 65%인 9.8만명 해당
 - ※ 예시) 근로소득 월 500만 원, (기존) 매월 14.1만 원 연금 감액 → (개선) 감액 없음
 -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 경과일('26.6.17.) 시행

□ (예상쟁점) 법 시행일('26.6.17.) 前 감액 미 희망 수급자의 민원 발생 우려

※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됨에 따라, 과세 자료 미확인 시 선제적 감액 제외 어려움.

□ 극복방안

- (2025년 소득) 국세청 소득확정 자료 기반으로 소득이 509만원 이하가 확인된 경우 정산하여 환급
- (2026년 소득) 개선된 소득기준 이하인 자는 기존 및 신규를 불문하고 '26.1.1.부터 감액 대상자에서 제외
- SNS 및 언론 등을 통한 집중 홍보 실시 및 안내문 및 상담 사례집 (Q&A) 활용 국민 혼란 방지

4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추진(90)

- (개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위해 1%p 이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자산배분체계 개편·투자 다변화·인프라 강화 추진

* 연금개혁('25.4월)에 따라 기금수익률 1%p 제고시 기금소진시점 7년 연장 효과가 나타나는 등 기금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소

- (그간의 경과) 자산배분체계 개선*, 최근 3년간 70명의 기금운용인력 확보** 및 기금운용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전략컨설팅*** 추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24.5.2.) : 위험자산 65%안전자산 35%의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 여전히 해외 선진연기금 대비 인력인프라 부족

('24년 말 기준 1인당 운용규모 한국 국민연금 2.5조원, 캐나다 CPPI 0.3조원, 네덜란드 APG 0.7조원)

*** 통합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연구용역('25.10월 ~ 12월)

- (예상쟁점) 연금개혁('25.4.)으로 향후 기금규모 확대, 변화한 투자 시계에 부합하도록 기금수익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기금 최대규모 '40년 1,882조 원 → '53년 3,659조 원(수익률 5.5% 가정시)

- (극복방안) 전략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을 통해 수익률 제고 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초과수익 기회 포착을 위해 액티브 프로그램 공모자산 확대 등을 통한 신규 상품 및 전략 지속 도입 추진
- 해외기업 통합익스포저 한도 관리체계 고도화, 대체투자 Factor Model 플랫폼 도입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강화(~'26)
- 선진운용을 위한 투자지원결정 AI 지원 서비스 구축 및 적정 기금운용 인력 확충 추진 (~'26)

5 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90)

□ (개요)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 및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이익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활동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그간의 경과) 국민연금기금은 '18.7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기금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

- 6가지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관련 투자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비공개 대화 등 기업과의 대화 이행**

* ①배당정책, ②임원보수한도, ③법령상 위반 우려, ④지속반대, ⑤기후변화, ⑥산업안전

** '19년 60개사(149회), '20년 109개사(225회), '21년 106개사(248회), '22년 118개(244회), '23년 124개사(216회), '24년 107개사(176회) (총 누계: 624개사, 1,258회)

□ (예상쟁점)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대체자산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 추진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자책임 활동 이행점검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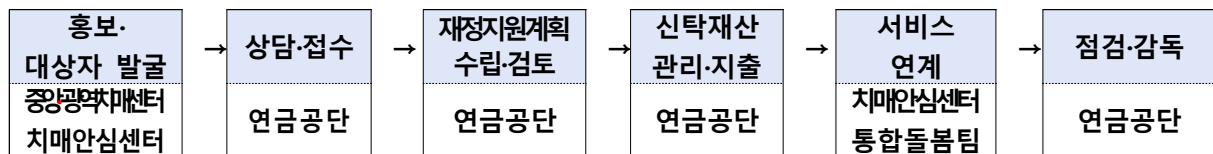
□ 극복방안

- 전 대체자산(인프라, 부동산, 사모 등) 대상 ESG 통합전략 방안 마련하는 등 수탁자책임 활동 확대 적용을 위한 기금운용지침 개정(기금위) 등 지원
- 위탁운용사에 위임한 의결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탁운용사 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추진 (~'26)
-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 강화,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미비한 기준 보완, 기업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이행력 강화 (~'26)

6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91·신규사업)

- (개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학대·재산갈취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생활비 등에 지출되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치매환자 본인 및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은 이에 근거한 의료비 지출, 필요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 관리·지출 지원

<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절차 >



□ 그간의 경과

- 재산관리지원서비스(공공신탁) 실행모델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 마련('23~'25)
- 정부 국정과제 91에 “치매 어르신 등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포함('25.9.16.) 및 시범사업 운영 예산 확보*('25.12.2.)

□ 장애요인

- 사업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 예상

□ 극복방안

- 대상자 확보를 위해 중앙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과 협력을 통한 수요자 발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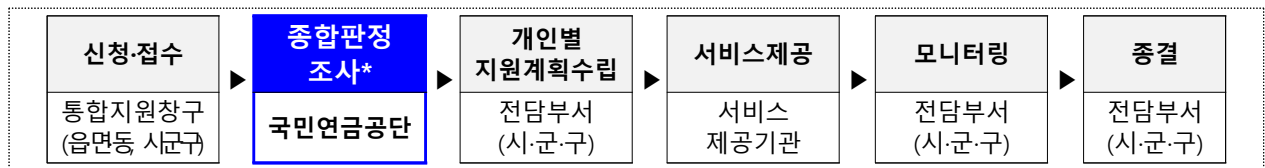
7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행(78·신규사업)

- (개요) 노쇠·장애·질병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에게 사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 통합제공('26.3월 시행)

* [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 공단에서는 지자체(대전·광주)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25. 7.~)

< 업무절차 > 공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판정 조사



* 신청자의 의료·돌봄 필요도와 이용을 희망하는 서비스 파악(5개 영역 40개 항목)

□ 그간의 경과

- ('24.11.~)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65세 미만 장애인으로 확대 추진
- ('25.1.~) 대상자 확대를 위한 판정도구 및 업무 매뉴얼 마련
- ('25.7.~)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 * ('25.7.) 4개 지자체(대전^{유성,대덕}, 광주^{서구,북구}) → ('25.12.) 19개 지자체로 확대(15개 추가)

- (예상쟁점) 사업시행 초기에는 서비스 신청 인원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사업 안정화 단계에서는 신청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발생

□ 극복방안

- 참여지역 확대를 통해 차질없는 본사업 시행 준비
 - ※ ('25.12.29.) 15개 시군구 추가 → ('26.3월) 40개 지역 확대 예정
-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홍보('26.2분기) 및 지역자원 지속 확보(정부 추진)
 - * 장애인단체,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 대상 사업설명회, 개별 안내문 발송 등
- 서비스 이용 증가에 맞추어 적정인력 추가* 확보 추진
 - * '26년은 정규인력 20명 확보 완료, 본부 2명·지사 18명('26.7월, 거점지사 18개소) 배치 예정
- 외부전문가* 활용, 전 지사 판정조사 교육('26.1분기, 3분기)
 - *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의 전문인력(복지부 협조)

8 AI 기반 연금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AX 추진(21)

- (개요) 정부의 국정목표* 추진전략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발맞춰, 공단은 ‘공공기관 중 AI를 가장 잘 쓰는 기관’ 구현 목표

* 국정목표(2번)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국정과제(21번)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 그간의 경과

- (추진체계 구성) ‘디지털혁신부’ 신설(1.1.), AI 중장기^(‘25년~’29년) 계획수립·추진(7.3.), AI·혁신 추진단(단장 기획이사) 구성·운영*(국정과제 발표후)

* 인공지능책임관(CAIO: Chief AI Officer) 지정, NPS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등 검토(~’25.12.)

- (AI 서비스 개발) ①정부 공모사업 AI수어*, AI쉬운말** 등 5개 서비스 구현
②연금청구 AI영상도우미, 진료기록지 판독지원 시스템^{근로능력평가} 등 개발

* AI 아바타를 활용, 장애심사 안내(구비서류, 업무흐름도 등)를 위한 수어영상 제공

** 복잡·어려운 국민연금 제도·법률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변환하여 안내문에 반영

- (AI 역량 강화) AI 아이디어 공모전 통한 AI 인식 제고 및 AI 리터러시 교육*, AI사업관리 및 모델설계 등 전문가 양성 추진

* (IT직원) ‘AI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사·본부) ChatGPT 활용 실무역량 강화 교육

- (장애요인) 다양한 AI서비스 개발과 공단 특화 AI 등을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가 필수적이나 보유 수량* 절대 부족

* 공단은 GPU 8장 보유, 기금운용 AI 도입에 전량 우선 투입·활용 중(’25.1월~)

□ 극복방안

- (GPU 등 자원확보) 과기부 주관 국가프로젝트 공모 참여 등(’26.1분기) 정부 자원 활용 공모사업 지속 참여(’26.4분기 까지)
- (AI 거버넌스 완성) 전사 AI 의사결정 기구 마련(’26. 상반기), AI 사업·데이터 관리체계 등을 포괄하는 AX 체계 구성(’26.4분기 까지)

9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8년) 준비

□ (개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상태 점검을 위해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제도와 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 6차 재정계산('28년) 대비 2026년부터 관련 준비 필요

* 재정추계 실시 연도에 시행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도 함께 준비

<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그간의 경과) 2003년 1차 재정계산 이후 2023년 5차 재정계산까지 5차례 실시하여 2차례 연금 개혁* 단행

* '07년 연금 개혁(소득대체율 하향 조정(60%→40%))

** '25년 연금 개혁(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41.5%→43%), 크레딧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

□ (예상쟁점) 6차 재정계산은 2025년 연금 개혁 이후 첫 재정계산으로 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제반 환경변화 분석에 대한 수요 증가

□ (극복방안) 6차 재정계산에서 '25년 연금 개혁의 제도변화와 재정추계의 여건 변화 반영 및 국민연금 제도 관련 경제 분석 연구* 수행

○ (제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구 등 가입·급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추계) 연금개혁, 인구구조 변화, 기술 진보 등 국민연금 재정전망 기초가 되는 데이터 분석 등

○ (기금)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목표 설정 및 투입요소별 (제도/기금/재정) 고려와 실행방안 검토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72개 기관 중 최고 수준 달성
 - '24년 2등급(양호) 달성으로 전년도 3등급(보통) 대비 향상
 - * 72개 기관 중 1등급 기관 無, 2등급 기관 총 20개
 - 공무원 법정선임 안전관리자 '특수직무·역할급' 도입, 작업별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 내실화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 강화
 - 질병 유소견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직무별 심리 진단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근로자 정신건강 지원 중점 추진
-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 철저 예방
 - 고위험 공사 현장 대상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NPS 안전패트롤'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발생 ZERO
 - *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장, 부산사옥 엘리베이터 공사 및 인재개발원 신축 현장 총 16회 점검
 -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본부사옥 '공간안전인증'* 최초 취득 및 전체 사옥 담당자 결과 공유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 * 소방청 감독·(사)한국안전인증원 주관 국내 유일의 기업 자율안전 평가제도
- 리튬배터리를 외부 전용공간으로 이전하여 화재 발생 시 전산실 확산 차단
 - 열폭주 위험 리튬배터리를 건물 외부 전용 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이전하여 화재 발생 시 전산장비 피해 원천 차단 및 진압 용이
 - * (1차) 11.29일(토) / 2차12.6일(토) 2회 실시를 통한 정상 이전 완료
 - 외부 배터리실에 센서(온·습도, 화재 감지, 누수 등)* 및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관제 및 온도변화 시 담당자 알림 체계 구축
 - * 열·연기 감지 시 ① 산소 공급 차단 초기 진화 → ② 잔열 냉각
 - 배터리 이전 시에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 하여 덕진소방서 소방 장비 및 인력 현장 지원으로 사고 예방 및 무사고 이전 완료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국내·외 우수 금융기관의 전주사무소 유치
 - '19년부터 누적 16개*의 국내·외 금융사 유치, '25년 5개 유치
- '전북 국제 금융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금융행사(지니포럼) 개최
 - 글로벌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금융산업 발전 방안 모색
-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상생·협력
 - 소멸 위기 지자체(임실)와 자매결연 체결로 상생 소비 활성화
 - * 임실 특산물 구매(16백만원), 직거래 장터(치즈구매 420만원, 고향사랑기부 85건)
 - 판로지원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기업 매출 증대
 - * '연금이네 장터', 출장 세차·세탁 등 영업 공간 무상지원('25년 매출1,650만 원)
- 비수도권 최초 전북형 창업이민 플랫폼 구축 지원
 - 로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협업으로 외국인 (예비)창업 아카데미(19팀) 운영 및 해외 유망 스타트업 지역 정착 지원(5개사)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국민연금 온에어(자체 플랫폼), SNS(5개) 및 구독매체(뉴스레터·웹진) 운영 및 채널을 활용 제작 콘텐츠 확산
- '국민연금 바로알기' 캠페인의 전사적 추진('23.4.~)
 - 전국 지사의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면교육, 행사·축제 참여, 이해관계자 및 언론매체 활용, 미디어보드 등 활용 생활밀착형 홍보
 - 온라인 전용 페이지('24.8. 오픈)를 통한 핵심정보 콘텐츠 제공
- 핵심 이해당사자인 청년층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
 - (대학생 홍보대사) 정기회의(교육) 및 미션 활동으로 창의적 홍보 아이디어를 발굴·실행하여, 제도·기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
 - (청년 미디어랩) 청년의 관심사·선호를 반영한 홍보를 위해 '청년이 청년에 대한 홍보방안'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장종태 · 한지아 의원 등]

- (주요내용) 노인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필요(김예지 · 한지아 · 서영석 의원)
- (개선계획)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상향*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국민연금법 개정 '25.12.16. 시행 '26.6.17.)
 - * (현행) A값(월 309만원) 초과 시 감액 → (개선) A값+200만원(월 509만원)
 -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사례집(Q&A) 배포
 - (2025년 소득) 국세청 소득확정 자료 기반으로 소득이 509만원 이하가 확인된 경우 정산하여 환급
 - (2026년 소득) 개선된 소득기준 이하인 자는 기존 및 신규를 불문하고 '26.1.1.부터 감액 대상자에서 제외

②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인력 확대 및 제도개선(김예지 · 서미화 의원)

- (주요내용)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시 1인 출장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민감성 질문 등 장애인의 불편 및 조사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
- (개선계획) 적정인력 확보 및 제도개선 TF(복지부) 참여
 - 정책 당국과 협력하여 2인 1조 조사가 되도록 적정인력* 확보와 함께 조사원의 남녀 성비 불균형 완화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제도개선 TF(복지부)* 참여하여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

* 장애인단체, 학계장 전문가, 복지부 등 총 15명 구성, 월 1회 정례회의 실시('25.11월~)

③ 기금운용본부 우수인력 유치유지 노력 (서명옥·장종태 의원 등)

- (주요내용) 운용성과 제고 위한 운용직 처우개선 방안마련 요구 등
 - 운용직 이탈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우개선, 정주여건 개선, 장기 조직 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요구 (서명옥·장종태 의원 등)
 - * 국정감사('25.10월) 서명옥·장종태·김미애 의원 등의 지적 및 VIP 발언('25.9월)

※ (참고) 운용직의 보수수준은 민간시장 대비 상위 50% 수준*

* 운용직 기본급은 기재부 지침(총인건비)에 따라 시장 임금인상률의 절반수준인 공공기관 공통 임금인상률 적용하여 격차 발생

- (개선계획) 운용직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 등 개선
 - 기본급과 달리 총인건비 인상률 적용을 받지 않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시장상위 25% 수준 이상으로 총보수 수준 상향('25.3월, 기금위)
 - 민간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해외사무소 근무* 및 연수기회 확대
 - * 해외사무소 근무 후 복귀 시 퇴직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해외 장기근무 (5년 → 10년 이상)가 가능한 해외사무소 전문인력 제도 도입
 - 기금운용 조직의 특수성·전문성 등을 감안,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 추진
 - *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만으로는 보수 수준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처우개선 추진 예정

④ 중증장애인 평균수명을 고려한 노령연금 조기수급 (김예지·서미화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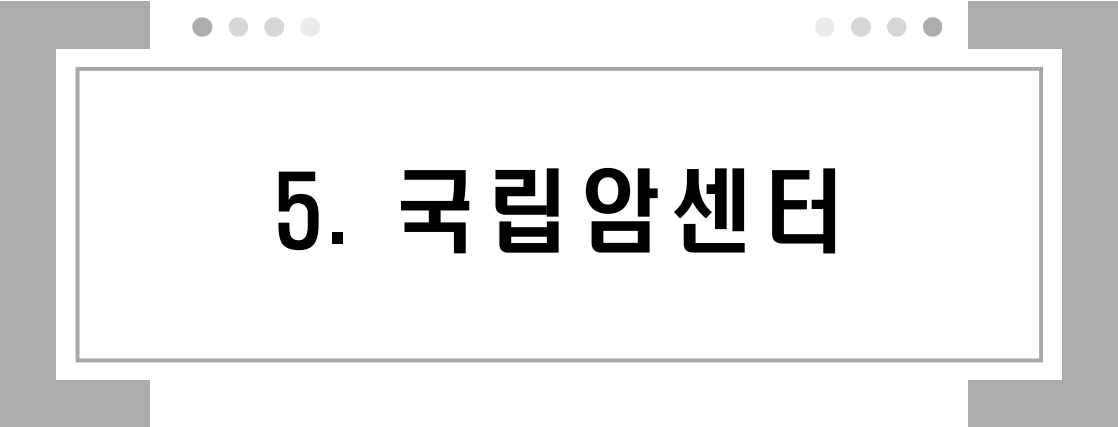
- (주요내용) '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 타당성 검토 및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2026년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수행될 예정임
- (개선계획)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 일정 등은 다음과 같음
 - 2026년 5월경: 중간보고
 - 2026년 8~9월: 1차 및 2차 정책협의회
 - 2026년 10월말: 감독용 보고서를 제출하면 3명의 내외부 감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12월경 최종보고서 제출

□ (주요내용) 우수한 인재 유치·유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선

- 기금 수익률 향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유치·유지가 필수적이며, 총보수의 시장 상위 수준으로의 상향 추진 필요
 - 성과급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기본급 총합 × 성과급 지급률”을 “기본급 총합 1.5 × 성과급 지급률”로 개선
(‘26년 성과급 지급분부터 적용)
 - *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 (‘25.3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 (향후계획) 기금운용 조직의 특수성·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 및 해외사무소 근무, 연수기회 확대 등 추가적인 방안 마련 검토

- 민간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해외사무소 근무 및 연수기회 확대
 - 안정적 사무소 근무 지원 및 해외 투자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해외 장기근무(5년→10년 이상)가 가능토록 해외사무소 전문인력 제도 도입
 -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현지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 ‘25년 기준 해외기관 지식전수 프로그램 등 6개 과정, 연인원 94명 교육 이수
- 우수인재 유치·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 지속 검토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thick, grey L-shaped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brackets, there are two horizontal rows of four small grey dots each, positioned above and below the central text box.

5. 국립암센터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2 인원 현황

(단위 : 명, 2026. 1. 1. 기준)

구분	계	원장	연구직	교원	의사직	의학 물리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사무직	업무직
정원	2,355.1 (64)	1	157 (64)	20	106	6	896	33	253	54	126	703.1
현원	2,297.2 (58)	1	148 (58)	17	97	6	906	26	246	51	132	667.2

※ () : 진료를 겸하는 연구직인 의사수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673,451	682,217	8,766	1.3
□ 연구소·사업본부	146,304	151,349	5,045	3.4
□ 부속병원	521,741	525,235	3,494	0.7
□ 국제암대학원대학교	5,406	5,633	227	4.2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국가 중앙 암관리기관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암관리 성과 견인

- (암관리 성과) 보건복지부와 협력·지원하여 25년간의 노력으로 암발생 대비 사망률 지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암관리 성과에 기여

* 위·대장·유방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전 세계 185개국 중 가장 낮아, 우리나라 암관리 체계의 우수성 입증 (출처: 국제암연구소 GLOBOCAN 2022)

□ 암전문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기반 구축 및 공익적 역할 강화

- (World Best 암전문병원 세계 40위) 고난이도 진료 및 탁월한 연구성과 창출 등 암 진료·연구에 있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 강화

* 美 뉴스위크 발표, 2025 암분야 월드 베스트 전문병원 세계 40위 선정(국내 6위)

- (임상연구 중심) 우수한 진료역량 토대 암 전문진료 제공 및 표준치료의 향상을 위한 임상 연구 추진 및 신의료기술 테스트베드 역할

* 국내 최초 로봇 기관지내시경 도입시 기존 진단치료방법과 비교연구 병행하여 임상 근거 마련

- (한국형 암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지역암센터, 병원, 학계, 협회 참여 네트워크 구축, 협업을 통해 근거기반의 표준화된 암진료 가이드라인 제시

* 암종별 15개 학회 참여, 18개 암종에 대한 표준 암진료 가이드라인 제정(성과발표회, '25.11월)

- (암진료 특성화 기반 구축) 노후 시설 교체를 통한 환자안전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 무균치료, 희귀암 치료 등 공익적 목적의 병상 확대 추진('20~'26)

*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리모델링 추진 중('26.1월 준공 예정)

- (지역·필수의료 위기극복 지원) 지역사회 암 진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의료장비비 지원사업* 지원 및 경기권역 소아암거점병원 역할** 수행

*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사업 : '25년 3개소, 국비 총 36억원 지원

** 소아암 세부 전문의가 없는 강원대병원에 전문의 파견('25년 총 230명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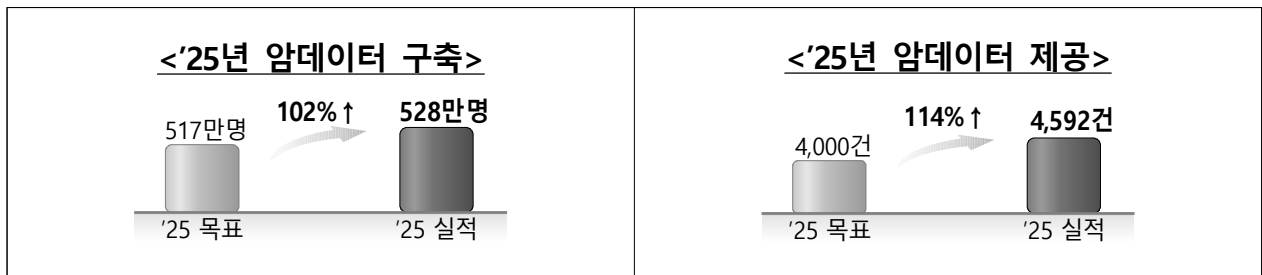
□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으로서 근거기반의 국가암관리 정책 수립 지원

- (암정책기관 역할 강화) 정부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1~'25) 중추역할 수행 및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6~'30) 수립 지원

* 암환자 5년 생존율 획기적 증가(1993~1995년 42.9% → 2017~2021년 72.1%)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치료성적 등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암관리사업 성과 창출 기여

- (암빅데이터 구축·개방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암 통합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암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연구기반 확산

- *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암 정밀의료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착수
- * 국내 의료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ISO/IEC 42001) 획득으로 인공지능 선도기관 입증
- *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701) 등 6개 인증 획득



- (국가 암통계 산출) 표준화된 암등록자료 수집 및 시의성 있는 통계 산출

* '23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암유병률 발표 예정(보건복지부, '26.1월 말)

- (암검진 권고안 개정) 최신 과학적 근거를 반영, 암검진 효율화 방안 제시

* '25년 대장암, 위암, 간암 국가암검진 권고안 개정

□ 첨단 암 치료제 및 암 예방·진단·치료·예후관리 기술 개발

- (혁신치료제 개발 착수) 고형암 치료용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개발 연구단 출범, CAR-T 등 차세대 혁신 항암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개시

- * 국내 산학연 공모를 거쳐 CAR-T 임상연구 등 신규과제(6개) 선정, 연구개시('25.7월)
- * 국내 인프라 부족으로 치료제 개발에 가장 큰 난관이 되고 있는 바이럴 벡터(유전자 운반체) 등 임상시료 생산시설 구축 및 위탁 생산으로 치료제 개발 가속화 지원

- **(암관리·암치료 근거 제시)** 암 예방·진단·치료에 대한 혁신적 기술개발 및 지속적인 국내 산학연 암연구 지원을 통한 암연구 역량 강화
 - * 국립암센터-(주)뉴캔서큐어바이오 공동개발 항암제, 세계 최초 국산신약 임상 1상 성공
 - * 국립암센터, 한국 자궁경부암, 2034년 조기 퇴치 가능성 제시
- **(암 연구자원 공유 강화)** 바이오뱅크 운영을 통해 암 관련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위한 검체 자원(종양조직, 혈액 등) 10,806건 분양 지원('25)

□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글로벌 암관리 리더십 확대

- **(K-NCC 전파)** 개발도상국 의료진 교육연수 등 글로벌 암관리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지원
 - * 코트디부아르 국립암센터 건립 관련 현지 인력파견 및 교육연수 연계 협력 추진(연중)
 - * 20년 양성자치료 노하우 카자흐스탄에 전수로 중앙아시아 최초 양성자치료 개시
- **(국제기구 협력)** WHO(세계보건기구), IARC(국제암연구소), UICC(국제암연맹), ANCCA(아시아국립암센터연맹) 등과 국제 암관리 정책 논의, 공동 연구 수행
 - * WHO WPRO Regional Forum 참석을 통한 국제 암관리 정책 논의 참여(11월)
 - * UICC World Cancer Leaders Summit(11월), UICC Technical Fellowship(11-12월)을 통한 글로벌 암관리 리더십 강화
 - * ANCCA 활동 주도를 통한 아시아 암예방 정책 리더십 확보(연중)
- **(글로벌 연구·기술협력)** 국제 공동 암연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연구원 등과 국제 건강 데이터 스페이스 이니셔티브 출범(7월), 2025 국립암센터 국제 위암 세미나 개최(9월), 호주 Peter MacCallum Cancer Centre 방문 및 협력 논의(11월)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 암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암 표준 진료와 암정보 제공
- 중환자실 운영 개선, 당일 전용 수술실 신설 및 항암 낮병동 활성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환자중심 진료 기능 강화
- 신규 양성자치료기 도입, 노후 의료장비 교체 등 암진료 기반 강화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부합하는 국가 암관리 구현

- 지역 암 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 암관리기관 역할 강화
- 고품질 암데이터 생산 및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암 데이터센터 역할 강화
- 암 모니터링 지표 확대, 맞춤형 암예방 지침 체계화, 암검진 권고안 개정 등 암관리체계 고도화
- 암생존자, 호스피스 등 국민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정책 확대
- 희귀암진료 강화, 호스피스 병상 확대 등 공백 없는 암진료체계 구축

□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위한 글로벌 암 연구 역량 강화

- 암데이터 글로벌 허브로 데이터·AI 혁신 선도
- 고형암 치료용 혁신적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임상개발 가속화 및 초고령화 시대 암환자 치료·관리 연구 확대 기반 마련

□ 글로벌 암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 직종별·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암환자 케어 인력 양성 과정 확대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대외협력사업 발굴 확대
- 적극적인 암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참여로 암 분야 국제협력 주도

Ⅲ. 중점 추진과제

①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 암전문기관 기능 강화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암 표준 진료와 암 정보 제공

- 효과·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비급여 암 치료제 등을 평가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국민과 의료계에 투명하게 공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과 협력하여 근거 평가 수행, 근거가 부족한 치료제·보완대체제 등 사용에 체계적 대응

- 국가암지식정보센터를 통한 근거기반 암정보 생산, 허위정보 모니터링·팩트 체크 제공으로 국민의 암정보 길잡이 역할 수행

*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의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올바른 암 정보 생산과 유통을 위한 역할 강화

□ 항암제 실제 효과 기반의 재평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국민건강보험자료·암등록·사망자료 등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규 등재 항암제의 임상 현장에서의 실제 효과 평가 실시
- 기대 대비 효과성이 낮은 항암제의 사용 적정성 검토 등 불필요한 약제 사용 감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

□ 암치료 표준 정립 및 암 전문 특화 기능 강화

- 근거중심 암치료의 표준을 정립하고 새로운 약제, 기술로 암치료의 표준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임상연구 중점 추진

* 국내 최초 로봇 기관지내시경 도입시 기존 진단치료방법과 비교연구를 병행하여 임상 근거 마련

* 임상성과지표 선정·관리·공개 추진

* 암진료가이드라인 제·개정, 암검진 권고안 개정, 암 보도 가이드라인 논의 등

- 희귀암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 및 임상연구 활성화로 공백 없는 암 진료체계 구축

* 희귀암진료부 육종암센터 신설·운영 등

- 당일 전용 수술실 신설 및 항암 낮병동 활성화로 암환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감소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 * 당일 전용 수술실(2개) 신설('26)하여 당일 수술 가능한 분야 신속 시행, 기존 수술실은 중증 암환자 수술에 집중
- 신규 독립형 양성자 치료기 도입* 및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통한 암치료 기반 강화
 - * 양성자치료기 추가 운영('28)을 통해 적응증, 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 창출 지속
 - ** 내구연수 초과 의료장비 교체로 암진단·치료 정확도 제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절감
- 중환자실 운영 개선 및 응급대응 역량 강화로 암환자 안전 도모
 - * 중환자실 병상 확충 및 인프라 개선, 신속대응팀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
- 암환자 감염 예방 및 간병부담 절감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 호스피스병상 제외한 전체 일반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26년 2개 병동 확대)

2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부합하는 국가 암관리 구현** ---

- 지역 암 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 암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국립암센터-권역암센터 다기관 협력 연구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추진, 지역 암 진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의료장비 지원사업* 지속 지원
 - *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사업 : '25년 3개소, 국비 총 36억원 지원
 - 중앙 암관리기관으로서 역량 있는 지역 퇴직의사를 활용하여 권역 암센터의 암 치료 역량 강화*
 - * 국립암센터는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소아암 세부 전문의가 없는 강원대병원에 국립암센터 전문의(서울대병원 퇴직 전문의)를 파견하여 외래진료 등 실시
- 국가 암관리 고도화 지원
 -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6~'30)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수행 및 암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원

○ 국가암데이터센터로서 암데이터 통합·연계 및 개방 플랫폼 고도화

* ('26년 목표) 암데이터 구축 누적 환자 538만명, 암데이터 제공건수 4,200건

* 다기관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패널 데이터 수집('25~'29)

○ 국가 암통계 지표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발생률이 높은 4개 암종(간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료변수 확대
('25) 간암(표본자료) → ('26) 간암, 위암 → ('27) 유방암, 대장암 → ('28)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위험요인 기여도 분석 기반 개인·집단 맞춤형 암예방 지침 체계화 및 예방정책 근거 강화

* 소아청소년 암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흡연예방, 건강체중 유지, 건강한 식생활) 발간

○ 의료환경 변화,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국가암검진 권고안 개정

* ('25) 대장암, 위암, 간암, ('26) 폐암, 유방암, ('27)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서 표준화 프로그램 제·개정 및 배포, 연례보고서 발간 등 우수사례 홍보 강화

* 암생존자 임상데이터 구축을 통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활성화

* 암생존자통합지지실 및 암환자사회복지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암생존자 지원 활성화

○ 중앙호스피스센터로서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지원, 전문인력 교육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강화

○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호스피스 제공인력 교육 확대로 말기암환자 돌봄 강화

*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 확대 : ('25) 13병상 → ('26) 18병상(+5병상)

○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강원 지역 소아청소년 암환자 진료를 지원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 소아청소년암환자가 지역 내 거점병원 중심으로 진단-치료-사후관리 받을 수 있도록 강원대병원에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암 전문의 파견, 외래진료 지원, 의료진 교육 등

- 저소득 환자의 첨단 치료기회 제공 위해 양성자치료센터 치료비 지원 지속
 - * 저소득 소아 및 성인 환자에 대한 경제적(발전기금 후원 등) 지원 : '25년 662명, 22.1억
-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지체계 활성화
 - * 암환자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암경험자 취·창업 및 사회활동 역량 증진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돌봄사업 추진 등

③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위한 글로벌 암 연구 역량 강화

□ 암데이터 글로벌 허브로 데이터·AI 혁신 선도

- 고품질 암데이터 생산 및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암 데이터센터 역할 강화
 - * 다기관 NGS 패널 데이터 수집('25~'29, 표준화된 8만명 이상의 임상-NGS 빅데이터 구축)
 - * 유럽 암데이터 허브인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과 협력 등 암빅데이터·AI 활용 공동연구 확대
- 개별 암환자 데이터와 AI를 통한 맞춤형 진단·치료 제공 및 예후 예측 기술 고도화 등 데이터·AI 혁신 유도
 - * AI사업단 확대·개편 및 멀티모달 학습 가능한 AI 플랫폼 구축 등

□ 혁신 암연구 강화

- 고행암 혁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 * 뇌암 CAR-T세포치료제 임상연구 추진 등
- 초고령화 시대 대응 암환자 치료·관리 전략 마련
 - * 고령 암환자 특성을 반영한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노화기전 기반의 암발생·진행 규명 및 노화 특이적 항암 표적발굴 연구 추진(신규 R&D)
 - * 65세 이상 암 유병자는 약 130만명(전체 유병자의 50.3%)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7명 중 1명에 해당('22년 기준, 국가암정보센터)
- 희귀·난치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립암센터 중심 지역암센터 다기관 협력 연구 추진

4 암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암 전문인력 양성으로 의료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

○ 분야별·직종별 암 전문인력 수요를 고려한 암전문 교육과정 확대

- * 종양전문 약사, 간호사, 임상영양사, 의학물리학, 세포병리사 등 분야별·직종별 전문과정 운영
- * (신설) 종양전문의료사회복지사, 국제장루창상실금전문간호사 등

○ 국내 및 저개발·개발도상국 대상 특화된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학위 과정 운영 통해 글로벌 암 전문가 지속 양성

- * 보건AI학과 및 암의생명과학과 석·박사 과정 운영 및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5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적 위상 강화

□ 글로벌 암관리 협력 고도화를 통한 국제 보건의료 선도체계 구축

○ 국제기구, 국제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 및 암관리 지원 강화, 국가암관리모델의 글로벌 확산 추진

- * WHO WPRO CC 활동, IARC HELPER 공동 연구 후속조치 추진, UICC 지속 참여 및 공동사업 발굴, ANCCA 활동 주도 및 아시아 암예방 정책 공조 강화
- *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과 '국제 건강데이터 스페이스 이니셔티브' 협력 등

○ 암 선진 노하우 기반 K-NCC 전파를 위한 국제 보건의료 협력사업 확대

- * 코트디부아르 국립암센터 건립(26년 완공 예정) 관련 현지 인력파견 및 교육연수뿐만 아니라, 현지 암관리 역량 강화로 확산(코트디부아르 전립선암 조기진단 역량 강화 사업)
- * KOICA, KOFIH 등과 연계한 자원 다각화 및 사업 구조화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중대재해 Zero 달성)** 일상 속 안전 문화 확산,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로 사업장 산업재해 無, 안전사고 사망자수 0건 달성
 - (현장점검 강화) 기관장 주도 고위험 건설현장 점검, 주 1회 경영진 참여 안전 지도, 노·사 합동 안전 점검 및 외부전문가 점검 실시
 - * 직원 생명보호 및 안전보건 문화조성 기여로 대한산업안전협회 표창 수상('25)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ISMS-P(정보보호체계 인증)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한 관리적, 기술적 보호체계 확립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A 등급 획득
- **(사이버 재난 선제 대응)** 사이버공격 및 재해재난으로 인한 데이터 소실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24^{시간}/365^일 안전 정보보안체계 운영
 - 멀티 시스템실 체계를 활용한 4단계 백업체계 운영, 보안 취약점 발생 예방 및 선제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관제, 인프라 개선·고도화*
 - * 네트워크 통제, 개인정보노출진단 등 노후 장비 13종 교체 및 도입완료('25)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암경험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암경험자와 가족의 자조 및 돌봄 활동 등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조직 설립 및 활성화 지원('25~)
 - 암경험자 주도의 자조·돌봄을 통해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설립부터 서비스·제품 개발, 판로개척 등 활성화 지원
 - * 암경험자 사회연대경제조직 설립 목표 : ('25년) 2개 → ('26년) 3개 → ('27년) 4개

- **(지역 암생존자 사회복귀 지원)** 권역암센터의 표준화 프로그램을 통해 암생존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건강증진 및 직업복귀 준비교육 시행
 - 지역기반 암생존자 직업복귀 지원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및 각 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연계·협력 확대 추진('26)
-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협력)** 기관 보유자원(연구소, 병원, 데이터 등) 활용 방안 모색, 산·학·연·병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 바이오·의료 융합 산업 육성계획 추진 지원
 - * 국립암센터-K-바이오랩허브 추진단 AI-Bio Forum 공동 개최('25.12), 고양 바이오 클러스터 추진 협의체 참석 등
- **(공공의무구매 적극이행)** 투명한 공정거래 문화 기반의 공공구매 실천 및 상생협력 내실화 추진
 - 의료기관 특성 상 구매물품 한계에도 공공의무구매 실천 노력 지속으로 중소기업, 녹색제품, 여성기업(공사, 용역) 등 우선구매목표 달성('25)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국민 암정보 길잡이)** 국가암정보센터를 통해 근거기반 암정보 생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유통·전달 및 허위정보 모니터링·팩트 체크 제공
 - * 다양한 매체 활용한 암정보 및 교육자료 제작·확산, 암 관련 건강정보 생산과 유통에 관한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 * ('25) 암 콘텐츠 조회수 5,176,369회, SNS 댓글 상담 153건, 검증제안 89건
- **(홍보 강화)** 기관 홍보역량 강화를 통해 올바른 암정보 전달 및 기관의 공공성, 전문성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강화 노력 추진
 - * ('25) 언론홍보 9,385건('24년 대비 2.3배 증), 유튜브 구독자 21,554명('24년 대비 29% 증)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노후 의료장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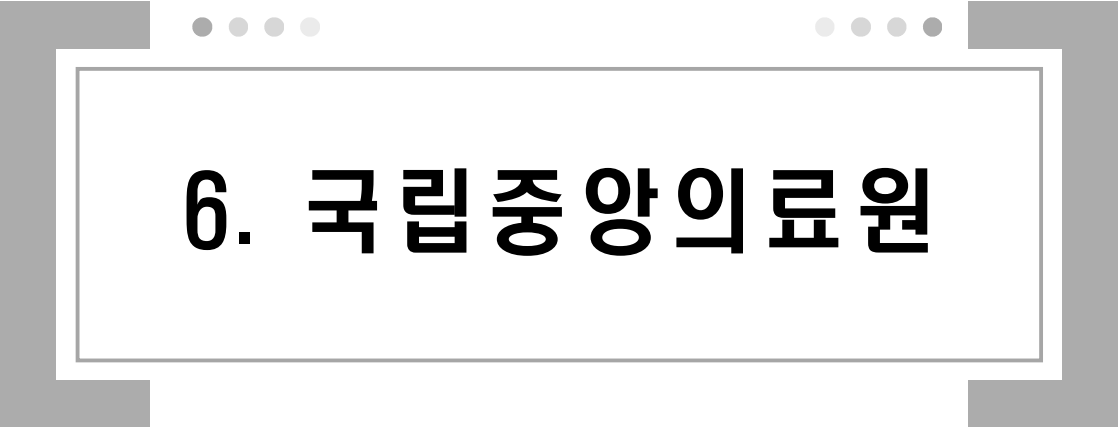
- 국립암센터 노후 의료장비를 개선할 것
- (개선계획) '26년도 MRI 신규 장비 도입 예정 등 노후화율 개선 예정
 - 매년 1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의료 장비 교체하고 있으나 고가의 비용 소요로 자체 예산 한계 존재. 정부지원 확대 필요

② 국가암데이터센터 분석 인프라 확충

- 국가암데이터센터 분석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암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개선계획) 고품질 암데이터 생산 및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가암데이터센터 역할 강화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암AI데이터구축**'을 통해 글로벌 공동연구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 추진 계획
 - * 유럽 암환자 데이터 허브인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과 협력 추진 등
 - ** '24년 ISP 완료, '27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③ 장애인건강검진 필수장비 구비

- 장애인건강검진 필수장비 구비계획 수립할 것
 - *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 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영상확대 비디오, 대화용 장치, 점자프린터, 성인기저귀 교환대, 이동형 침대
- (개선계획) '25.12월 구매계약 완료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a large gray bracket on the left and right sides, enclosing a white rectangular area. Above the white area, there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ay dots,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6. 국립중앙의료원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 '국가 감염병대응체계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방산동 부지로 신축·이전 추진(~'30)

* 중간설계('25.6월말),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25.10월말)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완료('25.12월말)

-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HIS) 표준 플랫폼 구축 및 단계적 확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국립중앙의료원과 2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표준 플랫폼 실증('27년 예상)을 추진하여, 레퍼런스 모델을 마련할 예정

□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내부 혁신 및 우수의료진 영입을 통한 진료 활성화
 - 연초대비 입원환자수 32% 증가, 로봇수술 최초 도입, 홈페이지 예약 서비스 개시 등

-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중 비상진료 체계 운영으로 의료공백 예방

- 외상, 호스피스 등 필수 공공의료 강화

- 외상전담 마취·척추 전문의 확보로 외상센터 활성화, 간병인력 신규 배치 통한 호스피스병동 활성화 등

- 공공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남원의료원, 국군의무사령부, 국립암센터 등과 인력교류·교육지원 등 연계협력 강화

□ 국립중앙의료원의 정책 지원 기능 강화

- 「제3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연구 수행
- 공공병원 기능보강 기술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보건복지부-시·도-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지원
-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공공의료정책망, 정보망, 연계망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정책지원
- 중증도별 기능·역할을 반영한 모자의료 사업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및 정보시스템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근거 기반·인프라 확충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 체계 강화
 - 추정 치매 유병률 및 치매환자 수 등 치매 관련 최신 통계 생산
 - 치매안심병원 25개소 지정 및 운영관리, 국립요양병원 기능보강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치매관리시행계획 시행 결과 평가 등

□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양성 및 확보

-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력 파견(순환)근무 등 배치 지원
 -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의료취약지 보건(지)소·보건의료원 등 의료 인력 부족 지역에 시니어의사 매칭 및 채용 지원
 -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국립대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으로 파견 보낸 의료인력의 인건비 지원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예비의료인부터 공공병원 의료진, 시니어의사 재진입 교육까지 현장 수요와 필요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 지역 및 공공병원 특화 교육을 위한 맞춤형 방문교육 및 컨설팅 등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근거개발 연구 수행
 -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체계 구축, 직무 및 역량진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도구 개발 등 내외부 연구진을 통한 과제 수행

□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인프라 확충

-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등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 마련
-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수용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운영 및 전국 6개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운영
- 최종 치료 가능 기관이 부족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전국단위 야간·휴일 순환당직 체계 구축·운영
 - 소아 중증응급질환 야간·휴일 진료 참여기관 확대 필요
- 응급의료 취약지 대상 원격협진(취약지 응급실 - 자문기관) 및 진단 지원을 위한 영상 판독지원 사업 시행
-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중증도에 따라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연계) 및 모자의료 전원전담팀 설치·운영

□ 감염병위기 대응체계 개선

-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 팬데믹 시 감염병전문병원에서 감염병 대응 병상·자원·인력을 실시간 파악하여 병상 배정 및 전원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 감염병예방법('25.4.1.) 및 동법 시행령('25.9.30.) 개정: 의료자원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유관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간 업무 논의 진행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지원 및 운영비 지원모델 마련 중
 - * 감염병전문병원 운영비 추계 및 지원방안 수립, 유관기관 의견수렴 예정('26.1) 등
-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으로 중앙-권역-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시도 및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등 감염병 대응 유관기관 간 주요 현황 공유 및 조정기능 강화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역량 강화

- 상급종합병원 수준 시설·장비 현대화 및 우수 인력 확보
- 공공의료 AI 생태계 구축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강화, 로봇수술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의사직 보수체계 지속 개선 및 보완으로 의료진 동기 부여

□ 국립중앙의료원 정책지원 및 공공의료 인력양성 기능 강화

- 「제3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추진, AI기반 정책역량 강화
- 모자의료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DB 연계 강화
- 파견의료인력 및 시니어의사 지원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 치매환자의 자립·건강 지원, 지역사회 돌봄에서의 맞춤형 지원 강화

□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인프라 확충

- 맞춤형 이송·수용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이송지침의 실효성 강화
-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연 문제 개선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업무 확대·강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업무 확대
- 응급환자 이송·수용 강화를 위한 현장-병원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AI솔루션 도입 검토

□ 감염병위기 대응체계 개선

- 감염병 대응 의료자원 관리 등 위한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연구용역 추진, 중앙감염병병원 ISP 예산 확보 및 ISP 수립, 법률 및 시행령 재개정
- 위기 시 가동 가능한 적정 병상 규모 파악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신속 구축 및 운영 지원체계 마련

Ⅲ. 중점 추진과제

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국정과제 84]

□ 신축·이전 사업개요

- 목적: 감염병, 응급, 외상, 재난 등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기능 수행 및 역할 확대를 위해 신축·이전 사업 추진
- 사업규모: 총 776병상(본원 526, 중앙외상센터 100, 중앙감염병병원150)
- 총사업비: 1조 8,346억원 + α (기부금 운용소득 발생규모에 따라 변동예정)

□ 신축·이전 추진경과

- ◆ '20년, 원지동 → 방산동으로 신축이전 부지 변경 결정
 - ◆ '21년, 故 이건희 유족 측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목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5천억원 기부
 - ◆ '23년, 설계 공모 및 당선작 선정, 설계 착수(계속)
 - ◆ '2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신설)
 - ◆ '25년 6~10월,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 ◆ '25년 11~12월, 정책지원센터 설계비(13억원) 확보, 총사업비 조정·협의 완료
- ☞ 적정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향후 일정의 차질없는 이행 가능

□ AI-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 공공부문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공통 모듈(기능)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개발하고, 내·외부 시스템·기관 간 연계·실증 추진
- 2026년 병원정보시스템 공통 플랫폼 개발 후, 2027년 국립중앙의료원과 2개 지방의료원 대상으로 실증(파일럿) 추진 예정

□ 2026년 중점 추진계획

- (신축이전) 총사업비 조정·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발주방식 확정 추진
- (정책지원센터) 신축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설계를 착수하고, 적정 총사업비 확보 추진
- (새병원 정보화) 클라우드(SaaS) 기반 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 및 구축 본격화('26~'27), 시스템 실증 적용('27)

* 과기부 주관 사업으로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발과정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지원

2 공공의료 최상위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 강화 (국정과제 84)

□ 진료활성화 및 의료질 향상

- 병상 확대 운영, 우수의료진 확충을 통한 신환 유입 증대, 로봇수술 도입, 보수체계 개편 등 진료량 확대를 통한 경영개선 노력
-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확충, 중증·응급·외상 24시간 완결체계 운영, 필수의료 표준 진료지침 보급

□ 진료협력 체계 강화

- 관할 지역 내 협력 병의원과 지방의료원 등 전국 공공의료기관과의 진료협력 체계 강화 노력
 -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강화를 위한 MOU 추진
 - 국립암센터와 공동워크숍 개최 등 협력 강화
 - 국군수도병원 등 군진의학과의 진료협력 강화
- 민간 의료기관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료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 외상, 응급, 감염병,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 지방의료원과의 의료인력 교류

- 전문의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료원과 의료인력 교류 추진

□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제공 및 그에 따른 보상

- 권역외상센터 운영 활성화, 감염병위기 대응체계 개선
-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보상 시범사업 관련 진료 성과에 따른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정규사업 전환 필요(~'28.)

* 現 지원금 규모는 과거 진료실적 기반으로 산정(실적 산정 기간 : '19., '23.'24.,)

3 국립중앙의료원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 (국정과제 84)

- 공공보건의료 기능 확대 등 다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공공병원의 안정적 공공의료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본부 기능·역할 확대
 - (정책지원 확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별 국가 정책 지원센터들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연계·관리하는 국가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로 강화
 - * 분야별 정책실행 효과 극대화를 위한 총괄 역할 수행
 -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확대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전담부서 신설(인력, 인프라, 운영 지원 등)
 -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본부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의사결정 및 실행체계 간 연계, 논의 안건 개발 및 실행 지원
 - (설립·운영 지원) 병원 설립, 신·증축 등 타당성 연구 위탁 수행, 표준 설계·운영지침 수립 및 관리 등 포함 경영·기술 컨설팅 제공 강화를 통해 공공병원에 대한 설립·운영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 (연계 지원)필수의료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위해 지자체-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지원
 - 지역완결의료 구현을 위해 지자체(광역시)-권역(시·도)-지역(중진료권) 단위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별 역할 분담을 체계화
 - * (지자체)조정·관리감독, (권역)필수의료 컨트롤 타워, (지역)지역밀착형 의료실행
- 근거기반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실행을 위한 정책통계 개발 및 모니터링과 정보시스템 운영
 - 분야별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비하고, 통합 축적·관리 기능을 확립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기획·정책연구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 공공의료 AI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클라우드 EMR 기반 공공 병원 의료역량 실시간 분석·진단 시범 AI체계를 구축
-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및 산출자료 시각화를 통해 지역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 등 AI기반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 * AI기반 지역·기관단위 보건의료 현황 프로파일 제작, 치료가능사망률 등 정책 목표 성과지표 산출 및 모니터링 등

□ **모자의료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품질관리 및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고도화**

- 권역모자의료센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사업 등 전국 모자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 성과평가 시행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실시간 의료자원 관리 및 이송 체계 효율화

□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실현과 지역맞춤형 센터 운영 등 정책 지원 역할 수행**

- 정책 및 전략 지원을 통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실현 추진
 - 정부의 치매정책 구상과 5차 종합계획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4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양성 및 확보 (국정과제. 84)

- 공공의료 인력의 배치 및 지속근무 유도를 위한 공공의료 인력의 중앙- 지역 의료기관 간 순환근무 및국공 인센티브 체계 구축 지원
 - 기존 공공의료인력 배치 및 지속근무 지원 사업의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배치정책 효과성 제고
 - (파견의료인력) 지역 주요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 의료인력의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파견 및 순환근무 체계 개선, 의료인력 파견기관 대상 인센티브 개발을 통한 자발적·지속적 인력파견 유도 등
 - (시니어의사) 현장 수요가 높은 다양한 근무형태의 채용 지원, 전문진료 과목별 임상수요가 높은 진료과 지원 확대 검토 등
- 지역·필수·공공의료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
 - (예비의료인력) 의대생 및 공중보건장학생 등 대상 공공의료 이해 및 현장 체험 강화, 지역공공의료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멘토링 지속 운영 등
 - (전공의 등) 공공의료기관 의료진 대상 수련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개발 지원, 지역사회·공공의료 실습·수련자원 발굴 및 의과대학 연계 지원 등
- 현장 공공의료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
 - (의사·간호사 등)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직종, 경력, 업무역량, 직무 등을 고려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속
 - (전문의 등) 시니어의사의 지역·공공·일차의료 현장 적응을 위한 재진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 수립 및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도구 개발, 인력정책 근거개발 및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수행
 - 공공보건의료 교육 전담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데이터 기반 인력정책 근거 강화 지원 등

5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인프라 확충 (국정과제. 84)

□ 환자 중증도 맞춤형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설정 및 보상 강화

-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를 위하여 진료역량을 반영한 지정 기준 개선* 및 권역응급센터 확충(60개소 내외)

* (現) 시설·장비·인력 기준의 지정 기준 → (改)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치료 가능 여부 반영

-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개선안 마련 및 시행규칙 개정(∼'26.4월)

-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성과중심 보상체계 강화 방안 마련

*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및 권역·전문응급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기여 등

-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시행(∼'26.下)

□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 지역 이송지침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역응급의료거버넌스* 평가·환류 강화 및 지역별 이송지침 단계적 확대(現 중증질환 → 경증질환)**

*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이송지침 및 수용관리 실효성 강화, 지역응급의료 평가/환류 강화

**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연 문제 개선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업무 확대·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통합 관리 추진

*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예정 및 인력·예산 확대 추진

- 신속한 이송·전원 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고도화
 - 구급대-병원-광역상황실 간 원활한 환자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 연계 체계 마련 추진
 - AI 등을 활용한 응급실 수용능력 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등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고도화 방안 마련

구분	AS-IS	TO-BE
전송 주기	최대 15분 이내 갱신(96회 이상/1일)	전송 주기 단축(1분 간격)을 통한 실시간성 확보
전송 내용	기준 대비 병상, 의료장비 등의 정보를 ON/OFF 수준으로 전송	응급의료자원 종류 확대 및 전송 기준 세분화를 통한 실질적 수용능력 확인 지원
정보 표출	수집 정보의 파편적 표출	중증응급질환별 의료자원 매핑·표출, 알고리즘을 통한 질환별 수용가능 여부 종합·판단 지원

- 취약(저빈도 고난이도)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순환당직 확대
-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사업 대상 기관 확대
 - AI기반 중증도 분류, 진단·검사 결과 판독 지원 도입 추진, 협진 자문기관 확대 검토

□ 모자의료 전달체계 강화

-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원시스템 구축
 - 체계적인 모자의료 전원·이송 지원, 자원관리 및 통계·성과관리 고도화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고위험 산모·신생아 권역별 전원 조정 및 전국 단위 신속한 병원 선정 위해 모자의료 전원전담팀 운영(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지역 분만 대응 역량 강화
 -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기능 강화 사업 확대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현대화 지원 등 추진

6 감염병위기 대응체계 개선 (국정과제. 84)

□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6년 상반기 내 완료)
 -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설정
 - * ① 중앙 및 권역감염병전문병원, ②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③ 상급종합병원 등 감염병관리기관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 방안 마련 및 필요성 검토
 - 감염병 환자 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 문제 등 검토
- 중앙감염병병원 ISP 예산 확보 및 ISP 수립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세부 기능 및 구축 범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담은 ISP 수립
 - 감염병 대응 의료자원 관리,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운영, 감염병 환자 임상정보 수집·분석·활용 등 시스템 설계 구체화
- 고려 사항
 -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 신축·이전 일정 고려한 적정 시기 ISP 예산 확보 필요

□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기관 기능·역할 정립 및 의료대응체계 고도화

- 감염병 자원(병상·인력·장비 등) 현황 및 운영역량 파악, 감염병 유행 양상별 적정 필요 병상, 대기병상 규모 파악
- 감염병 유형·중증도·위기단계별로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지역 감염병관리기관' 기능·역할 정립
 - *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기관(병상)별 역할 구조화를 통한 단계별 전달체계 정립

□ **효과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심의 관리체계를 긴급치료병상·기타 감염병 관리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병상관리체계(운영기준·자원관리 등) 수립 지원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지원 및 운영지원 방안 마련**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절차별 검토 지원
- 권역별 실무자(감염관리, 시설, 의료장비 담당자 등) 협의체 정례화 및 병원 건립 경험·운영 사례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 감염병전문병원 및 국가지정 감염병병상 등에 대한 운영비 및 정책 수가 지원방안 검토

□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협의체 상시 체계 구축**

- 위기 단계별 협의체 가동 기준 마련 및 의료대응체계 운영전략 마련·조정 기능 강화
 - * 평시 정례 협의체 개최, 위기 시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 및 대응체계 점검 등 역할 조정을 위한 방안 논의
- 협의체 기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지자체·감염병전문병원 등 대응 현황 공유채널 일원화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이행점검 체계 구축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관리 강화) 법정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자체적으로 '안전패트롤' 신설하고, NMC 주도로 서울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8개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자 협의체 발족
 - 작업장, 유해물질, 소방안전, 시설물 등 전 영역에 걸쳐 매월 체계적인 위험요인 점검 실시. '25년 한 해 동안 52건의 잠재적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조치 통해 최근 4년 평균 대비 안전사고 30% 감소
- (정보보안 강화)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25.5.)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운영 체계가 양호하게 유지
 -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주관 사이버보안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정보보안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요인은 개선계획에 따라 지속 관리중임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우선구매 이행) 중소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 다양한 취약계층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 노력 지속
 - * 기관장 주관으로 각 영역별 의무구매관리 비율 수시 관리
-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강화) 원내 공공의료사업과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취약계층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와 지속가능한 상생 기반을 구축
 - * 다양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의료취약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 지속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대국민 소통 노력

- (국민 체감형 소통 강화)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및 미디어 운영 활성화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대국민 소통 역량 강화
 -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원 인지도 향상을 위해 SNS(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을 확대해 국민과 의료원 간 소통 점점 다각화
 - *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현장성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기 위해 간호사 2인의 하루를 밀착 콘텐츠로 제작하여 조회수 2.8만 회 달성 등
 - 보도자료와 기획기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의료원의 역할과 주요 성과를 언론·미디어 전반에 지속적으로 확산·노출
 - * 중장기 비전과 국가중심병원 정체성 홍보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 4건 배포 등
 - 의료원의 역할과 주요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고 신뢰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의료원 대표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
 - 대내외 소통과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원의 주요 소식과 가치를 폭넓게 담아내는 소식지 ‘케어(Care you)’ 발간 및 배포
- (만족도평가 우수)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4년 우수 등급 획득
 - 기관장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회의 개최하여 신규 개선과제 발굴 및 지속 개선 추진

<연도별 고객만족도(PCSI) 조사결과>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체	점수	91.0	조사제외	81.8	82.1	85.3
	등급	우수	(코로나19)	미흡	미흡	우수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공공보건의료 정책지원 역할 강화

-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상 정책지원 총괄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센터* 발전방안과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 업무지원 강화 방안
 - * 「공공보건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보건의료본부 산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정책통계지원센터에서 수행 중
- (개선계획)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지원 역할 강화, 공공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 공공보건의료본부 내에 정책 기획, 조정, 지원업무 및 공공병원 설립 지원 전담부서 운영

②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실적 개선

- (주요내용)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의 실적 개선 방안 마련
 -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활성화 및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 방안
- (개선계획) 시니어의사의 지속적 참여 기반 마련 및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 예산 확충, 사업 지침 개정
 - 시니어의사 참여역할 확대 방안 모색 및 관련 학회·전문단체와의 연계·홍보 강화
 - 매칭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통한 매칭 정확도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예산 확충('25년 30억원 → '26년 70.2억원)과 지침 개정으로 사업 대상 기관 확대('25년 149개소 → '26년 291개소)하여 현장 수요에 대응

③ 분만취약지 산모의 건강한 분만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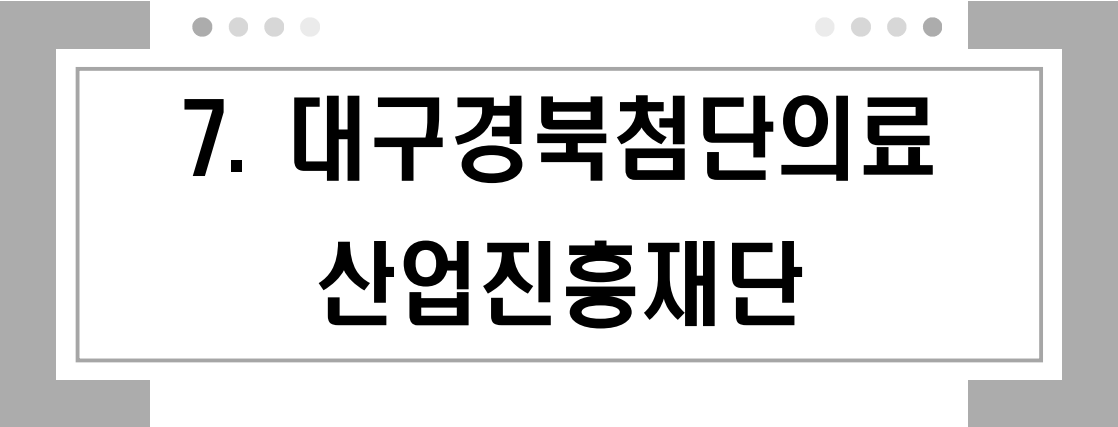
- (주요내용)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한계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분만건수 감소에 따른 수익저하로 인한 사업참여 의료기관 감소와 취약지 응급의료 대응 한계
- (개선계획) (기존) 인프라 확충 ⇨ (개선) 지역 내 분만병원 간 연계 강화
 - ①전국 분만의료자원 통합 관리와 병원 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분만의료체계 구축, ②소청과·마취과 등 필수 연계 진료과 지원을 확대하여 협진체계 유지 및 분만기반 안정화
 - * 분만취약지 산모의 산전관리는 지역 내에서 수행하고, 분만 단계에서는 분만거점 병원(연간 분만 300건 이상)과 연계하여 분만 안전성을 강화

4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 (주요내용) 응급의료·배후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 능력 약화된 상황에서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 심화
 -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청과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전원 조정 체계 구축(더민주 서영석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현장 중심 지표로 개선하고, 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국힘 김예지 의원)
 - * 코로나 19, 의정상황 등으로 인한 구급대 수용능력 확인의무(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대한 현장 어려움 강화
- (개선계획) 소방청과의 정보공유 확대 및 시스템 연계·고도화, 이송·수용·치료 전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체계 마련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미수용’ 적극 방지
 - AI 등을 활용하여 119구급스마트시스템 및 응급의료기관의 정보(종합상황판*) 연계 고도화
 - * 現내손안의 응급실(중앙응급의료센터)
 - 통합 정보를 기반으로 중증도 분류, 이송·수용·치료 소과정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사례분석-평가-환류를 통한 주기적 개선 실시

5 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지원사업 관련 야간당직비 증액 및 휴일야간 당직인력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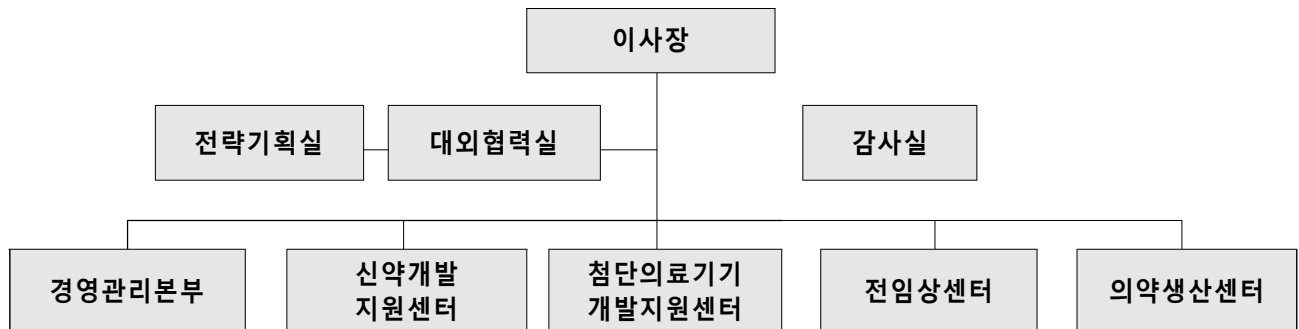
- (주요내용) 현재 평일 주간과 휴일·야간 구분 없이 당직수당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24시간 상시 당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 야간 휴일 당직수당을 반영하여 '26년 예산(145,500천원 증액) 요구를 하였으나 미반영
- (개선계획) '26년 추가예산 확보 노력 및 AI 솔루션 도입 검토·추진
 - 판독 정확도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AI 솔루션(중증도 선별 및 진단, 병변 부위 정보 사전 제공을 통한 판독 지원) 도입 검토



7.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I. 일반현황

① 기구 및 조직 현황 : 1개 본부, 4개 센터



② 인원 현황

(단위 : 명 / '25.12.31. 기준)

구 분	직급별	계	이사장	본부·센터장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합계	정 원	406	1	5	18	77	126	179
	현 원	370	1	5	1	52	129	182

③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183,252	141,871	△41,381	△22.6
I. 국고보조금*	81,989	29,774	△52,215	△63.7
II. 시도 보조금 및 출연금**	13,640	7,600	△6,040	△44.3
III. 자체수입	28,950	30,510	1,560	5.4
IV. 연구개발사업(R&D)	21,446	14,757	△6,689	△31.2
V. 전기이월금 등	37,227	59,230	22,003	59.1

* 의료기술시험연수원(6월, 518억) 및 제약스마트팩토리(9월, 33억) 완공에 따라 건축비 감액

** 제약스마트팩토리(9월, 50억) 완공에 따라 건축비 감액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재단 설립 이후 역대 최고 성과 달성

- (기술서비스) 재단 보유 첨단기술·장비 활용 국내 산·학·연·병 공백·애로 기술 지원 실적 3,085건, 14,236백만원 달성 (누적 21,312건, 77,835백만원)
* 전년 대비 올해 실적 금액 13% 향상(12,588백만원 → 14,236백만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재단 우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실적 18건, 11,155백만원 달성 (누적 139건, 308,641백만원)
* 전년 대비 올해 실적 금액 59% 향상(7,010백만원 → 11,155백만원)
- (판로개척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수출 상담회 개최를 통한 수출 지원 실적 23개사, 수출 계약 6,473만달러 달성 (누적 66개사, 16,275만달러)
* Arab Health 2025(두바이), K-MED EXPO 2025(베트남), MEDICA 2025(독일), KOADMEX(국내), KIMES(국내) 등 총 5개 전시회 공동관 구성
- (인프라 구축)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개소('25.7) 및 본격 가동, 의료기술 시험연수원('26.6), 스마트팩토리('26.9),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26.12) 구축 중

□ 지원분야별 기업지원 우수성과 도출

- 암 줄기성 억제 항암제(PMB212), 미국 FDA 1상 IND 승인('25.8)
 - (지원내용) 유효물질 기술이전, 후보물질 발굴^(신약), 항암효능 평가, non-GLP 독성평가 수행^(전임상), CMC전략 컨설팅, 원료의약품 공정 개발, 완제의약품 제형 개발 및 공정 최적화^(생산) 등 공동 연구
 - (주요성과) 파이메드바이오*의 항암제 미국 FDA 임상 1상 IND 승인, 특허 해외 4건 출원, 국내외 11건 등록
 - * 파이메드바이오 : 암 줄기세포 표적 치료제 등 혁신 약물 연구·개발 기업

○ CadAI-B(유방암 영상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임상 실증 및 혁신 의료기기 지정('25.6)

- (지원내용) 복지부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지원사업('22~'26)을 통해 개발된 디지털 의료제품의 실증 지원^(기기)
- (주요성과) 빔웍스*, 식약처 3등급 의료기기 허가 획득('24.7), 혁신 의료기기 지정('25.6), 시리즈A(142억) 투자 유치('25), 해외 진출(카자흐스탄 수출) 성공

* 빔웍스 : 재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반으로 창업('21) 및 AI 기반 유방 영상 솔루션 개발 기업

○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영대회 준결승 (Top 40) 진출 성공('25.6)

- (지원내용) 의약품 후보물질의 전임상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지원,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지표 분석 지원^(전임상)
- (주요성과) 로노제약,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영대회 'XPRIZE Healthspan*' 준결승(Top 40) 진출 성공, 세포 역노화 기술 적용 물질 관련 와디즈 펀딩률 283% 달성, 세노테라퓨틱스 천연물 소재 제품 출시 및 해외 입점(체험단 만족도 96.4%)

* XPRIZE Healspan : 미국 비영리 기관 XPRIZE 재단이 주관하는 혁신 경진대회

○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제, 16개국 기술이전 및 독점 계약 체결('26.1)

- (지원내용) 임상용 의약품 위탁개발 및 생산,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운영관리 지원, 공동 연구기획 지원
- (주요성과) 아스트로젠*,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제 임상 3상 완료,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3,000억 원 규모 16개국 기술이전 체결

* 아스트로젠 : 소아신경과 의사 설립,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첨복단지 입주)

□ 보완점

- 기술서비스, 기술이전, 사업화 등에서 정량적 성과가 증가하였으나, AI, 빅데이터 등 산업 전반의 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기반 부족
- 재단의 개별 기업, 기관 지원 성과는 우수하나, 타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구심점 역할 부족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단의 기능 및 지원 범위 확대
 - AI·디지털과 의료기술의 융합, 모달리티 진화 등 의료산업 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데이터 기반·예측 중심 지원체계로의 전환
 - 국가 주도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서 타 클러스터와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성장 견인
 - 첨단 의료산업과 의료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분야 전문인력양성 교육 영역 다양화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공공성 강화
 - 산업·의료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R&D 및 기술 서비스 체계를 다각화하여 공공적 연구 지원 기능 강화
 - 해외 인증, 규제 대응, 수출 확대 기능 강화를 통한 기업의 글로벌 진출의 체계적 지원
 - 低수익성으로 인해 개발 수요가 낮은 필수·희귀 의약품 등 공공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문제 공동 대응
 - 창업 기업 발굴부터 성장·사업화까지 연계되는 개방형 공공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기반 바이오헬스 창업 생태계 활성화
- ➔ 국정과제 및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국가 중심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재단의 기능·역할 전반 재정립 및 개방형 혁신 전략 확대

Ⅲ. 중점 추진과제

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첨단 의료분야 지원 확대

□ AI·디지털 전환 맞춤 운영 기반 마련

○ (조직·인프라) AI 대전환에 맞춘 조직 운영 및 장비 첨단화 추진

- 인공지능 활용 분자설계, AI 알고리즘·의료 로봇 개발 등 AI 대전환에 맞춰 전담 조직 운영*

* (신약센터) AI분자설계팀('24.7~), (의료기기센터) AI헬스케어부('25.9~)

- 오믹스 빅데이터 수집·분석 장비, 디지털헬스 빅데이터 센터 등 글로벌 트렌드 맞춤 AI·빅데이터 활용 장비 첨단화 추진

* AI 활용시 신약 후보물질 도출 기간 단축(5~6년 → 18개월)

□ 첨단기술 활용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가속화 지원

○ (AI 활용 신약 개발) 신약 개발 가속화를 위한 AI 기반 기술 확보

- 신약 개발 후보물질 발굴 가속화를 위한 AI 활용 연합 학습용 실험 검증 데이터 확보 및 공유

* K-멜로디 사업(구조 다양성을 고려한 연합학습용 ADMET 데이터 확보 및 검증, '24~)

- 혁신신약 발굴 플랫폼 고도화 및 인공지능 신약개발 생태계 정착 지원

* AI 신약 개발 공공 포털 플랫폼 홈페이지(KAIDD) 운영('22~)을 통해 신약개발 초기단계(유효물질 도출, 약물특성 예측 등) AI 모델 공유

**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사업('24~'26)

□ AI·빅데이터 활용 의료기기 개발 지원

○ (AI 기반 의료기기 개발) AI 디지털 의료 제품 및 의료기기 개발 지원

- AI 기반 디지털의료제품 및 의료기기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성능평가 및 인프라 지원 서비스

* 기업 수요 맞춤형 클라우드 형태의 GPU 서버 활용 지원('26년~)

- 「지역거점 AX 기술개발사업(대구)」 사업단 참여를 통해 세부사업 기획

- (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업의 병원 의료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업-병원 간 데이터 중개 적극 지원

* 지역병원-기업 협의체 구성을 통한 수요·공급 연계 데이터 중개 서비스 구축('26년~)

□ 첨단 재생의료 기술 상용화

- (바이오소재 활용 기술 확보) 인체유래소재(폐지방·폐치아) 활용 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지원

* 이노-덴탈 사업을 통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25~'28년, 156억원)

- (바이오소재 DB 구축) 바이오소재, 골이식재 물성 분석, 데이터 구축 및 AI-물성 데이터 연계 지원

* AI-물성(성질) 데이터 연계 기업 지원 사업('25~'29년, 60억)

- (체외진단 바이오소재 개발) 감염병 세포 신속, 고감도 검출을 위한 나노구조체 기반 체외진단 바이오소재 개발 및 기업지원

* 감염균 및 바이러스 신속 검출 바이오소재 개발 사업('23~'27년, 72억)

② 신규 인프라를 활용한 대구경북 침복단지 특성화 추진

□ 국내 유일 합성의약품 GMP 생산 플랫폼

○ (고품질 의약품 제조 체계 구축) 국제 수준의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 GMP 인프라 확충

- 스마트 제조공정 시스템 적용 및 신규 생산라인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한 **생산량 증가*** 및 고수요 분야 **위탁생산 지원범위 확대**** 예정

* 제약 스마트팩토리 준공 : '26.9월 예정

** 제조라인 확대(100L → 200L), 기존 생산시설 제한으로 평균 약 6개월의 대기기간 존재

*** 원료 및 완제의약품(고형제, 세포독성항암주사제) + 일반주사제 및 융복합 의료제품

- 글로벌 품질 기준 강화에 따른 데이터 완전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약품 제조·품질 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 신뢰성 향상

□ 미래형 동물 모델 활용 신규 전임상 평가 플랫폼

○ (미래의료기술연구동) 미래형 중동물(미니피그) 활용 및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갖춘 신규 전임상 평가 인프라 확충

- 인체 유사성이 높은 중동물 자원(미니피그) 활용 전임상 평가 지원으로 고수요 저공급 분야 지원 확대

*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개소 및 본격 가동 : '25.7월~

** (기존) 미니피그 15두 사육 → 미니피그 65두(기존 15두+미래동 50두) 사육

- 고위험(스텐트, 심혈관 중재 의료기기 등) 및 치과용 의료기기 전임상 프로토콜 개발 등 미니피그 활용 **치과, 심·뇌혈관질환 분야 전임상 평가 특성화 추진**

* 대구지역 치과 의료기기 업체 多, 뇌혈관질환 국내 전임상 평가지원 미흡

□ 국내외 보건의료인 특화교육 플랫폼 구축

○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국내·외 보건의료인(의사·간호사·수의사·한의사 등)의 임상 술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의료기술 전문성 향상

*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준공 : '26.6월(예정)

- 의사·간호사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학회, 국시원 등 주요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운영방향 설정 및 특화 프로그램* 발굴

* 총 113개 교육 프로그램 발굴(의사분야 : 76개, 간호분야 : 37개)

- 복강경·내시경 수술 교육 등 국산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범 교육 운영을 통해 국산 제품 사용경험 확대 및 마케팅 지원

□ 창업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및 신약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창업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추진

-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개발부터 인허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유망기업 발굴·성장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메디키움:Medikeyum) 건립(복지부, '23~'26)

- 의료 분야 창업 아이디어 선정 등 예비 창업자 발굴 지원, 창업기업 원천기술 개발 공동 R&D 수행, 투자유치 지원 등 사업화 성과 창출

*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 창업생태계 지원사업 운영('25년~)

□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공공 시제품 제작소 구축 및 운영

- (시제품 제작소 운영) 의료기기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전문 제조 기술 인프라 제공을 위한 개방형 시제품 제작 허브 구축

- PCB 제작, 3D 스캐너, 모션캡처시스템 등 IT기반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장비 활용 및 기술 지원

* 개방형 공유 제작소(OPEN BRIDGE 프로젝트)

③ 기업 및 공공 수요를 반영한 R&D 및 기술서비스 지원

□ 신약개발 분야 수요 맞춤형 전임상 평가 및 생산 서비스 지원 강화

- (전임상 전문역량 제고) 동물실험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경쟁력 지속 강화, 국제적 수준의 동물시설 및 자원 유지 관리

* 국제실험동물관리 평가인증협회(AAALAC-I) 완전 인증('20~, 3년간 갱신)

- (전임상 평가 패러다임 전환) AI 기반 전임상 평가 시스템 구축, Car-X 전임상 평가법 구축, 생체모사시스템 평가법 구축 등

- (첨단 제조기술 확보) 차세대 제형기술 기반 신규 기술서비스 구축

- 제형기술 특화 장비(Dual Centrifuge) 기반 나노크리스탈 제제 스크리닝 플랫폼 구축으로 기술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 글로벌 GMP 기반 제약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의약품 품질시스템(QbD) 연속공정 예시모델 개발 기술 확보

- (IND 승인 지원) 국내 신약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의약품 허가 전주기 지원

- 합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전략 수립, 품질자료 작성 지원 등 IND 승인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업 맞춤형 CMC 전략 컨설팅 제공

* 국가신약개발사업단 CMC 전략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23~'26)

**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신약 허가 신청에 필수적

□ 국산 의료기기 제조·인허가 등 업무 범위 확대

-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의료기기 공공 CRDMO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기기 위탁제조서비스 지원

* 추후 피부 미용·치료기기 위탁 제조 등 지원 영역 확대 추진

- (해외 인허가 지원) 국내 의료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허가 기준 대응 서비스 제공

- 의료기기 국제 공인 시험 서비스를 위한 **국제 공인 시험 기관(CBTL)* 인증 획득 추진**

* CBTL(Certified Body Testing Laboratory)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 수행 시험기관으로 국제인증기관(NCB)의 심사를 통해 지정

** (기존) 해외 인허가시 국가별 중복 시험 필요 → (인증 획득시) CBTL 시험성적서로 국제 상호인정 가능하여 여러 국가 인증 신청시 리드타임 및 비용 절감

- 중·대동물 외과 수술 기술 활용 임상 환경 유사 평가 플랫폼 구축 및 FDA 510(K)* 등 **해외 인증 평가 기술 확보·지원**

* FDA 510(K) : 기존 의료기기와의 동등성을 입증해 미국 시장 진입을 허용받는 사전 신고 제도

□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형 R&D 수행

- (필수·희귀의약품 개발 지원)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개발 지원을 통한 수급 안정화 기여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대상 품목의 **국내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자급률 제고 및 수급 불안정 해소

* 국가필수의약품 완제의약품(히드랄라진 주사제) 생산 기술개발 연구

- 말라리아, 소외 열대질환 등 시장성이 낮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 소외질환신약개발재단(DNDi)과 회선사상충증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4 **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 마련(R&D,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 **첨복단지 프로그램형 R&D 추진**

- (프로그램형 R&D) 첨복 특화 R&D 추진으로 지속가능 연구개발 체계 확립
 - 단기·단발성 과제 중심의 공모형 R&D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적 수요와 전략목표에 맞춘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추진

□ **미래 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UST) 지정 추진) 해외 석·박사급 인재 유치 및 연구자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캠퍼스 지정 추진
 - AI·바이오헬스케어 등 재단 내 UST 대학원 과정 신규 개설을 통한 산업현장 기반의 전문 인재 양성(우수인재 활용·유치)
- (실무형 전문인력 교육 훈련) 재단의 인프라(연구자·장비 등)를 활용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전임상, 생산, 규제과학 등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취업준비생·종사자 대상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 RA 프로그램 수료생은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국가공인자격) 응시자격 부여
 - 실험동물기술원 실기 실습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전임상 교육 실시
 - 식약처 위탁 의약품 허가·심사 현장 실습교육 및 약학 및 제약 학과생 대상 제약 이론·실무실습 필수 교육 제공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 개척**

- (해외시장 개척 지원) 국내 의료산업 전시회 개최 및 의료산업 분야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 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재단 주최 국제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공동관** 운영 추진

* KOADMEX(대한민국 국제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

** Arab Health(아랍에미레이트), MEDICA(독일), K-MED EXPO(베트남) 등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제도 개선) 안전관리 전담부서(안전경영부) 신설 및 안전보건 제도 강화
 - 신규 화학물질, 유지보수, 건축공사 등 유해위험요인 유입시 사전 안전보건 364건 점검(화학물질 327건, 공사관련 23건, 유지보수 14건)
 - 적격수급업체 선정 대상범위 확대로 사전 안전 적격심사 증가('24년 1건 → '25년 16건) 및 도급부서의 수급업체 안전관리 감독 강화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연장 완료('25.11~'28.11)
- (우수연구실 인증) 과기정통부 주관 우수연구실 3개소(신규 1, 재인증 2) 인증('25.12) 등 연구실 안전역량 강화
- (도급관리) 최고경영자 주관 건설발주공사 현장점검 및 수급업체 관리
 - 최고경영자 주관 건설공사 3개소* 현장점검 및 발주자 의무이행사항 점검, 산업안전보건협업체 정기 참석하여 수급업체 애로사항 청취(분기별)
 - *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제약스마트팩토리,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건립공사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및 안전 조치 강화
 -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확대 지정(2명→4명), 개인정보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가상사설망(VPN) 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보안) 보안관리 체계 마련 및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정보보안 담당부서 신설, 정보화사업 일원화 추진, SSL(Secure Sockets Layer)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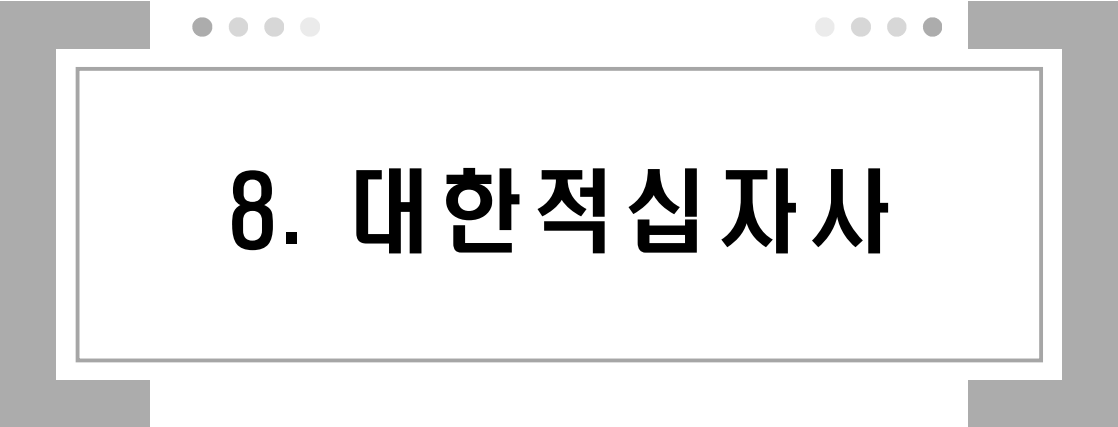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지역협업 사회공헌 전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 기여

- 구내식당 쌀 구입,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지역 전통 시장 상권 활성화 추진
- 대구시 동구청·서구청과 연계하여 지역 취약계층 대상 빵, 도시락, 연탄 나눔 행사 추진 등 임직원 기부문화 확산 및 상생협력 실천
 - * 지역사회 발전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 대구시 동구청장 감사패 수상('25.12)
- 임직원 단체 헌혈 지속적 확대를 통한 생명 나눔 운동 참여, 헌혈 기부문화 조성 등 인간 생명 보호를 위한 혈액 사업 적극 시행
 - * 헌혈 적극 참여 및 혈액수급 안정화 기여 대구시장 표창 수상('25.12)
- **(공공구매 활성화)** 공공구매 법정비율 초과달성(10개 항목) 및 항목 확대 추진
 - 공공구매 이행률을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구매계약 추진 시 공공 구매 대상여부 사전 검토 의무화 등 공공구매 관리체계 구축·운영
 - 노인일자리생산품 및 자활용사촌생산품 공공구매 항목 확대('25~)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5년 공공구매 촉진대회」 국무총리 표창 수상('25.10)
- **(지역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한 대구형 유니콘 기업 육성
 - * AI·바이오 메디시티협의회 참여, 대구시 메디코어 지원 사업 런칭('26~'31년)
 - **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을 통한 혁신도시 발전 기여 국토부 표창 수상('26.1)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대국민 접근성 확대)** 홍보채널 다각화를 통한 국민 접점 확대 및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제작으로 기관 이해도 제고
 - 타깃별 소통채널 운영 및 연구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한 기관 주요 소식 신속 안내
 -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시제품 제작소 등 행정·연구시설 개방으로 재단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
 - * 대국민 인식도(인지도) 조사 결과 '인지' 응답자 92% 달성
- **(고객만족도 제고)** 24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등급 획득
 - 내부 CS교육 진행, 실험 접수 시스템 개선 등 고객 불편 의견 해소를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90점(A등급) 획득('25.2)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thick, grey L-shaped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brackets, there are two horizontal rows of four small grey dots each, positioned above and below the central text box.

8. 대한적십자사

I.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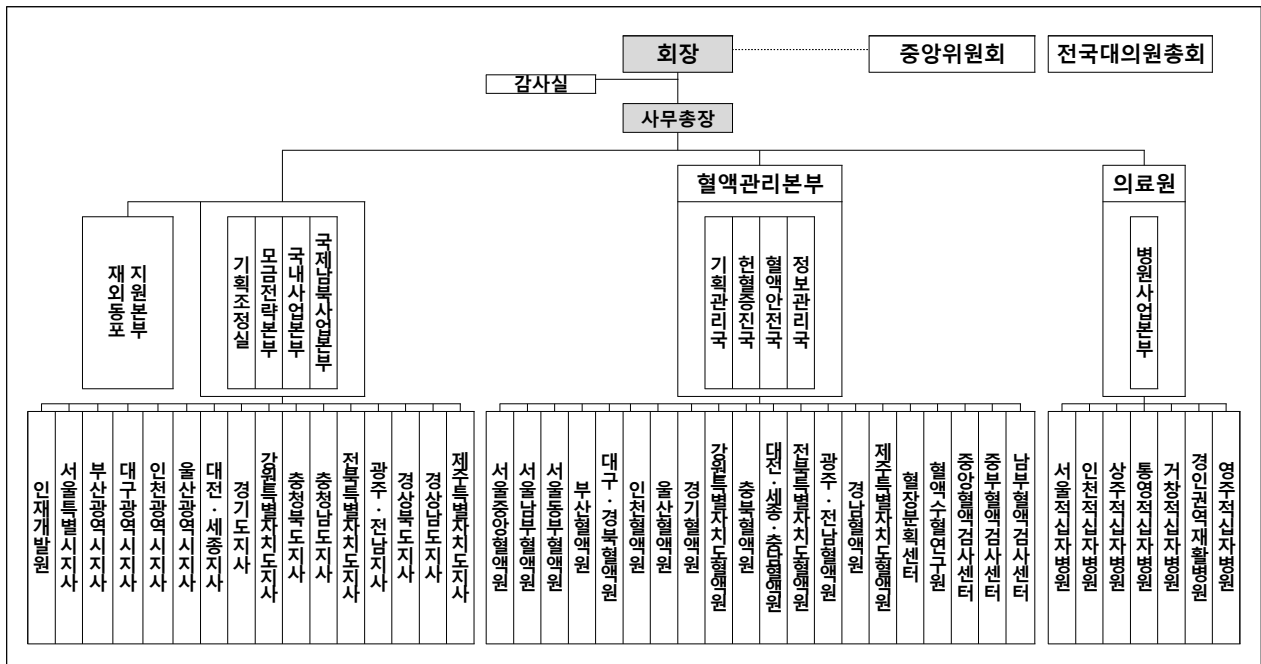
1 기구 및 조직 현황

○ (기구) 본사(2실 3본부) 및 45개 소속기관*, 49개 사업장**

* 지사(15), 인재개발원(1), 혈액사업기관(21), 의료사업기관(8)

** 봉사관(42), 청소년수련장 및 연수원(2), 적십자수품센터(1), 적십자회관(2), 재외 동포지원본부(1), 인재개발원 제주캠퍼스(1)

○ (기구표)



2 인원 현황

구 분	직급별	계	별정직	일반·전문직							의무직	연구직	특수경력직	기술직	기능직	고용원	기타(계약)	영주병원	별도정원	무기계약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합계	정원	4,476	1	45	78	232	898	1,169	693	129	30	40	1	395	171	22	117	242	116	97
	현원	4,380	1	28	66	185	816	1,228	677	226	12	40	1	406	177	24	117	181	116	79
본사	정원	93	1	4	5	14	38	13	6	-	-	-	1	3	-	-	2	-	2	4
	현원	86	1	4	6	12	32	14	9	-	-	-	1	3	-	-	2	-	-	2
소속기관	정원	4,383	0	41	73	218	860	1,156	687	129	30	40	0	392	171	22	115	242	114	93
	현원	4,294	0	24	60	173	784	1,214	668	226	12	40	0	403	177	24	115	181	116	77

③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총계 (순계)	1,216,769 (1,133,118)	1,294,974 (1,204,931)	78,205	6.4
본 · 지 사 일 반 회 계	251,574	273,371	21,797	8.7
병 원 특 별 회 계	285,594	294,792	9,198	3.2
혈 액 원 특 별 회 계	502,029	545,316	43,287	8.6
혈장분획센터특별회계	99,965	101,458	1,493	1.5
회 관 특 별 회 계	1,953	2,216	263	13.5
수 품 센 터 특 별 회 계	1,403	1,427	24	1.7
퇴 직 금 특 별 회 계	44,773	47,752	2,979	6.7
재 외 동 포 지 원 본 부	29,478	28,642	△836	△2.8

* 차감내역(총계-순계, 900억원)

: 기관간보조금(220억원), 공통사업비(186억원), 퇴직급여부담금(423억원), 기관간차입(46억원), 기관간이자(25억원)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및 공공병원 역량 강화

○ 적십자병원의 대표 공공의료플랫폼 '누구나진료센터*' 추가 개소 및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전국 단위 공공의료안전망 강화

- 기부금 위주의 재원 구조 개선을 위해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고, 후원처 다변화로 사업 운영의 지속성 확보 필요

* 누구나진료센터: 아프면 '누구나' 진료받을 수 있고, '누구나' 참여(후원·봉사)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 (기존) 인천, 통영 ⇒ (추가) 서울, 상주, 영주

** 지역 맞춤형 지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다문화 가정(서울·인천·영주), 도서 지역(통영), 지역 취약계층(상주·영주)

[누구나진료센터 운영 현황]

구분	2022년(7~12월)		2023년		2024년		2025년.11월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액	지원인원
합계	5.6억원	4,084명	8.2억원	6,607명	7.8억원	7,733명	19억원	19,164명

○ 보건의료ERU(재난대응의료팀) 운영체계 구축

- (성과) 재난관리전문기관으로서 재난대응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ERU 발족 : 의사·간호사·행정인력(전국 4권역 4팀)

* 1권역(서울, 인천) / 2권역(경북, 충북, 대구) / 3권역(거창, 상주) / 4권역(통영, 상주)

** 2025년 3월 경북산불 현장에 보건의료ERU 파견, 의료지원 실시

○ 공공병원 평가 결과 우수 및 대외 신인도 향상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획득 : 영주병원

-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최우수기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상주병원

□ **적십자병원 경영실적 개선**

○ (성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강화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적십자병원 실적 개선**

- 전년 동기대비 진료수입, 병상이용률, 경영손익 등 주요실적 개선

< 전년 동기대비 적십자병원 주요실적 (2025.11.30. 기준) >

구분	2024년(1~11월)	2025년(1~11월)	증감	증감률
진료수입	1,154억원	1,265억원	111억원	9.6%
병상이용률	58.6%	64.0%	5.4%p	9.2%
경영손익	△231억원	△163억원	68억원	29.4%

* 2025년 보건복지부 필수의료강화 지원사업비 180억원 지원

** 2026년 보건복지부 필수의료강화 지원사업비 234억원 확정

□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혈액수급 안정 기반 강화**

○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른 혈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 혈액 공급실시*(245,716unit ↑)

* '24년 수혈용 혈액 공급량(3,996,018unit)→'25년 공급량(4,241,734unit)

** '25년 수혈용 혈액(전혈, 혈소판) 헌혈 인원 전년 대비 49,071명 증가(2.4% ↑)

○ **(규제개선)** vCJD(변종 크로이츠펔트 야콥병) 발생위험도 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vCJD 위험지역 체류에 대한 헌혈 제한기준 완화로 잠재 헌혈자 확보(약 16,600명)

○ **(채혈환경 개선)** 헌혈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후된 채혈환경을 개선하여 헌혈 재참여율 증대 도모

* 헌혈의집 개선(신축2·개축9, 약 45억원), 노후 헌혈버스 신규 교체 (7대, 약 17억원)

□ **각종 재난시 급식·재난심리·구호물자 지원** 등* 재난현장 대응력 입증

○ 적십자는 **보건의료 분야 유일 재난관리책임·구호지원기관**으로서 대형 재난 시 법정 역할 충실 이행

-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재해구호법) 개정 필요**

* (현장대응) 5,976명 활동, 긴급구호세트 등 130,868점, 급식지원 등 27,755명 지원

□ **적십자 전국 지사·봉사원 치매파트너화로 치매극복 사회안전망 강화**

- 치매 안심프로그램 ‘기적(기억을 지키는 적십자)’ 운영과 전 지사·봉사원 치매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극복에 기여,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 (수상일)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25.9월), (유공) 노인정책추진

적십자 치매안심 프로그램 ‘기적’ (기억+적십자) 고령화시대 증가하는 치매 문제에 대응하여 기(記)억 을 지키기 위해 적(赤)십자사 가 따뜻한 돌봄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은 치매예방 캠페인		
① 치매예방활동 취약계층 및 일반시민 대상 치매예방활동 및 캠페인	② 돌봄활동 취약계층 대상 돌봄지원 및 정서지원 활동 전개	③ 지역사회 협업활동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및 대국민 캠페인 추진
- 치매예방키트 제작·배포 -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 지역별 프로그램 : 웃음치료·심리안정·마음치유·인지개선 프로그램, 치매전문자원봉사단 및 노인건강체조교실 등	- 취약계층 치매위험군 대상 돌봄활동 - 취약계층 치매환자 가족 대상 돌봄활동	- 지자체, 협회, 치매안심센터, 노인요양병원 경로당 등 연계 협업 프로그램 추진 - 지역축제 및 지역행사 연계 치매극복 캠페인
④ 봉사원 전문교육(치매파트너 기본교육 + 치매파트너 플러스교육)		

□ **청소년 자살예방 인도주의 사업 추진**

-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복지부) 예비인증 획득

* ('24~'25 상반기 누적실적) 51회 1,880명 교육, 7,360명 캠페인

프로그램	HEY! 마음을 지키는 우리
대 상	초등학생(고학년) / 중·고등학생 *프로그램 2종
프로그램 목적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만성적이고 강한 부정적 감정을 안전하게 조절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공식·비공식 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역량 개발하여 자살 위기 대처 역량 함양
프로그램 목표	1) 아동·청소년의 감정인식 및 표현 능력 향상 2) 건강한 정서 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 습득 3)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도움 요청 기술 습득 4) (청소년대상) 자해/자살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운영방법	1) 운영회기: 1회기(4-50분) / 대면교육 2) 교육운영: 필수활동과 선택활동 조합하여 교육 인원, 시간, 환경 및 강사의 숙련도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

2 향후 업무추진방향

[혈액사업]

- 혈액관리시설과 정보시스템 등 **혈액사업 핵심인프라 관리 강화**
 - (혈액관리시설 현대화) 건축 연수 35년 초과한 노후 혈액원*을 순차적으로 신·개축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제공하고 선진 GMP 인프라와 혈액관리 안정성 확보
 - * (부산혈액사업기관) 국고보조금 활용하여 '26년부터 이전·신축 추진 예정
 - ** 부산 제외 5개 혈액원 신·개축 위한 연구 용역 수행 완료
 - (혈액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시 관제 도입*, 사이버공격** 대비 위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등 혈액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 * 담당직원이 연중 24시간 상주하며 전산 장애와 화재 등 돌발 변수 대비

[공공의료사업]

- 필수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추진**
 -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창·상주·통영병원의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

구 분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거창병원	상주병원	통영병원
기능확대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 내 충분한 필수의료 공급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증진료권	거창진료권(거창·함양·합천)	상주진료권(상주·문경)	통영진료권(통영·거제·고성)

[재난구호사업]

- 안정적인 재해구호 사업을 위한 **의연금 배분 체계 개선**(「재해구호법」 개정)
 -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집중된 의연금 배분 권한을 적십자 등 구호지원 기관·모금기관 협의체 중심으로 다원화·합리화 추진

[사회봉사·청소년 사업]

□ **적십자 희망풍차 연계형 치매 돌봄서비스의 상시 지원 체계 구축**

-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사업에 치매예방 활동을 편입시켜 적십자 고유의
보편적·상시적 돌봄 서비스로 모델 재구조화

* 희망풍차 결연: 지역 취약계층과 봉사원이 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방문 돌봄과
맞춤형 생필품을 지원하는 적십자 대표 복지사업

□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화**

- 단계적 시범운영('26~'27) 성과분석 및 사업전문성·중복성 진단을
통한 전국 단위 확대 여부 최종 검토 예정

* 2026년도 교육 보급목표: 50회 1,000명

Ⅲ. 중점 추진과제

① 주요 추진과제

□ 혈액사업 안전성·내구성 확보를 위한 **사옥 신·개축 사업 추진**

(7개 혈액사업기관* 약 1,783억원)

* 7개 기관(남부혈액검사센터, 부산/광주전남/대전세종충남/대구경북/서울중앙/서울남부혈액원)

** '26년 정부 예산 부산혈액원 및 남부혈액검사센터 신축 설계비 반영(약 13.8억원)

□ 필수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추진**

-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창·상주·통영병원의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한 예산 확보 필요

□ 안정적인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 배분 체계 개선**

-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집중된 의연금 배분 권한을 적십자 등 구호 지원기관·모금기관 협의체 중심으로 다원화·합리화 추진

□ **치매 예방서비스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자살예방 운영 프로그램 확대**

- (치매돌봄)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사업에 치매예방 활동을 편입
- (자살예방) 단계적 시범운영 및 평가·보완를 통한 전국 단위 확대

② 업무보고(12.16.) 지시사항

□ (지시사항) 대한적십자사 예산구조 관련 보고

- (세부 이행계획) ‘26년도 예산안 보고 완료하였으며(12.22.), 회계별 예·결산, 집행 등 지속 관리 예정

<2026년도 회계별 자원구조>

(단위: 억원, %)

회계구분	자체수입		정부보조금	총계
	과목	금액		
일반회계	기부수입	1,710	53	2,734
	적립금 및 기금	425		
	투자·재무활동	76		
	기타**	470		
	소계	2,681		
병원회계	진료수입	2,192	444	2,948
	의료부대수입	63		
	기타	249		
	소계	2,504		
혈액회계 (혈장분획센터 포함)	사업수입	5,711	125	6,468
	기타	632		
	소계	6,343		
기타회계*	퇴직급여부담금	391	71	800
	사업수입	24		
	기타	314		
	소계	729		
합계		12,257	693	12,950
비율		94.6	5.4	100.0

※ 필수의료강화 지원사업 추경예산 54억 원은 별도

* (기타회계) 회관특별회계, 수품센터특별회계, 퇴직금특별회계, 재외동포지원본부회계

** (기타 수입과목) 기관 간 보조금, 이자수입 등 사업외수입

참고 1

'24년도 대한적십자사 결산

□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억원)

회계구분	세입	세출	연도잉여금
일반회계	2,117	1,997	120
병원회계	1,696	1,940	△244
혈액회계 (혈장분획센터 포함)	4,906	4,933	△27
기타회계	725	590	135
합계	9,444	9,460	△16

○ 세입 세부내역

(단위: 억원, %)

구분	금액	비율
기부수입	1,506	16.0
사업수입	6,180	65.4
정부보조금	334	3.5
기타수입	1,424	15.1
합계	9,444	100.0

○ 세출 세부내역

(단위: 억원, %)

구분	금액	비율
사업수행비용	8,038	85.0
일반관리비용	1,130	11.9
모금비용	202	2.1
사업외 비용	40	0.4
법인세비용	50	0.5
합계	9,460	100.0

참고 2

정부보조금(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세부 현황

□ 2026년 부처별 구분

(단위: 천원)

구분	보조내역	계	사업비	자산취득	비고
합 계		69,263,254	45,860,334	23,402,920	
보건복지부	소 계	46,508,860	24,277,250	22,231,610	
	필수의료 강화 지원	18,000,000	18,000,000		병원회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13,818,300	2,250	13,816,050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500,000	500,000		
	혈액원 노후장비 교체지원	3,959,000		3,959,000	혈액회계
	헌혈의집 설치지원	1,600,000		1,600,000	
	조혈모세포 검사지원	1,305,000	1,305,000		
	헌혈자 예우 증진사업	100,000	100,000		
	스프링클러 설치	1,479,560		1,479,560	
	부산혈액사업기관 신축 설계비용	1,377,000		1,377,000	
	원폭피해자 진료비·장제비 등 지원	4,370,000	4,370,000		원폭사할린 회계
통일부	소 계	3,435,000	3,435,000		
	이산가족 상봉 및 고향 방문	3,242,000	3,242,000		일반회계
	이산가족 민간교류 촉진	193,000	193,000		
재외동포청	소 계	995,000	995,000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정착비 지원	795,000	795,000		원폭사할린 회계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200,000	200,000		
지자체 등 연계	소 계	18,324,394	17,153,084	1,171,310	
	- 시·도 재난심리 전문인력 운영,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행정안전부+지자체)	1,848,200	1,848,200		일반회계
	-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보건복지부+부산·인천시)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 운영, 분만취약지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등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12,089,801	10,918,491	1,171,310	병원회계
	- 경인권역재활병원 운영 보조 등(인천시)				
	- 365안심병동,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경상남도+통영시)				
	- 헌혈장려 지원(서울시 강남구 등)	2,648,950	2,648,950		혈액회계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시설 운영 지원 등 (보건복지부+재외동포청+인천시)	1,737,443	1,737,443		원폭사할린 회계

※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추경예산 54억 원은 별도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관리체계 내실화) 안전보건 정기 점검 실시
 -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통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위험 관리 현황 확인
- (안전사고 예방 관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활동 지속
 -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사전 예방
- (조치 이행관리) 안전보건 기본계획 추진 및 후속 조치 실시
 - 기본계획에 반영된 연간 실행 과제 단계적 추진 및 보완
- (위험요인 관리) 근로자 참여 중심의 현장 유해 요인 발굴 및 대응
 - 근로자 의견 수렴을 통한 위험요소 관리 및 안전의식 제고
- (개인정보보호·관리) 정보보호 전담조직 운영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 2025년 보안·유출 사고 ‘제로’ 및 복지부 보안감사 지적사항 없음.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우수(A) 등급 획득을 통한 안정적인 관리체계 유지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지역물품 우선구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물품 우선구매 지속 노력
 - 물품·용역 지역구매 확대 및 강원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한 위탁 계약 등 ‘25년 지역우선구매 실적 달성

[연도별 우선구매 실적 현황]

구분	목표	실적	금액(백만원)	전년대비 증감(백만원)
2025년	9.3%	10.1%	1,327	783

- 물품 우선구매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지역 공급 가능 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 상생 기반 강화 및 활성화 도모
- (지역경제 공헌) 기관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사회 선순환 사업 이행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헌혈기부권 사업**을 통해 강원권 장학사업 30명(1인 100만원) 및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7,000만원 지원
 - 지역사회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소비 촉진 활동**(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및 **지역주민 대상 재난 대비 응급처치 교육** 실시 ('25년 425명 교육 수료)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채용 박람회 참여**(4회) 및 학생 방문 견학 프로그램 운영(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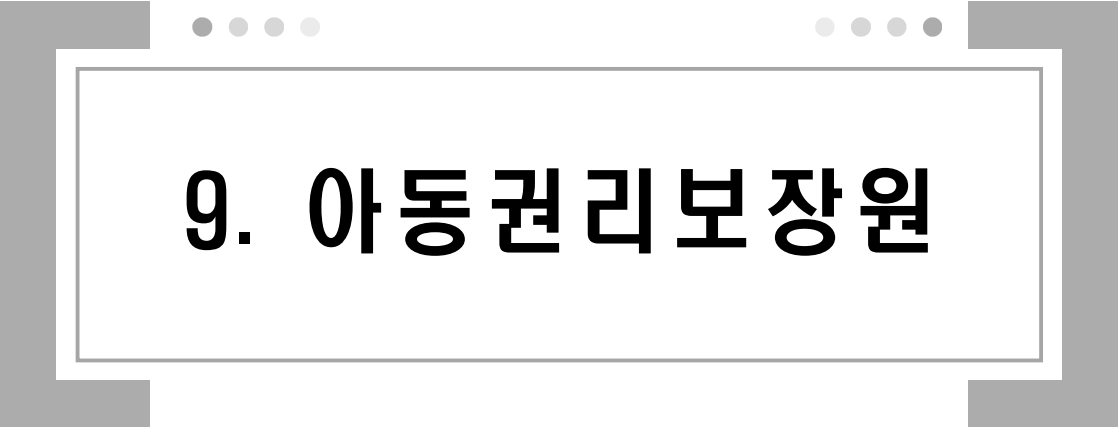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반부패 · 청렴) 전사적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대국민 신뢰 확보
 - 소속기관 반부패·청렴시책 평가(전사적 반부패시책 추진)
 - * 소속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반부패 노력을 촉진 · 지원하여 청렴인식과 조직문화 개선
 - * 소속기관 반부패시책 평가결과의 기관성과평가 연계 반영, 우수기관 포상 등을 통한 전사적 반부패시책 추진 역량 강화
 - 자체 익명신고시스템 상시 운영
 - * 익명신고시스템 상시 운영을 통하여 부패 · 비위 등 위법 · 부당행위를 조기에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운영 확립 및 국민 신뢰 제고
 - 5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 [국정감사] 헌혈 유공 포상 기준에 대한 적절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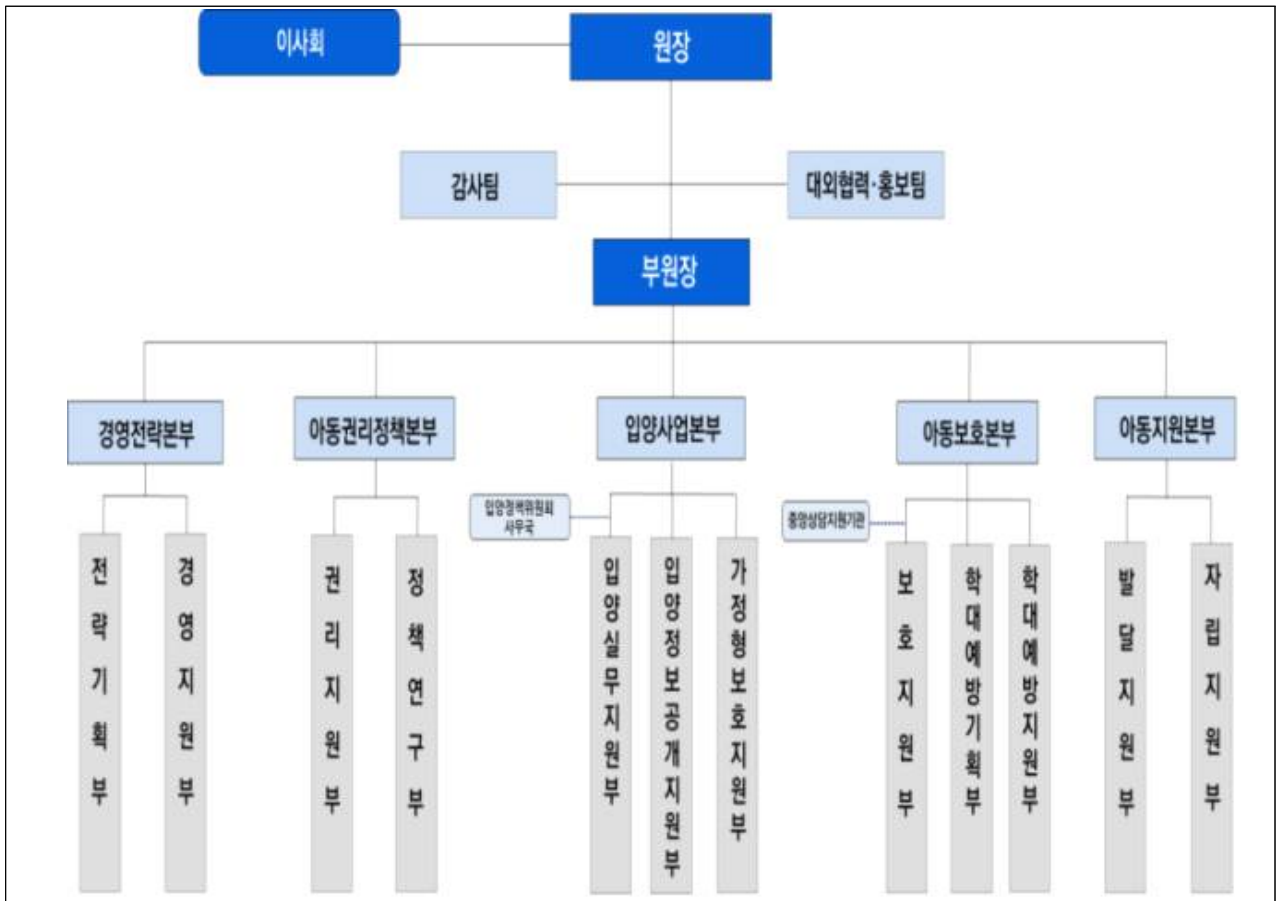
- (주요내용)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단체에 대한 헌혈 유공 표창 수여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포상 공정성 문제 지적
- (개선계획) 정부 포상운영지침을 준용하여 포상심의위원회 내 위원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내부 포상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검증 체계 강화 예정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a large gray bracket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bracket is a white rectangular box with a thin gray border. Above the box, there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ay dots,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9. 아동권리보장원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5본부 12부 2팀)



2 인원 현황

구 분 \ 직급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아동권리 보장원	정 원	198	2	5	12	32	40	45	62
	현 원	177	2	2	7	16	29	42	79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28,038	31,332	3,294	11.7
민간경상보조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38	31,332	3,294	11.7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추진성과

- **[공적 입양체계 운영]** 국가가 책임지고 입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25.7월)됨에 따라 안정적 제도 운영 지원 추진
 - **(정보공개청구)** 각 입양기관 등에서 진행되던 입양 서류* 신청·발급 업무 일원화로 편의 제공, 정보공개청구 매뉴얼 개발·배포 등을 통한 업무 표준화
 - * 입양정보공개청구서, 입양사실확인서, 무연고입양인 유전자 검사 대상 확인서
 - **(입양인 지원)** 입양인·가족 등 취업연계(3인), 입양인 선호지역으로 주거지 제공, 지자체와의 협업기반 마련
- **[아동보호체계 강화]**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 결정·지원
 - **(맞춤형 양육지원 확대)** 고위험 조손 위탁가정 대상 양육 코칭 프로그램(12회기) 보급 확대로 양육기반 강화('25. 3개소, 90가정)
 - **(소통 강화)** 제도 당사자(위탁아동·부모 정책참여단,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등)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하여 **현장 불편 해소**
 - * 위탁부모 실태점검·개선,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정부24 발급, 위탁부모의 제한적 법정대리권한 부여 등
 - **(공공후견 지원)** 친권자·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에게 **공공후견 지원 사업 확대** 추진(경기→서울, 인천), 「보호대상아동 미성년 후견 매뉴얼」 발간 및 배포('25.9.),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을 위한 실무교육('25.12.) 실시
 -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현장 소통 및 고난도 사례 대응 위한 **지자체 현장간담회 실시**, 「2025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매뉴얼」 개정 등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전문성 강화**
 -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제도 홍보** 등을 통하여 **누적 상담 인원 증가**('24년 901명 → '25년 12월 2,923명)
 - 원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기업체 업무협약(한진택배, 스타벅스)등 민간자원 협력 확대

-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한 정책 이행 지원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 중대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부처간 소통 확대(경찰청), 중앙-지역간 유사사건 방지를 위한 간담회 운영 및 개선과제 도출
 - * 학대사망사건 정합성 개선지침 개정, 사망사건 대응 절차 지침 개발
 - **(피해아동 지원)** 17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완료 및 사례 세미나, 간담회 등현장 소통 확대로 사각지대 방지 및 심리지원 기능 강화
 - **(학대 예방 개선)** 긍정양육 실천 콘텐츠 제공으로 실질적 양육 인식 개선 가족 동반자살 표현 감소 등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 기준 준수 개선('24년 103건 → '25년 132건)
- **[아동돌봄 및 자립지원]** 안정적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보호대상 아동 청년 자립 지원 강화
 - **(마을돌봄서비스 체계 강화)** 야간 연장 돌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돌봄 공백 지원 및 이용자 특성 기반 맞춤형 서비스 추진*
 - * 전체 이용아동의 23.4%('23년 기준)인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다국어 번역지원 만족도조사, 홍보영상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 참여 제고
 - **(자립 지원)**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매뉴얼 개선, 경제교육 콘텐츠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적 개선 및 표준화 기반 마련
 - **(사전예방 강화)** 드림스타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아동 사례 관리 공유('25.4/9월, 4회), 우수사례집 발간·배포('25.12.)
 - **(아동 자산형성지원)** 가입아동 및 후원자 후원금 지속 확대에 따라, 신규 후원모금 관리 서비스 도입('25.10.) 등 업무효율 개선으로 후원금 관리체계 내실화
- **[아동권리 증진]** '권리 주체'인 아동 당사자 정책 참여 지원,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 보장 환경 조성
 - **(아동 참여 활성화 등)** 아동참여기구 운영 등 대내외 아동 참여활동 연계를 통한 아동 참여기회 제공 확대(전년 대비 7.1%↑), 제1회 참여사례 공유회 도입을 통한 아동의 참여경험 및 의견 청취 창구 및 환류체계 마련
 - **(아동권리 옹호)** AI 기반 아동권리 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전국 아동 행사놀이 정보 지도 플랫폼 구축 운영(T map 등 453건),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통한 국제 아동권리협약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

2 보완점

- 공적입양체계 제도 시행 초기 기반 마련 과정에서 현장 혼선, 정보공개 청구 운영 대기시간 발생 등 **제도 조기 안정화 위한 운영기반 보완 필요**
→ (대응방안) 관계기관·부처, 입양인단체 및 전문가와 정기협의 통한 쟁점 분석 및 신속한 조정, 매뉴얼 개정 등 실무 지원 강화로 안정적 운영체계 정착 추진

3 향후 업무추진방향

□ 공적입양체계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강화) 입양정보공개 청구 업무 일원화 및 효율화를 통한 국내·외 입양인 알 권리 향상 지원
 - 국가기록원 위탁보존에 따른 입양기록물 보존·관리 통해 입양기록물의 영구적·체계적 보존 기반 구축
- (입양인식개선 홍보·교육)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양질의 예비 양부모 발굴 및 양성을 통해 아동최우선 원칙 기반 국내입양활성화 지원

□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 지원 강화

- (가정위탁 보호제도) 가정형 보호 활성화 위한 위탁가정 발굴·양육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지속 강화
 - 고위험 조손위탁가정 양육코칭 프로그램 확대 ⁽²⁵⁾3개소 → ⁽²⁶⁾6개소
-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24년 제도 도입에 따라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상담원 전문성 강화, 지역상담기관 운영 역량 강화
- (공공후견 지원 강화) 공공후견 사업 지역 확대를 통한 보호 대상 아동 후견 공백 완화 및 후견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도 홍보
- (아동보호체계 역량 강화) 보호대상아동 고난도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과정(기본·보수교육) 지원 및 교육 내실화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 돌봄 및 자립지원

- (마을돌봄서비스) 마을돌봄시설의 운영 역량 강화 지원으로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안정적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야간연장돌봄사업 운영('26~)
- (드림스타트)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개선, 가족돌봄아동의 전담 사례관리 지원('26~)
- (아동자립지원)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개선, 자립준비청년 대상 외부자원 발굴·연계 강화 등 통해 실질적인 자립 실현 도모
- (자산형성·관리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체계적 자산형성과 재무역량 관리 지원, 후원자 참여 확대 통한 자립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

- (제도 개선 지원)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제도 도입 추진 및 실무 운영체계 마련
- (피해아동 지원) 가족중심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및 회복지원체계 확대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과 전방위적인 재학대 예방 체계 강화
- (학대 예방 홍보) 긍정양육 문화 조성 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공,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확산을 위한 아동·언론단체 협력 강화

□ 아동 존중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

- (아동참여 활성화) 아동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아동 정책 개발 위해 아동참여기구 운영 및 참여 기회 제공 강화
- (아동권리옹호) 온라인 방송 아동 인권 보호 모니터링 통한 디지털 환경 아동권리 보장 강화

Ⅲ. 중점 추진과제

① 국가 책임 입양제도 안정화 지원 [국정과제 87-3]

□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안착 및 통합적 서비스 품질 제고

- 입양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입양 전 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입양 실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소통 및 교육 체계 구축
- 긍정적 입양문화 조성 위한 **대국민 참여형 홍보** 및 다각적 매체 홍보 추진
-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증설** 및 신설 운영을 통한 예비입양부모 발굴 및 양성 강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예비입양부모 기본교육(11H): 대면강의, 23차수(월 2회),
/ 국제입양법상 예비입양부모 기본교육(10H): 대면강의, 6차수

□ 입양기록물 안전한 보관 및 정보공개서비스 원활한 제공

- 기존 입양기관에서 이관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관 필요 → 기록물 위탁보관 등 국가기록원과 협조체계 구축

* MOU 체결('25.10.), 국가기록원 위탁보관 추진('26.上), 각종 자문 등 상시협력 예정

- 입양기록물 이관에 따라 공공이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 입양인 대상 정보공개 서비스 원활한 제공 필요 → 인력 확충, 법제도 정비,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추진

②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국정과제 87-3]

□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 지원 강화

- 가정위탁 국가 사업화를 위한 법제화 지원 및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종사자 및 위탁부모 등 의견 수렴

- 실제 위탁 참여 부모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메시지 및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중앙 차원 홍보 강화(카드뉴스화, SNS, 유튜브 쇼츠 등)

- 고위험 조손위탁가정 대상 양육 코칭 프로그램 확대 및 매뉴얼 보급

* 경상권역, 충청권역 및 전라권역 포함 6개소로 확대

- **친권자·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후견 지원 확대**
 - **(사업 확대)** 사업 대상지역 확대('25.서울·경기·인천→ '26 2개 시도 추가), 공공후견 관련 법률지원 기관 연계를 통한 법적 절차 지원 운영
 - * 보장원의 후견업무 관련 심판청구 등 법률 절차 대행 및 지원, 공공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 업무 관련 활동 지원 등
 - **(교육·홍보 등)**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세분화 및 후견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채널 활용한 대국민 홍보 추진
- **아동보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협력 강화**
 - 아동보호체계 유관기관* 간 소통·협력체계 강화 위한 권역별 합동 워크숍 및 현장간담회 추진
 - * 시군구(아동보호·학대·드림스타트), 자립지원전담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등
- **생존권 보호 위한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 생활 점점 매체 활용 타켓 홍보 및 민관 협업 홍보 강화 및 중앙 기관 차원의 '위기 임산부 상담 1308' 모바일 상담 채널 운영·관리
 - * 생활점점광고, 주요포털 검색광고

③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국정과제 87-3)**

- **아동학대 사망 분석 체계 도입 지원**
 - 하위법령 개정, 전·후향적 분석절차 마련 등을 위한 지원, 24시간 사망사건 보고 체계 운영, 국내·외 자료 수집 등
 - * 아동복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12.)
- **학대피해가정 회복지원 체계 강화**
 - 가정내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맞춤형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사업 점진적 운영 확대* 및 성과 분석 등 사업 운영 내실화
 - * ⁽²⁴⁾81개소, 2,459가정 → ⁽²⁵⁾86개소, 2,561가정 → ⁽²⁶⁾90개소, 2,680가정

4 아동돌봄 및 자립지원 강화 [국정과제 87-4]

□ 드림스타트 제도 운영 지원 강화

- 가족돌봄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로 새롭게 포함하여 아픈 부모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등 지원
- 가족돌봄아동 등 드림스타트 대상 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연구 추진 및 서비스 현장 보급

□ 보호종료 전 아동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보호아동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개선 연구('26.~), 보호연장아동 대상 특화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방식 다양화(중앙 및 지역 주도형)

□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원 발굴·연계 체계 구축

- 자립준비청년 취업활성화 협의체 운영(연2회), 민간·공공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무설계 및 진로(진학·취업) 지원 연계 등 지원

□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

- 가입아동 및 후원자·후원금 지속 확대에 따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 후원모금관리서비스 기능개선, 신규 후원자 발굴 및 홍보 강화
-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26.4.)에 따른 아동 자산관리 지원사업 신규 추진
 - 자산관리 지원 지침·매뉴얼 개발, 자산관리 컨설팅*, 경제교육 강화, 자산관리 실적관리 등

* 가입 시기, 만기 인출 시기(만17세~23세) 등 특정 시기별 의무교육·컨설팅 필요

□ 종사자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개선

- 자립준비청년의 안전·건강 등 위기도 판단을 위한 사정도구 개선 및 사례관리 매뉴얼 적용 교육 개설 등 종사자 교육(연중) 강화, 자립지원전담인력 워크숍(각 연1회) 운영을 통한 소진 예방 등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경영강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위험성 평가 조기 실시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체계 의무 이행 및 개선

- (안전경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2년 연속 인증('25.11.), 새정부 안전 정책을 고려한 안전 보건경영방침 개정 및 선포('25.12.)
- (시설안전) 사무실 이전('25.3.)에 따른 위험성평가 조기 실시('25.4.), 시설 방호계획 개정('25.4.), 회의실상 담실 비상대피로 안내 체계 마련('25.10.)

- (환경조성) 건강친화기업 신규 인증, 맞춤형 근로자 안전교육 등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 지원

- (안전보건 역량강화) 맞춤형 근로자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수시), 정신건강 등 건강친화 교육 및 활동
- (임직원 건강 지원) 비상상황 대비 심장충격기, 구급용품 구비('25.11.), 건강친화기업 신규 인증('25.12.), 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챌린지('25.12.)

- (정보보안 강화) 관리적·기술적 보안 통제 점검,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을 통한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 연간 정보보안 업무 추진계획('25.2.)에 따라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정보보안 종합감사 대응,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등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노후화 네트워크 장비 교체, 정보보안 솔루션 적용을 통한 네트워크 운영 안정성 및 운영환경 개선

-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관련 법령·지침을 반영한 관리체계 정비 및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 관련 법령·규칙 등 현행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 기준 최신화, 개인정보 파일 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안정성 평가('25.7.)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 이행 실태점검('25.9.) 등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속 관리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지역사회 연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기관 업(業)을 활용한 지역사회 상생 활동 적극 추진

- 24년 기업·기관 협업의 전국 단위 취약계층 아동 자원연계 추진(8,339건), 청년·대학생 대상 직무 멘토링, 지역 연합 사회공헌 협의체 '광화문원팀' 참여, 보유시설 지역사회 개방 등
 - *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활동을 인정해 주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 2년 연속 인정(2024~2025)으로 대외 인증 성과 창출(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 (업체 협력) 우선구매기업 대상 검토 의무화 등 협력업체 상생, 협력 강화

- 우선구매기업 대상 검토 의무화*, 선금지급 한도 확대, 대금지급 일정 단축 모니터링 실시
 - * 계약업체 선정 시, 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계약 검토서 필수 제출

○ (계약 공정성 확보)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지속

- 계약 특혜 방지,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 규정 및 매뉴얼 개정('25.7.)으로 퇴직자 재직여부, 중복 인력 투입 방지 확인 의무화
- 공공계약 교육('25.8.), 계약실무 교육('25.9.) 등 지속적인 내부 교육을 통해 공정계약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 제고

3 대국민 소통 노력

○ 최신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정보 확산 및 국민 체감도 제고(국민소통지수 '24比 73.3%↑)

- 뉴미디어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국민 참여도 및 반응도(좋아요, 공유 등) 중심의 국민소통지수**를 전년 대비 73.3% 상승(40,282건 → 69,789건)
 - * 입양체계 공적 개편 QnA, 아동학대 OX퀴즈, 드라마·영화 속 사례 기반 아동권리 인식 제고 콘텐츠 시리즈 제작·배포 등
 - ** SNS 채널(유튜브, 블로그 등) 팔로워 수: ('24년)38,604명 → ('25년)64,463명
- 입양제도 공적 개편 및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제 등 변화하는 아동정책에 대한 다각적 뉴미디어 콘텐츠 발행*을 통해 정보 접근성 강화
 - * SNS 채널(유튜브, 블로그 등) 콘텐츠 제작·확산 건수: ('24년)783건 → ('25년)1,355건

○ 정책 기반의 능동적 언론홍보 및 현안 이슈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체계 확립

- 주요 사업 및 아동정책을 기반으로 한 보도자료 생산·배포 확대*(전년 대비 27.2%↑)로 정책 노출 빈도 강화 및 왜곡·부정 보도관련 적극 대응 등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편향적 보도 예방 노력****
 - * 보도자료 생산·배포 및 보도 건수: ('24년)103건 생산/378건 보도 → ('25년)131건 생산/728건 보도
 - ** 왜곡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2건) → 반론보도 게재 결정 확보

※ 입양제도 공적 개편('25.7월) 정책 집중 홍보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콘텐츠	유튜브 협업(하이머스타드, 경계를 걷다 등) 및 '입양으로 잇는 이야기' 시리즈 등 총 236건 제작	누적 조회수 49만 회 달성
현장 소통	전국 권역별 인식개선 캠페인, 신애라 홍보대사 강연 및 임시서고 설명회 추진, 지역 아동보호체계 종사자 대상 합동 워크숍 시 입양제도 개편 설명 추진(597명, 6회)	이해관계자 등 1,313명 참여
언론 노출	제도 개편 관련 기획 보도 및 보도자료 27건	총 187건(배포 대비 약 7배)의 언론 보도 확산

○ (고객만족경영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기적 고객만족 수준 점검 및 결과 기반의 사업별 환류, 대국민 소통·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고객 중심 경영 실천

-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수행 및 조사 결과 기반 사업별 개선계획 수립·환류에 따른 서비스 제공 수준의 체계적 관리
 - * (고객만족도 점수) '22년 76.8점 → '23년 78.3점 → '24년 79.3점

Ⅵ.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입양기록물 보존환경 보완 필요 (더민, 뉴스타파)

- (주요내용) 입양기록물 보존·관리 시 아동권리보장원 임시 서고에 대한 보존환경 문제 사안 지적
 - 입양기록물 원본의 관리주체가 입양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입양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서고’ 마련하였으나, 보존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입양인·상임위·언론 등)
- (개선계획) 입양기록물의 국가기록원(전문보존시설) 위탁보존 추진 및 보존·관리 강화
 - 입양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기록원 위탁보존 추진(성남분원)* → 국가 차원의 전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입양인 기록 보존 체계 정비 및 인력·예산확보 통한 입양인 알 권리 강화

* MOU체결(‘25.10.), 기록물 보존전문가 자문회의 운영(‘25.12~), 국가기록원 위탁보관 추진(‘26.上)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gray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brackets, there are two horizontal rows of four small gray dots each, positioned above and below the central text box.

1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I. 일반현황

① 기구 및 조직 현황 : 1개 본부, 4개 센터



② 인원 현황

(단위 : 명 / '25.12.31. 기준)

구 분	직급별	계	이사장	계약직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주임급
합계	정 원	390	1	5	29	70	104	181
	현 원	354	1	5	8	46	128	166

③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115,468	108,862	△ 6,606	△ 5.7%
I. 국고보조금*	26,516	21,146	△ 5,370	△ 20.3%
II. 시도 보조금 및 출연금**	15,743	8,675	△ 7,068	△ 44.9%
III. 자체수입	28,479	28,990	511	1.8%
IV. 연구개발사업(R&D)	19,915	26,809	6,894	34.6%
V. 전기이월금 등	24,815	23,242	△ 1,573	△ 6.3%

* 세포특성분석센터(4월, 73억) 완공에 따라 건축비 감액

** K-바이오� 트레이닝 센터(4월, 73억) 완공에 따라 건축비 감액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첨단의료제품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품화 공백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
 - 바이오의약품 국내·외 품목허가 및 IND승인 지원(11건)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반기술(71건), 기술이전(3건), 특허*(38건) 확보
 - * 특허 등록 18건, 출원 20건
 - 제품화 지원 고도화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 *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의료기기 국제규격 ISO13485 '적합' 승인, 신약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
 - 차세대 의료제품 개발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플랫폼 구축
 - * 디지털 트윈 기반 의료기기 설계·성능·신뢰성 검증 플랫폼 구축, 감염병원체 대응 인간항체생성 인간화마우스모델 구축, 천연물·BT기반 의료기기 인증지원 플랫폼 고도화, mRNA 핵산 치료제 제조 및 품질분석 플랫폼 구축 등
 -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K바로) 구축
-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양성 및 규제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 바이오의약품 실무 실습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 * 첨단재생의료, 규제과학 등 현장 중심 전문과정 운영, 약대 실무실습 및 고등학생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총 42회 운영, 820명 양성)
 - 제품화 성공을 위한 규제과학 지원 체계 강화
 - * 기업 규제 애로사항 지원 11건, 기업간담회·워크숍 개최 4건, 컨설팅 53건 실시
 - 창업기업 입주·지원을 위한 이노랩스(28개 기업 입주 可) 개소('25. 7월)
 - * 기업 13개社 입주 완료, KAIST 바이오 창업 랩센터 운영 예정

□ 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의료기기 신규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

사업명	기간
바이오접합체 핵심기반기술 구축사업	'25~'30년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사업	'25~'29년
고품질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디지털트윈 정제공정 기술개발 사업	'25~'29년
인공지능 QbD 기술 기반 항체의약품 고생산성 유가식 배양 공정용 디지털트윈 시스템 개발 사업	'25~'29년
글로벌 시장 진출형 다중항체의 품질 맞춤형 생산공정 기술개발 사업	'25~'29년
AI 적용 삼킴장애 진단·전자약 핵심기술 개발	'25~'29년
첨단의료산업선도기반 실증지원사업	'25~'29년

□ (보완점) 플랫폼 고도화 및 첨단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

-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 및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 필요
-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첨단연구장비 확보 필요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의약품·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역량 강화

- 필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mRNA 백신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 AI 기반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CMC 개발 및 제조공정 시스템 구축
- AI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 * 임상·규제 Path AI에이전트 기술, 난임 환자 맞춤형 체외수정 자동화 플랫폼 기술 등
- 국내 백신 역량 강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세포특성분석센터 구축
 - * '26년 3월 예정, 세포은행 제작기술 및 안정된 보관서비스 제공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추진
 - * CBTL 지정 추진('26.4월) - IEC60601-1 등 4개 시험규격 기반
 - ** 이식형 의료기기 MRI적합·안전성 평가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추진

- AI기반 표적지향 바이오접합의약품 제조 자율랩 구축

□ 바이오의약품·첨단의료기기 제품화 서비스 고도화 및 활성화

- 첨단동물모델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평가 지원 고도화

* 인간 간세포 기반 평가기술, 첨단 의약품의 효능 극대화를 위한 마모셋 약물 투여 경로 다변화 등

- 감염병, 노인성 질환 관련 치료제 중심 신규 플랫폼 구축

- AI 기반 첨단의료기기 성능·신뢰성 분석 및 위탁생산 서비스 확대

-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편의성 강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첨단의료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K-바이오 트레이닝 센터*('26.4월 준공 예정)을 활용하여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규모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 현재 신약센터 內 운영 중인 전문인력양성센터를 3층 규모의 센터로 확대·이전

- 첨단재생의료, 규제, 소부장, AI·바이오 중심 실무과정 및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25년 820명 → '26년 1,300명)

- WHO, IDB, ASEAN 등과 연계한 글로벌 트레이닝 허브화 추진

- 규제기관 협의체와 연계 협력 통해 규제지원 활성화·체계화

* 규제지원기관 협의체(CELL-UP) : 식약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규제과학센터 등

- 혁신창업 지원을 통한 첨단의료산업 생태계 활성화

* 美 BioLabs 운영모델 도입, KAIST 창업·벤처 생태계 지원 등

Ⅲ. 중점 추진과제

① AI 융합 바이오의약·BT기반 의료기기 전주기 제품화 역량 제고

- (바이오신약) AI 기반 차세대 항체의약품 전주기 개발·제조공정 혁신 강화
 - (전주기 지원) 바이오의약품의 발굴부터 GMP 생산까지 기업 지원
 - 항체·단백질치료제, 핵산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인프라·전문인력 지원
 - * (발굴)-(최적화)-(공정개발)-(비임상)-(GMP생산)에 걸친 전주기 지원
 - (AI·로봇 기반 신약 개발) AI·로봇 기반 자동화 자율 제조 시스템 구현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 단축, 바이오 기업 제조 경쟁력 확보
 - 바이오의약품 디지털공정 설계 모델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설계물질의 신속 검증*, 신규 모달리티** 개발 등 지원
 - * AI 설계 바이오의약품의 물리적 신속 검증 지원을 위해 자율랩 플랫폼 구축
 - ** 신규 모달리티 치료제(항체접합, 이중항체, 핵산치료제 등)와 자율랩 플랫폼 융합을 통한 단기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 (공공 CMC 인프라 구축)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국가 공공 CMC 지원 플랫폼* 구축
 -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품질관리·분석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 핵심역량* 확보와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술 자립 및 경쟁력 강화
 - * (계속)세포 제작 및 특성분석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 (신규)세포특성분석 기술구축 및 실증, (제안예정)바이오의약품 공공 CMC 지원센터 및 GMP 실증 인프라 구축
 - (바이오 소부장)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소부장 제품개발* 및 제조산업** 활성화 목적의 민관, 소요-공급 기업 협력 체계 구축
 - * 세포 배양배지 개발, 일회용 배양백 개발, 필터 개발 등 공정개발 소부장 및 세포개발, 전달체 개발 등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개발
 - ** 3D 바이오패브리케이션 핵심 소재 및 3D 생체조직 모사체 이미징 분석 부품 개발 등

□ (비임상 평가) 신약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제품화 서비스

-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시설(ABL3) 운영* 및 미래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 감염병 관련 기반기술 고도화를 통해 백신·치료제 개발 병목 해소 및 공공 인프라 활용도 제고

□ (BT기반 의료기기) 개발-제조-인허가 등 사업화 지원 강화

- (지원 체계 구축) 인체삽입형 고위험군(3·4등급)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제조-인허가 연계 One-Stop 지원 체계** 구축

*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시술/수술을 통해 인체 내부에 삽입되어 장기간 머무르며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기(예: 임플란트,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카테터, 스테이플 등)

**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 (GMP기반) 제품 설계제작, 초도물량 생산 → (인허가용) 공인시험검사

- (기술 개발 지원)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미래 핵심 유망기술 확보 지원

- 미래시장 트렌드·국가전략기술 방향 따른 경쟁 우위 기반기술* 확보 및 공동 연구개발 지원

* AI활용 디지털 기기개발을 통한 개인맞춤 정밀 의료 시스템 구축 및 초고령사회 대응

- (제품 제작 지원) 첨단인프라 및 GMP(품질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성, 성능이 확보된 제품화 기술 및 제작 지원

- GMP 기반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제조 플랫폼 패키지 (초도물량, 위탁생산 등) 서비스 제공

* GMP + 제조공정 프로세스 구축 → 'GMP 기반 플랫폼 패키지 서비스'

- (공인 시험 검사 지원)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의료기기 공인시험 서비스 지원으로 첨단의료기기 국내·외 인허가 획득 및 수출 지원

- 품목 허가를 위한 의료기기 전기·기계적·생물학적 안전성, 전자기 적합성 등 글로벌 인증용 시험검사 서비스 제공

* 식약처('16), KOLAS('18), GLP('19)등 공인시험기관 다수 지정

② 바이오헬스 생태계 확장 · 내실화 및 글로벌 연계 강화

□ (규제과학 지원) 수요자 중심 규제 지원 통한 병목 적극 해소

○ (기술규제 컨설팅) 신기술 사업화 과정의 국내 산·학·연·병 연구자·개발자 대상 기술규제 컨설팅 확대

- 기업 발굴·선정*을 통한 선제적 규제과학 컨설팅 및 맞춤형 기술지원 제공, 개발단계별 애로사항 해소 및 신속 개발 지원

* '26년 10개 기업 발굴 예정

- 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기업 대상 식약처 연계 공동 상담을 통한 고품질 공식 규제 컨설팅 제공

□ (전문인력양성) 현장형 바이오 인재양성 'K-BIO트레이닝센터' 구축('26.4월)

○ 바이오 분야 디지털 전환(DX)에 대응하는 AI·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바이오 제조 공정 교육 체계 구축

* VR·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공정 실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접근성 한계 극복 및 교육 숙련도 제고

○ 첨단산업 분야 GMP 기반 바이오의약품 실무 교육을 통한 국제 규제 대응력 강화

* 첨단재생의료·규제과학 등 신산업 분야 중심의 Pilot-scale GMP 제조 실습 과정 고도화 및 FDA·ICH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바이오 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

* WHO 인력양성 허브 및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연계 공동 인증 프로그램 추진

** 중남미·아시아 등 신흥국 대상 맞춤형 ODA 교육운영을 통한 한국형 바이오 공정 모델 수출

□ (글로벌 연계 창업지원) 이노랩스 기반 스케일업·글로벌 진출 지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바이오헬스 창업지원 시설 '이노랩스'를 거점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화형 지원* 확대

* IND 지원, 규제 컨설팅, 인증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 (혁신창업 기업 육성) 美 BioLabs, KAIST 연계 창업기업 유치로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및 혁신 창업 기업 육성 본격화
- (글로벌 협력)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선진 바이오 기관과의 협력체계 활성화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 기반의 바이오헬스 기업 특화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데모데이* 추진
 - * 스타트업을 홍보해 (후속)투자, 구매, 채용, 홍보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 (기술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관리시스템 개선·운영('26.1월, K-바로 시스템)
 - 기술서비스 확대 및 업무 수행 절차 명확화, 신청·접수 단계부터
통합 관리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도모 및 기술서비스 활성화
 - * 기술서비스 절차 : 신청 → 협의 → 의뢰접수 → 계약 → 수행 → 청구·수납
 - ** (기존) 센터별 기술서비스 수기·관리 → (개선) 재단 통합 접수·관리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책임 강화) 근로자 및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조직개편) 선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대응TF팀 신설
 - (점검강화) 중대재해예방 현장 안전점검 확대('24년 2회→'25년 4회), 수급업체 현장 순회 점검 강화('24년 주 1회→'25년 주 2회)
 - (예방관리)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장 개선 추진(물질성상별 캐비닛 확보, 생물안전작업대 및 흡후드 추가 설치, 유기용매 안전캡 도입 등)
 - (지원확대) 재단·수급업체 계절별 건강물품 지원(여름철, 겨울철) 및 지역주민 지원 확대(물품지원(구급함:100개), 건강상담(노인대학:70명))
- (고도화) 기존 KOSHA-MS 인증을 국제 기준 ISO45001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 (사이버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이버 위협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 과거 훈련데이터 분석 통한 임직원 개별교육(2회) 및 기관 자체 모의훈련(2회) 실시
 - 백업 및 복구관리 포함한 '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신규 제정('25.4월)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매월) 등 정기적 점검 및 개선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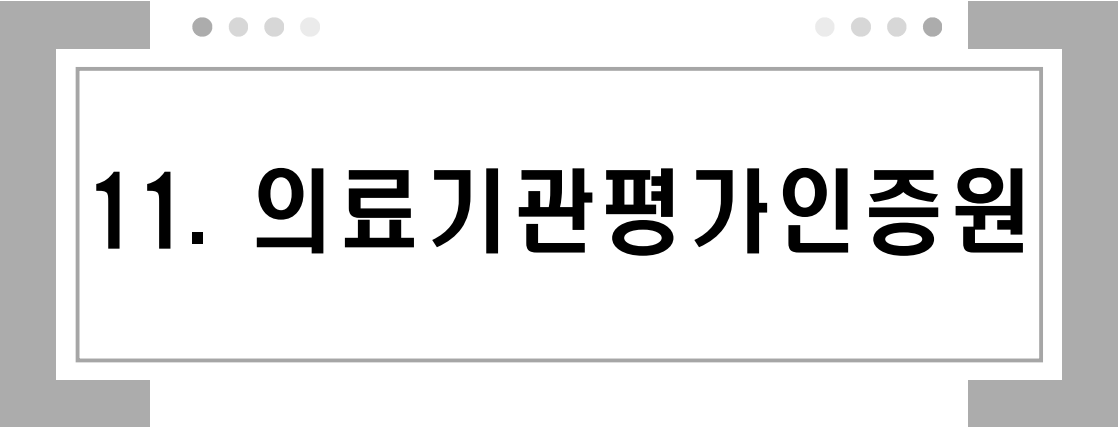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강화) 지역 특화 바이오헬스 R&D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 대상 지원사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외 시장 진출 기여

- (충청북도)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 사업('25) : 총 19개社, 6.5억원
- (청주시)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25) : 총 1개社, 1억원
- (친환경 및 사회적책임) 친환경 실천 및 탄소중립 추진 강화
 - 전산용품 불용 건(138점) 사회적기업 무상양여를 통한 자원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
 - 녹색제품 구매를 적극 확대하여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12.1억 원, 전년 대비 102% 증가)
 -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실시(년 2회)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임직원의 환경보호 인식 제고
 -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4회)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3회-안전용품, 과일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강화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고객만족도 제고) 공동연구 수행 및 인프라활용 서비스 수혜기업 대상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및 개선 필요사항 점검
 - * (고객만족도 결과) 신약개발지원사업 85.4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 89.8점, 비임상시험 및 의약품생산지원사업 90.8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사업 91.7점
- (소통 강화) SNS 채널 운영을 통한 대국민 소통 및 기관 인지도 제고
 -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25년 운영결과[콘텐츠 865건, 조회 384,965건, 방문자(팔로워) 40,728명] * 중복 콘텐츠 포함
 - 청년바이오 홍보단 운영(13명)
- (연구성과 확산 및 산업교류 활성화) 오프라인 전시·행사 참여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및 산업계 교류 강화
 - 재단 우수연구성과물 전시(제천 한방천연물엑스포 등 6개 전시회)
 - 재단 홍보부스 운영(바이오 코리아, KIMES 등 8개 전시회)
 - 재단 주최 바이오 전시회 운영(KBIOHealth Excel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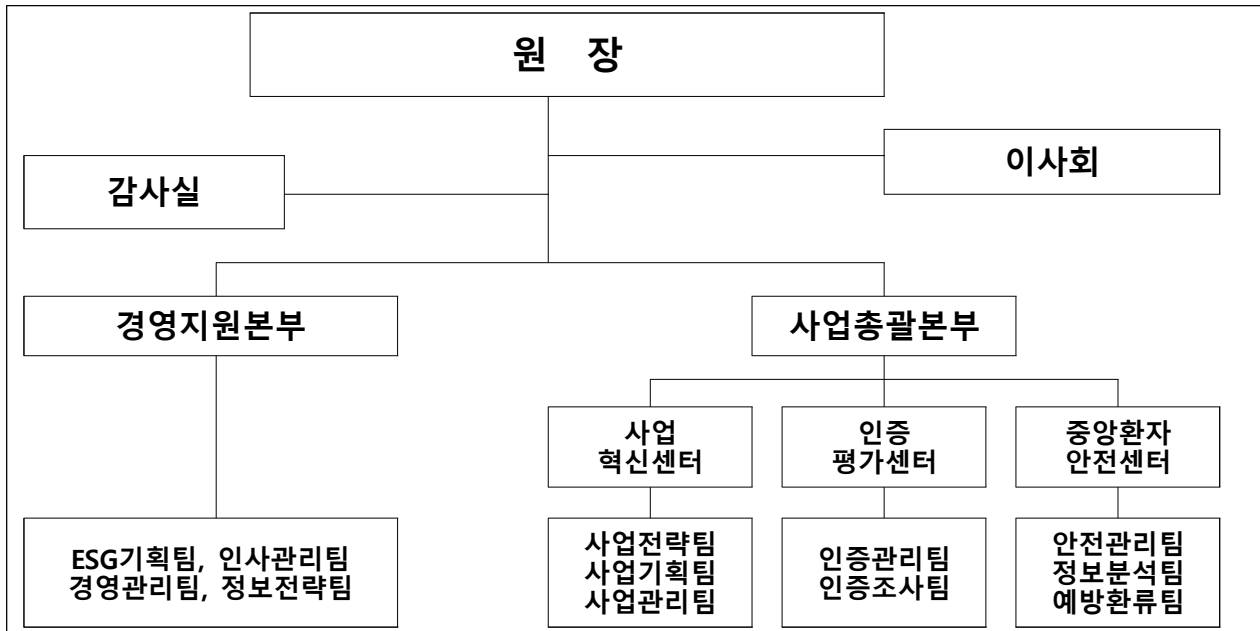


1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I. 일반현황

① 기구 및 조직 현황

○ 1실 2본부 3센터 12팀



② 인원 현황

구 분	직급별	계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공무직)
	정원	80	1	4	3	4	19	15	33	1
합계	현원	80	1	3	3	5	18	38	11	1

③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19,351	20,622	1,271	6.57
국고보조사업비	13,320	14,188	868	6.52
자체사업비	6,031	6,434	403	6.68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의료기관 인증제 개편

- 병상 규모, 지역,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증 참여가 어려운 중소의료기관의 의료 질 관리 문화 확산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인증제 개편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기본 인증제도 도입**
 -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시범조사, 간담회 및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등 검토 후 의료기관인증 위원회에서 기본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 심의·의결('25.11.)
 -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과 직결된 인증기준* 개발을 통해 중소의료기관의 인증 참여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시설·환경 개선이나 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기준 지양,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확인 및 의사소통, 환자진료, 감염예방 등이 포함된 156개 조사항목
- 또한, **인증기준 개정 방식 개편***으로 사회적 이슈, 급변하는 국내외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 등에 시의성 있게 대응 가능

* 정기적 개정(4년 주기)에서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시 수시 개정

□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적용 만료 시점이 도래('23.~'26.)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강화, 임상현장의 수용성 및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개정(Ver. 5.0)

* 성과관리 체계 및 수술시술 전 확인 강화, 수술실 CCTV 및 환자안전을 위한 리더십 교육 신설, 항생제 사용 관리 운영기준 구체화, 국제인증 권고 및 ESG 경영 요소 반영 등

□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및 운영

-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비예산사업(지정기관 전액 자부담) 분야를 포함한 제1기* ('21.7~) 및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24.7~) 10개소 지정 및 운영 중

* 보건의료기관(강원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그 밖의 협회단체(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 예산사업(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비예산사업(국군의무사령부,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 현재 10개소만으로는 전국적인 수요 충족에 한계 존재,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지역환자안전센터 확대 지정 필요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기본 인증 제도 기반 마련

- 중소의료기관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률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 교육, 컨설팅 및 다양한 홍보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환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인증제도로 유입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과 정책적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지속적 협의

□ 지역환자안전센터 확대 지정 및 운영

- 환자안전 관리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양적 확대

Ⅲ. 중점 추진과제

① 기본 인증제도 (국정과제 83)

□ 기본 인증 활성화

- (홍보) 지역별 의료기관의 정보 비대칭 및 이해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중소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한 권역별* 제도 설명회 시행('26.상반기)
 - * 강원권, 경상권, 수도권, 전라권, 충청권
 - 유관기관(중소병원협회 등),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 (교육) 기본 인증제와 인증기준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반영한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의료기관의 인증 준비 지원
- (맞춤형 컨설팅) 인증 경험이 없거나 인력·자원 부족 등으로 자체적인 준비가 어려운 의료기관 50개소를 선정, 준비 방법 안내, 규정 검토 및 보완, 개선 활동계획 수립 등 맞춤형 무료 컨설팅 제공

□ 인증마크 차별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 인증제 개편에 따라 현행 인증과 기본 인증 간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적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 인증마크 개발('25.11.)
 - 「의료법 시행규칙」(참고) 개정을 통해 차별화된 인증마크 신설('26.10.),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본 인증마크 홍보('26.하반기)

<변경 전> 인증마크	<변경 후> 인증마크 리뉴얼	기본 인증마크 신설
		

□ 기본 인증제도 시행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직력 강화 필요

- 기본 인증 도입 시 참여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증기준 관리, 조사 운영, 교육·컨설팅 업무 등 인력 증원 필요
 - 아울러 인증 의료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및 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이 요구되므로,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② 지역환자안전센터 확대 (국정과제 83)

□ 배경 및 필요성

-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나 전국에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10개소에 그쳐 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 10개소만으로는 전국적인 수요 충족에 한계 존재,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지역환자안전센터 확대 지정 필요

□ 사업 내용

- (개요) 지역 간 환자안전 격차 감소 및 환자안전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소 보건의료기관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지역환자안전센터 확대 필요
- (지원대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인 단체(중앙회), 의료기관 단체, 대한약사회, 기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협회·단체 등
- (지원단가) 개소당 100백만원(8개소 지원*)
 - * 강원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간호협회, 약사회, 의사협회, 단국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예수병원
- (사업기간) '21년 ~ '30년(계속)
- (지원조건 및 시행 주체) 지역거점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환자안전 교육·홍보, 환자안전사고 예방, 보고 활성화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0. 9. 4.>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4조의6제1항 관련)

1.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예

<도안>



<표시 예>



2.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가. 인증마크에는 인증받은 인증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나. 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르고,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가로·세로를 같은 비율로 하여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다. 인증마크는 황금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여 무광 금박으로 처리하고, 신문·잡지 등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 인증마크는 원칙적으로 사진제판 방식 또는 슬라이드 필름에 의한 투사 방식으로 복제되어야 하고, 벡터 방식(Vector Type)의 컴퓨터 그래픽 파일을 사용하여 재생하도록 한다.

□ 지원대상

- 「환자안전법」 제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

□ 지원내용

-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수행 경비 지원)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정부 시책 확산 및 지역거점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환자안전 교육·홍보, 환자안전사고 예방, 보고 활성화 등

□ 지원절차

- (절차)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 모집, 신청기관 대상 선정 평가에 따른 지정
- (운영)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현황 모니터링, 결과·실적 보고 등 성과 관리, 지정기간 종료 시 최종 평가를 통한 재지정 여부 결정

□ (지원단가) 개소당 100백만원

- (산출근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특성과 역량 차이를 감안한 운영 모델 개발('18년)
- (산출내역)
 - 인건비(40%) :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한 신규인력 및 참여인력 수당 등
 - 운영비(60%) : 환자안전 관련 제도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 및 배포 등 홍보비(25%), 유관기관, 협력병원, 지부분회, 환자 및 보호자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수행을 위한 교육비(20%), 기타(15%)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
 -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 수립, 정기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 강화
 - 전 직원 안전교육 정례화 및 안전관리 예산 확대를 통해 13년 연속 산업재해·안전사고 ZERO 달성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기관 자체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 웹해킹 DDos 모의훈련, 상시적 자체 해킹메일 발송 및 사이버 침해대응에 대한 자체 도상훈련으로 임직원 對사이버침투 대응 능력 함양
 - 견고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업무환경 마련
 - * AI를 활용한 개인정보필터 솔루션 운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기적 내부 업무 규정 개정, 개인정보 생애주기별 관리 지침 마련 등
 - 침해사고 및 재해·재난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해 자체 원격지 소산 및 복구훈련*으로 안전한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 * 대전KT IDC센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소산 환경 마련 및 주기적 복구훈련 실시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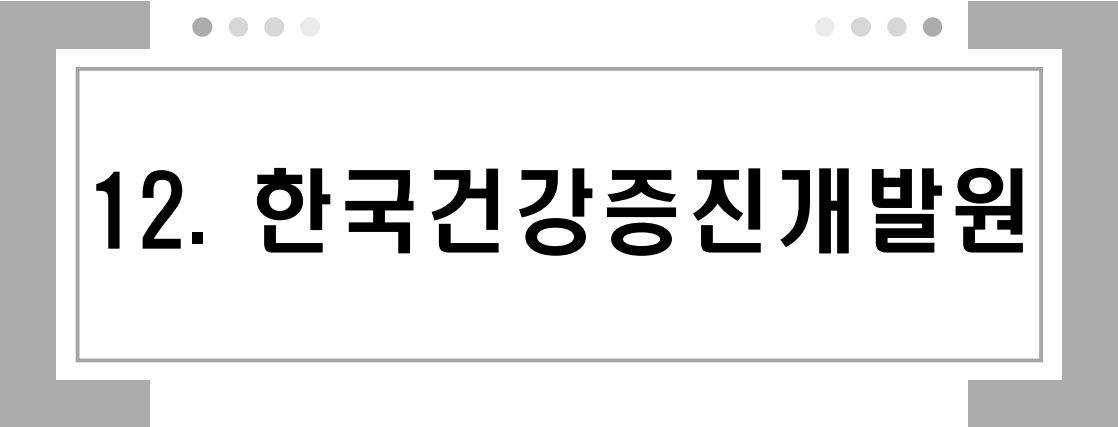
- 중소·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이행
 - 중소기업('24년 90.1%, '25년 92.9%), 기술개발제품('24년 143백만원, '25년 212백만원), 창업기업('24년 204백만원, '25년 254백만원), 온누리상품권('24년 6.4백만원, '25년 9백만원)

- 지역연계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지역사회 연대감과 나눔 문화 확산) 명절 후원물품, 성금모금, 의료 취약계층 지원, 급식 및 빵 나눔 등 봉사활동 확대
 - (ESG 동행마일리지 제도* 고도화) 2024년 결과를 반영, 직원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통한 제도 운영(전년 대비 271% 증가)
 - * 친환경, 탄소중립, 지역상생등ESG 가치실현위한9가지활동 선정(ESG 위원회, '24.9.) 및제도운영('24.10.~12.)

3 대국민 소통 노력

- 고객만족도 및 내부직원 인식도 조사 결과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3년 대비 '24년 2.7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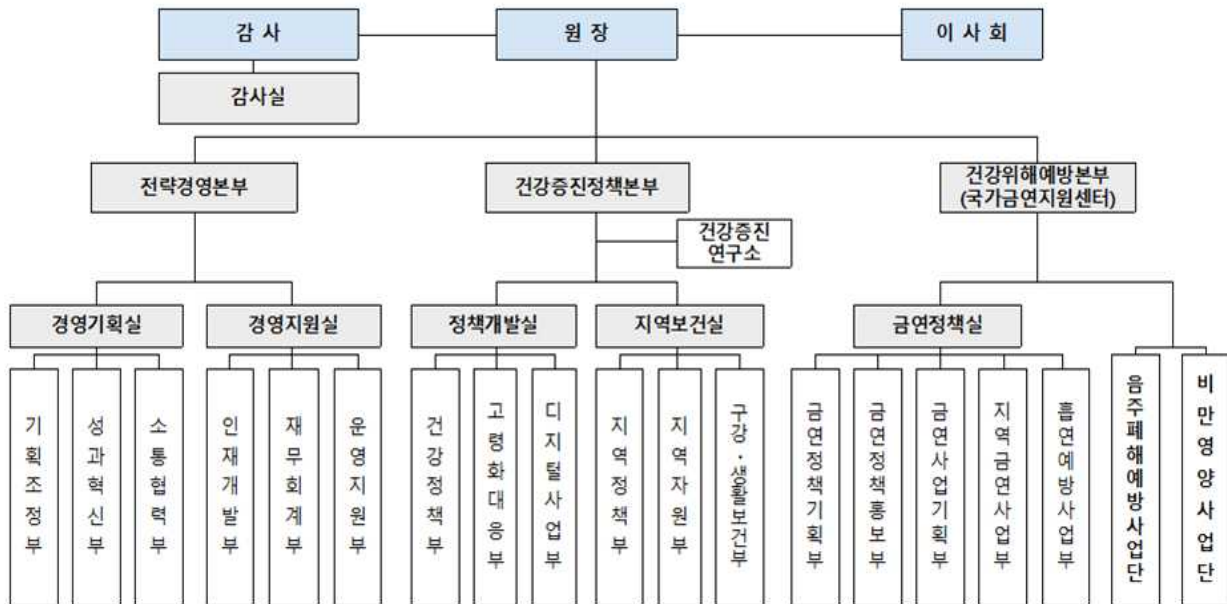
구분	'23년	'24년	증감
전체	83.7점	86.4점	2.7점
의료기관 인증제 수행	84.2점	87.0점	2.8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지원	85.8점	88.6점	2.8점
정신의료기관 평가	84.7점	88.5점	3.8점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사업	90.1점	92.9점	2.8점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1.6점	84.4점	2.8점
조사(평가)위원·컨설턴트 교육	85.6점	86.9점	1.3점



1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3본부, 6실, 20소·단·부)



2 인원 현황(정원 165명, 현원 180명)

구 분	직급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무기직	계약직
합계	정 원	165	1	3	8	18	35	66	7	27	-
	현 원	180	1	2	8	18	38	65	7	24	17

주: 2026. 1월 기준(휴직자 7명 포함)

3 예산 현황(총 32,0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31,656	32,090	434	1.4
□ 정부순지원	30,119	31,549	1,430	4.7
○ 보조금	25,957	27,697	1,740	6.7
○ 위탁사업비	4,162	3,852	△310	△7.4
□ 기타 (기타수입, 이월, 자체예산)	1,537	541	△996	△64.8

주: 2026. 1월 현재 기준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체계 개편 및 보건소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기반 마련
 - (방향설정)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개편 방안 마련 연구 추진(~'26.3)
 - (계획반영) '제8기 4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내 시·군·구 재택의료센터 총괄관리 계획 신규 반영('25.12)
 - (사업개선) 통합돌봄 연계 강화 및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 개발('25.12)
 - * (대상 확대) 장기요양등급 외자→등급자, (서비스개선) 1:1대면→디지털
 - (방문구강)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가이드라인' 개발('25.4), 지자체 시범사업 최초 운영(29개 보건소, 대상자 1,340명)
- (지역격차 해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일차의료 기반 국민 건강증진 제고 및 지역격차 해소 노력
 - (도서·벽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참여기관* 확대('24년763→'25년843개)를 통한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공공·민간 병원
 - (인력배치) 공중보건의사 배치 형평성·효율성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 공중보건의사 배치 최적화 모형 개발('25.11)
- (디지털 헬스) 디지털 기반 건강증진서비스 확대로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참여자 증가
 - (어르신)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지역 확대('24년178→'25년200→'26년230개, '27년전국 263개) 및 서비스 이용자 확대('24년102,356→'25년147,527명)
 - (성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건강검진 연계, 자체 활동량계 연동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 확대('24년20,160→'25년22,478명)
 - * ('24 성과) 90.5% 참여 완료, 56.3% 건강행태 개선, 53.6% 건강위험요인 감소

- **(금연) 금연정책 기반 강화 및 서비스 확대로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
 - **(담배 정의 확대)** 합성 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 추진('25.12.23.개정, '26.4.24.시행)
 - * (담배사업법 제2조) (기존) '연초의 잎' → (개정) '연초나 니코틴'으로 정의 확대
 - **(공공AX) 온라인 담배 마케팅 감시체계 AI 기반 부분 자동화**(^{'24년}1.8→^{'25년}5만 건 ↑3배), **금연특화 AI 정보·요약 서비스 운영*** 등 추진
 - * AI 정보·요약 서비스 이용건수 4,805회('25.10), 보건복지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 수상
 - **(정보 접근성 개선) 금연길라잡이 누리집 통합·개편으로 창구 일원화, 흡연자 특성 기반 금연지원서비스 추천·예약 기능 신규 개발·운영**('25.11~)
 - **(교육·홍보) 유아·장애아동 흡연위해예방교육 확대*, 위기·취약 청소년 금연 지원 강화, 청소년·청년 자발적 노담(No 담배) 캠페인****(노담소셜클럽) 추진
 - * 전국 유아 1,445,904명 중 수혜율 19.9% 장애유아 특화 교육 확대(^{'24년}501→^{'25년}1,216명 ↑142.7%)
 - ** 세계보건기구(WHO)의 K-nodam 우수 성과 공인(Best Practice)
- **(음주폐해예방) 경고문구 개정과 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대응 강화**
 - **(규제 기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제8조제4항, '25. 3. 공포)으로 과음·음주운전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경고문구·경고 그림 도입**
 - **(모니터링 강화) 新유형 매체**(OTT·유튜브 PPL·콜라보 광고 등)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광고 규제 사각지대 지속 해소
 - * ('24) 530,659건 모니터링, 불법 주류 광고 1,083건 적발, 100% 시정조치
⇒ ('25) 414,242건 모니터링, 898건 조치 중('25.10. 기준)
- **(비만예방·영양) 건강 취약계층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 **(건강한 돌봄놀이터)** 방과 후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아동 참여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전반으로 사업 대상 확대(^{'24년}127→^{'25년}164개)
 - **(영양플러스 제도 개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임신부·한부모가정 대상 사업 신청 확대(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확대 대상자 수 ^{'24년}0→^{'25년}21명)

- **(모자건강관리)** 임신 전·후 및 영유아기 대상 서비스 확대, 전문인력 역량 제고, 건강정보 제공을 통한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생애초기 건강관리)** 수혜자 확대('24년 14,484→'25년 19,576명), 사례 관리('24년 400→'25년 711건) 및 임신부·영유아 건강정보 자료 개발('24년 3→'25년 6종)
 -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수혜자 확대('24년 75,336→'25년 257,903명), 의료기관용 가이드라인 및 건강관리콘텐츠 개발('24년 7→'25년 14종)
- **(건강정책기반 강화)** 국가-지역-직장 건강증진 실행체계 강화
 - **(국가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이행률 상승('21년 86.4→'24년 98.7%) 및 청년, 기후위기 등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 대비한 중장기 건강정책 기반 마련
 - **(건강수명)** 전국 성별·지역별·소득수준별 건강수명 산출 및 공표(9월)를 통한 건강수준 격차 진단과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 ('22년 건강수명) 전체 69.89세, 성별격차 3.75세, 지역격차 2.2세, 소득격차 8.4세
 - **(건강환경)** '모든 정책에 건강(HiAP)' 고려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및 다부처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정책 국민참여 확대('25년까지 7만 명 참여), 근로자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기업 '인증' 부여('25년 27개)
- **(AX·안전)** AI 전환을 위한 조직 기반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한 근로자 안전보건 내재화
 - **(AI 전환)** AI 전담조직 마련 및 AI 전환 계획 수립(9월), 전사 AI 활용 역량 교육 운영(9~12월), 행안부 'AI 챔피언' 인증 최초 취득(10월)
 - **(안전강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4년 연속 인증('25.11.),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중대재해 6년 연속 ZERO 유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환, 생애주기 건강관리 강화, 디지털·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등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력 강화가 요구됨

☞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 기반마련 및 기능 재정립, AI·디지털 건강서비스 확산, 건강위해예방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서비스 제공으로 확대

2 향후 업무추진방향

미션

모두가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 중심의 혁신적 건강증진사업 추진

비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평생건강 동반자, KHEPI

4대 목표

중점추진과제

통합돌봄
지역보건의료기관
역할 강화

>

1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국정과제 78]

2 맞춤형 디지털 건강관리 강화 [국정과제 32]

건강위해 예방·
관리체계 확립

>

3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한 정책·서비스·인식 강화

4 음주폐해예방 정책·환경 조성

5 국가 비만·영양 관리체계 고도화 [국정과제 85]

미래대비 건강증진
체계 마련

>

6 국민 건강증진정책 기반 구축

7 건강한 출산·육아 환경 조성 [국정과제 87]

국민 중심
건강안전망 구축

>

8 AI 기반 경영혁신 및 디지털 전환 [국정과제 24]

9 대국민 건강 안전 대응체계 마련 [국정과제 72·73]

Ⅲ. 중점 추진과제

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국정과제 78)

□ 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 (기반마련) 보건소용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침 개발(~'26.5), 성과관리 체계 개발 및 성과공유회 개최(~'26.下)
- (재가의료) 재택의료센터의 보건소 역할 및 운영체계 구축, 지자체 현황 모니터링, 현장 의견 수렴, 우수사례 발굴·확산, 전문인력 역량 강화(연중)
- (기능정립) 농어촌 하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모델 개발(~'26.5) 및 지역별·기관별 세부 운영 매뉴얼 개발·확산(~'26.下), 도시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소생활권 건강관리 체계 마련(~'26.下)

□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돌봄 대상 포함* 서비스 확충 및 디지털 관리 서비스 체계 도입**

* 통합돌봄 13대 핵심서비스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포함

** '26년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방문 및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통합운영)

-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장기요양 진입 지연과 AIP(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모든 노인 대상 정례적 노쇠평가 및 노쇠예방 프로그램 제공

* (시범사업) '26년도 10개소(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범운영('26.下)

* (프로그램) 운동, 영양, 구강건강, 낙상예방, 정서지원(우울) 등 프로그램 개발('26.上)

- (노인방문구강사업 확대) 거동불편 노인 대상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 확대 추진('25년 29→'26년 88개 보건소 추진 예정)

- 치과위생사 단독 방문 시 안전 가이드 강화 등 방문 서비스 질적 개선
- 실무 중심의 현장 인력 대상 표준교육 체계 마련 및 보수교육 확대

□ **농어촌 보건의료인력 일차진료 역량강화**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임상 능력 강화된 「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단기 집중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공중보건 의사) 일차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소아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 등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역할 확대를 위한 환자진료지침 개편

② **맞춤형 디지털 건강관리 강화 (국정과제 32)**

□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이용자·제공자 디지털 서비스 편의 제공**

- (이용자) 어르신 친화적 오늘건강 앱 UI/UX 개편 및 건강정보 측정 고도화
 - * 디바이스(스마트워치) 연동 없이 스마트폰 자체 측정 기능 추가
- (서비스 제공자) 방문 및 AI·IoT 사업 통합운영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담당자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MPHIS 활용 확대
 - * (MPHIS) 모바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태블릿을 통한 대상자 등록·관리 시스템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서비스 고도화**

- (AI 기술 도입)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서비스 AI 기술 개발 및 실증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AX 전환 실현
 -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연계 AI 기술 개발 및 지자체(2개) 실증('26.上)
- (서비스 확대) 공공·민간 병의원의 다양한 진료과 참여 확대
 -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중심에서 재활, 정신 등 다양한 진료과 참여 확대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강화**

- (이용자 중심 서비스) 알고리즘 기반 대상자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 개선, 어플리케이션 UI/UX 개편 및 앱 접근성 인증 취득
 - * 개인건강정보(PHR)에 따라 '채움건강' 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자동 발송(24주)
- (정보보안 강화) 노후장비 교체, 보안관제 도입,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DDOS 대피소 연계 등 정보보안 강화

3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한 정책·서비스·인식 강화

□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규제정책 강화 및 정책 전환 대응

- (담뱃갑 건강경고) 담배 제조·수입자 등 대상 제5기 건강경고 표기 매뉴얼 안내('26.1~2), 현장 계도 및 법 이행 상황 모니터링('26.3~계속),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개발·고시 개정 추진('26.上)·법 시행('26.12.23)
- (담배광고·판매) 담배 도·소매인 등 대상 광고·판매 제한사항 안내('26.1분기),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추진('26.4~11)
- (금연구역) 정책 홍보('26.1분기), 지지체 교육 및 전자담배 집중 단속('26.4~계속)
- (담배자동판매기)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실태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 합동점검 추진('26.4.~11.)

□ 흡연자 맞춤형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강화

- (체계 정비) 이용자 특성·선호를 반영한 금연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
 - 흡연자 특성 기반 서비스 정비, 이용자 추적관리체계 마련, 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예산 확보(~'26.12) 추진
- (대상자 발굴·확대)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서비스 확대 추진(~'26.12)
 - * 건강검진 데이터와 연계하여 담배 사용자·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

□ 금연 공공AX 사업 확대

- 공공혁신 AI 기반 온라인 불법 담배광고·판매 모니터링 확대(~'26.12)
 - * ('25) AI 활용 반자동 모니터링 → ('26) AX 전략 활용 모니터링 자동화 영역 확대
- 국민체감 AI 금연정보 및 상담서비스 확대
 - 정보 제공서비스 추천·예약 기능 고도화 및 AI 금연코치(상담사) 개발 추진('26.10)

□ 노담(No담배)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캠페인 강화

- 청소년·청년 활동* 및 국민 디지털 참여 기반 노담 캠페인('26.6~11) 추진
 - * 청소년·청년 주도 노담(No 담배) 활동 지원 확대('25년20→'26년30팀)
- 유아·교사·가정 대상 흡연위해예방교육 확대(연간 상시)
 - * 유아('25년287,839→'26년302,230명, ↑5.0%), 장애유아('25년1,216→'26년1,337명, ↑10.0%) 교육 확대
- 청소년의 일상 속 흡연예방교육 및 위기청소년 금연 지원 확대(연간 상시)
 - * 청소년 교육(전국 507만 명 중 '26년89.6%), 위기청소년 금연 지원('25년1,348 → '26년1,415명 ↑15.0%) 확대

4 음주폐해예방 정책·환경 조성

□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규제정책 실효성 제고

- (규제 개선) 음주조장환경 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추진
 - 주류용기 경고문구·경고그림 개정에 따른 업계 계도(표준가이드 마련, 설명회 등)
 - 규제 필요 영역 발굴* 및 상습·반복 광고 위반 업체 규제 방안 마련
- * 주류자동판매기 도입('26.6월)에 따른 설치·운영 실태 및 운영 문제점 검토

□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강화

- (주류광고·마케팅) 신종 마케팅 대응 모니터링 확대 및 규제 실효성 강화
 - 모니터링 매체 범위 지속 확대*, 국민 참여 기반 불법 광고 감시 강화 및 규제기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협력 강화(연중)
- * 모니터링 범위: ('23년) 도시철도 주류판매점 ⇒ ('24년) 업계 차량, 배달앱 ⇒ ('25년) 유튜브(PPL 등), OTT(넷플릭스) 등 ⇒ ('26년) OTT·유튜브(PPL 등) 확대, 팝업스토어, 콜라보 제품 등
- (음주장면) 민관 협력 기반 콘텐츠 내 문제음주 장면 노출 최소화 추진
 - 유관기관 연대 협력을 통한 미디어 종사자 인식 개선 확대('26.上)
- *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확대
- 시청자의 문제음주 장면 비판적 수용 역량 향상 교육·홍보 추진('26.上)
- (주류용기) 위반 사례 수집 및 자율개선 유도, 제도 보완사항 도출('26.上)

□ 대국민 음주폐해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정책 확산) 신규 음주폐해예방 브랜드 '무음모드ON' 집중 홍보(연중)
- * ('24) 음주폐해예방 5개년('25~'29)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신규 브랜드 개발 → ('25) 신규 브랜드 인지도 제고 → ('26)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확산형 홍보
- * 음주폐해예방 홍보 확산도 상승('24년 31.50 → '25년 42.45%)

□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사업 활성화

- (금주구역 확대) 지역 조례 제정 증가('24년 144 → '25년 154개)에 따른 지자체 금주구역 시행 현황 분석 및 수준별 현장 점검 강화('26.下)

5 국가 비만·영양 관리체계 고도화 (국정과제 85)

□ 비만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 (정책기반) 범부처 비만관리 종합대책(안)* 수립 지원, 비만예방관리 위원회 구성(연중)

* ('26년) 정책연구 추진 및 대책 발표 → ('27년~) 대책 이행

- (사업운영) 아동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 지속 운영(연중), 신체활동 매체 개정('26.2~4분기)
- (사업확대) 늘봄학교 참여 대상 확대(초1·2→전 학년)에 따른 '건강한 학교놀이터(초3·4)' 보급('26.3~)
- (인식개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비만 인식 개선 캠페인 운영('26.3분기)

* 굿네이버스 등 아동복지 전문 비영리단체와 아동 비만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 시도 영양사업 역할확대 및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체계 개선

- (역할확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평가체계 개편 및 운영(연중)

* (기존) 중앙에서 시군구 영양관리시행계획을 평가 → (개선) 시도에서 시군구 영양관리시행계획을 평가하고, 중앙에서는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

- (선정체계)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조사 4유형)에 따른 보건소 업무의 안정적 수행 지원(연중)
- (교육환경) 온라인 영양교육센터 접근성 품질인증 추진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26.下)

* 시스템 기능 진단·보완을 통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으로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

6 국민 건강증진정책 기반 구축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건강정책틀 마련(HP2030)

- (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 범부처 국가 단위 중장기 건강계획 HP2030의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 도입, 기존 중점과제 수정·보완
 - (청년건강) 기존 청년 정책에서 주목받지 못한 청년 건강권 기반의 청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중심의 신규 건강정책 중점과제 도입
 - *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등
 - (기후위기 대응) 미래 건강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후변화성 질환’ 과제를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단위로 확대·강화
 - *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기후위기 대응 질환 통합적 관리, 건강 영향 감시·모니터링, 기후위기 적응 커뮤니케이션 제고 등 과제 추진
- (이행) 지난 5년간의 추진성과와 한계, 과제별 현안 및 정책 동향, 국정 과제 등을 고려한 제6차 HP2030 대국민 홍보 및 실행력 강화
 -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 총 7분과 30여개 과제로 구성

□ 건강수명 산출 정확성 확보와 국제 표준 산출 기반 강화

- (산출방법론 체계화) 건강수명 산출 절차를 체계화하여 산출 결과의 일관성 및 정확성 제고
- (국제 표준 전환) 국제 비교가 가능한 국제 표준의 건강수명 산출 체계로 전환할 기반 마련

□ ‘모든 정책에 건강을 우선 고려(HiAP)’를 통한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건강한 도시환경) 광역형 건강도시 지표 개발 및 기초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확대(’24년 10→’25년 24→’27년 40개), 정책 결정권자 대상 역량교육 신규 도입
- (건강한 일터조성) 근로자 건강친화환경의 일터 전반 확산을 위한 기업 현장 지원 실행 체계 강화
 - 기업 대상의 건강친화 일터 조성 지원 방안(중견, 중소기업 우선지원) 검토

- (국가 거버넌스) 국내·외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강화, 국내 건강도시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적 위상 제고
- 국내기관(건강도시 MOU기관, 산림청 등) 협력, 국외기관(WHO 서태평양건강 도시연맹) 성과 공유

7 건강한 출산·육아 환경 조성 [국정과제 87]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 확대

- (사업 확대) 온라인 홍보 강화, 보건·복지 서비스 및 취약계층 발굴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 수 확대
-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전문가 인력 풀 확충('25년20→'26년23명)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인력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관리
- (성과관리)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체계 고도화 추진('25.9)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사업 고도화) 가임기 임신 전 건강관리 및 영구 불임 예상 대상자 난자 정자 냉동 지원을 포함한 사업 모니터링·실적 관리로 저출산 대책 강화
* ('2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26) 난임극복지원사업
- (사업 확대) 사업 수혜자 확대('25년20→'26년36만명)에 따른 지자체 관리·지원 및 참여 의료기관 모니터링 강화, 사업성과 분석 정밀화
- (홍보 강화) 임신·난임 관련 정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확산을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8 AI 기반 경영혁신 및 디지털 전환 (국정과제24)

□ AI 전환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기반 강화

- (전략 수립) AI 전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중점 추진 분야 설정, 단계별 실행 로드맵 마련('26.上, 로드맵 구축 → '26.下, 사업별 적용)
- (인프라 구축) 건강·사업자료 통합 관리체계 마련, AI 도입·활용을 위한 기반 인프라 정비(AI 인프라 확보 등)
- (실행기반) AI 기반 혁신 추진 대응조직 확대, 기관 경영-건강증진 사업 간 AI 전환 경영전략 실행을 위한 소통·협력체계 강화('25.9~)
* 'AI 혁신 추진단' 운영, AI 전환 경영전략 수립·조직문화 조성·과제 성과관리 등 추진

□ AI 활용 조직문화 및 환경 조성

- (역량 강화) 조직 AI 활용 역량진단 기반 직무 맞춤형 AI 교육과정 개발, AI 관련 자격 취득지원 제도 신설 등 AI 친화적 인재 양성('25.4분기~)
* ('25) 행안부 주관 'AI 그린 챔피언' 인증 직원 최초 발굴 → ('26) AI 역량 인증 직원 확대
- (시스템 도입) RPA,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 추진
 - 회계·예산집행 분야 업무(전표 발행, 법인카드 모니터링 등 반복 업무) 자동화 솔루션 도입('25. 신규) 및 AI 기술 접목 고도화('26)
 - 기관 업무 특화(기관 규정 질의·답변, 자료수집, 보도자료 작성 등) 생성형 AI 도입('26) 및 직무별 고도화('27)
- (보안)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개인정보·보안 점검체계 구축('26)
- (사례 확산) 건강증진 서비스 내 AI 활용 우수사례 발굴·확산('26)
* 사내 포털 활용 AI 우수사례 코너 신설, 타 기관과의 AI 협업 네트워크 구성 등

□ AI 기반 정책·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 (기술 연계) 건강증진 정책·서비스-AI 기술 연계·적용*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26~)
* AI 기술 활용 건강증진 콘텐츠 개발, AI 기반 사업 모니터링 등
- (성과관리) AI 기술 활용 건강증진사업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26.7~)
- (협력 강화) 다부처·다분야 공동 프로젝트 추진으로 AI 전환 협력('26.1~)

9 대국민 건강 안전 대응체계 마련 (국정과제72·73)

□ 대국민 건강위해정보 대응 역량 강화

- (AI 감시체계) 건강위해정보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방안 마련
 - * 다양한 인공지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사전 학습된 범용 머신러닝(ML) 모델
- (국민 참여 기반)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 운영을 통한 국민 맞춤형 건강위해정보 대응
- (정보 신뢰 강화) '건강정보 도서관' 운영으로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

□ 노인 대상 재난 위험 대응 서비스 제공

- (재난 안전 경보) 기상청 폭염·한파 영향 예보와 연계하여 위치기반 오늘건강앱 경보 서비스 개발 및 운영('25.5~)
 - * 어르신 거주 지역의 영향 예보에 따라 경보 단계별 메시지 및 대응요령 카드뉴스 발송

□ 문신사 제도 신규 도입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안전기반구축) 「문신사법」 제정('25.10)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지원 및 위생·안전 교육체계 등 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 안전 확보
- (안전이용환경) 문신사법 하위법령 제정 지원 및 국민 대상 안전한 문신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보건) 안전보건·재난 체계 고도화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4년 연속 인증 취득
- (위험성 평가) 사내 공모전(2025년 유해·위험 요소 찾기) 등을 통한 사전 위험·유해요인 15건 발굴 및 100% 개선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정보보안 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절차서 전면 제·개정(개정 1건, 전면 개정 4건, 일부 개정 8건), 홈페이지 대상 사이버 공격 사전 차단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웹 방화벽 설치 등 조치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공공기관·지역상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프로그램 지속 추진
 - (지역현안 해결)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22.10.) 체결 후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구호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사회 공헌 활동 추진('25년 총 19회 실시, 임직원 약 150명 참여, 누적 봉사시간 900시간 이상)
*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4년 연속 인증
 - (상권 활성화) 지역 전통시장 자매결연 체결('21.11.)을 기반으로 '전통시장 가는날', '장보기 행사' 등 임직원 참여형 소비 촉진 프로그램 운영
- (상생구매) 중소·소상공인 거래 확대를 통해 판로지원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
 - (판로지원)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내 소비 확대 유도('25년 중소기업 구매 실적 83억원(81.8%), 전년 대비 8.3%↑)
 - (상생결제 활성화) 중소기업 상생결제 제도 확대 운영을 통해 경영 안정성 및 자금 유동성 제고('24년 3.7→ '25년 10.8억, 전년대비 191.9%↑)

3 대국민 소통 노력

- (금연·음주 예방 캠페인 확산) 금연서비스 인식개선을 위한 3차 금연광고

시작하자 금연PT, 음주폐해예방 신규 브랜드 **‘무음모드ON’** 중심 홍보 확산

* (금연) 광고업계와 학계, 대국민 평가 '25년 총 5개 광고홍보상 수상('23년 8건, '24년 5건 수상)

* (음주) 홍보 확산도 상승('24년 31.50 → '25년 42.45%)

- (고객만족도) 전문가 및 지자체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4년 연속 향상

* ('21) 85.0 → ('22) 85.9 → ('23) 86.6 → ('24) 88.3점

- (공공·민간 협업) 타부처·지자체 및 민간기업·단체와 협업하고 국민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통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 「더건강캠페인」 운영 (누적 약6만명)

* SNS 채널 총 참여 전년대비 11.8%('24년 4,234,396 → '25년 4,735,084회) 증가

- (대국민 소통 확대) 시의성 있는 건강정보를 중심으로 보도자료 배포를 체계화하고, 친근한 캐릭터를 활용한 SNS 소통을 통해 올바른 건강증진 정책 및 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 보도자료 배포 전년대비 6%('24년 82 → '25년 87건) 증가

* SNS 구독자 전년대비 10.7%('24년 43,849 → '25년 48,558명) 증가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역할 강화 ('25 국정감사)

- (주요내용) 합성 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 등 규제 강화 필요
 - 합성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제조·판매 규제를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 추진 필요
- (개선계획)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에 따른 정책 변화 대응 및 홍보, 제도 이행 모니터링 등 강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담뱃갑 건강경고, 담배광고·판매, 금연구역 등) 변화 대응, 대국민 및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 홍보, 제도 이행 모니터링 등 추진

② 앱 접근성 인증 추진 ('25 국정감사)

- (주요내용) 건강증진사업 앱 접근성 인증 필요('24~'25 국정감사)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오늘건강, 채움건강)*, 금연길라잡이 모바일 앱에 대한 앱 접근성 인증 미취득에 대한 조치 필요
 - * 채움건강앱(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오늘건강앱(AI-IoT 어르신 건강관리)
- (개선계획) 금연길라잡이 모바일 앱접근성(Android, iOS) 취득 완료*, '26.6월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앱 접근성 인증 취득 완료
- * (심사기관)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유효기간) 2025.12.31.~2026.12.30

③ 내부 연구관리 체계 정비 및 강화 ('25 종합감사)

- (주요내용) 연구과제 관리·운영 개선 필요
 - 연구과제 결과평가 지연 및 미수행, 공표 지연 등 발생
- (개선계획) 연구관리 규정 개정 및 평가체계 정비 실시(완료)
 - 연구과제 평가 관련 조항 보완,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및 연기 신청 내용 보완, 연구과제 결과 공표 사항 보완 등('25.8.)
 -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관리규정 교육실시('25.8.)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thick, grey L-shaped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frame, at the top,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ey dots,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13. 한국공공조직은행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2 인원 현황

(’26.1월 기준)

구 분	직급별	계	임원 (상임)	별정직	1급 (개방직 포함)	2급	3급	4급 이하
합계	정 원	66	1	2	1	4	10	48
	현 원	60	-	1	1	3	5	50
본부	정 원	66	1	2	1	4	10	48
	현 원	60	-	1	1	3	5	50
소속 기관	정 원	-	-	-	-	-	-	-
	현 원	-	-	-	-	-	-	-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7,486	7,873	387	5.2
수입	1. 국고보조금	5,190	5,532	342	6.6
	2. 자체수입	1,867	2,016	149	8.0
	3. 이월결산잉여금	429	325	△104	△24.2
지출	1. 인건비	4,115	4,287	172	4.2
	2. 경상비	908	1,145	237	26.1
	3. 사업비	2,463	2,308	△155	△6.3
	4. 예비비	-	133	순증	순증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필수·맞춤형 인체조직 공급 확대로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

- (고난이도 수술 지원) 전문인력 교육 및 기술 역량 확보를 통해, ROSS 수술*에 필요한 폐동맥 이식재 공급('25.11월, 서울아산병원)

* 손상된 대동맥판막을 본인의 폐동맥판막으로 대체, 폐동맥판막 자리에 동종 이식재를 사용하는 수술

- (희소 조직 적시 공급) 경골·비골 등 고난이도 복합 다중조직을 국내 최초 환자 맞춤형 공급으로 희소 조직의 이식 지원 달성('25.11월, 국군수도병원)

- (이식재 품목 다변화) 신규 수요처* 적극 발굴과 의료기관 연계 확대**를 통해 국내기증 심장막을 최초로 분배하고, 안정적인 심장판막 공급체계 구축

* ○○○병원('25.9월), ○○○병원('25.9월, 11월) 등 총 4개

** ○○○병원('25.10월), ○○○병원('25.11월), ○○○병원('25말 예정)

□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 (원스톱 채취 확대) 유관기관 협력·연계 강화로 뇌사자 장기-조직 연속 채취 29건 달성(전년 대비 61%↑)

* 협약건수: ('22) 3 → ('23) 1 → ('24) 14 → ('25) 4건

* 채취건수: ('22) 15 → ('23) 13 → ('24) 18 → ('25) 29건

- (생존기증 확대) 대퇴골두, 양막 외 심장판막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생존기증 78건 달성(전년 대비 32%↑)

* 기증건수: ('22) 64 → ('23) 23 → ('24) 59 → ('25) 78건

- (공공-민간 연대 강화)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 공동 캠페인 'Better Life Together' 전개(150여명 기증희망서약)

- (채취 전국망 구축) 충청권역 거점 공공조직은행('25.7월) 설립·운영으로 기증자 이송 부담 완화 및 지방 의료 접근성 제고

□ 분배 서비스 혁신을 통한 인체조직 이식 수혜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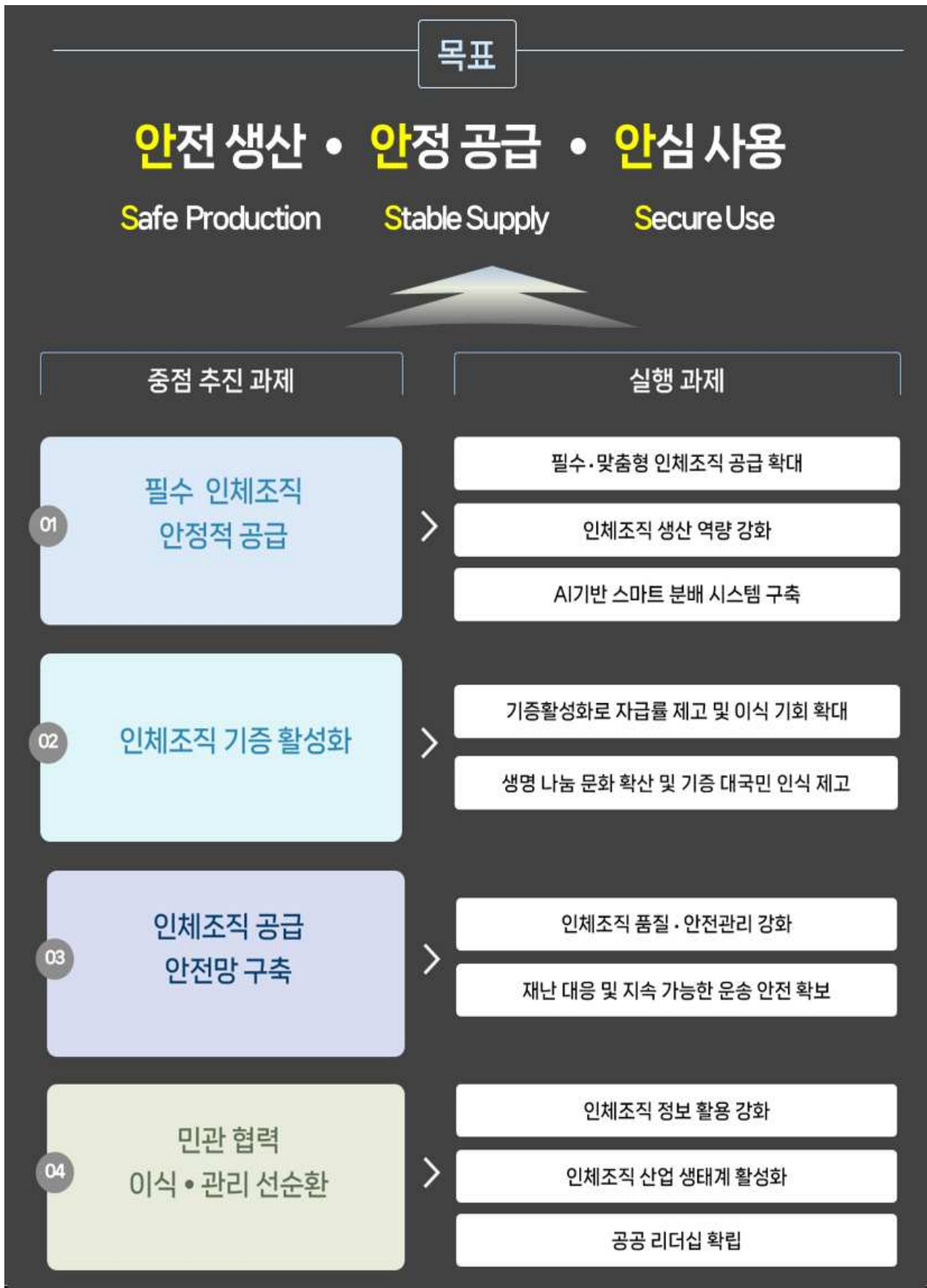
- (정밀 치료 지원) 골종양 수술을 위한 3D CT 기반 인체조직 정밀 데이터를 제공(4건)하여, 이식재 선택 과정에서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수술 정확도 및 성공률 제고
- (치료 기회 확대) 수요예측을 통한 공급체계 개선 및 분배·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역대 최다 수혜자 1,601명 달성(전년 대비 8.99% ↑)
* 이식 수혜자: ('22) 1,140 → ('23) 1,309 → ('24) 1,469 → ('25) 1,601명

□ 최고 수준의 안전성 확보 및 민·관 협력 기반 기술·품질 고도화

- (품질 적합성 확보) 품질 검증대상 이식재 품목 확대로 공정 안전성 강화
* ('24) 혈관·양막 → ('25) 뼈·근막 추가
- (기증자 적합성 평가 표준화) 전문가(감염내과·진단검사의학과) 자문을 기반으로, 기증자 적합성 판단 및 감염성 질환 선별 기준 구체화
- (자원 선순환) 임상 적용이 어려운 인체조직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20건)함으로써, 민간 조직은행 기술 지원과 기증 자원의 선순환 체계 강화
- (기술·품질 혁신) 임상 수요를 반영해 선천성 안검하수 수술용 탯줄 이식재의 개발 가능성 확인과 양막 이식재 사용 기간 연장(2→3년)을 검증하는 등 신규 이식재 개발과 품질 고도화 추진
* ○○○병원 공동연구를 통한 해외 저널(Tissue Engineering) 논문 채택

□ 국민 신뢰 기반, 지속 가능한 공공 책임 경영 실현

- (조직은행 안전관리체계 구축) 비상 발전설비 구축을 통해 전력 공급 중단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보관 중인 이식재 안전성 확보
- (데이터 기반 운영 혁신) 차세대 인체조직정보 통합관리 시스템(TIMs) 구축을 통한 전 주기 데이터 통합관리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글로벌 전문가 육성) 미국 조직은행연합회(AATB) 주관 국제 조직은행 전문가(CTBS) 배출을 시작으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 양성



Ⅲ. 중점 추진과제

① 필수 인체조직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건강권 보장 [국정과제 84]

- 민간 공급이 어려운 필수·맞춤형 인체조직의 공급을 확대하여 이식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
 - (필수조직) 간 이식(혈관), 골육종 치료(장골), 판막 치환술(심장판막) 등에 필요한 인체조직 공급 확대
 - [혈관] 채취 품목 다변화(복재정맥 등)로 부족한 혈관 공급량 확보
 - * 혈관 공급 점유율(%): ('21) 68.5 → ('22) 74.2 → ('23) 82.5 → ('24) 71.0
 - [장골] 정형외과 세부 분과 학회(○○○학회 등) 연계 협력 및 홍보 강화
 - * 장골 급여 점유율(%): ('21) 77.6 → ('22) 75.3 → ('23) 84.0 → ('24) 87.4
 - [심장판막] 뇌사자 기증발굴(장기조직기증원 협력) 및 생존기증 협약병원 확대
 - * 이식환자 부담 경감 : 수입(약 7,200만원) 대비 3% 수준인 국내(약 216만원) 이식재 공급
 - (맞춤형조직) 조직 이식 생착률 향상(연골), 영구 장애 예방(다중조직) 등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조직 공급 확대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이식 수혜자 특성에 맞는 복합 다중조직 등 생산·공급체계 구축
 - * (요청) 의료기관·환자→(기증자 발굴·연계) 장기조직기증원→(생산·공급) 공공조직은행
- * [사례 ①] 지뢰 폭발로 발목 절단 위기의 국군 장병 이식수술에 맞춤형 복합 조직(종골-아킬레스건) 공급으로 정상 보행('23.4.20. SBS 뉴스 보도)
 - * [사례 ②] 민간 공급 불가능 영역인 다중조직(Multi-tissue) 공급으로 영구 장애 예방('25.11. ○○○병원)
- 전문 인력 양성 및 이식 환자 맞춤형 정보 제공 내실화 등 생산·공급 역량 강화
 - (직원 전문 역량 제고) 고난이도 인체조직(심장판막·혈관 등) 생산을 위한 개인별 역량 진단·평가·교육 강화
 - 글로벌 수준의 전문가* 양정으로 국내 조직은행종사자 역량 강화 활용
 - * 미국조직은행 전문가 자격취득(Certified Tissue Bank Specialist)
 - (맞춤형 정보제공) 이식재 정밀정보(3D CT)를 의료진에게 제공하여 환자별 최적 이식재 매칭 지원

- 이식재의 크기·형태·밀도 등 다각도 영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수술 정확도 제고 및 성공률 기여

* (기존) 단순 규격 정보 → (현재) 입체적 데이터(형태, 밀도 등)

□ 수요자(의료진, 이식환자) 중심 품질관리 강화, AI 기반 스마트 분배 시스템 구축 등 분배서비스 혁신

- (사용자 효능감 제고) 임상현장 소통(의료진 집담회 등) 강화로 사용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 및 신규사용 의료진 의견 지속 반영
 - 사용 의료진 등 의견을 반영하여 이식재 생산 및 품질관리
- (이식재 공급망 강화) AI 챗봇 도입을 통한 365일 중단 없는 이식재 공급망 구축
 - AI 기술기반 이식재 수요 접수부터 분배정보까지 원스톱 알림 제공 서비스 단계적 도입

* 추진단계: ('26) 연중무휴 자동 접수 관리 → ('27~) 분배 전 과정 실시간 통합 알림

기대효과

국민의 장애 예방 및 신체 기능 회복지원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2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한 자급률 제고 및 이식기회 확대 (국정교제 84)

◆ 고령화와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이식재 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 의존도 심화 → 국내 인체조직의 안정적·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 마련 필요

- * 생산·수입(천개): ('20) 564 → ('21) 775 → ('22) 860 → ('23) 1,030 → ('24) 700
- ** 수입률(%): ('20) 95.9 → ('21) 98.0 → ('22) 92.9 → ('23) 91.6 → ('24) 91.3
- *** 국내기증(명): ('20) 101 → ('21) 114 → ('22) 167 → ('23) 166 → ('24) 145 → ('25) 180

□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한 자급률 제고 및 이식 기회 확대

- (뇌사·사후 기증)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뇌사자 장기-조직기증 연계율 ('24년 기준 27.2%) 및 사후조직 기증 제고
 - (뇌사) 전국 권역별 실무자(공공조직은행, 장기조직기증원) 간담회 정례화
 - (사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한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활용
- (생존 기증) 공급 대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 확대, 잠재 의료기관 발굴·협약 확대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고령화·심혈관질환 증가에 따라 심장판막까지 대상 확대(기존: 양막, 대퇴골두)
 - * 생존기증(건): ('23) 23 → ('24) 59 → ('25) 78
- (기증자 예우 강화) 기증자 장례 예우 강화(입관 시 꽃 장식, 화장장 리무진 서비스)를 통해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감 도모 및 기증자의 생명나눔 존중
 - * 추진일정: ('26) 시범사업 실시 → ('27~) 본사업 추진
- (원스톱 채취) 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조직기증원 연계 뇌사자의 장기-조직 연속 채취 가능한 '현장 중심 통합 시스템' 확대
 - 협약대상 병원 확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복원·봉합, 장례지원 등) 적극 반영
 - * 협약대상 병원 95개 중 65개(68.4%) 협약 체결('25.12. 기준)

□ 생명나눔 문화 확산 및 인체조직 기증 대국민 인식 제고

- (기증문화 확산) 민·관 협력 기반의 '생명나눔 캠페인' 확대 추진
 -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 캠페인(Better Life Together) 확대 추진 ('25~)
 - * 민간조직은행(3개소) 임직원 151명 장기·조직기증희망서약 ('25.12.)
- (기증 인식 제고) 이식 수혜자 사례 발굴·콘텐츠 제작, 언론·SNS 홍보 강화
 - 인체조직 기증·이식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긍정 인식 확산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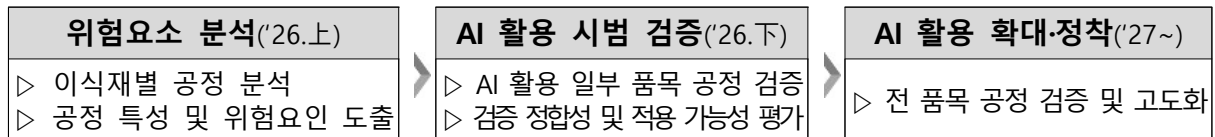
- 국내기증·가공 인체조직 활용 극대화로 수입 대체효과 창출
- 글로벌 공급망 차질 또는 수출국 정책 변화 시 발생 가능한 이식재 수급 위기대응

③ 국민이 안심하는 인체조직 공급을 위한 안전망 구축 [국정과제 72]

◆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호와 직결되는 이식재의 안전한 생산·공급이 최우선

□ 인체조직 전주기 품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 (생산 공정 검증 강화) AI 기반 생산 단계별 인체조직 오염 위험요소 도출 및 공정 검증



- (안전성 검증 거버넌스 구축)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 기증자 선별부터 이식재 분배까지 조직관리 전 과정에 대한 자문
 - * 감염내과·병리과·진단방사선과 등 10인 이내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보관 안전성 검증) 보관기간(2~5년) 특성을 고려한 조직의 보관 안전성 및 품질 유지 검증
 - 포장·밀폐상태, 보관환경(온·습도 등), 조직의 무균성 등

□ 재난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운송 안전체계 확보

- (재난 대응체계 강화) 비상 상황(전력 중단, 자연재해 등) 대비 인체조직 생산·공급 대응체계 구축
 - 자체 발전설비('25.12. 설치) 운영 및 비상전력 공급망 이중화로 필수 의료자원 보호
- (운송 안전성 강화) 이식재별 특성에 적합한 전용 운송 용기 도입으로 외부 충격, 보관 온도 이탈 등 안전 저해 요인 선제적 차단
 - GPS 기반 실시간 운송 정보 공유를 통해 환자 수술 일정에 맞춘 적시 공급
 - 운송 중 온도 데이터 기록·분석 등으로 분배 안전성 확보

기대효과

국민이 안심하고 이식받을 수 있는 인체조직 공급 안전망 구축

4 민·관 협력 기반 국내 인체조직 이식·관리 선순환 혁신 [국정과제 32]

- ◆ 유관기관 연계 선도적 거버넌스 확립으로 인체조직 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 ◆ 인체조직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 중심의 혁신적인 협력체계 구축 요구 증대

□ 인체조직정보 활용 강화

- (정보시스템 구축) 인체조직정보 통합관리시스템('25. 구축)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 (데이터 공유·개방) 심평원, 식약처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으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제고
 - 인체조직 정보의 활용 극대화, 민간 부문의 성장 및 산업 활성화 촉진

□ 민관 협력 기반 인체조직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인체조직 활용 확대) 연구·품질관리용 부적합 인체조직 사용처 확대 및 국내 인체조직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기반 마련
 - 이해관계자 수요조사 후 관계부처 협의(안전관리 프로세스 등), 관련법 검토
- (민관 협력 강화) 병원 등 공동연구를 통해 임상 수요 기반 인체조직 신규 활용 분야 발굴 및 공동 개발의 단계적 추진

□ 공공 리더십 확립 및 산업 역량 강화

- (국제 협력체계 구축) 해외 선진국과의 과학적 지식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공공의 역할 강화
 - 미국 및 EU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최신 동향 파악 및 국내 적용 검토
 - 해외 선진 조직은행(美, LifeNet Health) 교류협력을 통한 조직은행 운영 및 인체조직 공정 기술 벤치마킹
- (국내 기술 표준 선도 등) 이식재 처리기술·인체조직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노하우 민간 공유, 국내 조직은행 종사자 윤리강령 제정·선포
 - * 양막 이식재 처리기술, 정도관리 노하우 등 전수('24. 2개 민간조직은행)

기대효과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협력을 통한 민관 상생 동반성장 도모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인체조직 취급 특수성 기반 표준 안전관리 절차(SOP) 고도화
 - (매뉴얼 정비) 화학물질·감염원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 처리지침을 재정립하여 인체조직 생산현장의 바이오해저드(Bio-Hazard) 원천 차단
 -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기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발굴 및 즉각적 개선
 - * (위험성 개선 조치) '23년 42건→ '24년 47건→ '25년 77건
 - (비상대응) 사고 발생 비상대응 시나리오 정비 및 실전 모의훈련 실시(연 1회)
 - * 유관기관(공공조직은행, 장기조직기증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동 CPR·AED 교육
- (안전근로환경 구축) 직무 맞춤형 안전장비 도입 및 안전문화 정착
 - (채취공정) 감염원 직접 노출을 차단하는 이중 보호체계(이중 장갑, 안면보호구 등) 의무화로 생물학적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 보호
 - (가공·보관) 절삭 작업 및 초저온(액체질소) 취급 공정에 특화된 베임·동상 방지 특수 보호구(철제장갑·초저온 방한장갑, 부츠) 완비 및 착용 생활화
 - (건강증진) 현장 근무자 중심 감염·직무스트레스 통합 예방 프로그램 운영
 - * (마음건강) 인체조직 취급자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 * (감염예방) 생물학적 유해인자 노출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잠복기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 채혈 검사지원
- (시설 안전관리) 인체조직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위한 핵심 시설·장비 무결점 관리
 - (시설검증) 조직은행 시설(클린룸, 초저온 냉동고 등)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평가(Validation) 및 예방 정비 실시
 - (시설관리) 노후 설비의 선제적 교체 및 안전 등급 관리를 통한 시설·장비 오작동 사고 예방
-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비상상황 대비 인체조직 소실방지 인프라 구축
 - (전력 확보) 정전 등 전력 공급 중단 위기 시 인체조직 핵심 장비(초저온 냉동고 등) 및 인체조직 보호를 위한 비상 발전기 가동 태세 확립('25.12)
 - (복합재난 대응) 화재·침수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인체조직 긴급 이송 체계 및 대체 보존 대책 수립 및 훈련으로 국가 필수 의료 자원 손실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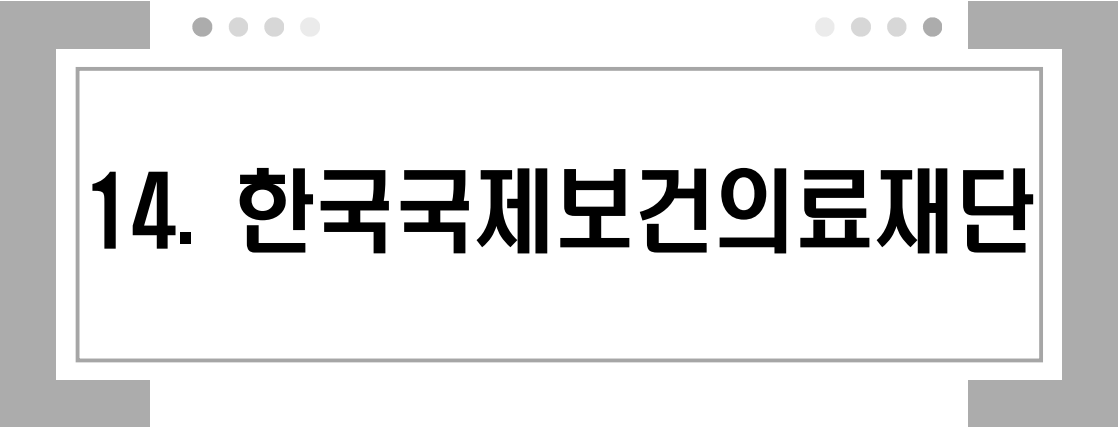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안 관제 고도화 및 내부 통제 체계 강화
- (정보보안) 분기별 해킹메일·침해대응 모의훈련,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해킹사고 무(無)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매월 접속기록 점검, 개인정보처리·위탁 관리 감독 강화 → 유출사고 무(無)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거점은행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방시대 선도
 - (지역활력) 권역별 거점 조직은행 중심 지역인재를 채용*으로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
 - * 지역인재 채용: 경남 양산시(4명), 광주광역시(2명), 충북 청주시(1명), 누적 총 7명
- (사회연대경제 기업 상생협력) 중소·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 (사회적 가치 창출) 우선구매 제도 적극 활용으로 지역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 지원
 - * '25년 중소·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 공공구매 전 부문 목표 100% 달성

③ 대국민 소통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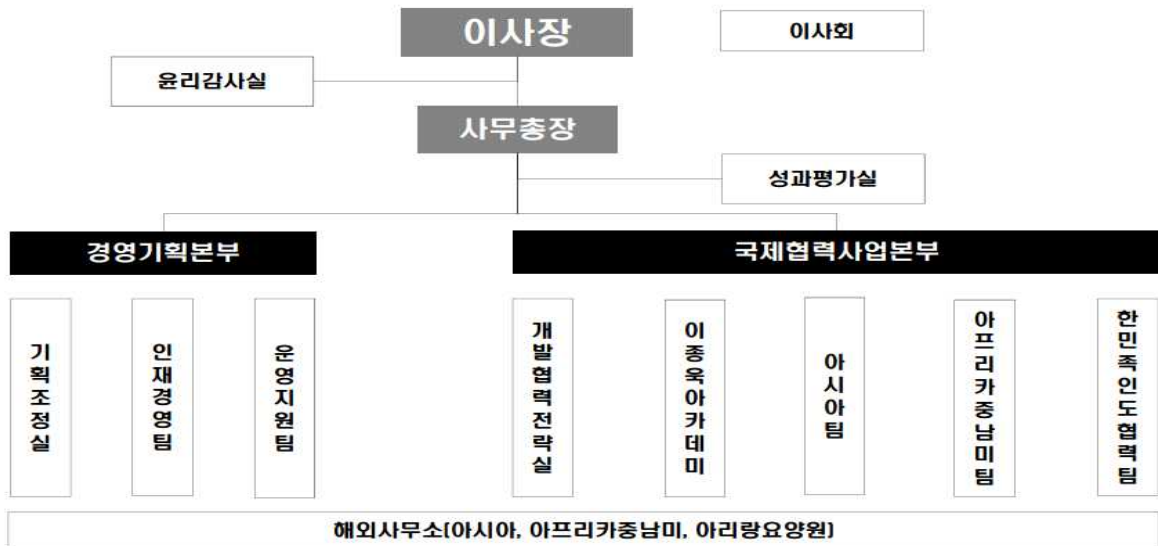
- (소통체계 혁신) ‘국민소통 협의체’ 중심의 전략적 통합 홍보 추진
 - (협업체계) 단편적 홍보 한계 극복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한 ‘국민소통 협의체’ 신설을 통한 체계적인 소통 전략 수립
 - (채널 확장)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홈페이지 등) 신설·정비 및 매체별 차별화 전략 이행으로 인지도 급상승 견인
 - * 기관 인지도 개선: '23년 5.9% → '25년 31.7% (25.8%p 상승)
- (공공언어 개선) 인체조직 전문용어 순화로 정보격차 해소 및 수용성 제고
 - (용어정비) ‘공공언어 개선사업’을 통해 의학 전문용어의 우리말 순화*로 국민 눈높이 소통 실현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 ‘슬근 건’ -> ‘허벅지 뒤 근육 힘줄’ 등 전문용어 349개 중 51개 개선과제 발굴
 - (인식개선) 순화어 기반의 친숙한 콘텐츠(영상·카드뉴스 등)를 배포하여,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완화 및 긍정적 인식 형성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thick, grey L-shaped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frame, there are two horizontal rows of four small grey dots each, positioned above and below the central text box.

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2 인원 현황

(2025. 12. 31. 기준)

직급별		계	이사장	사무총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별도 정원
구 분	정 원	99	1	1	3	7	15	21	28	23	1
	현 원	91.5	1	1	3	7	14	17	21	27.5	1
본부	정 원	99	1	1	3	7	15	21	28	23	1
	현 원	91.5	1	1	3	7	14	17	21	27.5	1

※ 알리오 인원 산정 기준으로 집계

3 예산 현황

(출연금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72,821	63,717	△9,104	△12.50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60,803	49,240	△11,563	△19.02
아시아지역사업	27,727	19,773	△7,954	△28.69
아프리카지역사업	16,172	12,563	△3,609	△22.32
다국가사업	16,904	16,904	-	전년동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	12,018	14,477	2,459	20.46
사업비	2,699	4,789	2,090	77.44
기관운영비	9,319	9,688	369	3.96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성과) 실효적 ODA 추진을 통해 협력국 보건의료체계 발전 및 자립 역량 강화, 나아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

○ 13개국 대상 ①필수보건 체계 강화, ②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③감염병 대응, ④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 등 총 35개 사업 추진('25. 608억원)

* 아시아(8개국, 19개 사업), 아프리카(5개국 13개 사업), 이종욱 펠로우십 등(다국가 3개 사업)

- 25년 아시아 주요 성과

* 몽골, 우즈베키스탄 사업 대상 병원 환자 만족도(우수) 제고('24) 90.3%→ ('25) 93.1%

* 협력국 내 최초 의공학 학위 커리큘럼 개발(라오스: 학사, 스리랑카: 석사)

* 스리랑카 이동식 의료기기 수리 특장차량 8대 제작 및 전국 배포

*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품질경영 인증시스템(ISO) 취득

* 키르기스스탄 내 최초 첨단 의료 시뮬레이션센터 개소

* 라오스 'KOFIH 바우처' 통해 저소득 고위험 임산부 1,173명 의료서비스 혜택 제공

* 캄보디아 국립아동병원 소아임상과 교육과정 최초 신설

- 25년 아프리카 주요 성과

* 에티오피아 짐마존 결핵환자 발견율 ('21) 52.6%→ ('25) 97%

* 우간다 국가 암 관리 사업 AI 기반 자궁경부암 검진 활용 교육 ('25년 20회)

* 탄자니아 모자보건 병동 및 신생아 치료실 건축 및 개보수 (3개소), 의료인력 교육 운영(11개 지역 33개 과정)

○ 이를 통해, 협력국의 실질적인 보건의료지표 개선 효과 확인 및 36개국 8개 과정 총 1,894명 연수생 배출(25년까지 누적)

- 25년 이종욱 펠로우십 주요 성과

* (연수생 배출) 아시아 959명(57.35%), 아프리카 705명(42.16%), 중남미 8명(0.49%)

* (글로벌 동문회 운영) 12개국 1,589명 네트워크 관리

* (연수생 참여 현지 프로젝트 발굴) 우즈베크 자궁경부암 국가검진 시범사업 신규 추진 ('25-'30)

○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평가 최고 등급 획득

* 기관역량진단(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관) 기획-관리-평가 진단결과 "A"등급('25.2)

< ODA 사업 기관역량진단 결과('25.2) >

- ① **기획** 협력국 보건전략 반영 및 국가별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국별 ODA전략 차별화
- ② **관리** ODA 기획-이행-평가 단계별 관리 및 적극적인 유-무상/ 무무상 연계사업 발굴
- ③ **평가** 구체적인 성과지표, 평가위원회('22~)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 (보완점) 우리 국익에 기여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ODA 추진 및 사업 내실화 필요성
 - 우리 ODA 규모 확대에 따라, 협력국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 및 우리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ODA 추진에 대한 대내외 요구 증가

② 향후 업무추진방향

-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통합적 ODA 추진 및 사업 내실화
 - 보건 분야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이종욱 펠로우십'을 지속 개선 및 고도화
 - * '25.12월, 제55차 국개위에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의결
 - 국내외 보건 ODA 관계기관*·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정보 교류 플랫폼 역할 수행
 -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지자체, 민간 NGO 등
 - 사업 성과제고 및 국익 창출 위한 효율적 ODA 관리체계 구축, 일부 사업의 경우 산업진출 기여도 평가 도입 검토
- 북한 및 재외동포, 해외긴급구호,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국제협력사업 강화
 - 북한 보건·인도적 지원 중장기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 * 북한 백서 개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추진 중
 - 고령의 고려인 동포 및 국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지원 추진
 - 해외긴급구호대를 통해 재난 발생국가의 피해 복구, 구조 및 의료구호 등을 지원

Ⅲ. 중점 추진과제

① 이종욱 박사 서거 20주기 행사 개최(세계보건총회 행사 계기)

- 서거 20주기 행사 개최를 통해, 이종욱 前 WHO 사무총장의 업적 추대 및 한국 보건의로 리더십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주요내용) 세계보건총회(WHA)* 계기 20주기 추도식 및 기념포럼 개최,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 시상식 및 강연 등
- *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94개 회원국에서 파견한 각국 대표가 참여하며 매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 **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 정부(복지부, KOIFIH)가 공동으로 공공보건 분야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 운영('08년~, 총 17회 수여)

② 이종욱 펠로우십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도약

- 보건 분야 대표적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이종욱 펠로우십'을 지속 개선 및 고도화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도약
 - * '25.12월, 제55차 국개위에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의결
- (주요내용) ▲연수생 주도 국가단위 프로젝트 지속 발굴*, ▲지역거점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현지 교육체계 활성화, ▲WHO 협력센터 지정('27년 목표)*** 통해 대내외 브랜드가치 제고 추진 등
- * 이종욱 펠로우십 임상과정 참여한 우즈벡 연수생의 수료('16) 후 현지에서 ('17) 자궁경부암 예방 워크숍 및 검진 → ('20-'24) 자궁경부암 HPV 선별검사 역량강화사업 → ('25-'30) 우즈벡 자궁경부암 국가검진 시범사업으로 발전
- ** 우리 ODA 기지원한 협력병원 등을 지역거점 교육훈련센터로 지정 또는 인증, 현지 및 인근 국가 보건인력 대상 전파교육 확대
- ***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협력기관으로, WHO 보건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수집, 교육·훈련, 공동연구, 용어·기술 표준화 등 역할 수행

③ 보건 ODA 정보교류 플랫폼 역할 수행 등 통합적·효과적 ODA 추진

- 국내외 산재한 보건 ODA 관계기관*·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정보 교류 플랫폼 역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ODA 추진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지자체, 민간 NGO 등

- 주한외국공관 초청 간담회('26.2월(안)) 정례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ODA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및 사업 연계·조정 협의 추진

* '25.3월 최초 개최, 몽골·우즈벡 등 13개 주한공관 및 6개 공공기관 참석

** 지자체 및 공공기관 ODA 사업 관련 정책부합성 검토, 연계 등을 위한 ODA 협의체 구성 검토

-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IAC) 운영('24~, 연1회) 및 NGO 간담회 추진 등

* 비비안 린(前 WHO WPRO 국장, 홍콩의대교수) 위원장 등 10명의 국제보건 전문가로 구성

- ODA 성과 제고 및 국익 창출을 위한 효율적 ODA 관리체계 구축

- 사업 수행 및 평가 시 사업 성과지표 점검을 강화하고 개선, 일부 ODA 사업의 경우 산업진출 연계 기여도 평가 도입 검토('26~)

* 성과 및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결과 일부 사업 적용('26~) : △성과관리 체계 표준화 (표준양식, 모니터링 주기 체계화 등), △중간평가 외 중간점검 도입, △영향평가 (Impact Evaluation) 시범도입 등

** 예. 의료기기 진출 지속 및 추가 진출여부, 사후관리(현지 A/S) 여부 파악, 의료기기 진출 기반 마련 활동(한국 의료기기 업체 등과 연수생 연계 등) 사업 내 활동 확대 성과 지표 추가 검토

④ 북한 및 재외동포 등 대상 국제협력사업 강화 [재단 고유사업]

- 북한 TF 구성('25.9월)을 통한 보건·인도적 지원 중장기 전략 수립 중('26. 9월 예정)

- 북한 보건의료 체계 및 정책 환경 변화 분석, 국내외 지원 현황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정부·민간단체·국제기구 간 협력체계 수립 및 사업 발굴

□ 고려인 강제이주 90주년('27년) 및 파독 60주년 계기, 재외동포 보건 의료지원 사업 강화 추진 및 인지도 개선

- 아리랑 요양원('10 설립, 고려인 1세대 40인 입소 중) 우즈벡 고려인 및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 제고

□ 해외긴급구호(KDRT)* 의료팀 선진화 방안 추진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 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피해 감소, 복구 또는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파견하는 긴급구호대

- 우리나라는 '22.6. WHO 주관 EMT 인증 평가에서 “Type 1 Fixed” 등급 획득(세계에서 34번째 인증 획득) 이래 현 등급 유지중

* WHO는 각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 응급의료팀의 역량에 따라 TYPE 1(Mobile-Fixed) - TYPE 2 - TYPE 3(외래-수술-심화) 및 Specialized Care Team 등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인증

- 우리가 획득한 Type1(Fixed)는 총 29명의 대원이 자급자족하며 최소 14일 동안 1일 100명의 외래환자를 치료할 수 있음을 의미

- 기후변화 등 글로벌 보건위기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Type1에 추가로 감염병 등 우리 강점분야 기반 Specialized Care Team(SCT)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외국인 근로자 기초 검진 등 보건의료안전망 강화

- 비수도권 지역 계절근로자 등 대상으로 보건 정보 제공 및 검진 확대

* '24-'25년 전라남도의사회 공모사업 행안부 외국인주민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장려상)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1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책임경영 체계 구축 및 중대 재해 예방

- 경영책임자 중심 안전관리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중대 사고·중대 재해 부상자 '0건'을 지속 유지

*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24) 및 매년 사후 심사로 안전관리 체계 적정성·신뢰성 확보

○ 해외사무소 안전관리 및 재외 근무자 보호 강화

- 해외사무소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고위험 국가 우선의 현장 점검·교육으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해외사무소 안전용품(자동심장충격기(AED), 재난대비 가방 등) 비치, 통합적 의료·보안 서비스(International SOS) 운영 등

○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역량 확보

- 국가 주요 시설 화재 사례 계기, 재단 자체 전산시스템의 데이터 손실 위험에 대비를 위한 저장·백업 체계 마련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대응 체계 완료 (소요예산 500백만원)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장애인 생산품 공동구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등 법정 의무 구매목표 비율 2년 연속 달성 및 이행성과 대외 인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25.9월)

○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상생협력 활동 확대**

- 지역 기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대상 실질적 지원 활동을 지속 확대
 -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25.11월), 광진복지재단과 지역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취약계층 생필품 기부 활동(16백만원)

○ 공공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적 환원 추진**

- 임직원 공무수행 중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지역사회에 환원
 - * 중곡지역아동센터 생필품 5종 983개 구매 기부(2백만원 상당)

3 대국민 소통 노력

○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수행**

- (청소년) 2개 중학교 총 26명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 중학교 진로체험(2개교) 평균 만족도: 4.83점/5점
- (유관기관·대학생) 한인간호재단,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 등 4개 기관 101명 대상으로 재단 사업 소개
- (대국민) APEC 및 월드바이오서밋 전시부스(9.15.-17.), 개발협력주간 홍보부스(11.3.-6.) 운영을 통한 대국민 재단 홍보
 - * 행사기간(4일) 동안 국무조정실 추산 약 4,000여 명 방문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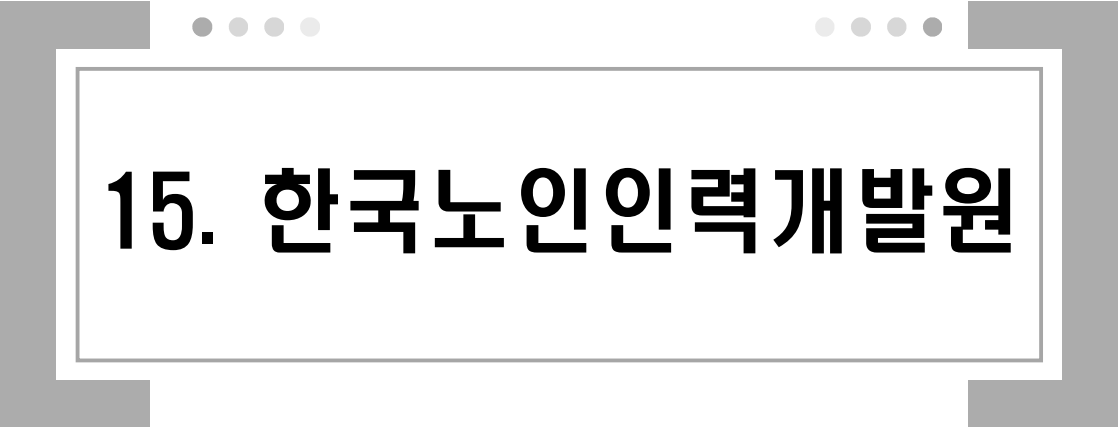
해외사무소 법적 지위 · 회계 투명성 등 관리 미흡 (국정감사)

○ 주요내용

- (법적지위) 해외사무소 중 일부 국가에서 미등록 기관으로 사업운영 및 해당 기관의 파견직원은 일반 거주 형태로 근무
- (회계 투명성) 해외사무소가 독립된 회계 주체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은행 계좌 개설 및 자금 수령 권한이 제한되어 회계 투명성 저해 우려 제기

○ 개선계획

- (법적지위) 협력국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지위 확보 추진 노력
- (회계 투명성) 외부 회계감사, 현지사무소 감사 등 통해 회계 투명성을 지속 제고하고, 모니터링 내실화 추진



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2 인원 현황

(단위 : 명, '26년 현재 기준)

구 분	직급별	계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정 원	165	1	3	11	16	27	39	68
	현 원	146	1	3	11	16	28	35	52

* 무기계약직 정원 22명 별도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218,663	221,720	3,057	1.4
인건비	10,615	11,133	518	4.9
관리비	3,947	4,010	63	1.6
사업비	204,101	206,577	2,476	1.2
개발원(민간위탁)	7,541	10,017	2,476	32.8
민간보조	196,560	196,560	-	-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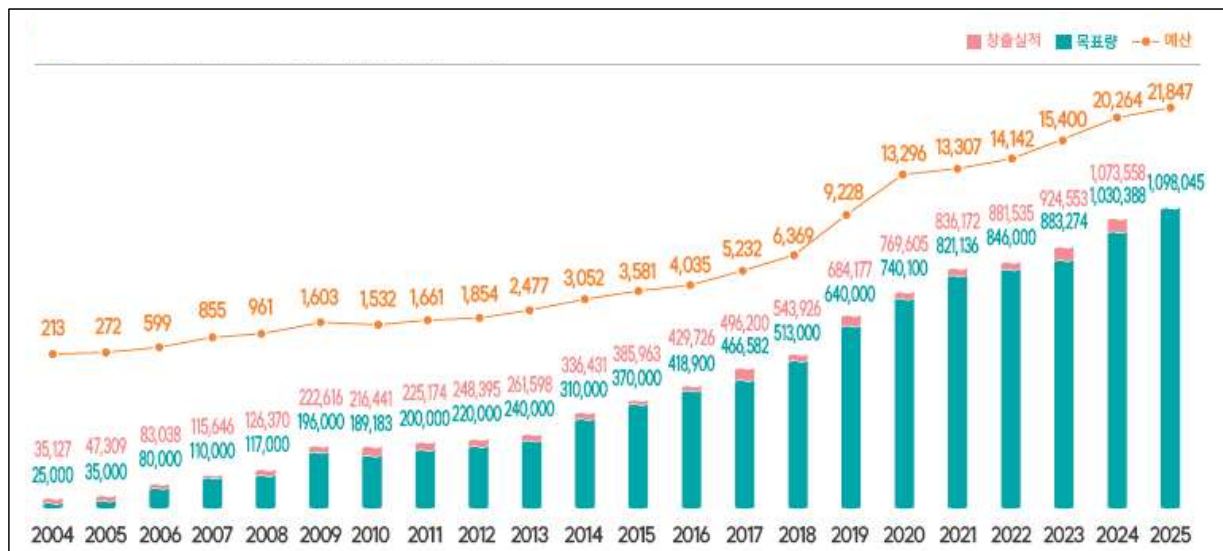
□ [양적 확대]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로 확대

- (사업량 확대) '04년 노인일자리사업(2.5만개) 시행 이후 '25년 역대 최대 수준인 109.8만개로 확대('25.10월 기준 113만개 창출, 예산 국비 2조 1,847억원)

* (노인일자리 수) ('04) 2.5만개 → ('17) 47만개 → **('25) 109.8만개** → ('26) 115.2만개
(노인일자리 예산) ('04) 212억원 → ('17) 5,231억원 → **('25) 2조 1,847억원** → ('26) 2조 3,851억원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확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유입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36.5%('24) → 37.0%('25)로 확대

< 연도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추이 >



□ [질적 개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노력

- 안전·돌봄 등 대국민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공공부문(정부부처, 공공기관·지자체) 일자리, 민간+공공 협업 일자리(ESG) 및 신규 아이템 지속 발굴

* (정부부처, 지자체 협업) 늘봄학교 지원사업 1.5천명(교육부 협업),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3.9백명(국토부 협업), 경로당 지원 8만명(지자체 협업) 등
(민간+공공기관 협업) 환경생태정비사업 201명(JDC 협업), 생활돌봄서비스 359명(LH 협업), 공항 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19명(한국공항공사 협업) 등

<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노력 >

- ('25.7월)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2건 선정
 -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국가보훈부 협업), ESG여행 도슨트(부산광역시 협업),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업),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제주특별자치도 협업),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버드라이버 사업단(여주시 협업) 등
- ('25.8월) 고령자친화기업 17개 신규 선정
 - 주식회사 부일에스티, 복을만드는사람들(주)농업회사법인, (주)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삼보오토(주), 전진산업(주), (주)대일이앤씨, 영암시니어클럽 등 17개 기업·기관
- ('25.9월) 2025년 노인적합형 신규 직무 8개 선정
 - 고독사예방게이트키퍼(대구 남구), 보조기기 관리원(충남 공주시), 시니어 점자 도우미(서울 강북구), 건강의료서비스매니저(대구 수성구), 시니어금융강사(경기 이천시), 외국인 정착 지원(전북 전주시) 등 8개 직무

□ [안전 강화] 노인 일자리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사고 예방 철저

- 사업안전부 신설('24.12월~)하여 위험성평가컨설팅 확대, 사전 안전 점검 강화 및 참여자 법률상담 등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노력

* (위험성평가 컨설팅) '24. 20개 기관 대상 → '25년 100개 기관

(사전 안전점검) 공익형 : 안전점검회의 + 자가진단, 사회서비스·민간형 : 위험성평가

□ [보완점]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개발 및 인프라 강화 필요

- 농촌지역 등 지역재생, 인구소멸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 농촌지역 빈집 및 폐업 상가 등 활용 지역경관을 개선, 청장년 유입을 위한 외식산업 지원 등 마을공동체-노인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등

- 후기고령층의 근로 능력 및 지역 수요를 감안한 사업 운영

* 참여자 역량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선발기준 개선, 실태조사 등 수요기반 사업량 배정 등

- 신노년세대 경험·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민간기업 연계 확대

- 종사자·참여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강화

② 향후 업무추진방향

□ 노인 인구 10% 수준으로 일자리 지속 확대

- (사업량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 '26년 노인일자리 수를 115.2만개로 확대하여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지속 제공

* ('25) 109.8만개 /2조 1,847억원 → ('26.) 115.2만개/2조 3,851억원(+5.4만개 +2,004억원)

- (유형별) 공익형은 후기고령층(75세 이상) 빈곤 완화를 위해 총량 확대, 사회서비스·민간형은 新노년층 수요에 맞추어 비중 38.5%까지 확대

*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 '24년 36.5% → '25년 37% → '26년 38.5%

□ 돌봄·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연대를 창출하는 일자리 개발·보급

- (취약계층 대상)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수요가 많은 돌봄과 안전, 환경 관련 일자리 적극 발굴 및 지속 확대

* 노노케어, 안전통학지킴이·안심귀가도우미,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 공공부문(정부부처, 공공기관·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공성이 높은 신규 일자리·ESG 일자리 지속 발굴

*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유치원),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국가보훈부), 스마트 시설안전관리매니저(국토부), ESG여행 도슨트(부산시) 등 30여종

- (민간 일자리) 기업사회공헌기금 등을 연계한 민간일자리 확대 발굴

* (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회공헌기금을 활용, 제주 오름 내 환경정비 및 환경자원조사, 곳자왈 폐기물 등 불법 투기 현황 지도 제작 및 배포 등 일자리 연계

□ 지역 특성 및 지역 수요기반 일자리 운영

- (우선지정일자리)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고시 제정, '26년 1월 시행) 운영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경로당 급식 지원, 안전통학 지킴이 등 시·도지사 외 시·군·구청장에게도 우선실시 노력 의무를 부과

- (수요기반 운영) 노인 일자리 실태조사('22, '25년) 등을 토대로 지역별 수요 체계화, 참여자 역량평가체계 구축 등 수요기반 사업 운영 추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요 체계화 심층 연구('26), 참여자 역량평가체계 기준 및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26) 등 추진 예정(육구기반 일자리 선발체계 확충)

- (농·산·어촌 일자리) 노인 일자리 지역자율계정 전환('26~)에 따라, 지역의 자발적 참여로 청년과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 발굴

* (예) 창녕 안리마을 빈집활용 노인일자리 모델 : 마을경비, 특산물판매, 산토끼 도슨트 등 마을공동체-노인일자리 연계 모델로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노인 일자리 안전관리체계 구축

- 수행기관 내 사업 유형별 1명 이상 안전전담인력 배치('26. 613명)
- 사업장 위험도(사고율 등)를 종합 평가하는 사업 안전 등급제 실시('26~), 중대한 사고 현장조사 및 재발 방지 등 관련 대응 강화
 - * (중대한사고 심의위원회 운영) 사고의 중대성, 기관 책임성, 개선의지 등을 심의·후속대응
- 위험성 평가 강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 맞춤형 위험성 평가 도구' 보급
- 참여자 법률상담지원 및 안전 전문교육 확대(2시간, 5.8만명 → 3시간, 10만명)

□ 노인일자리 인프라 강화

-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서 AI활용 가능한 모형 개발 및 운영
-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노인일자리법 제정('24.12월)에 따른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한 개발원 인력 증원 추진
 - *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 참여자 법률상담 지원, 시장형 성장지원 및 노인생산물품 우선 구매 지원, 참여노인 및 종사자 교육 확대, 사업량 확대에 따른 대응 인력 등
-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인상, 경력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추진

Ⅲ. 중점 추진과제

①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국정과제 91-1)**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노인 인구 10% 수준 지속 제공(~'30년)**
 - '26년 노인 인구 10.3% 수준의 115.2만개 일자리 확충, '30년까지 노인 인구 10% 이상인 130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
 - * 참여의향 및 요건 등을 분석한 실수요층은 노인인구의 10.9%로 추정('21,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 * (일자리 수) ('25.) 109.만 → ('26.) 115.2만 → ('28.) 123만 → ('30.) 130만개
 - 상대적으로 건강·소득·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본격화에 대응 필요

□ **향후 5년간 유형별 노인일자리 제공 계획**

- **후기 고령층(75세 이상) 빈곤 완화를 위해 공익형 총량 확대**
 - * (공익형 사업량) ('25) 69.2만 명 → ('26) 70.9만 명 (+1.7만) → ('30) 75.9만 명 (+6.7만)
- **新노년층 수요에 맞추어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 점차 확대**
 - *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 ('25.) 37% → ('26.) 38.5% → ('30.) 42%

< '26~ '30년 노인인구 및 노인일자리 제공계획 >

(단위 : 명)

연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노인인구	1,051만	1,112만	1,160만	1,213만	1,252만	1,298만
베이비붐 세대 (비중)	434만명 (41.3%)	522만명 (46.9%)	596만명 (51.4%)	676만명 (55.7%)	744만명 (59.4%)	818만명 (63.0%)
노인일자리	109.8만	115.2만	118만	123만	125만	130만
공익형 (비중)	69.2만명 (63%)	70.9만명 (61.5%)	71.3만명 (60%)	72.5만명 (58.5%)	74.2만명 (58.5%)	75.9만명 (58%)
사서·민간형 (비중)	40.6만명 (37%)	44.3만명 (38.5%)	44.7만명 (40%)	48.8만명 (41.5%)	51.0만명 (41.5%)	53.9만명 (42%)

2 양질의 일자리 확대 (국정과제 91-1)

□ 돌봄·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연대를 창출하는 일자리 개발·보급

○ (돌봄·안전·환경 분야 확대)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수요가 많은 돌봄과 안전, 환경 관련 일자리 적극 발굴 및 지속 확대

- * (안전) 시니어승강기안전단(2,030명), 시니어소방안전지원(1,023명), 시니어치안지킴이(951명), 온동네초등돌봄(5천) 등 대국민 안전 지원 ('25년 10월 기준)
- (돌봄) 노노케어(6.5만), 취약계층 돌봄서비스(4,201명), 실버장애인돌봄 서포터즈(1,714명), 늘봄학교 지원(1,470명)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
- (환경) 지역사회 환경개선, 지역사회 방역활동, 폐건전지·폐의약품 수거, 아이스팩·종이팩·플라스틱·커피찌꺼기 자원 재활용 사업 등

○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 공공부문(정부부처, 공공기관·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공성이 높은 신규 일자리·ESG 일자리 지속 발굴

- *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유치원), 현충시설 시니어 레이전스(국가보훈부), 스마트 시설안전관리매니저(국토부), ESG여행 도슨트(부산시) 등 30여종

○ (민간 일자리) 기업사회공헌기금 등을 연계한 민간일자리 확대 발굴

- * (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회공헌기금을 활용, 제주 오름 내 환경정비 및 환경자원조사, 곳자왈 폐기물 등 불법 투기 현황 지도 제작 및 배포 등 일자리 연계

□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노인일자리 확대

○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 전국 유치원 아침·저녁돌봄에 특화 교육을 받은 보다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교육부 협업)

- * 전국 4,000명(현장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연 10개월, 월60시간, 월90만원, 유치원 내 돌봄, 등·하원 지도, 놀이·간식지도 업무 수행 (유아돌봄 특화교육 30시간(예정))

○ (선도모델 대상기관 확대) 소셜벤처기업에 업무 맞춤형 사업을 제안, 함께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 (기존) 공익적 목적의 민간기업 → 소셜벤처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까지 대상 확대

○ (신규직무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25년 공모 선정된 노인일자리 신규 아이템 12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 노인일자리 신규아이템 발굴 및 전국적 보급 추진

- ('27년 신규아이템 공모)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수행기관 대상 노인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개최('26.5월~7월 예정)
- (노인일자리 우수모델 선정) 노인적합형 신규직무 중 사업 효과성 및 확장성이 높은 우수모델 선정('26.7월)하여 차년도 전국 확대 추진
- (사업설명회) 노인적합형 신규직무의 전국적 보급을 위해 권역별 사업설명회 → 직무자료 제작·배부 → 사업량 매칭 추진

□ 취업·창업형 일자리의 시장경쟁력 확보

- (공동체사업단 확대) 우수모델 발굴·확산, 초기투자비 및 성장지원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신규 사업단의 시장 진입 및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 * (성장지원컨설팅) 인테리어, 마케팅, 법률, 노무 등 사업단의 사업 전 과정 브랜딩 지원
- (틈새일자리 발굴) 민간 고용시장 내 신노년세대 특성·욕구를 반영한 탄력 일자리 및 맞춤형 직무 개발 및 연계 활성화
- (노인친화근로환경 조성) 고령자 채용 확대를 위해 노인친화근로환경 조성 지원 강화 및 서류접수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 온라인 전환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증빙서류를 데이터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수, 기 고령자 비율 등 데이터 검증 강화와 관리 전산화
- (노인생산물 판매 촉진) 노인생산물 대국민 인지도 제고 위한 온라인 몰 운영(네이버스마트스토어 자체 운영) 및 노인생산물 인증제 고도화 추진
 - * 노인생산물 인증제, 우선구매 제도*의 지자체·공공기관 평가 반영 노력
- (인력풀 구축·운영)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업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으로 현장 적응력 개선
 - * 취업형 수행기관 중 공모를 통해 민간취업교육센터 시범 운영('26.)
 - * 기업맞춤형 직무교육분야(예시) : 가사, 간병, 아이돌봄 등 돌봄 분야, 디지털 교육 분야, AI 리터러시교육 분야, 기타 기업 맞춤 직무교육

③ 지역 특성을 살린 수요기반 일자리 운영 [국정과제 91-1]

□ 우선지정일자리 지정·운영

- (정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일자리(고시 제정, '26년 1월 시행)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경로당 급식 지원, 안전통학 지킴이 등

- 노인일자리 사업 전 유형 대상, 시·도지사 외 시·군·구청장에게도 해당 일자리를 우선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

* ('26년) 우선지정일자리 유형별 사업 지정 → ('27년) 우선지정일자리 유형별 사업량 제시

< 우선지정 일자리의 종류 및 현황 >

(단위 : 개)

사업명	내용	'25년	'26년
경로당 배식지원	▶ 전체 경로당 6.9만개에 배식 지원(사서형은 조리포함)	54천	7만명 이내
통합돌봄 지원	▶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내 노인일자리 연계	-	221개 지자체 배치 추진
노노케어	▶ 취약노인 가구 방문, 안부확인, 말벗 활동 등 지원	65천	5%확대추진
유아돌봄 특화형	▶ 유치원 아침·저녁돌봄 보조교사 파견	-	5천
운동네 초등돌봄	▶ 초등학교 아침·틈새돌봄 방과후 보조, 생활귀가지도	5천	5%확대추진

□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 수요 체계화

- (데이터 기반 수요분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22, '25년) 등 기본조사를 토대로 한 지역별 수요 분석 및 계획 수립

* 고령화 비율, 농어촌 등 지역 특성, 인구구조 등 지자체별 노인일자리 특성 및 수요 분석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요 체계화 심층 연구('26. 예정)

- (지역자율계정 전환) 노인 일자리 지역자율계정 전환('26~)으로 지방우대 등 지역에 맞는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 비수도권 사업량 증가 또는 고령화율 또는 후기고령층(75세 이상)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공익활동형 수요 우선 배정

- (참여자 역량평가체계 구축) 건강수준 등 노인일자리 참여자 역량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 및 선발기준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 노인일자리 참여자 역량평가체계 연구('2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참여자 역량평가 지표검증 시범사업('2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지역재생, 인구소멸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 (농·산·어촌 일자리) 농·산·어촌 마을공동체-노인 일자리 밀접 연계, 지역의 자발적 참여로 청년과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 발굴

- * (예) 창녕 안리마을 빈집활용 노인일자리 모델 : 농촌지역 빈집 및 폐업 상가 등을 활용하여 마을경비, 특산물판매, 산토끼 도슨트 등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자율형 일자리) 지자체 수요에 따라 기존 사업 유형을 접목 시키거나, 신규 아이템 개발 등 지역에 맞는 자율형 일자리 사업 모델 운영

< 농촌 마을공동체-노인 일자리 연계 모델(예시) >



- (만족도 조사)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지역 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처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26. 7월 예정)

4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정과제 91-1)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사각지대 발굴

- (안전전담인력 배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내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전담인력을 사업유형별 1명 이상 단계적 배치 추진('26. 613명)
 - * 고위험 사업단부터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27년 2,472명(공익형 1,254명, 사서형 794명, 공동체 424명) 배치 추진
- (표준안전관리 모형 개발) 노인일자리 '맞춤형 위험성평가도구'를 보급, 실제 위험성평가에 적용하여 사업 특성을 반영한 표준안전관리 모형 개발
 - *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200개 기관('25. 100개, '26년 100개)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특성, 사업단의 위험요인, 개선대책을 체계화한 관리 모형
- (사업안전등급제 실시) 수행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개선하는 '평가-환류-지원'의 순환형 안전관리체계 확립
 - * 안전역량(기반), 안전수준(과정), 안전성과(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안전전문교육 강화) 노인일자리 참여자·종사자 대면 안전전문교육 강화
 - * ('25.) 2시간, 5.4만명 교육 이수 → ('26.) 3시간으로 확대, 15만명으로 확대

□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수립

- (중대한사고 심의위원회)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중대한사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대응체계 마련
 - * (심의 내용) 사고의 중대성, 기관 책임성, 개선의지, 기타사항 및 후속조치
 - * (현장조사 강화) 사고경위 등 현장파악, 사고처리 및 보상여부 등 즉각 대응

□ 참여자 활동보호 지원 강화

- (보상체계 강화) 상해보험으로 안전을 지원하는 봉사성격의 공익활동은 필수 보장담보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보상지원 체계 유지
- (법률상담지원) 참여자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민원, 폭력행위, 소송, 산재 신청 등 참여자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5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강화 (국정과제 91-1)

□ 안전 등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개발원 인력 증원

- 노인일자리법 제정('24.12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 시장형 성장지원 및 노인생산물 우선구매, 참여노인 및 종사자 교육 확대 등 업무 지원 인력

□ AX/DX 기반의 전달체계 및 모니터링 고도화

- (모형개발)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담-모집-신청-매칭-활동관리-참여자 이력 관리 등 사업전반에 걸친 디지털 및 AI 활용방안 강구
- (협력 네트워크 운영) 가능성 모색 및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AI기업, 기술연구소, 현장 등을 망라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수요맞춤형 시스템 개선) 직역연금·국가유공자 정보 등 참여자 연관 정보 연계 확대, 민간형 일자리 구직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추진
 - *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개발원 홈페이지, 노인일자리 여기, ERP 등 현재 운영중인 노인일자리 시스템 간 연계 및 사업부서 간 칸막이 개선 포함

□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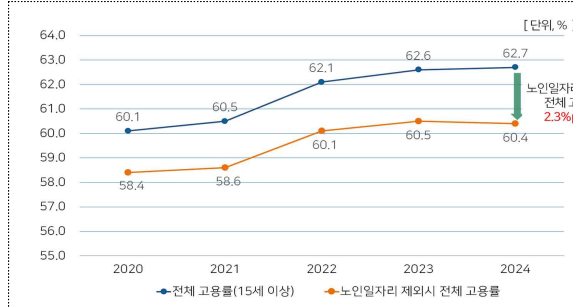
- (법정 수당 반영) 가족·명절·연차 수당 등 현재 부대경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을 담당자 급여에 반영하도록 예산 편성 추진
 - * 참여노인 1인당 연 18만원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약14%를 담당자 수당으로 지급 중
- (경력에 따른 차등지급) '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맞추어 경력에 따른 급여를 반영한 예산 확보 필요
 - * 신규-1년-2년-4년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별첨]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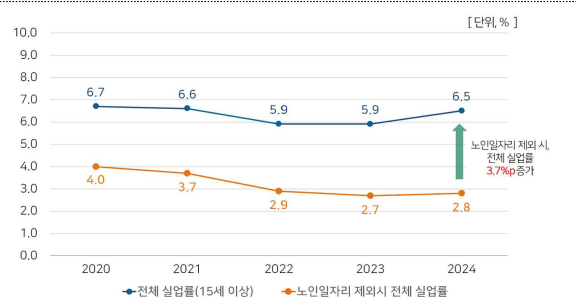
□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 (고용률 및 실업률 개선) 노인 일자리 제외 시, 전체 고용률은 62.7%에서 60.4%로 2.3%p 감소하고, 전체 실업률은 2.8%에서 6.6%로 3.7%p 증가

[그림1] 노인일자리 적용 시, 고용률 변화



[그림2] 노인일자리 적용 시, 실업률 변화



자료: 통계청(2024).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2020~2024),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5). 내부자료.

- (건강보험 재정 기여) 2009~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참여 노인의 월 의료비가 비참여자보다 약 4.5만원 낮음¹⁾
 - 2024년 노인 일자리(1,074천명) 규모에 적용 시, 연간 약 5,316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²⁾
 - ※ 계산식 : 월평균 의료비 절감액(45,000원) × 11개월 × 1,074천명
- (국가 세수 증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2024년 기준), 약 2,639억 원의 근로소득세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표1> 노인 일자리 사업 월평균임금 기준 소득세 규모 산출(2024년 기준)

구분	총 참여인원	1인당 월평균 임금	전체 임금 환산 (9개월 근무 적용 시)	전체 소득세 금액* (소득세율 15% 적용시)
취업알선형	100,097명	176만원	1조 5,886억원	1,121억원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10,669명	167만원	1,603억원	106억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69,719명	237만원	1조 4,901억원	1,356억원
노인친화기업	2,624명	253만원	598억원	56억원

주 : 월평균임금 기준 9개월 근무 적용 시, 근로소득 기본세율 과세표준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세율

산정방식인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적용

* 계산식: 총 소득세 금액=(누진공제액(840,000원)+(연간소득-14,000,000원)×0.15)×총 참여인원

취업알선형: (840,000 + (15,871,230 - 14,000,000) × 0.15) × 100,097=112,177,156,396원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840,000 + (15,033,195 - 14,000,000) × 0.15) × 10,669=10,615,433,618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840,000+(21,373,605-14,000,000)×0.15)×69,719=135,676,015,049원

노인친화기업: (840,000 + (22,818,519 - 14,000,000) × 0.15) × 2,624=5,675,129,078원

1) 이석원, 이윤석. (2014). 노인일자리 참가자의 보건의료 효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2) 2021년 데이터를 분석한 김문정 외(2022)의 연구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의료비는 비참여자에 비해 월평균 약 7만원 적어 연간 약 8,329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됨.

- **(빈곤 완화 효과)** 2020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기준으로, 참여 전 대비 상대 빈곤율이 약 10%p 감소

- 시뮬레이션 결과, 노인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급여 인상('22년 27만원 → 45만원) 및 참여자 확대(140만명) 시, 1.43%p 감소할 것으로 예상.³⁾

<표2> 노인일자리 참여에 따른 빈곤완화('20년 기준)

구분	노인일자리 참여 전(a)	노인일자리 참여 후(b)	차이(a-b) ²⁾
상대 빈곤율 ¹⁾	93.2%	83.0%	10.2%p

주 1: 가구 단위 경상소득 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을 의미함.

2: 2020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 기준 2019년 참여 전 vs. 2020년 참여 후 경상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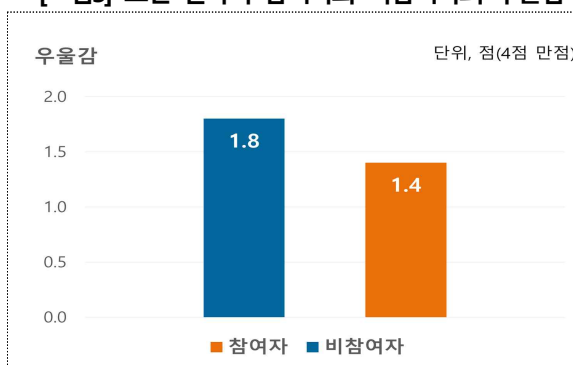
* 상대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경상소득을 통해 상대빈곤율을 도출함.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박경하 외, 2022).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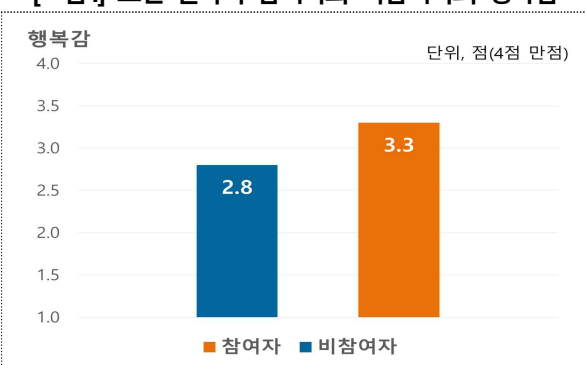
- **(우울 감소 효과)**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비참여자⁴⁾ 대비 우울감이 0.39점 낮은 반면, 행복감은 0.4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가 참여자의 자살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⁵⁾

-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22.2% 우울감 감소 효과를 가지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3.04%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그림3]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우울감



[그림4]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행복감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천재영 외, 2023).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사전조사.

- **(사회적 편익 증가)** 노인 일자리 취약계층 돌봄, 노노케어, 누리과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령 노동자의 생산성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
- 노인 일자리의 소득 증가, 순매출액, 의료비 절감, 조세 증가, 지역사회 노인보호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비용편익비는 1.59~1.65로, 노인 일자리의 경제적 가치가 비용보다 높음.⁶⁾

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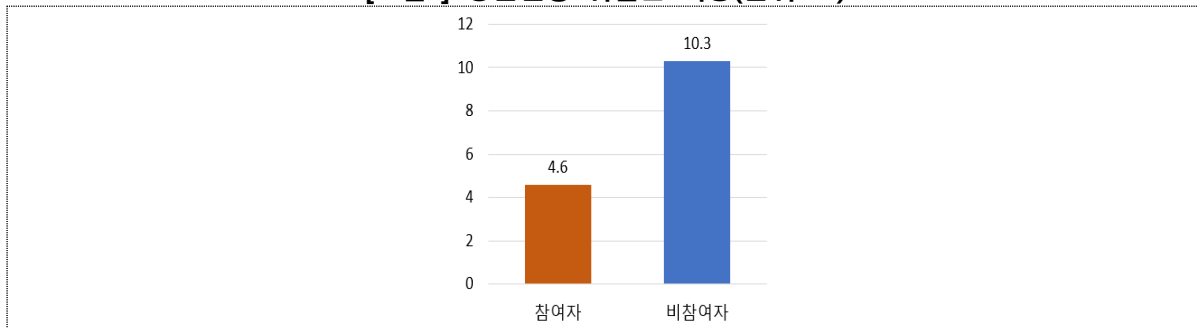
4) 주: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유사한 대조군으로 비참여자를 선정하여 분석함.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천재영 외, 2023).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사전조사.

□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인적 효과

- (소득 증가) 2022년 기초연금 수급가구 기준, 노인 일자리 소득(37.5만원)은 전체 월 가구소득(103.2만원) 36.3%를 차지하여 가구 소득에 상당 부분 기여⁷⁾
 - 2021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22년 참여한 노인의 생활비 지출액은 전년 보다 10.7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일자리를 통해 보다 여유 있는 지출 가능
- (건강 및 삶의 질 제고) 노인 일자리 참여를 통해 참여자는 비참여자⁸⁾보다 규칙적인 신체활동량 증가
 -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져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노출될 위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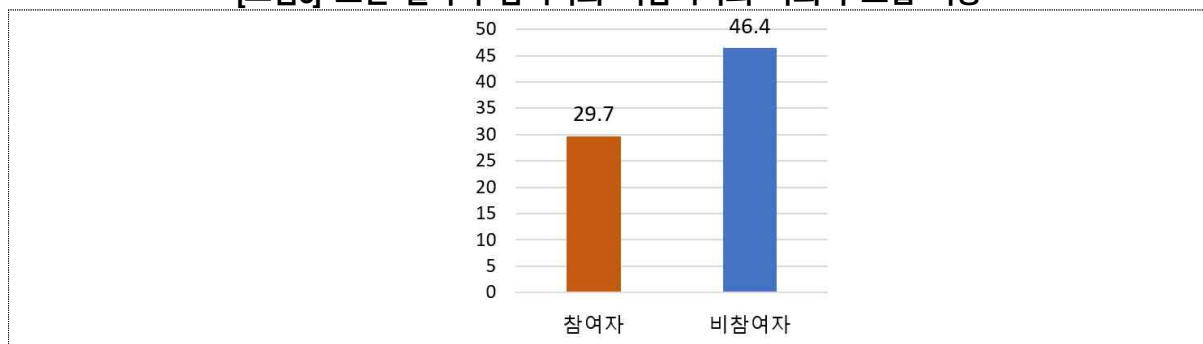
[그림5] 정신건강 위험군 비중(단위: %)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천재영 외, 2023). 한국 어르신들의 일과 삶 패널 사전조사.

- (사회적 고립 예방) 노인 일자리 참여는 친인척 및 친구와의 접촉 빈도와 친밀한 교류 관계가 긍정적으로 개선됨
 -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비중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 29.7%, 비참여자* 46.4%로, 노인 일자리는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관계의 질을 향상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을 낮춤

[그림6]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사회적 고립 비중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천재영 외, 2023). 한국 어르신들의 일과 삶 패널 사전조사.

6) 김문정 외(202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은나 외(20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8) 주: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유사한 대조군으로 비참여자를 선정하여 분석함.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산업재해ZERO) 위원회, 협의체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 목표 달성
 -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통한 위험성 평가방식 개선 및 안전경영책임 계획 방향 설정
 - * 체크리스트, 빈도강도법 복합평가 도입, 위험성평가교육 등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개정
- (안전취약근로자 보호) 안전취약근로자 집중보호로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 기능직 근로자 등 유형별 지원방법을 결정하여 안전 취약 근로자 근무환경 적극 개선
 - *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사고발생無 CCTV 추가, 경사로 아스콘 공사, 배관 보수 등 시설 개선 / 업무지원 근로자(업무상담 등)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 / 장애근로자를 위한 탕비실 안전바 및 모서리 완충장치 설치 등
- (개인정보 안전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100% 이행, 5년 연속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ePRIVACY)
 - 개인정보 유출대응 모의훈련 최고수준 “양호”등급 유지, 타산하공공기관 평균점수 대비 2.29점 높은 점수 획득
 -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41개 기관 중 양호 27개, 보통 14개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사회공헌 협력) 기업(기관)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 추진
 - JDC이음일자리사업(곶자왈 환경생태보전활동), KOEN바다사랑지킴이사업(해안가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ESG 노인일자리 창출
 - * 총 19개 사업, 2,330백만원 투입, 971개 일자리 창출

- (노인생산물 판매)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한 노인생산물 판로 혁신 및 구매 활성화 지원
 - 지역 노인생산물 판매 확대 지원을 위하여 **프로모션 다각화**, **상품 확대** 등 국민접점과 사업단 자생력 증대 노력
 - * 지역·물품별 노인생산물 카탈로그 1,600부 제작,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430개소 배부
-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역사회 협력(지자체 등 대응투자)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기여
 -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 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체계 마련 지원
 - * 한국부동산원, 대구은행 지역사회 외부자금 지원 연계(1.4억원), BGF리테일 업무협약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 점포 가입비 및 투자예치금 면제(3.8천만원)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고객만족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우수” 달성
 - 기획재정부 발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결과 **총 94.0점 획득**
 - * 기타공공기관 평균 86.7점 대비 108.5% 수준
- (국민소통채널) 기관 공식 유튜브(시니어잡화점) 구독자 10만명 달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1위”
 - 산하기관 최초 유튜브 실버 버튼 획득으로 대국민 소통채널 인증
- (대국민 인지도) 세대 간 화합과 정책 긍정 인식 확산 캠페인, 웹드라마 제작 등 대상별/세대별 맞춤형 소통전략 체계 수립 및 운영
 - 정책 캠페인(6개월), 노인일자리 웹드라마 활용*(춘자의 전성시대), 참여노인 수기 공모전(2~11월)을 통해 **우리원 인지도 향상 및 정책 긍정 인식 확산 노력**
 - * 3개 국제 웹드라마 대회 수상 및 공식 초청 : 제2회 여수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25.9.), 2025 멜버른 웹페스트 공식 초청(25.10.), 비엔나 국제 영화상 명예언급(25.11.)
 - ** 우리원 인지율 31.9% 달성(전년대비 103.6%, 1.1%p 상승)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노인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 저소득 노인 위주의 노인공익 활동 활동비 인상 필요
 - 노인공익활동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유급자원봉사자로 교통비, 활동실비, 식비 등으로 구성된 활동비를 지급(월29만원)
 - (개선계획)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활동비 인상 등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추진
 -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6년 활동비 인상 등 협의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은 전년동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4.12.20., 시행 2026.1.1.(장종태의원실(민주당, 대전 서구갑) 대표발의)>

②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방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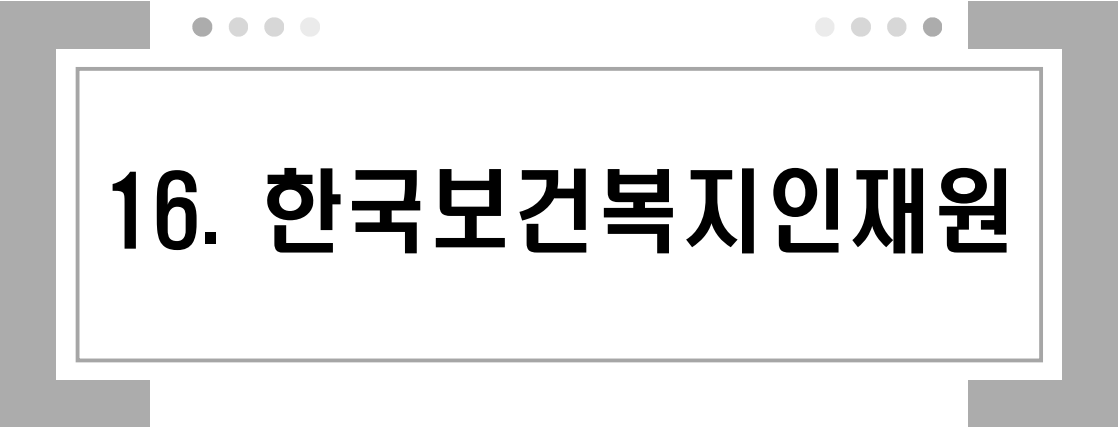
- (주요내용) 매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호봉인정, 업무경감, 경력인정 등 현장 처우개선 요구 증가
 - (개선계획)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처우개선, 배치기준 완화 등 개선 추진
 -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수행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경력·명절수당을 부대경비 중 일부를 활용하는 등 처우개선 노력
- * 경력수당('25~): 2년~4년 미만 월5만원 이내 / 4년 이상 월10만원 이내
- ** 명절수당('20~): '20년~'23년 연간 기본급 100% → '24년 연간 기본급 120%
- 다만, 경력 인정, 급여 인상, 담당자 추가 배치 등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③ 안전사고 대응 및 안전전담인력 배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주요내용)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사업유형별 안전전담인력 배치 필요
 - '20년 74만개 → '24년 103만개(139% 증)로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지속 증가
- (개선계획) 안전전담인력 배치 및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전담인력 사업유형별 1명* 배치 추진('26년 613명 1차 배치)
 - * '27년 2,472명(공익형 1,254명, 역량활용형 794명, 공동체사업단 424명) 배치 추진
- (표준안전관리 모형 개발) 노인일자리 '맞춤형 위험성평가도구'를 보급, 실제 위험성평가에 적용하여 사업 특성을 반영한 표준안전관리 모형 개발
 - *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200개 기관('25. 100개, '26년 100개)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특성, 사업단의 위험요인, 개선대책을 체계화한 관리 모형
- (사업안전등급제 실시) 수행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개선하는 '평가-환류-지원'의 순환형 안전관리체계 확립
 - * 안전역량(기반), 안전수준(과정), 안전성과(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안전전문교육 강화) 노인일자리 참여자·종사자 대면 안전전문교육 강화
 - * ('25.) 2시간, 5.4만명 교육 이수 → ('26.) 3시간, 15만명으로 확대

④ 안전사고 예방관련 인력 및 예산 확충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노인일자리법 제정('24.12월) 에 따른 참여자 보호 업무를 위한 수행기관 대상 위험성평가 등 관련 인력 및 예산 확충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노인일자리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인력과 예산 부족
- (개선계획) 안전사고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노력
 - 위험성 평가 지원, 사고조사 및 대응, 안전교육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안전부 신설('24.12월, '25. 7명 → '26. 20명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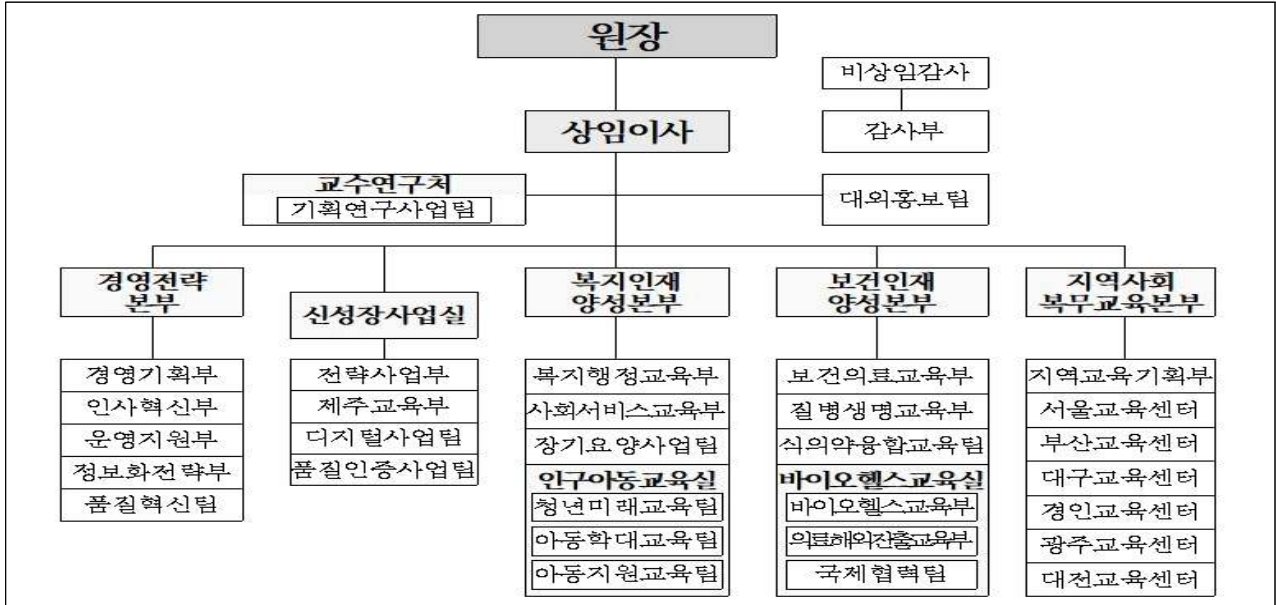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gray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brackets, at the top,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ay dots. In the center of the frame is a white rectangular box with a thin gray border.

16.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 4본부 1처 3실, 20부(14부·6센터), 11팀



2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직급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교수직	기능직	공무직	기간제
정 원		272	2	2	6	11	22	57	44	12	1	115	-
현 원		257	1	1	6	11	22	55	28	9	0	95	29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 (A) * 예산변경(안) 기준(12월)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48,417	47,664	△753	△1.5
정부출연금	15,936	22,778	6,842	42.9
민간경상보조	4,566	4,206	△360	△7.9
자체수입	27,915	20,680	△7,235	△25.9

4 교육 현황

(단위 : 과정, 회, 명)

분 야	교육영역	2025년 실적			2026년 계획		
		과정	회수	인원	과정	회수	인원
계		1,078	1,816	3,531,164	1,010	1,986	3,717,904
보건복지공동	기본·공동·인문소양, AI, 디지털, 국제협력 등	194	183	1,144,065	144	189	1,188,523
사회복지	복지행정, 사회서비스, 노인장애안아동청년복지, 사회복무 등	419	1,073	2,236,298	412	1,249	2,434,358
보 건	공공보건, 건강증진, 정신건강, 만성질환, 감염관리 등	310	368	136,477	305	410	84,083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제약·화장품·의료기기, 글로벌헬스케어 등	155	192	14,324	149	138	10,940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보건복지 인재양성을 책임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年 353만명 이상의 보건복지 인재교육을 수행 중 ('22년~'25년간 교육인원 29.6% 증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교육인원	2,725,672명	3,015,907명	3,285,745명	3,531,164명

- 의료·바이오헬스, 복지·돌봄 등 AI인재양성·체계구축으로 AI 대전환 계기 마련
- 현장의 AI 활용 강화를 위한 의료AI보건의료인직무교육사업(1,489명) 및 바이오헬스 AI 역량강화사업(복지부·과기부 협업, 220명) 성공 수행
 - ※ (의료) 27.9억 예산 신규 확보, 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대중앙대광명병원 AI 활용인력 및 적용모델 발굴 (바이오헬스) 교육생 89.3%가 AI도구기술적용, 83.6%는 신규사업 기획·추진 등 교육성과 有
 - 6개 병원*에 의료AI 종합역량진단 및 진단결과에 기반한 AI 역량향상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실행형 AI 활용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
 - *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중앙대광명병원 분당차병원 성남시의료원
 - 임상·행정·데이터·보험심사까지 교육 후 병원 AI 적용 모델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현장 AI 활용격차 해소 및 안전한 AI 확산 기반 조성

Best Practice 2025년 의료AI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참여병원 AI 적용 모델 ('25.12월 성과교류회 中)

병원	혁신성과
삼성서울병원	• 논문실적 검증 자동화 구축으로 오류탐지·중복판별·실적파일 자동생성 등 연구행정 처리시간 대폭 절감 • 강북·창원까지 연계한 지역확산형 AI 러닝모델 구현
서울아산병원	• 진료 프로토콜 개선·스마트 청킹 RAG 구현되는 LLM 기반 AI Agent 운영 및 의료 RAG 플랫폼 AMIR 구축
서울대학교병원	• 미세운동변화 조기감지 등 파킨슨병 운동기능 정량측정 AI 개발 • 의료진 AI 수용성 조사 및 AI 도입 정책모델 제언
중앙대학교광명병원	• 심평원 Q&A·고시문 기반, 코드입력만으로 인정기준삭감가능성 즉시 확인 가능한 삭감예측 RAG 구축으로 청구 오류 감소 • Prompt+Marathon 결합 프롬프트톤(Prompt-thon) 추진

- 복지현장의 AI 기술 도입·확산을 위한 복지부 'AI복지·돌봄 혁신TF' 참여(8월) 및 'AI 복지·돌봄분야 인재양성 기초연구' 착수('25.12월~'26.4월)
 - ※ 중국 선전(深圳) AI 휴머노이드 케어로봇 IoT 기반 요양시설 활용 등 선진지 견학(11월)
- (보완점) 직역·지역간 균형적 역량수준 상향을 위해 직역별 표준모델 개발과 지역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살던 곳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담당자 전수 교육 실시

- 전국 지자체(229개) 시범사업 본격 시행(‘25.9월)에 따라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지자체 핵심·서비스제공기관(인력) 대상 전문교육* 실시(11,586명)
* (집합교육) 시도1과정(1회) 22명 시군구24과정(53회), 3,865명 읍면동19과정(38회), 7,699명
- 시군구 전수 통합돌봄 실행계획 컨설팅(8회)으로 사업 완성도와 실행력 제고
- 지역 특성 반영한 사례기반 정책실습형(Policy Lab) 교육모델* 도입
* 대상자 복합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수립절차 실습 교육
- (보완점) 지자체 역량편차 완화를 위해 중앙 주도형 역량강화 체계 마련

□ 미래 성장과 행복을 이끌 아동·청년분야 전문인력 교육

- 통합사례관리, 학대·안전대응,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 전문인력(26천명) 교육
- 고위험(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의 건강한 자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시범운영 4곳(인천·울산·충북·전북) 전수 교육으로 종사자 전문성 강화
-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상담기관 종사자 교육을 확대(127명→146명)하여 출생통보·보호출산제의 안착 지원
- (보완점)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고난도 사례 활용 역량 교육 확대 필요

□ 보건복지 역량평가, 장기교육 등 보건복지 공공 리더 양성

- 보건복지 공공 역량평가모델 구축·운영 및 평가운영매뉴얼 고도화
※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 인사부서와 연계한 ‘역량개발·평가·모의평가’ 패키지 운영
- 지역 문제해결과 보건복지 성장·변화를 이끌 핵심 리더 양성(65명)
※ 사회복지직(6급)장기교육(29명, 7~12월), 지역사회공중보건전문가고위과정(36명, 4~11월)

□ 지역공공의료 파수꾼인 필수 직군 대상으로 전문직무 역량강화

- 보건소·지소·진료소 대상 전문직무교육*으로 지역보건의료 실행력 제고
* 보건소·지소 등 건강증진 13개 소 영역(32과정 2,846명), 보건진료소장 1,681명 교육
- 감염병(2,324명), 의약품·의료기기 규제관리 및 안전성(2,540명) 등 사회재난 예방 핵심인력 교육으로 국민 안전의 촘촘한 기반 마련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미션과 비전

미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 분야 발전을 위한 국가 보건복지 인재양성			
비전	보건복지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의 성장 파트너 KOHI			
핵심 가치	전문(Knowledge)	책임(Obligation)	소통(Harmony)	혁신(Innovation)
	국가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전문성 확립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품질의 인재양성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 인재양성 디지털 플랫폼 기능을 통한 보건복지 파트너십 강화	ESG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자기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인재상	① 보건복지 전문지식 + ② 실천사례 학습 + ③ AI 기반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보건복지 전문가			

□ '26년 업무추진방향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인재 양성

① 미래 보건복지를 책임질 보건복지 AI·디지털 역량 강화 선도

- 보건복지부 AI 챔피언('26년~) 등 보건복지·공공기관 대상 AI 역량진단·맞춤형 교육·컨설팅 운영으로 실무형 AI 전문가 양성·지원
- 의료AI 역량진단을 반영하고 난이도를 세분화하는 등 교육과정 고도화
- 의료AI 취약지 지원 확대로 수도권 편중 완화 및 국가의료AX 토대 마련

② 지역별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안착을 위한 담당자 사업역량 강화

- 전담인력 및 핵심인력(시도,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등) 필수교육으로 지자체간 역량 편차 최소화 및 정책 실행역량 강화(9천명 계획)
- 통합돌봄 전문가(현장강사, 사례관리 전문가 등) 양성 및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지자체별 자체 교육실행 여건을 보장
- 통합돌봄 교육효과와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연구 및 교육모니터링 강화

③ 취약계층 지원 체계 고도화 및 보건·복지 인력 전문성 강화

- 보건·복지 수요 다변화에 대응할 직무 중심 전문 인력양성 교육 설계
- 복지팀장 신규자 교육으로 실무역량과 정책기획력을 갖춘 공공복지 리더풀 구축
- 지역의료기관 부족, 감염병 등 지역 공공보건 및 위기 대응 인력양성 강화

Ⅲ. 중점 추진과제

'26년 4대 영역(공통·사회복지·보건·바이오헬스) 28개 분야 371만 명의 보건복지 전문인재 양성

① 보건복지 AI 인재 양성으로 AI 혁신 도약 지원 (국정과제 32번)

□ 의료AI 직무교육 고도화 및 지역·중소병원 맞춤 지원 확대

- (교육과정 고도화) 의료AI 사전·사후 역량진단결과를 반영한 의료AI 보건 의료인 역량 5단계(입문→이론→심화→실습→프로젝트)* 구축 및 과정 세분화
* 기본역량을 위한 초급모듈(1~2단계), 직무특화·전문성(LLM 프롬프트 디자인, RAG 설계, 병원데이터 실습기반 프로젝트 심화를 위한 중·고급모듈(3~5단계))
- (중소·지역병원 역량지원) 종합 권역·중소병원 순으로 이어지는 확산모델 구축, 표준교재·실습데이터 고도화, 의료AI 취약지 지원 확대*로 역량 격차 해소
* ('25년) 수도권 4개 기관(1,000명) → ('26년) 충청·호남·영남 포함 6개 기관(1,200명)으로 확대
- (역량강화 패키지 모델) 의료AI 역량진단→컨설팅→직무교육→성과창출로 이어지는 의료AI 역량강화 패키지 모델로 현장 적용과 확산 단계별 추진

□ 바이오헬스, 복지·돌봄 등 AI 선도 인재 양성 기반 조성

-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산업 내 AI전환 핵심리더 양성(250명) 및 AI 기술·도구 현업적용 성과교류회로 산업 현장의 AI 활용 확산
- (복지·돌봄) AI 기반 복지 및 돌봄 서비스 혁신과 현장 종사자 AI·디지털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 (보건복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AI 챔피언('26년 2분기, 20명)을 시작으로 보건복지·공공기관 대상('26년 하반기) 실무형 AI 전문가 양성·지원

□ AI역량진단 등 AI 기술 활용한 맞춤형 교육솔루션 제공

- (DX전환) 보건복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DX 전략 연구('25)를 기반으로 중장기 DX 로드맵 수립 및 디지털전환 혁신 기반 마련
- (AI역량진단·컨설팅) 보건복지 AI역량 진단도구('25.12월 개발)를 활용한 조직·개인 AI역량진단으로 맞춤 교육컨설팅(솔루션) 제공
- (AI콘텐츠) 글로벌헬스케어 AI학습 콘텐츠 개방·운영으로 현장 전문성 지원

※ '24~'25년 개발된 8개 언어(영어·일본·중국·러시아·베트남·아랍·태국·인도네시아), 740종의 상황별 시나리오를 의료통역, 코디네이터, 국제진료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활용

2 통합돌봄 성공 정착과 돌봄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국정과제 78번)

□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지자체 사업 수행 역량강화 지원

- (지자체 맞춤 교육 확대) 제도 시행 전('26.3월) 집중 교육운영으로 지자체 실행력 확보하고 사업 수행 역량을 고려한 권역별 맞춤·현장교육 실시
※ ('25년) 정책·지침 교육 → ('26년) 기초-기본-심화 등 단계별 교육 **약 9,000명**
- (지자체 교육지원) 지자체에서 자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교육품질 관리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 및 표준 교육프로그램* 확대
* 현장강사(60명), 사례관리 전문가(60명) 양성 및 표준교안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10종)
- (상시학습 지원) 통합돌봄 인력의 상시 역량 개발을 위한 이러닝 등 개발보급
※ ('25년) 이러닝 5과정, 동영상 7개 + ('26년) 이러닝 4과정, 동영상 10개(신규개발 예정)

□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선도적 교육 및 역량 개발 체계 구축

- (직무역량 로드맵 구축) 의료요양 통합돌봄 교육체계 수립 연구* 실시로 직무기반 역량 개발 로드맵을 도출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 체계 구축
* ('25년)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표준교안, 실습과제) → ('26년) 대상자별 표준교육체계 수립
- (정책지원) 통합돌봄 추진지침 변화에 대한 적시교육 강화 및 정책교육·현장연구 연계 패키지 제공을 통해 복지부·지자체 정책지원 기반 강화
- (성과관리) 통합돌봄교육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시도, 유관기관과 교육협의체를 구축하여 성과관리 및 교육품질 지속 관리

□ 돌봄인력 전문성 강화로 돌봄서비스의 질과 인력부족 동시 개선

- (승급교육 확대)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확대·운영(20회→30회 이상)으로 직무 전문 경로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선임요양보호사 배치 수요*에 대응
*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기존 50인 이상), 35인 이상 주야간보호시설(신설) 배치 의무화
- (외국인요양보호사 전문연수) 노년인구 증가와 국내 돌봄시장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연수과정 시범사업' 추진(예정)
※ (기대효과) 지방 중소도시 및 지역 돌봄기관의 고질적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저숙련 인력에서 벗어나 고학력의 숙련된 전문인력 매칭으로 돌봄 품질 고급화

3 아동·청년·장애인 전문가 양성 및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강화 (국정과제 87, 91번)

- 취약·위기 아동·청년·장애인 지원 정책을 책임질 현장 전문가 양성
 - (보호지원·학대대응) 아동보호지원 전문인력 양성(15천명)과 사례관리·판정·위기개입 등 아동학대 대응 인력 실습훈련 강화로 현장 대응력 제고
 - (취약·위기청년) 청년미래센터 종사자 교육(200명) 고도화(기본-보수-심화(소진)) 및 위기임산부 상담원 보수교육 강화로 담당인력의 전문가 성장 경로 마련
 - (장애인) 다양·복합화된 대상자 욕구와 특성을 지원할 수 있게 단계별(기본-심화-전문)·보수교육 등으로 고령·발달·자립 등 분야별 지원인력 역량 강화
※ 고령장애인(3과정, 270명), 발달장애인(8과정, 685명), 장애인자립지원(1과정, 90명) 교육
- 공공분야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간관리자·신규자 등 교육 강화
 - (중간관리자) 지자체 사회복지 6급(팀장급) 대상 장기교육을 확대·개편(29명→69명, 6개월→10개월)하여 실무역량과 정책기획력(리더십) 동시 강화
 - * '26년에는 개인 직무연구 및 통합돌봄 정책 내실화, AI 기술 활용한 공공복지 실천 등 주요 국정과제 분임연구 신규 추진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공공복지 핵심리더 역량 강화
 - (신규자) 초임자가 체감하는 핵심 직무 중심의 신규자 입문교육(1,460명)으로 조기 업무적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이탈 방지
 - ※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350여개 복지업무 가이드라인 교육과 함께 사회복지직 역할·가치·성장경로를 명확히 제시하여 '일의 의미'를 인식시키는 스토리 기반 교육 실시
 - ※ 실습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직무매뉴얼 기반 AI 챗봇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 역량 제고
 -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병역법 제33조의2)으로 책임있는 근무수행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지원
 - * 사회복지시설 20,454명(89%), 지자체 1,414명(6%), 보건소 등 1,121명(5%)에 근무('25년 기준)

4 노쇠예방 다학제 전문인력 등 지역보건 인재 양성 (국정과제 78번)

- 다학제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노쇠예방관리 교육체계 마련
 - (역량강화) 노쇠예방관리 건강관리서비스 전국 확대(~30년)에 따른 전문인력(간호사, 운동처방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등 100명) 역량 강화 수행

- (교육체계 마련) 기본-심화-전문-보수 단계별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다학제 공통역량기준 마련, 전문인력간 협업을 위한 다직종 합동 워크숍 운영

□ 지역 공공보건의료 및 위기 대응 인력 양성 강화

- (전문·실습 교육확대) 지역의료기관 부족, 고령화 등 복합 위기로인 증가에 대응할 전문교육* 및 모의훈련, 대응매뉴얼, 사례연구 등 실습 교육 확대
 - * WHO QR(Quality Rights, 정신장애 당사자가족전문가 등 인권회복) 정신인권 140명 교육 등
- (의료인면허재교부교육) 경미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대상 윤리·전문성 재교육으로 자질 향상 및 의료현장 복귀 지원(30명)
- (위기대응 교육강화) 의료감염 교육대상 확대(의사간호사→행정·환경 등 지원인력), 의료기기/의약품 규제관리, 응급의료 등 위기관리 인력 역량 강화

⑤ 보건의료 외교강국 실현 및 K-의료 글로벌진출 강화 (국정과제 120번)

□ 국제사회 중심에서 보건복지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선도적 역할 강화

- (국제협력) WHO 초청 인사 설명회 등 청년 인재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아세안 11개국 보건부 대상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수립 주도(한아세안협력기금)**
 - * '25년(서울·부산)→'26년(서울·광주·대구)→'27년(전국 5개 권역)으로 개최 지역 다변화
 - ** 해외진출 희망 기업 '네트워킹데이' 운영, 빅데이터 정책 동향 공유 및 시장 선점 기반 마련

□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기반 강화

- (외국인환자유치지원) 외국인환자유치 핵심인력(의료인, 통역, 코디, 유치기관 등) 대상으로 국가·직무·대상별 전문·심화 및 실습 교육 운영(72과정, 5,515명)
- (의료통역검정) 시행 11년을 맞아, 현장 수요(7개→8개 언어)와 제도 적합성을 점검하고 평가신뢰도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고도화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기관 설립('04년) 이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무발생·무재해 사업장 타이틀 유지
 - (산업재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고도화, 교육훈련 직무특성에 맞춘 안전·보건교육 및 **취약근로자**(시설관리·환경미화·상담·운전·안내원등) **안전보호활동** 실시
 - ※ 매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 후,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책임·감독하에 운영 중
 - (시설안전) 본원 교육관 증축 사업('26년 하반기 예정) 건설 과정의 교육생 및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 삼아 **시설 안전 확보**
 - * 과제¹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준공전에 안전관리 이행여부 반영 과제² 현장과 교육생·직원 동선 분리, 무사고 건설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과제³ 재난대피공간 등 안전 중심의 新교육관 설계 진행
- 최근 3년간 정보보안 무사고, 개인정보보호 무사고 달성
 - (정보보안·보호) 413만명 교육생·강사정보 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정책·인프라·모니터링 고도화 및 보안의식 강화로 외부공격·반출 차단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지역인재채용·구매·소비촉진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 기여
 - (지역인재채용) 이전 공공기관(충북 오송)으로 지역 경제·사회적 활력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목표 30%) **적극 이행**('25년 83% 달성, 목표대비 276%)
 - ※ 지역인재비율 확대('11년 15%→'25년 83%) 및 지역정주를 개선('11년 65%→'25년 87%)
 - (지역구매) 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연대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활용으로 **3년 연속 우선구매 목표 초과 달성**('23년 285%, '24년 194%, '25년 160%)
 - ※ 소액수의계약 시 사전검토서 작성으로 지역업체 적극 활용 유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고려한 공공구매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진행
 - (소비촉진) 연간 대규모 교육생 지역 유입을 통해 숙박·교통·외식 등 지역 기반 서비스 수요 확대* 및 지역 공실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질적 기여
 - * '26년 기준, 약 25억원 경제효과 창출 기대('26년 오송 집합교육 연인원 약 10만명×일비25천원)
 - ** 이전 지역(충북 오송) 인근 유휴공간을 사무실 및 교육장(3실)으로 활용('25~)하여 지역 공실 해소

- **교육훈련기관 특성을 살린 자원개방과 포용적 고용 등 상생 실천**
 - (자원개방) 콘텐츠·플랫폼 공동활용('25년 콘텐츠 469건, 플랫폼 18개 기관) 및 교육장 및 대강당 시설개방 등 기관 보유 자원 적극 개방·공유
 - (취약계층 일자리) 장애인 장애인 고용목표제 적극 이행*, 청년인턴('25년 21명)·일경험 프로그램('25년 6명) 운영, 노인 지역 시니어클럽과 협업한 노인 일자리 모델 ('KOHISI니어서포터즈') 개발·운영 확대** 등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
- * 의무고용률(3.8%) 3년 연속 상회 ('23년 12명(5.26%), '24년 14명(5.71%), '25년 13명(5.03%))
- ** 적합업무(안내, 교육운영 지원 등) 발굴, 해당 업무 지원할 시니어 서포터즈 운영('24년 5인→'25년 7인)

3 대국민 소통 노력

- **주요 고객(교육생·강사·직원) 소통·제안에서 찾은 핵심요구 기반 서비스 개선**
 - (교육생·강사·직원) 소통채널(고객센터, 고객의소리, 제안접수), 교육간담회 등 VOC 기반 핵심니즈 해결로 서비스 고도화 및 고객 감동 실현
- ※ '23-24년 임시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여 '25년부터 부서 책임의 서비스 개선 정규 업무로 관리 ((서비스) 'KOHI 주요 고객 핵심니즈 이행전략', (조직문화) 노사 공동 '직원경험협의체')

Best Practice KOHI 주요 고객 핵심니즈 이행 전략·사례 ('25~)

교육생(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강사(체감형 강사서비스 제공)	직원(몰입형 조직문화 강화)
•수요자 중심 교육공간 재설계 * 다인실→1인실 리모델링(78개) •보건복지 디지털 교육경험 확대 •시간 부담이 없게 학습 접근성 개선 * 하프·원데이교육(807회), 마이크로러닝 확대	•강의집중을 높일 수 있게 강사지원 확대 * 픽드랍(일 3회), 숙박 지원, •강의열정과 헌신에 합당한 지원 •강사인증제(16명)로 강사양성전문 체계화	•업스킬·리스킬로 HR 전략 재조정 * CDP고도화, 교육선진연수 직무전환 챌린지 •일하는 방식혁명, 복리후생제도 발굴 •직원은 '도전, 조직은 '응원하는 문화형성 * 워크ेशन 도입, 직원제안솔루션 운영

- (국민) 국민 체감 서비스 발굴을 위한 'KOHI 국민제안제도' 운영('24년~)
- ※ (제안) 디지털 취약계층 시니어 요양보호사 교육 접근성 제고→ (반영)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거주지 기반 연계 정보 제공

- **콘텐츠·캠페인으로 친근하게 '보건복지 가치'를 전하는 정책 소통**
 - (콘텐츠) 보건복지 종사자 및 국민 누구나가 보건복지 정책과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교육(배움인, 290개)·학습자원포털(보e다, 2,934개) 운영
 - (캠페인)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마약 오·남용 예방, 인구위기 인식개선 캠페인*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콘텐츠 확산
- *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예방캠페인('24년, 오송역 포스터 광고), 국가 인구위기 극복 의지를 담은 민·관·공 릴레이 캠페인('24.10월~'25.7월 총 1,200개 기관 참여)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인재원 조직문화 진단 결과 재발 방지 계획 마련(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주요내용) 인재원 자체 조직문화 진단 결과 중, 언어·업무적 괴롭힘에 대한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할 것
- (개선계획) 노사협의체 구성을 통한 세부 이행과제 도출 및 조직 내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개편 추진, 신고채널 안내 강화 등('26년 중)

② 강사 활용 절차 등 점검개선(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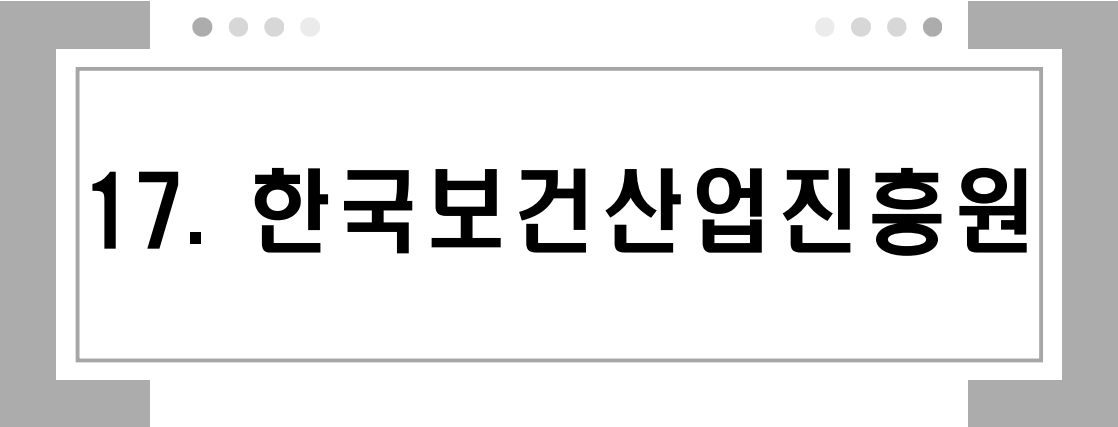
- (주요내용)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은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특별강사 활용의 제도적 미비점 내재
 - 특별강사 활용 수당 및 승인절차를 점검하고 강화 필요
- (개선계획) 특별강사 활용 기준 및 절차 점검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한 강사 운영이 되도록 조치
 - 연간 강사수당 총액제 도입(완료), 원거리 지역 등에 대한 여비 기준 재점검 및 규정 개정(완료), 특별강사 승인 절차 강화 추진 중('26.1월)

③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체계화 및 확대 노력 필요(국민의힘, 최보운 의원)

-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참여자가 저조함에 따라 관련 교육을 체계화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개선계획) ^{고도화} 타기관 유사 교육과정은 폐지하고 사례·실습 중심으로 개편, ^{접근성개선} 종사자 근무환경 고려, 교육기간 축소(2일→1일) 및 비대면 병행(완료)

④ 청년 WHO 진출을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필요(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 (주요내용) 세미나 교육을 통한 청년 인재들의 WHO 진출을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개선계획) 기존 서울 중심에서 서울·대구·광주 등 교육지역 확대를 통한 교육접근성 강화 및 1:1 컨설팅에 더하여 참여자들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맞춤형 코칭체계 구축('26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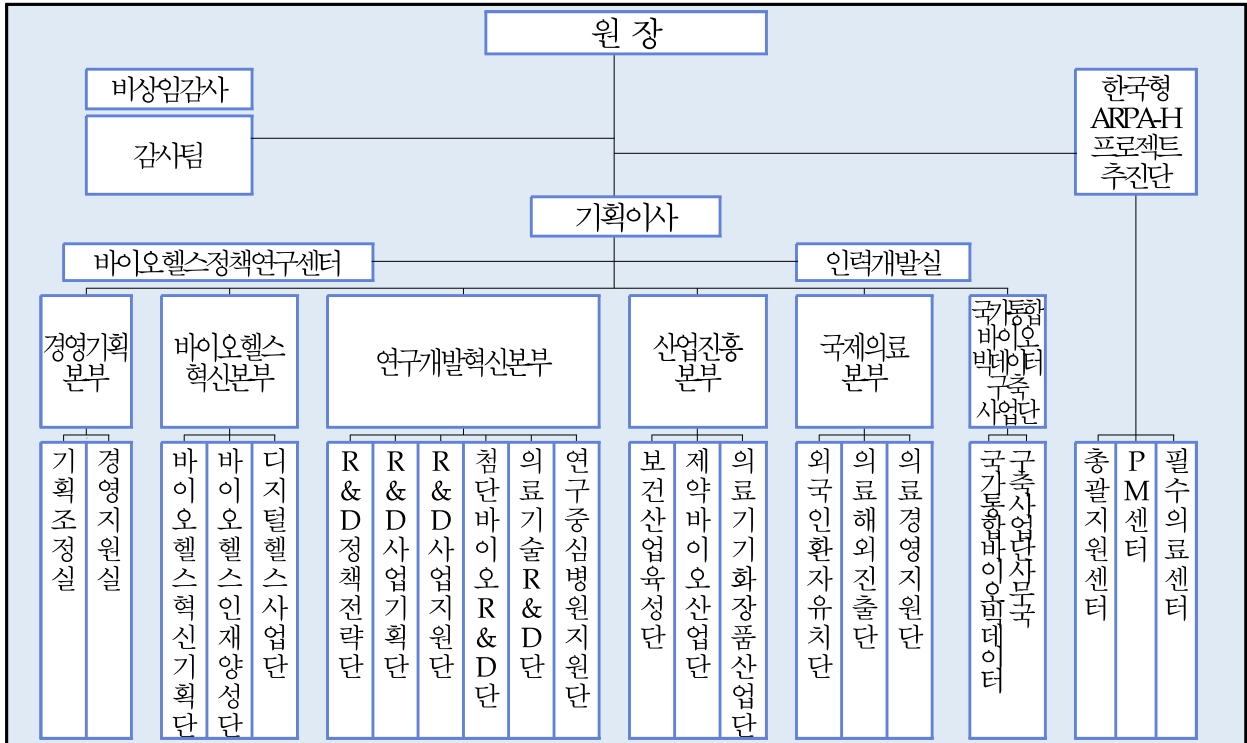


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 5본부 3실 15단 1센터/ 1추진단 3센터 1사업단 2사무국



2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정원	402	423	423	424	433	438*
정규직	213	234	234	235	244	249
무기계약직	189	189	189	189	189	189

※ '26년도 정기증원 5명 포함, '26년 출연금 인건비에 포함된 수시증원(12명) 추가 필요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감 (B-A)	(B-A)/A
계	1,201,297	1,384,828	183,531	15.3%
출연금	39,251	51,296	12,045	30.7%
보건의료R&D	1,073,020	1,190,034*	117,014	10.9%
민간경상보조	63,523	117,545	54,022	85.0%
정부용역 등	25,503	25,953	450	1.8%

* 보건의료R&D('26년): 복지부(993,267백만원), 식약처(69,503백만원), 질병청(48,767백만원), 그 외 부처(78,497백만원)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1

보건의료 연구개발 : R&D 관리예산 1.2조원 시대,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보건부처 대표 전문기관으로 도약

□ (성과)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적·산업적으로 경쟁력 확보

- (논문, 특허) 보건의료 R&D 논문·특허 성과는 국가 R&D 평균 대비
질적으로 우수한 실적 유지

< 복지부 R&D 논문 · 특허성과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표준화된 논문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lf)	국가R&D	63.54	64.01	63.83	65.25	65.84	65.25	68.51	73.11	-
	복지부 R&D	70.99	70.67	70.61	71.86	67.16	67.38	68.13	76.01	77.42
국내 등록특허 SMART 평균점수	국가 R&D	3.86	3.93	3.84	3.85	3.90	3.95	4.03	4.24	-
	복지부 R&D	4.59	4.48	4.36	4.29	4.32	4.23	4.11	4.21	4.8

※ 자료: 국가 R&D: 당해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과기부&KISTEP)

보건의료R&D: NTIS 등록 성과(단, 2024년 IRIS 등록 성과)

- (해외 인·허가) 보건의료 R&D 지원으로 최근 4년간('20~'23) 신약·
의료기기 FDA, EMA 등 해외 인·허가는 총 218건 달성

<보건의료 R&D 해외 품목 인허가 수>

(단위 :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해외신고	2	8	8	5
해외인증	28	25	44	21
해외허가	9	21	29	18
계	39	54	81	44

- (한국형 ARPA-H프로젝트)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5대 임무에
따른 국민체감형 프로젝트 착수(10개 과제) 및 PM 중심의 혁신도전형
R&D 체계 확립(프로세스 정교화, 마일스톤 기반 단계평가 실시 등)

□ (한계) 연구 결과물의 양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환자에 사용되는
보건의료 R&D 전주기적 혁신 전략(프로그램형 사업, 기술사업화 연계 등) 필요

2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AI 도입 · 활용 촉진 및 최대 수출 실적 달성

□ 바이오헬스 혁신 역량 및 시장 안정성 제고

- (의약품 공급 안정화)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 시작
 - 재산성 문제로 생산 중단된 국내 유일의 ‘임산부 소아용 고지혈증 치료제*’ 생산시설 구축 지원→’26년 공급 재개 예상
- * 보령케스트란현탁용산: (’23) 생산 중단→(’25)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시설 교체 및 신규 생산라인 구축

□ 바이오헬스 AI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AI 기반 실험 자동화 인프라) 가상실험(dry lab)과 실제실험(wet lab)을 통합한 AI 기반 실험 자동화 시스템(SDL, Self-Driving Lab)을 구축하여(’25, 25억원) AI 신약 예측-실험 검증 간 선순환 체계 마련
- * (SDL) 로봇 실험 장비-자동화 제어-AI 의사결정 시스템이 결합 형태로, ‘실험설계→실행→분석→피드백’ 전 과정을 AI가 반복·최적화할 수 있는 가상/실제 실험실 통합 플랫폼
- (한계) 신약개발 전주기 중 ‘후보물질 발굴 단계’ 중심에서, 임상·제조 등 신약개발 전주기 전체로 자동화 시스템으로의 확대 필요

□ AI·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시장 진입 지원

- (AI·디지털헬스 활용 촉진) AI·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실증·보급 및 시장 선진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제품 활용이 지속 확대
- * 디지털헬스케어 등 혁신의료기기 실증·시범보급을 통한 68개 제품 390개 의료현장 보급
- **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등 시장 선진입제도 운영을 통한 AI·디지털 활용 혁신의료기기 36건 지정 1,133개 의료기관 활용(’25.11기준)
- (한계) 다양한 AI 디지털 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여, 진단·치료 효율성 제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의료서비스 적용범위 확산 노력 필요

□ 바이오헬스 수출 역대 최대 성과 달성(’25년 잠정)

- (의약품 수출) 세계 최고 수준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급성장하여, 무역수지 흑자 전환(’24) 및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술 수출도 역대 최대 성과*

* 의약품 수출액: ('23) 75.6억 달러 → ('24) 92.7억 달러 → ('25) 103.9억 달러

** 기술수출액: ('23) 61억 달러 → ('24) 61.6억 달러 → ('25) 148.7억 달러

- (의료기기·화장품)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기 수출 회복세 전환* 및 화장품 역대 최대 수출**('25년 114.3억 달러, 전년 대비 12.3% 증) 실적 달성

* 의료기기 수출액: ('23) 57.9억 달러 → ('24) 58.1억 달러 → ('25) 60.5억 달러

** 화장품 수출액: ('23) 84.6억 달러 → ('24) 101.8억 달러 → ('25) 114.3억 달러

- (한계) 수출 리스크 확대에 따른, 규제 대응 지원 강화,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노력 필요

3 외국인환자 유치 : '25년 160만 명(추정) 유치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 외국인환자 유치 '200만 명 시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 '24년 '외국인환자 유치 年 100만 명 시대(117만 명)' 진입 2년 만에 '25년 160만 명(추정) 유치 달성

* '24년 외국인환자 의료비 지출액 1조 5,601억 원, 의료관광 지출액 7조 5,039억 원 추산

□ 외국인환자 유치채널 다변화 및 역량 강화 지원 확대

- (국비환자 송출 확대)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기반으로 기존 UAE 한정 국비환자 유치에서 몽골, 카타르로 신규 국비환자 송출 확대

* 몽골 국비환자 송출 협약(6월), 한-카타르 間 공동운영위원회 합의의사록 체결(11월)

- (한국의료 정보접근성 제고) 구글·네이버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정보 제공 및 외국인환자 접근성 제고

* 구글 및 네이버 맵(map)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 및 등록기관 표시의 일괄 반영 추진

- (글로벌 역량 강화) 국제서비스 품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컨설팅 지원으로 유치사업자 국내 최초 ISO 9001 인증 획득(4개소)

□ (한계)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한국 의료 선진국 도약과 외국인 환자 유치의 다양한 제약 요인 존재

2 향후 업무추진방향

1 [효율] R&D와 산업육성 기능 연계를 통한 투자효율성 강화

□ R&D와 산업육성 기능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 마련

○ R&D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R&D와 산업육성 거버넌스 강화

* CTO(기술이사) 및 CIO(산업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R&D이사 신설 검토

○ R&D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전략회의 운영 및 조직·제도 정비

* R&D의 산업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공동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기능 연계를 위한 사업조정, 성과평가와 공동목표 연계 등을 위한 전략조정회의 운영 등

□ 혁신기술의 산업화·글로벌화를 위한 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후속 투자와 사업화 종합지원체계 강화

* 정부R&D-민간투자 연계, 기술 특성별 맞춤형 사업화 전략 컨설팅 및 스케일업 R&D·창업 지원, 혁신형기업·연구중심병원 인증과 정부R&D투자 연계 기능 강화

○ 혁신기술의 글로벌화를 위한 글로벌 개방형 혁신 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 개방형혁신 촉진을 위한 R&D-산업 연계 기능 강화, R&D협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글로벌전략거점(미국지사; 보스턴 CIC) 강화 및 확대

□ 의료현장·산업 수요의 R&D연계를 위한 민간 협력 R&D지원체계 마련

○ 산업현장 수요 기반 R&D 수요 발굴 및 사업 기획 기능 마련

* 제약, 의료기기 등 산업현장 수요 발굴·검증·환류 플랫폼 구축, 민간R&D협의체, 산업단체 연계 등을 통한 민간협력 기반 개방형 R&D사업 기획 기능 마련

○ 정부 및 기업 R&D의 임상현장 중심 중개연구 지원 기능 확대

* 정부 및 기업 R&D의 성공확률 제고를 위한 학술학회단체(대한의학회 등) 협력 기반 중개연구지원 기능 확대

② [임무] 미래사회 대비 전사적 R&D지원체계 구축

□ 고령화 등 미래 보건이슈 대비 대도약 기술의 전략지원 인텔리전스 강화

- 미래사회 전망 및 기술예측, 미래전략유망기술발굴, 기술수준조사, 글로벌경쟁환경 분석 등 예측·조사·분석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 고령화 등 미래보건이슈 대비를 위한 첨단바이오, AI바이오 등 대도약기술 선점을 위한 로드맵 및 확보전략 개발 등 R&D정책전략 지원 기능 강화

* Physical AI 기반 자율지능 의료 로봇 기술, 초지능형 신종감염병 대응 플랫폼 등

□ 보건의료서비스와 신약, 의료기기산업 AI 대전환 협력체계 강화

-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AI 대전환을 위한 병원, 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강화 방안 마련
- 신약개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AI 대전환을 위한 범부처전주기의료 기기개발사업 등 범부처 및 부처간 협력 지원체계 강화

□ 국가난제·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도전·임무형 R&D 지원 모델 고도화

-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지역의료 역량강화 등 의료혁신주체 네트워크 기반 임무중심 R&D 모델 고도화
- 5대 국가난제 극복을 위한 PM 중심 한국형 ARPA-H 모델 고도화

□ 넥스트 팬데믹 대비, 공급망 안정 등 보건안보를 위한 현장밀착형 R&D지원체계 구축

-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진단·치료제, 방역기술 개발 등 공공보건 현장밀착형 R&D 지원체계 구축
- 필수약품·의료기기 생산혁신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현장밀착형 R&D 지원체계 구축

③ [기반] 산업 대도약을 위한 혁신 지원 강화

□ 개방형 데이터관리체계 기반 의료AI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간활용 극대화를 위한 개방형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및 신속개방, 의료마이데이터 활용기관 지정 등

○ 의료현장 중심 의료AI 개발-실증-활용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 의료현장실증 및 AI디지털병원 활용 등

□ 생애주기 및 현장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양성기능 강화

○ 학부부터 우수연구자까지 의사과학자 생애주기 관리지원체계 마련

○ 현장수요 맞춤형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기능 강화

□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정·연계 기능 강화

○ 글로벌 기업-국내 앵커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계 기능 강화

○ 바이오헬스 기술 육성지원,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산업 특성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

□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 유치기관 관리를 위한 지원 기능 강화

○ 일괄이양법 시행으로 '21년부터 각 시·도에서 유치사업 관련 사무를 수행 중이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급성장*하는 유치사업 지원에 역부족

* (유치기관 수) '09년 1,547개소(의료기관 1,453개소, 유치사업자 94개소) → '25년 12월 기준 6,265개소(의료기관 3,884개소, 유치사업자 2,381개소)

○ 유치기관 관리 및 사업지원을 위한 진흥원-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업 체계 강화

Ⅲ. 중점 추진과제

① 바이오헬스 혁신 정책 개발 지원 (국정과제 32)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바이오헬스 혁신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1 개 요

- 주요국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안보 및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판단하고 각종 혁신적인 정책 추진 中
 - 바이오헬스 분야 공급망 안전성 확보, AI·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은 혁신 전략 개발
 - * (美)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의약품 자국 생산 행정명령
 - (EU) 전자 건강데이터의 2차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 전략
 - (중) 바이오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우리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 바이오기술 혁신 및 AI 전환 등 바이오헬스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우리의 강점과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부 혁신 정책 지원 추진
 - * (강점)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우수한 IT 기술력 및 바이오 인재
 - (기회) 첨단바이오로 산업 트렌드 변화,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반사이익
 - 혁신 정책 아젠다 발굴 → 혁신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 개발 → 범부처 위원회를 통한 전략 거버넌스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정책 기획

-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을 신속하게 조사 분석하여 산업계 전파 및 정부의 혁신 정책 기획에 활용

* 최신 기술, 산업, 정책, 규제 및 무역통상 등 바이오헬스 산업 핵심 이슈

- 바이오헬스 핵심 이슈를 다루는 “바이오헬스 미래 정책 포럼”* 운영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정책 공조를 위한 “세계 바이오서밋”** 개최

* 첨단재생의료, 의료데이터 활용 등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포럼 개최

** 팬데믹, 공급망, AI-데이터 등 글로벌 정책 공조가 필요한 아젠다 중심으로 각국 정부, NGO, 기업, 병원 등이 모여서 논의

□ 바이오헬스 산업 통계 생산 및 제공

- 정부의 정책수립과 산업체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 통계를 수집·생산*하고, 시의성 있는 산업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정보 적시 제공***

* 국가승인통계(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승인번호 358004호)) 등

** 수출입, 고용, 기업경영분석 등 정책통계 분석(월/분기별), 바이오헬스 특수분류 체계 개발, 바이오헬스분야 통계 연구 등

*** 보건산업통계포털(KHISS) 운영을 통한 통계 지표, 보고서/간행물 등 정보 제공

□ 바이오헬스 규제개혁 마당 운영

-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 설치(‘24.4)·운영 등으로 규제·과제 발굴 지원 및 범정부 거버넌스를 통한 해소*

* 86개 기업 방문 상담(규제개혁기동대) 및 10차례 협회·단체 간담회 등(상시발굴)을 통해 총 289건 접수과제(~’25.12.) 지속 관리 포함

2 보건 의료 R&D 확대 (국정과제 32)

R&D 전주기 관리역량을 높여 보건 의료 R&D 전문성 · 투명성 ·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 개 요

- R&D 관리예산 급증에 따른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고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R&D 기반 기술주도 성장 및 임무지향적 R&D 지원 시급
 - 우리원은 3개 보건부처(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R&D 전문기관으로 정부 보건 의료 R&D 예산 41%를 관리하며 실질적 책임을 수행
 - * '26년 진흥원 주요 R&D 예산은 총 1조 1,691억원(전년 대비 1,127억원 증액 (10.7%), 복지부 9,742억원, 질병청 480억원, 식약처 684억원)
 - 단순 연구지원을 넘어 미래 보건산업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도입 필요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보건 의료 R&D 전략적 투자지원 및 임무중심 혁신 R&D 추진체계 고도화
 - (전략적 투자) 5년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AI 신약 등 유망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보건 의료 R&D 로드맵 수립('25. 12)에 따라 전략적 지원
 - * 보건 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 단계적 발굴·투자, AI 기본 의료 체계 전환을 위한 R&D 전주기 지원,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R&D 강화 등
 - (임무R&D) 초고령화, 필수 의료 위기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 난제 해결을 기술로 극복하기 위한 임무중심 혁신 R&D 추진
 -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중심으로 임무 중심 신규 프로젝트 추진, 정신건강·통합 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현장 활용 지원 등
- 사업기획 역량 내재화 및 개방성 강화
 - (내부 기획역량) 민간전문가 및 AI 활용을 통한 자체 사업기획 역량 고도화 및 체계적 사업기획 품질관리(QA) 도입으로 기획 완성도 제고

* 민간전문가(PD, PM) 중심 기획체계 강화, 사업기획 표준 체크리스트 활용으로 기획 품질 관리 및 프로세스 표준화, 진흥원 "BION GPT" 활용, 기획업무 관리 체계화 등

○ **(개방형 기획 확대)** 보건의료 R&D 유관학회·단체와 임상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기획 확대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및 산하학회, 약학회 등 대상으로 R&D 기획수요 접수(컨셉페이퍼 형태) →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 그룹 중심 기획 구체화 추진

□ **개발기술의 가치 창출을 위한 현장수요 중심 R&D 관리체계 고도화**

○ **(관리제도 혁신)** 연구현장 중심의 유연한 관리체계 및 성과중심의 지표체계 도입으로 실질적 성과창출로 연계

* R&D 생태계 혁신방안(과기부, '25.11) 이행 : 혁신성 중심의 선정평가,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무빙타겟 허용, 평가등급제 폐지 및 마일스톤 중심 평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매몰 비용 최소화 등

○ **(사업관리 전문성 강화)** 과제수행 중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과제수행 초기부터 종료까지 전주기 밀착관리 및 맞춤형 지원

* 대형과제, 실용화과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

* (예시) R&D 연구자문(보정심 전문위원 활용), IP-R&D 컨설팅, 규제과학 컨설팅, 해외진출(진흥원 내 비 R&D 사업 연계), 홍보 등

○ **(규제과학 지원)** 기술·규제 정합성 조기 확보를 위해 사업기획 단계에서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 개발 추진

* 보건의료 유망기술 발굴 단계부터 규제과학적 접근으로 신규 기술의 임상승인, 인허가 과정에서의 평가기준 신속 확립 및 규제 리스크 완화

○ **(우수성과 후속지원)** 정부지원 종료과제 중 우수기술을 선정하여 맞춤형 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및 후속 스케일업 R&D 지원

* 시장성 분석, 지식재산권 확보·관리, 글로벌시장 진출, 비즈니스 모델 설계 지원 등

□ **글로벌 R&D 성과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고도화 및 전략거점 강화**

○ 확대된 글로벌 R&D에 대한 점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現 미국지사 활용)* 중심 지원체계 강화

* 글로벌 공동연구 수요 매칭, 지식재산(IP), 비밀유지(NDA) 등 법적 협상·분쟁 대응 지원, 글로벌 전문가 연계 자문, 해외센터 간 기능 연계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

3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국정과제 32)

혁신·공급망·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 개 요

-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대외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른 신약개발 성공률 하락, 공급망 불안정, 무역규제 등 불확실성 지속
 -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생산·공급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성장 기반 마련 지원
- 바이오헬스 시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규제 강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첨단·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환경 조성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 필요한 정책·판로개척 등 제도적 환경 지원
-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K-뷰티의 수출 활력을 토대로,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완비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
 -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초기 유망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글로벌 플래그십 허브 구축 등 미래 신경쟁력 확보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혁신형 인증 제도 개선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구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등 개정 추진(상반기)

→ '26년 신규 인증부터 적용(규제 강화되는 R&D 요건은 경과규정 부여)

* (인증개선 주요방향) ① 연구개발비 기준 상향 ② 리베이트 결격요건 개선 ③ 총점 조정 및 신규 지표 도입 ④ 외국계 제약사 유형 구분 ⑤ 인증 탈락 사유 통보

○ 「화장품산업육성법(안)」의 조속한 제정 및 하위 법령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을 지원하는 등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지원

- 법 시행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혁신형 기업 인증기준, R&D·세제 지원 등 세부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 수립

□ 바이오헬스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업 지원 확대(1→4社) 및 혁신의약품 비축 지원

* 수급불안정의약품 원료/완제 비축을 위한 보관비용(1억원) 지원 신규 추진('26~, 5社)

- 원료의약품 해외의존도 경감을 위해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사와 사용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26~)

* (원료사)생산장비 지원(2억원, 5社), (사용기업)원료구매비 지원(1억원, 5社)

- 국산 바이오 원부자재 제조 지원 신규 추진 및 시장 진입 지원 강화

* 원부자재 제조시설 지원(10억원, 5社), 사용자 검증 지원(10억원, 5개 컨소시엄)

□ AI·디지털헬스 전문인력 양성, 전주기 기능 강화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 AI 활용 신약개발 자동화 확대 및 전문인력 양정으로 산업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

-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 한정된 기존 자동화 체계를 임상·제조 등 전주기 프로세스로 확장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모델 구축

* (인프라) 임상·제조 단계까지 확장 가능한 AI 기반 SDL 장비·소프트웨어 구축 지원, 데이터 연계 플랫폼 표준화

* (전문인력) 신약개발·AI·자동화 융합 교육과정 신설, 산학연 수요 기반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AI·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기술 개발부터 고도화, 상용화 연계 전주기 기능 강화
 -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제품 솔루션 개발 지원 및 의료로봇 기술 고도화 지원을 통한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 지역거점 AX, AI 수술로봇 이노베이션 랩 등 신규사업 추진('26~)
 - 디지털헬스케어 실증·보급과 AI 의료제품 상용화 지원으로 의료현장 활용도와 산업 경쟁력을 높여 국민 체감 의료서비스 혁신 추진
 -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26~'27, 230억원)
 - 부처 협력(복지부+식약처)을 기반의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를 운영, 안전하고 혁신적인 AI 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진입 지원

□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수출입 애로 해소 및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진출 및 수출 다변화 지원
 - * 클러스터 거점 지원(미 보스턴 → 신규 1개소 구축 및 지원기업 확대), 전문 컨설팅, 미 FDA-CE MDR 등 규제 대응 비용 지원(최대 2억원), 마케팅 지원 등
- 글로벌제약사-국내 앵커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로 기술 이전, 공동연구 등 성과 도출 및 신약·의료기기 개발 가속화 지원
 - *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기술 협력 단계별 스케일업 및 협력 가속화, 투자 연계 지원
- 테스트베드로서 현지 인수·진출 병원을 확보해 디지털 의료기기·의료 시스템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임상·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 *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K-디지털헬스케어 새로운 의료수출 모델 마련'('26~'30)
- 국내외 KOL(Key Opinion Leader) 협력 및 의료기기 글로벌 교육 훈련 신규 운영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및 임상 검증 전략적 지원
 - * 국내외 의료기기 기업 주도 또는 글로벌 의학회 연계한 의료기기 교육훈련 신규 추진('26~, 40억)
- 미국 등 주력 시장 내 'K-뷰티 랜드마크' 구축 및 뷰티테크 융합을 통한 글로벌 수출 新경쟁력 확보
 - * 화장품 대형 플래그십 허브 구축, 테마형 팝업스토어 운영 등

외국인환자 200만명 유치를 달성하고 K-의료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개 요

- '24년 '외국인환자 유치 연 100만 명 시대' 진입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단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유치사업 생태계 조성 추진
 - 해외 주요국의 정부 국비환자 유치 확대 및 진료과 다변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외국인환자 유치채널 다각화
 -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경쟁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유치기관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국내 의사와 현지 외국인환자 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한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확대 및 한국의료 신뢰도 및 환자 만족도 제고
 - 의료관광 산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관광, 금융, IT 등 연관 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신사업 발굴을 통한 '외국인환자 쉼 여정의 디지털화' 및 환자 경험 혁신 확대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지속가능한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유치 채널 다각화
 - (유치채널 확대)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기반으로 국비환자 송출 지원 강화, 중점협력국 대상 한국의료 홍보회 및 학술교류회 개최 확대
 - (진료과 다변화) 피부·성형 중심에서 검진, 한방, 중증질환 등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진료과 다변화

*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항노화, 재생 등) 연계 환자 유치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유치사업자 역량 강화) 유치사업자 대상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공신력있는 국제서비스 품질 ISO 9001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확대
 - (지역 역량 강화) 지역 유치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사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기여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 (비대면진료 제도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한 해외 소재 외국인환자의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로 한국의료 이용의 만족도 및 접근성 제고
 - * 국내 의사와 현지 의사 간 비대면 협진 → 국내 의사와 현지 외국인환자 간 비대면 진료
 - (빅데이터기반 정책지원)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데이터’와 금융사 ‘외국인환자 금융데이터’의 결합·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정보 제공 강화
 - *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전략 및 의료관광상품 개발 지원, 경제적파급효과 분석 등
 - (유치시장 건전성 강화) 건전한 유치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모니터링 및 외국인환자 의료불만·분쟁 해결 지원 강화
- 플랫폼, AI 기술, 핀테크 금융 등 첨단기술 및 연관산업과의 민·관 협력을 통한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
 - (플랫폼 연계 혁신) 글로벌 플랫폼社 협업 확대를 통한 ‘K-헬스케어 통합 허브’ 구축으로 ‘외국인환자 쏠 여정의 디지털화’ 구현
 - (AI기반 홍보 확대) 외국어 음성합성(TTS), 립싱크 등 AI기술 활용한 한국 의료 홍보 콘텐츠 개발로 한국의료 홍보 글로벌 접점 확대
 - (결제 편의성 제고) 핀테크 기반 외국인환자 진료비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개발로 외국인환자의 결제 편의성 및 의료기관 행정 부담 절감

의사과학자 양성 생태계 확산과 지속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개 요

- ('19년~'25년)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 구축 지원 → ('26년~) 의사과학자의 안정적·지속적 양성을 위한 정책 이행 지원
 - 바이오헬스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정책 방향 및 의사과학자 진로 수요자 의견 수렴 기반 旣 지원사업 개편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
 - 의사과학자 양성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생태계 확산 기여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확대 지원
 - (학위과정 개편) 학부~석·박사까지 전주기 지원 확대 및 대학원 과정 지원방식 개편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
 - * 학부생 대상 의사과학자 예비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 심화전공 등) 도입
 - * 대학원 인프라(기관) 및 전일제 박사(개인)에 각각 지원하는 방식을 대학원 통합 지원으로 개편하여 기관 책임 강화
 - (박사학위 후 연구집중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 최대 8년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과제 지원과 글로벌 연구 기술 습득 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 (공동학위 등 지원) 의과대학-이공계 대학원 간 협력 기반 의사과학자 및 의과학자가 양성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사업화로 연계 지원
 - * (美) 하버드 의대-MIT는 공동교육 프로그램(HST) 운영을 통해 임상지식과 의과학, 공학분야의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의과학자 양성 중
 - * ('26년) 신규 지원 사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 및 젊은 연구자의 의료 영역 교육·연구 인프라 진입 장벽 해소 → ('28년~) 성과 점검 후 단계적으로 신규 지원 확대
 - * 의사과학자와 의과학자 간 협력 연구 활성화를 통해 우수 성과 창출 지원

- (의사과학자 사례 발굴)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박사후과정 지원의 우수 사례 발굴 및 대외 홍보를 통해 양성 모델 확산

* '의사과학자 컨퍼런스' 등 정례적 개최하여 사례 공유 및 의사과학자 간 소통 네트워킹 지원

□ 안정적 연구생태계 조성 지원

- (법령 및 제도 기획) 학부부터 박사후 독립 연구자로 성장까지 장기적 지원 체계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특별법' 등 제정 지원

* 의사과학자 지원 및 관리체계 근거 마련, 연구개발비 사용 특례 및 군전문연구요원 특례 등 법적 지원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의사과학자의 연구 몰입 지원

* 의사과학자 양성 협의체 및 젊은 의사과학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수요 등 주기적 파악

연구중심병원을 산·학·연·병 혁신생태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개요

-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10개 병원→인증제 21개 병원으로 확대('25.3.) 됨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을 의사과학자 등 우수인력 유치, 기술사업화 및 창업 요람, 혁신생태계 허브로 육성 필요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병원 스스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연구문화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기대

- 연구중심병원 확대에 따른 병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우수인력 유치, 연구 역량 강화, 산학연병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신규 R&D 예산 확보 필요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연구중심병원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 (의료기술협력단 운영 지원) 연구중심병원의 지속가능한 연구기반 구축, 기술사업화 및 창업 등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의료기술협력단 운영 지원

* 의료기술협력단 : 의료기관의 연구개발 촉진, 산학연병 협력 통한 기술사업화, 창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 R&D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연구중심병원이 산·학·연·병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기술이전·창업 등 전주기의 연구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협력지원 R&D) 연구중심병원이 주체가 되어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협력아이템 및 협력기관 등을 발굴하여 균형있는 연구성장기반 마련('26, 5억원)

□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R&D 지원

- **(신규사업 추진)** 연구중심병원별 맞춤형 우수인력 유치, 연구역량 강화, 산학연병 협력 활성화를 위한 R&D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 연구중심병원별 특화된 의사과학자, 과학기술자 등 우수인재 유치, 산학연병 협력 모델 발굴,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연구성과 창출 지원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개 요

-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개발 장기화 및 고비용·고위험 구조로 인해 기술 가치 검증을 통한 우수기술 선별과 체계적 사업화 지원이 매우 중요

- 바이오헬스분야 유망 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서는 단계별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 임상 현장과의 연계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로, 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주체간의 협력 강화 필요

- 전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병원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분절적인 운영으로 혁신 자원의 연계 활용 체계가 미비

- 중앙-지역 클러스터-병원-민간에 분산된 기술사업화 자원의 상호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인프라 사업 및 활용 체계 혁신 추진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바이오헬스분야 기술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전주기 통합·지원

- (유망기술 발굴·선별) 바이오헬스분야 특화 기술평가(등급평가)*를 통한 사업화 유망 기술 선별, 금융 연계 등 스케일업 지원

* (기술평가) ('21) 47 → ('22) 62 → ('23) 61 → ('24) 61 → ('25) 60건

- (기술 고도화) 유망기술 보유 및 초기기업의 대상으로 특허전략* 및 임상·인허가 컨설팅** 지원

* (특허) ('21) 17 → ('22) 12 → ('23) 18 → ('24) 14 → ('25) 19건

** (인허가 컨설팅) ('21) 17 → ('22) 22 → ('23) 21 → ('24) 27 → ('25) 28건

- (투자 연계) 전문투자기관(VC·AC)과 바이오벤처기업을 매칭, 투자 성공률 제고

* (투자연계) ('21) 15 → ('22) 25 → ('23) 28 → ('24) 30 → ('25) 32건

- (K-BIC 중심 지원) 창업기업 대상 기술 인큐베이팅,글로벌 파트너십 (J&J 등) 등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공간 제공

* K-BIC(Korea Biohealth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 서울 중구, 창업보육공간

□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병원-민간 기술사업화 인프라 연계 강화

- 중앙-지역 클러스터-병원-민간에 분산된 바이오헬스 혁신자원의 상호 연계·활용 지원을 위한 '버추얼 플랫폼' 구축

*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인프라를 허브(보산진, 전략센터)-스포크(지역센터·첨복) 방식으로 연계

* ('26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 ('27~28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29~30년) 플랫폼 고도화

- 병원 역량(인력, 인프라, 기술)에 기반한 기술 실용화 및 사업화 역량 강화

- 개방형실험실, H+TLO 등 병원 기반의 기술 실용화를 위한 임상 전문가 협업, 병원 인프라 연계 활용 지원

* 연구중심병원-개방형 실험실 등 병원 기반 기술사업화 인프라 기능 통합 연계 활용 확대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재난안전통합시스템* 「안전보건·재해경감·건강친화」 구축·운영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근로손실 ‘ZERO’

* 안전보건(산업안전, 노동부)+재해경감(재해복구, 행안부)+건강친화(직원건강, 복지부)

- (KHIDI 예방체계 구축) 사전예방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이행

* 중처법을 반영한 안전보건경영 체계 강화,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지방이전 16년 경과 노후 시설물 안전성 밀착관리, 지역사회 체감형 안전 문화 확산

- (근로자 건강관리 역량 강화) 근로자 건강증진 지원체계 개선

* 감정노동자, 취약근로자 등 정신건강 보호 강화, 임·직원 대사증후군 질환극복 지원

- (사이버안전·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통한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노출 17년 연속 ‘ZERO’

* 기타 공공기관 최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001/27701) 인증 취득 갱신(‘23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임원급 격상을 통한 개인정보 리스크 통제권 강화

- 보건복지부 산하, 충청권(충북/충남/세종/대전) 유일 ‘충청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3년 연속 개최를 통한 보건산업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배출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지역발전) 지역 마을기업 사회공헌 협력사업 및 사회공헌 추진

* 지역 제조업체 구매(김치 등)를 통한 지역 어린이재단 기부 및 나눔펀드·사랑 나누미 기금 마련을 통한 지역 취약계층 기부 활동 시행(매년)

- (상생협력) 정부권장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구매 추진 목표 3년 연속 100% 이상 달성 * 장애인업체 5년 연속 목표 달성 ☞ [참고1]

*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2회, ‘23년, ‘25년)

○ (경제활성화) 거래문화 개선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

- 정부권장 구매상담회 참석 확대(연8회) 및 상담연계 신규 구매 추진

* 총 19개사 구매상담 실시 및 상담연계 신규 구매 추진('25년, 30백만원)

- 이해관계자 간담회 확대 추진(연2회)에 따른 협력업체 고충사항 심층 논의 및 고충 해소('23년~)

[3] 대국민 소통 노력

○ (국민 체감 소통) 단순한 홍보를 넘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용·체감형'의 SNS 채널 콘텐츠로 제작·확산*

*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및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3년 연속 "SNS 대상" 수상('23~'25) (복지부 산하기관 중 "유일")、SNS 팔로워 5.8만명(전년比 20% 증가)

* 대국민 바이오헬스산업 응원 영상 "폭삭 속았수다. 담담히 걸어갑쎄!" 조회수 50만회 달성

○ (정책 사업 성과 홍보) 언론·미디어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민·기업에 사업 성과를 속도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지원 정책 체감도 및 신뢰도 향상*

- 보건복지부 출입 및 진흥원 등록 언론 기자 간담회('25년 3회), 전문가 기고·인터뷰, 기획기사 등 산업계 중심의 심층 취재 및 보도 추진**

* 기관 고객 만족도 92.6점 달성('25년, 전년比 0.4점 상승)

** 성과 중심 기획 보도량 전년比 24% 확대('24년 1.6천 건→'25년 2천 건)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긍정 여론 조성 및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송 콘텐츠 기획하여 대외 확산 강화

* SBS 일요특선다큐 「글로벌로 나아가는 K-제약바이오의 힘」(3월), KBS 다큐On 「한국에 온 중동 의료인」(3월), SBS 특집다큐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11월)

참고

최근 5년('21~'25) 간 장애인업체 구매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지표명	의무구매율* (정부권장)	구매율** (진흥원)	기관 총 구매금액	장애인업체 구매금액	비고
2021	중증장애인생산물품	1.0%	1.5%	21,064,193	335,347	
	장애인표준사업장	0.6%	2.5%	21,064,192	541,961	
	장애인기업	1.0%	1.6%	22,790,330	363,461	
2022	중증장애인생산물품	1.0%	2.7%	24,597,820	687,792	
	장애인표준사업장	0.6%	3.0%	24,597,820	747,459	
	장애인기업	1.0%	2.5%	25,357,820	623,985	
2023	중증장애인생산물품	1.0%	3.4%	20,598,429	715,242	
	장애인표준사업장	0.8%	3.6%	20,598,429	744,603	
	장애인기업	1.0%	2.3%	20,679,229	490,738	
2024	중증장애인생산물품	1.0%	3.5%	21,913,811	784,518	
	장애인표준사업장	0.8%	5.0%	21,913,811	1,105,817	
	장애인기업	1.0%	4.7%	23,086,425	1,102,656	
2025	중증장애인생산물품	1.1%	3.2%	22,917,587	739,417	
	장애인표준사업장	0.8%	2.7%	22,917,587	622,242	
	장애인기업	1.0%	1.8%	22,947,687	422,431	

* 정부권장 의무구매율은 기관 총구매액 대비 구매 비율임

** 기관 총 구매액 내 장애인업체 구매율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R&D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보장 대책 마련 필요 (국민의힘)

- (주요내용) 보건의료R&D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위원)

- (개선계획)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사전 강화를 위하여 ①연구비 교육, ②상시점검(허위·중복청구 검토 등), ③문제과제 발생 시 현장점검 등 추진

- 부당집행 발생 연구과제의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부가금 부과 및 연구비 환수 등 제재처분 강화

* 제재부가금·환수금 처분에 대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② 의사과학자 양성체계 고도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의정갈등으로 붕괴된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고도화할 방안 마련 필요

*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위원)

- (조치완료) 인재양성 정책 방향 및 의사과학자 진로 수요자 의견 수렴 기반 旣 지원사업 개편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정책 이행 지원

- (공동학위 지원) 의대-이공계 대학원 간 협력 기반 의사과학자 및 의과학자가 양성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사업화로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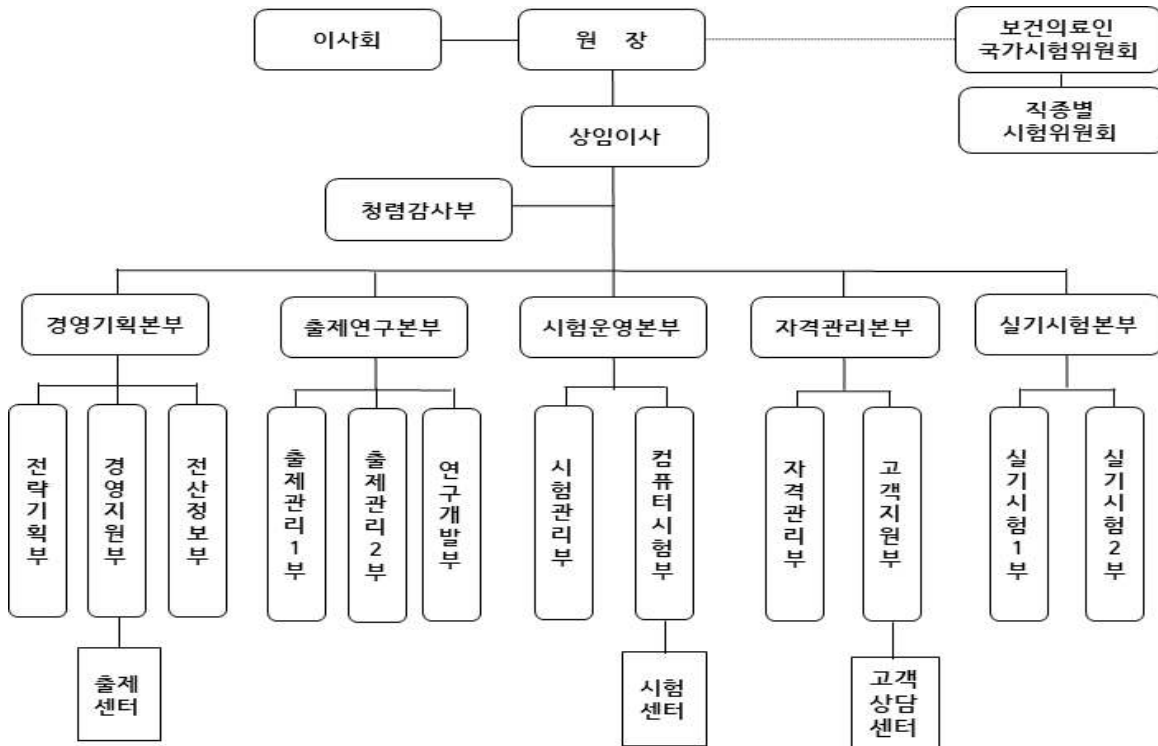
* ('26년) 신규 지원 사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 및 젊은 연구자의 의료 영역 교육·연구 인프라 진입 장벽 해소 → ('28년~) 성과 점검 후 단계적으로 신규 지원 확대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a large gray bracket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bracket is a white rectangular box with a thin gray border. Above the box, there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ay dots,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18.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2026.1.1. 기준)



2 인원 현황

(2026.1.1. 기준)

구 분	직급별	계	정규직							무기계약직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정 원	149	2	5	11	14	26	20	38	33
	현 원	139	2	5	9	14	26	34.5	19.5	29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26,203	31,060	4,857	18.5
일반예산	19,067	21,346	2,278	11.9
국고보조	7,054	9,000	1,946	27.5
기타	81	715	633	781.5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컴퓨터시험(CBT) 안정적 시행 및 확대

- (CBT 시험 확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컴퓨터시험(CBT)의 안정적 정착 및 확대*, 시험시행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

* '25년도 안경사, 1급 언어재활사, 간호조무사(기간제) 등 3개 직종 도입 확대 완료

- (임상중심 평가 강화) CBT 시행을 위한 멀티미디어 문항 및 자료제시형 문항 확대, 안정적 상시·기간제시험 시행을 위한 문항 중점 관리*

* 멀티문항: '25년(461개)→'26년(584개), 자료제시문항: '25년(10,490개)→'26년(11,629개)

- (출제문제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항은행 확충 필요) 신규문항개발 및 문항은행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안정적 확보 필요

□ 응시수수료 인상 및 국고지원금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재정기반 강화

- (자체수입 확대 노력)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하여 10년간 동결되었던 응시수수료 인상(15개 직종 22개 시험, 평균인상률 10% 내외('25년 9월))

* 인상률 최대한 억제하여 응시자 부담 완화(누적 물가상승률 약 21%의 절반 수준)

- (국고보조금 확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위한 국가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문항 질 관리 예산 확대

* 국고보조금 확대: '25년도 70.5억¹⁾ → '26년도 90억²⁾

1) 2025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 일시 지원 6.2억 포함

2) 문신사 도입 6.35억 별도

- (국고지원방식 변경 필요) 국가시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강화를 위해 현재 '민간위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전환 필요

* 관련 법적 근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5조 제1항

제15조(출연금)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문항의 양적·질적 관리 강화를 통한 시험평가 전문성 제고
 - (문항 완성도 제고) 보유문항의 시의성·완성도 제고를 위한 문항관리 작업 확대* 및 문항작업 연계형 인력양성 교육 활성화
 - * 전 직종 8,771문항 신규 개발('25년도 2,542문항 대비 3.5배) 등
 - (정책 연구 강화) 보건의료 분야 국가시험의 정책 연구 강화*를 통한 시험평가 전문성 제고
 - * 치과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 연구,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을 위한 연구 등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방안 모색을 통한 무결점 시험 시행
 -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험 안정성 도모) 의사 국가시험 추가시험*을 위한 표준화환자 교육 및 합격선 심의 시행
 - *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추가시험 실기시험(3~4월), 필기시험(7월)
 - (컴퓨터 시험 확대 도입) 약사 등 4개 직종 국가시험에 대한 컴퓨터 시험 확대 도입* 및 안정적 시험 시행
 - * 약사, 약사예비, 보건교육사 3급,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언어재활사 등 4개
-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중심의 공정한 시험관리
 - (직접 소통 강화) 온라인 직접 소통 강화 및 고객요구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고객상담센터 자체 운영을 통한 전문 소통 프로세스 구축
- AI·디지털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험제도의 혁신체계 마련
 - (출제·문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출제·문항관리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별 시스템 통합을 통한 시스템 간 최적화·효율화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기관 운영을 위한 책임경영체계 구축
 - (안전사고 사전 예방) 시설물 관리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청사 환경 개선 등을 통한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

Ⅲ. 중점 추진과제

①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 2026년도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추가시험 시행

- (추진배경) '26.8월 졸업예정자('25.7월 복귀한 본과4학년)를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결정*에 따른 시험 시행 필요

* 25.7월 의대생 복귀 당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 사항,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절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결정('25.10월)

□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시험 시행 일정(안)

- (응시규모) 제90회 필기시험 접수자 및 의과대학 재학생 현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응시 예상인원은 약 1,800명* 추정

* 제90회 의사 필기시험('26.1월 시행예정) 접수자 수 1,186명(예년 평균인원 3,200명), 의과대학 재학생 현황 관련 교육부 발표자료('25.5월), 제90회 불합격 인원 등 고려하여 응시규모 추정

- (시행일정) '26년 3월~4월 실기시험 시행 및 7월 필기시험 시행 예정

구분		일정		비고(근거법령 등)
		'26년도 제90회	추가시험 (안)	
실기 시험	· 시행계획 공고	'25.5.30.	'25.11.24. (완료)	- 시행일 90일 전까지 -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응시원서 접수	'25.7.21.~25.	'26.1.12.~16.	- 인터넷 접수
	· 실기시험 시행(시험기간)	'25.9.1.~10.15.	'26.3.4~4.22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실기시험센터)
	· 합격자 발표	'25.11.14.	'26.5.29.	- SMS, 홈페이지 공지
필기 시험	· 시행계획 공고	'25.7.15.	'26.4월	- 시행일 90일 전까지 -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응시원서 접수	'25.9.24~10.1.	'26.5월	- 인터넷 접수
	· 필기시험 시행(시험기간)	'26.1.8.~9.	'26.7월	- 전국 7개 지역
	· 합격자 발표	'26.1.21.	'26.7월	

□ 중점 추진 계획

- (시행계획 공고)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시행일 90일전 까지 시험 일정, 시행방안 등 필기시험 시행계획을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의과대학에 안내 예정

*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추가시험 공지완료('25.11.24.)

*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추가시험 공지예정('26. 4월)

- (시험장 확보) 통상 1월에 시행하던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달리 하계 시행하는 일정으로 국시원 보유 CBT 시험센터 규모(9개(1,564좌석))를 초과한 응시자에 대해 원활한 응시를 위한 외부 임차시험장 사전 확보를 추진하고 전산시스템 테스트 등 무결점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 철저 수행

□ 행정 조치 사항

- (협조사항) 출제·채점위원 등 전문가 인력 모집 및 추가 시행 비용 등 추가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와의 협조 필요

2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문신사 면허제도 신설

- (문신사법 제정) 문신사법 제정(2025.10.28.제정, 2027.10.29. 시행)에 따라 문신사 면허제도 및 문신사 국가시험 신설
 - 문신사는 면허 소지자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제4조)

제4조(문신사의 면허) ①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6조(국가시험) ① 문신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④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횟수, 응시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준비 계획

- (국가시험 도입 시기) 2027년도 말(2027.10.29. 법 시행 이후)
- (예산확보) 국가시험 도입 준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도 635백만원)
 - * 예산 세부내역 : 출제 및 문항개발기준 개발 연구(60백만원), 시험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문항 개발(75백만원), 시험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500백만원)

□ 행정 조치 사항

- (시험위원 확보 문제)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학과가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아 시험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또한 임상분야 전문성 및 평가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 수립과 객관적인 경력 증명 방법 마련 필요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사고 ZERO)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화
 - 재난 발생 위험 전파 및 사고 발생 가능 위험요인의 선제적 조치를 위한 실시간 신고 채널 ‘안전신고제’ 운영
 - * 매월 청사 시설 점검 강화로 안전신고제 신고 건수 감소('246건 → '255건)
 -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청사 소방시설 정비 및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 완료
 - 위험성평가 결정 과정에 외부 안전관리 전문가 및 근로자대표위원 참여를 통한 위험성 결정의 객관성 확보
 - * 매년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 등으로 위험요인 감소('2446건 → '259건)
- (안전보건문화 정착 활동) 안전보건경영 방침 수립 및 안전보건 인식 개선 홍보 활동 전개
 - 일반 시민 대상 3개 공공기관* 합동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35명 참여)
 - * 국시원(실습 장비), 공공조직은행(강사 지원), 장기조직기증원(장소·참가자 모집)
 - 임원 안전점검 패트롤 연 4회 실시, 전 직원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매월 안전문화 홍보활동 실시
 - 소방서 합동 화재대피훈련 시 옥내소화전 실습, 구급구조반 심폐소생술 실습, 대피반 토론 등 직원 재난 역량 강화(2회)
- (디지털정보 안전강화) 개인정보 유출 ‘ZERO’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개선 협업 실무협의회 개최 및 노후 보안장비 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 국가자격업무 수행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간 개인정보보호 업무 노하우 공유
 - * '25년도 정보보안 예산 3.3배 확대 투입으로 통해 방화벽 등 노후 보안장비 교체('24년)2.6억원→('25년)8.7억원, 6.1억원 증액)
 - * 개인정보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확대 운영 (고객상담센터(원내 수탁기관)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발송업체(원외 수탁기관))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여성취업센터 및 어르신 일자리 연계를 통한 감독관 운영(7개 지역 15개 기관)
 - * '25년도 CBT 전문감독관 : 8,976명, PBT 감독관 : 1,726명
- (지역업체·소상공인 구매 확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 입찰 진행으로 사회적약자 기업 우선구매 목표 달성
 - * 지역업체 구매 비율목표 구매초과 달성(목표:12%, 실적:14.3%, 6.2억)
 - 출제센터 구내식당 식재료를 충주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조달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1,150만원 지역농산물 식자재 구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강화)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운영 연계 지역소비 확산 추진
 - 지방살리기 상생 소비활성화를 위한 '충주시'와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25. 9월),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역 농·특산품 홍보 부스 운영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상시 소통체계 구축) 상시 소통채널 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고객만족도 5.2점 ▲)
 - 고객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 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알림톡 등을 활용해 기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문·건의사항 수집 및 만족도 평가
 - 수집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민원 행정서비스 고도화에 활용(FAQ 업데이트, 정보 접근성 개선 등)
 - *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고등급(우수) 달성('24년 80.9점→'25년 86.1점)
-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활성화) 응시자참여위원회¹⁾ 및 시민참여혁신단²⁾ 운영을 통해 국민 체감 서비스 적극 발굴 및 서비스 지원 노력
 - 응시자참여위원회: 62건 중 43건 이행(SNS 홍보, VR 미리보기 서비스)
 - 시민참여혁신단: 165건 중 104건 이행 완료(감독관 재난 및 응급교육 강화)

1) 직종별 응시에정자로 해당 직종의 대학생연합회 또는 시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
2)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시·도 관계자, 일반시민, 시험감독관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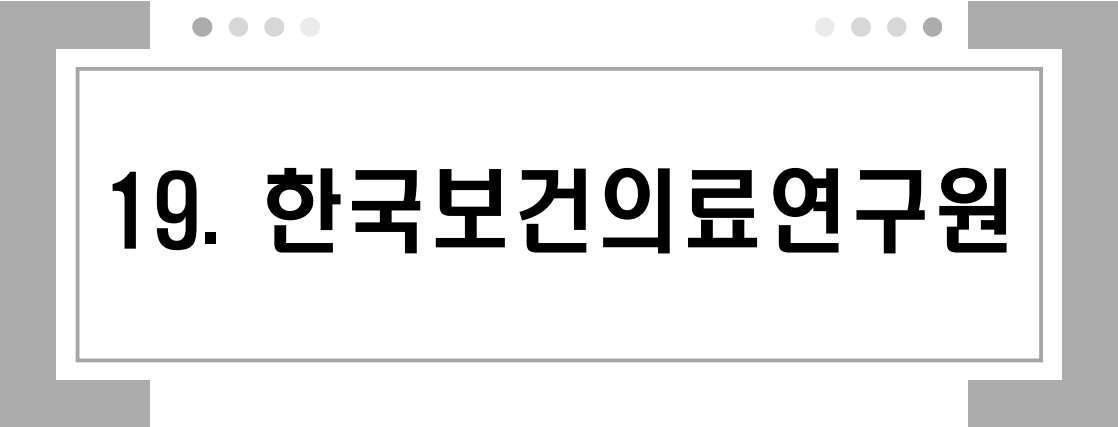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국시원 재정 안정화 노력 (2025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응시자 감소에 따른 예산부족 재정문제 해결 필요
 - '25년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인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필요
 - (개선계획) 주무부서와 적극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 완료
 - 타 직종 시험의 응시수수료가 의사 국가시험 운영에 전용됨에 따라 부족해진 하반기 국가시험 운영 출제비용 부족분에 대해 국가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완료(624백만원)
- * '25.12. 「2025년 국가시험원 운영 추가 예산 교부 통지 및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② 의료윤리문항 출제확대 필요 (2025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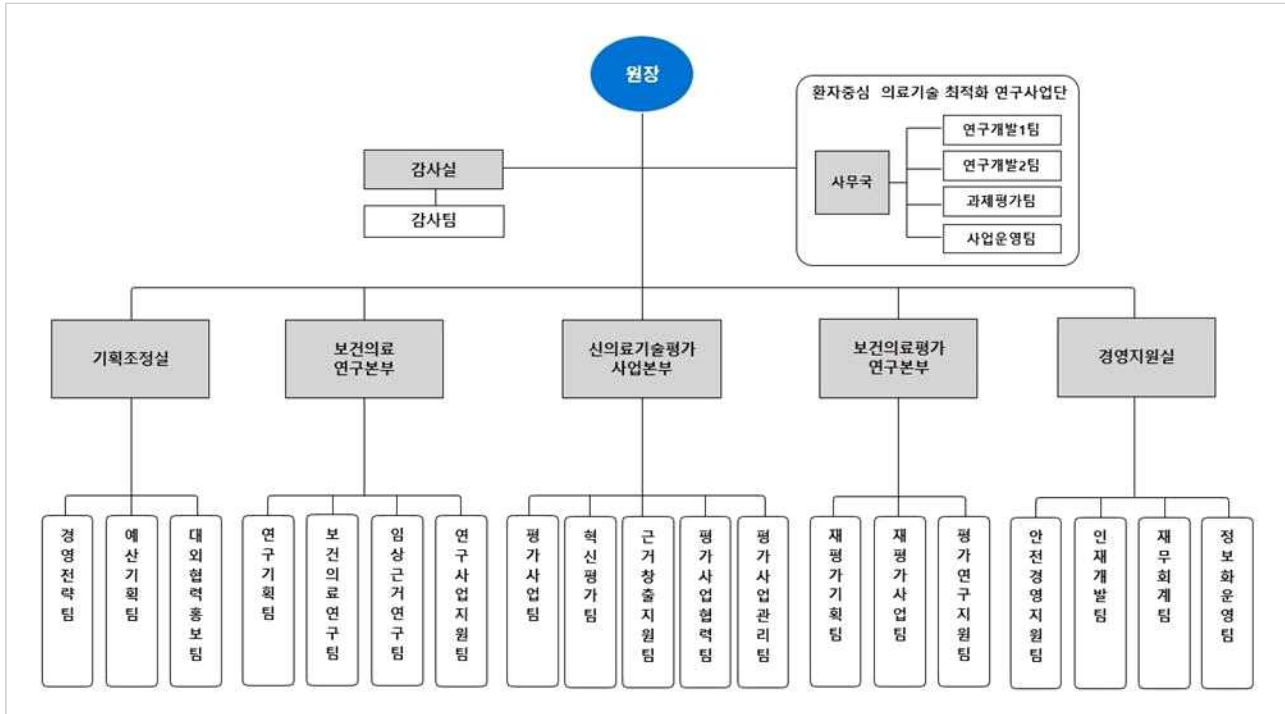
- (주요내용) 의료윤리문항 출제 확대 필요
 - 의료인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시험에서 윤리문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에 의료윤리문항 출제 확대 필요
 - (개선계획) 윤리문항 확대 논의 및 윤리문항 개발 역량강화 활성화
 - 2026년 직종별 시험위원회에서 윤리문항 출제 확대 방안 논의 예정
- * '26년 예정된 20직종(윤리문항 출제직종) 시험위원회에서 윤리문항 확대 논의
- 윤리문항 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문항개발능력향상워크숍 및 윤리 문항 개발 작업 지속 추진 예정
- * '26년 윤리문항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20개(윤리문항 출제직종) 전체 확대 운영 예정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gray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brackets, there are two horizontal rows of four small gray dots each, positioned above and below the central text box.

1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I. 일반현황

① 기구 및 조직 현황: 3실 3본부(20팀), 1사업단(1사무국, 4팀)



② 인원 현황

(‘26.1.1. 기준, 단위: 명)

구 분	직급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무기직	계약직
합계	정 원	164	1	5	14	33	44	30	37	-
	현 원	155	1	5	17	33	38	19	31	11

※ 1급: 선임연구위원, 수석행정원 / 2급: 연구위원, 책임행정원 / 3급: 부연구위원 / 4급: 주임연구원, 주임행정원 / 5급: 연구원, 행정원

③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출연금)	20,170	20,702	532	2.6%
인건비	9,683	10,022	339	3.5%
경상비	3,552	3,602	50	1.4%
사업비	6,935	7,078	143	2.1%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지원 [국정과제 85]^{보건의료연구사업}
 - 법제화 지원을 위한 국외 제도 및 동향 분석 자료 지원
 - * 국회 본회의 통과('25.12.2.)
 - 국내 비대면진료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 * 관련 연구 수행('25.12월 종료, 의료진·환자 의견 수렴 및 선진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기본 준칙(안) 제시)
-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원 [국정과제 84]^{보건의료연구사업}
 -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및 인력 교육 등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 * 관련 연구 수행 중, '26.3월 종료 예정
 - 응급의료 분야 AI 기반 시스템(환자 분류/이송, 권역 통합 등) 개발 지원
 - * AI 기반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의사결정 시스템 연구 수행 중(ARPA-H)
 - 의료인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설계 방안 마련
 - * 관련 연구 수행('25.12월 종료, 의료계·보험/법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계 방향 제시)
 - (보완점)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연계성·대응 구조의 한계
 - * '연구기획-결과 도출-정책활용·확산'까지 전주기 구조가 분절적이므로,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부 의사결정 기여도를 높일 필요
 - * 연구성과가 실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 선진입 의료기술 도입 확대 [국정과제 19]^{신의료기술평가사업}

- (사용기간 연장) AI·DTx 등 선진입 의료기술 사용기간 연장 신청 시 검토를 거쳐 기존 2~3년에서 최대 4~5년까지 1회 연장 허용*

* (평가 유예) 기존 2년 → 최대 4년, (혁신의료기술) 통상 3년 이내 → 최대 5년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5.3월) 및 하위 규정('25.11월) 개정 완료

- (유예 요건 완화) 모든 비침습 기술에 대해 비교 임상문헌* 제출 요건을 임상시험·임상성능시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 완화('25.3월)

* 기존 건강보험 등재 의료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비교한 동료검토 완료 문헌

- (안전성 관리 강화) 모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해 환자 동의서 구득 및 사용 현황 보고 의무화(※ 법적 근거: 지침에서 규칙으로 상향 개정, '25.3월)

- (보완점) 선진입 기간 종료 이후 후평가 체계 검토 및 기준 논의*

* (의료기술평가 미래전략 TF 출범, '25.4월) 선진입 의료기술 후평가 기준(등급체계 등) 확립 관련 법령 제정안 및 세부 절차안 검토·논의 중

□ 의료기술 재평가 법적 근거 신설 [국정과제 86]^{의료기술재평가사업}

-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평가 강화 필요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년):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주기적 재평가 (보의연)를 통한 퇴출기전 마련

- 「의료법」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하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재평가 조항 신설('25.3.6. 개정, '25.9.7. 시행)

* 제4조의3(의료기술의 재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재평가 할 수 있음. 장관은 재평가 실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 결과, 범위 등을 고시할 수 있고, 이미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 (보완점) 재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실효성 부재 보완 필요

* 재평가 결과 후속 정책 연계 부재(2025년 국정감사 김윤 의원 지적사항)

* 임상적 효과 불분명한 비급여 의약품 사후 평가기전 마련 필요(2025년 식약처 국정감사(NECA 재평가 언급) 백혜련 의원 지적사항)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정부 정책 의사결정 기여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노력 확대 보건의료연구사업

○ 미래 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적·상시·즉각 대응 기능 강화

- * 국정과제 기반 중장기 정책기획 Map 구축
- * 정부 부처의 현안-기획-후속 정책 간 연계·환류 구조 설계

○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강화

- * 정부-학계-의료계 네트워크형 의사결정 구조 활성화

□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적 안전망 강화 및 후평가 체계 확립 신의료기술평가사업

○ (선진입 의료기술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선진입 의료기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24~'26년, 총 3개년)를 통한 실사용 임상자료 수집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선진입 의료기술의 제도적 안전망 강화

○ (안정적 후평가 체계 확립) 관련 법령 제정 및 세부 절차 시행

□ 의료기술 재평가 운영체계 정비 의료기술재평가사업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정 의료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절차 개선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재평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실무 적용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 필요
-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운영지침」을 우선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등급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규정 개정시 해당 내용 반영

- ▶ (사업목적) 의료기술 간 비교효과연구를 통해, 최적의 의료기술 선택과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거의 생성 및 확산
-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주관, PACEN 사업단)

1 '25년 성과 및 보완점

□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술 비교 및 근거 창출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

- 전문학회 임상진료지침 개정 2건, 정책사업 근거 반영 1건 등 성과 창출

* 누적성과: SCI(E) 논문지수 73.16, 임상연구자원 확보 309,852건, 임상진료지침 제·개정 29건, 의료기술 정보제공 19건, 급여기준 반영 건수 10건, 기타 정책반영 3건

- (보완점) '26년 사업종료 대비 목표성과 충족 및 정책연계 등 성과확산

* 목표성과 도출 및 유관기관 협업 기반 연구성과의 정책환류 필요
 * 환자·국민 대상 맞춤형 성과 홍보 체계 강화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사업 성과점검 및 성과확산 고도화

- 사업단 및 정책 유관기관* 참여 운영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정책 연계 등 연구성과 확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 연구성과에 대한 동영상, 카드뉴스 제작 등 대국민 홍보 추진

Ⅲ. 중점 추진과제

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연구 강화 [국정과제 83, 86]

-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공급 관리를 위한 연구** 보건의료연구사업
 - 고가 의료기술 상시 모니터링 체계 제안('26.4분기 완료 예정)
 - * 청구자료 기반 실사용 근거 분석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기반 구축 → 고가항암제 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급여기준 설계 근거 확보
 - 초고위험군 간암 감시검사 급여기준 개선
 - * 초음파 대비 CT, MRI 감시검사 적용의 임상적 타당성, 표준 감시 프로토콜 마련, 급여 전환 가능성 검토 및 정책 권고안 제시
- **국민·환자 문제 해결 및 진료 최적화를 위한 임상근거 생성** 보건의료연구사업
 - 경구피임제의 안전성 분석('26.4분기 완료 예정)
 - * 혈전색전증 위험, 부작용 유형·발생 양상 등 실제 사용환경 기반 안전성 자료확보, 국민·의료진의 정보 요구도를 반영한 정확한 정보제공·소통 전략 마련
 - 국내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근거기반 권고안 마련
 - * 인지·언어·기분·삼킴·배변 등 비운동성 장애 중심 재활치료 최신 근거 종합 → 뇌졸중 후 장애 기능 회복 재활치료 진료지침 개발('27.4분기 완료 예정)
 - * 복부 내장동맥질환 진단·치료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27.4분기 완료 예정) → 치료 표준화 및 임상 변이 감소 기대
- **고령화 사회 대비,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구** 보건의료연구사업
 - 치매 환자의 사전 의료결정지원 체계 마련('26.4분기 완료 예정)
 - * 주요국의 제도 비교를 통해 국내 의료현장 적용형 의사결정지원체계(안) 도출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의료진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가족의 돌봄 갈등 감소 등을 목표

② 의료AI·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정책 지원 (국정과제 32)

□ AI 기반 응급환자 분류·이송·전원체계 고도화 보건의료연구사업

- ARPA-H와 연계한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실증 지원

□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 활용도·전문성 강화(계속) 보건의료연구사업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공동 사무국 운영 지속 → 빅데이터 기반 실사용 근거의 정책 활용도 제고

③ 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국정과제 19)

□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운영 신의료기술평가사업

- (배경)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시장진입 제도개선이 따라가기 어려워, 기술의 의료현장 진입에 애로 발생
 - 식약처 임상평가 강화를 전제로 새로운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대상)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장 즉시진입 대상 품목*으로 공고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 즉시진입(3년) 대상으로 규정

* 인공지능 진단보조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199개 품목

- (절차) 심평원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 확인 신청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평가를 유예하고, 즉시 시장에서 사용 가능토록 함(비급여). 일정기간(3년) 후 해당 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실시 및 임상적 필요성·경제성 고려하여 건보 등재

- (비급여 관리) 비급여 남용 방지, 환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필요시 즉시진입 사용기간 중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정적 후평가 체계 구축 및 근거창출지원 체계 확립 예정
- (이행계획)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26.1월)

4 의료 AI 등 혁신기술 성장 지원 (국정과제 32)

- 의료AI 등 혁신적 기술의 근거창출지원을 통한 임상연구 역량 강화 신의료기술평가사업
 - (배경) 연구단계기술의 근거창출을 지원하는 기존 제한적 의료기술 활용실적 미흡, 연구개시 지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실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지원대상 확대 시범사업 추진**(’25.10월~)
 - (지원대상 확대) **혁신의료기술** 선정 기술(25개) 중 혁신성이 우수하며, 정식 임상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큰 **의료AI, 디지털 의료기기**
 - (지원규모)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개 기술 선정, 기술당 1.5억원 내외 지원 예정**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대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
 - * 각 기술의 고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IRB 심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이행계획) 연구지원 시범사업 대상 선정 완료 및 본사업 추진체계 구축 예정(~'26년 4분기)

5 의료기술재평가를 통한 비급여 관리 지원 (국정과제 86)

□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의료기술 관리 지원 강화 의료기술재평가사업

- 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 기반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기술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관리·조정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도모

*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용성이 매우 낮은(D등급) 기술은 사용 제한 기전 마련

○ 추진계획

- (~'26.2분기) 비급여 의료기술 평가 결과의 활용 및 합리적 관리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

□ 비급여 정보 공개 지원 의료기술재평가사업

-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용량이 큰 비급여 기술 등 보고제도 관리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

*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 1,068개 항목 중 재평가 완료 101건을 제외한 재평가 필요 항목 88건에 대해 향후 단계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

<비급여 보고항목 중 재평가 필요항목>

재평가 필요 항목 (N=211)		재평가 불필요 항목 (N=857)	
행위*	약제	병실료 등 평가 불필요	개별 치료재료 등**
189	22	206	651

* 예: (행위) 갑상선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은 재평가 필요 항목

** 예: (치료재료)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 열치료용 치료재료, 고주파 전극 등 개별품목은 재평가 불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포털을 통해 비급여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재평가 결과 정보 제공
- (추진계획) 비급여 보고제도 항목의 단계적 재평가 계획 수립 및 이행
 - 연간 30건 내외 비급여 안전건의 재평가 수행 및 결과 제공
- (기대효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

6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 재평가를 근거로 한 전체 의료행위 목록 정비와 재분류 의료기술재평가사업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년), 의료 질 제고 및 비용 관리 강화를 위한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 실시 추진

○ 미평가 의료행위 재평가 수행

-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전 등재된 미평가 기술*에 대한 중장기적 재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 평가를 수행

○ 재평가 선순환 체계를 통한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화

-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행위는 정비하고, 유용성이 높은 기술은 보장성 강화로 연계하는 재평가의 정책적 선순환 구조 구축
-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혁신적 의료 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적 여력을 확보

○ '보의연 재평가-심평원 재분류' 연계를 통한 실효성 확보

- 보의연 재평가 결과를 심평원의 의료행위 재분류 및 목록 정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전체 의료행위의 관리 체계 실효성을 강화

○ 추진계획

- (~'26.3분기)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전 등재 기술의 중장기 재평가 로드맵 수립
- (~'26.4분기) 보의연 재평가-심평원 의료행위 재분류 연계를 위한 협업체계 마련

○ (기대효과) 재평가 대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의료행위의 통합적·체계적 법체계 정비를 추진하여 의료행위 체계 관리 기반 확립

7 전주기 의료기술평가 체계 확립

-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전주기 의료기술평가 체계 확립 의료기술재평가사업
 - 도입 단계 평가만으로는 기술 발전과 임상적 유용성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으므로, 기존기술의 재평가를 포함한 전주기 평가체계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필요
 - * AI·디지털 헬스 등 급변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실사용자료(RWD) 제출, 자료 표준화 등 근거 창출 체계를 법률 수준에서 확보도 필요
 - 추진계획
 - (~'26.4분기) 의료기술 전주기 평가의 법률적 근거 검토 및 협의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1 안전 및 재난관리

- (재해방지)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운영을 통해 11년 연속 무사고 유지
 - *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0건 지속('15년~'25년)
 - * 전사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안전매뉴얼 제작·운영('20년~'25년)
- (재난대응 및 시설안전) 전문가 평가 반영 재난 대응 역량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
 - 행정안전부 중앙평가단 재난대비 사전 컨설팅 실시('25.4.17.)
 - * 컨설팅 기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25.11.6.) 및 재난상시훈련('25.5.14.) 실시
 - 기관 안전관리를 위한 전사 위험성 평가 시행(매년)
 - * '25년 유해·위험요인 22건 발굴(외부 전문기관 합동 평가) → 100% 조치·개선
- (보건관리)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유지
 - 직원 스트레스 예방 심리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단계적 확대 운영('21년~'25년)
 - 기관 내 보건실 조성·운영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2025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컨설팅'('25.7.15.~11.30.)추진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
 - 정보보안 관련 내부 매뉴얼 7건 제·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등의 즉시 조치 및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권 연계 활동 추진
 - 전통시장 자매결연('22.2.), 온누리상품권 활용 등 지역 소상공인 우선 구매

- (사회공헌) 직원 참여 기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 직원 참여형 기부·봉사 활동 정례(매년) 운영
 -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4년 연속 PASS('22~'25), A+ 등급 취득
 - 임직원 자발적 참여 기반 사회공헌펀드(급여 연계 및 자율 기부) 운영
- (공공구매) 중소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우선구매 추진
 - ('25년) 중소기업제품 68%(목표 대비 27%↑), 중증장애인제품 1.4% (목표 대비 0.3%↑) 구매 등 정부권장 목표 비율 초과 달성

지표명		구매 비율	정부권장 목표 비율	달성 여부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68%	총 구매의 41% 이상	달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제품	1.4%	총 구매의 1.1% 이상	달성
	장애인기업 제품	1.2%	총 구매의 1% 이상	달성
	장애인표준사업장	0.9%	총 구매의 0.8% 이상	달성

3 대국민 소통 노력

- 보건의료연구 및 의료기술평가 전과정 국민·환자 참여기전 운영
 -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 '18년 발족한 연구·평가 과정 내 공식 국민참여 기전, 일반 국민 및 환자·소비자단체 추천 회원 104명
 - * '25년 3기 국민참여단 3차년도 활동 종료, '26년 4기 국민참여단 위촉 예정

- 주요 활동 및 '25년 실적

연구기획	→	연구수행	→	연구확산
건강정보 여과활동 - SNS에 확산되는 건강 정보 수집 건강정보 7건 근거검증 제안*		국민 의견수렴 활동 - 국민 관심 의료기술에 대한 인식, 사용 경험 등 의견 수렴 인식조사 3건 사용경험 인터뷰 1건		언어순화활동 - 대국민 정보제공 목적 연구산출물의 용어 및 국민 수용성 검수 대국민 정보문 2건 환자용 가이드 2건

* 연구부서에 '26년 연구과제 우선순위 검토 주제로 이관

- (국민참여단 활동 만족도) 보의연 역할 이해 기여 89.7%, 국민 건강 증진 기여 84.5%가 긍정적으로 응답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규제기관이 아닌 혁신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국민의힘 최보운 의원 2025년 10월 국정감사 서면질의]

- (주요내용) 규제기관이 아닌 혁신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의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필요
- (개선계획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혁신적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 예정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26.1월)

- (개선계획②) 선진입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실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입 의료기술 임상연구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25.10.), 연구지원 시범사업 대상 선정 완료 및 본 사업 추진체계 구축 예정(~'26년 4분기)

② 선진입 의료기술 남용 가능성 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2025년 10월 국정감사 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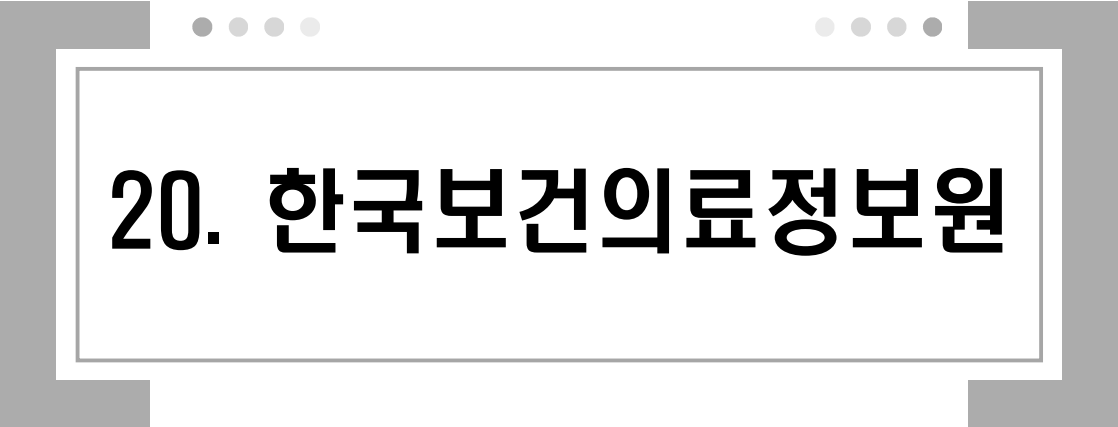
- (주요내용) 선진입 의료기술 트랙으로 진입한 일부 기술들이 비급여 상태로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남용 가능성 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 필요
 - 선진입 트랙 의료기술의 사용 건수와 비급여 지출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2년 사이, 사용 건수는 7.3배, 비급여 지출 비용은 4.5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 ('23년 '96억원 → '25년 437억 원)

- (개선계획) 현재 추진 중인 ‘선진입 의료기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4~'26년, 36.09억)을 '26년 내 완료하여,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 RWD)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구축 예정

3 제보 의존적 연구부정행위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및 감독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25년 10월 국정감사 서면질의)

- (주요내용) 연구원은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없으며, 제보에 의존하는 관리체계로 운영 중. 국민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들에 대해서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 (개선계획) 연구원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접수부터 조사 및 후속 조치까지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사전 예방 및 상시 점검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관리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 (연구윤리 신고센터 신설·운영) 기존 내부 신고 경로 외에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신고센터(가칭)」를 신설하여 외부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의 신고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
 - (AI기반 연구성과물 표절 검증 체계 도입) 2026년부터 국내외 학술 문헌 검증에 최적화된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활용하여 연구과제 및 평가보고서에 대한 표절 여부 사전 검증으로 부실 연구 원천 차단
- * 국내 문헌: '카피킬러'를 통한 국내 논문 및 연구보고서 유사도 검사·검증
해외 문헌: 'Turnitin Identified'를 통한 글로벌 학술지 대조 검증
- (감사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 연구 부정행위 관련 감사(점검) 시, 타 기관의 연구윤리 외부 전문가 위촉·자문 등을 통하여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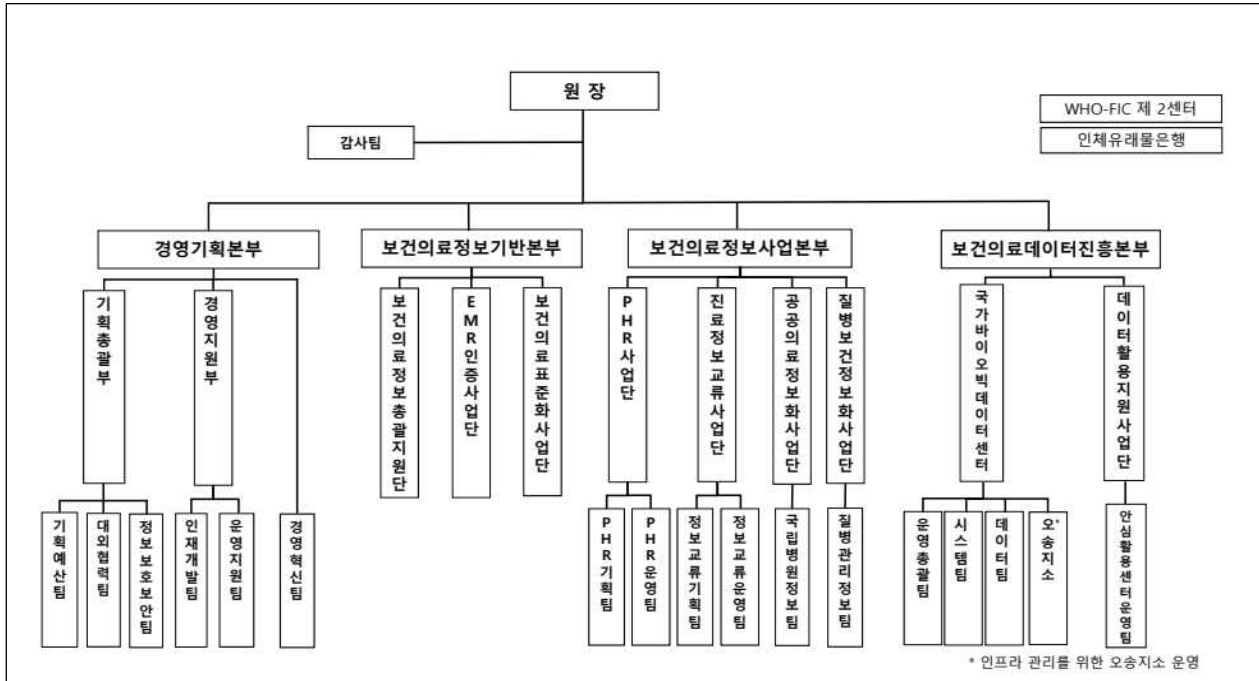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thick, gray L-shaped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frame, at the top,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ay dots,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20. 한국보건의료정보원

I. 일반현황

① 기구 및 조직 현황

- (조직 및 인력) 4본부 2부 8단 1센터 17팀 총 216명(정규직 정원 124명)



② 인원 현황

(기준일자: 2026년 1월 5일, 단위 : 명)

구 분	직급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무기직	기간제
합계	정 원	124	1	3	11	15	27	33	25	9	-
	현 원	216	1	2	11	12	27	33	32	6	92

③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57,241	65,729	8,488	14.8%
민간경상보조	26,909	35,436	8,527	31.7%
민간위탁	17,631	17,280	△351	△2.0%
R&D	12,701	13,013	312	2.5%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 생산 및 표준기반 마련

○ EMR 인증제도 운영개선

- (성과) '20년도 시작된 EMR인증제도를 통해 EMR 제품 총 150개(82%) 제품인증 완료
 - * EMR도입 의료기관 36,234개소 중 29,733개소(82%) 인증 EMR사용
- (보완점)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표준(KR CDI)의 필수 적용을 전제로 한 사용인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5년 국정감사 지적)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선 방안

- (현행) 제품/사용인증 → (개선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으로 통합
- 매년 자체점검표 제출하고, 주요 기능 수정시 변경심사를 받도록 사후 모니터링 강화

○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확산

- (성과) ①AI를 활용한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기술 개발(R&D) 추진('25~'29, 361억원 투입), ②보건의료 정보 표준화를 위해 '국제표준 부합 및 범용적 활용' 기반 KR CDI 항목 확대 추진
 - * '23년(14분류 77개 항목), '24년(14분류 79개 항목), '25년(14분류 80개 항목)
- (보완점) 의료현장의 표준화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필요, 자동화 AI 개발을 통해 데이터 전처리 부담 완화 추진('25~'29)

□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하고 정확한 연계 유통

○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 운영기반 강화 및 서비스 확대

- (성과) ①'23년부터 공공기관,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데이터를 상호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구축, ②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대국민 활용, '나의건강 기록앱' 구축 및 서비스 제공**('21~), ③보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 최초 지정('25.10.31.)

* 상종 47개소, 중병 113개소, 병의원 1,169개소,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3,600개소 등 총 4,929개소 연계

** '24년(259,676개), 25년(419,695개) 누적 기준

- (보완점) ①'나의건강기록' 앱과 관련해 고령의 부모, 발달장애인, 치매 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가족 열람 기능 확대와 앱 접근성 완화, ②'나의건강기록앱' 설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25년 국정감사 지적)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운영 활성화

- (성과) ①진료정보교류 참여기관(10,332개소) 확산 및 연간 진료정보 교류 이용 건수 확대('25. 180만건) , ②국민 건강·의료 데이터의 통합 활용을 위한 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ISP를 추진
- (보완점)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해결 필요('25년 국정감사 지적)

○ 공공병원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한 표준 확산

- (성과) 9개 국립병원* 차세대국립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23.1~)
- * 보건복지부 소속 7개 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및 질병관리청 소속 2개 병원(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 (보완점) 지방의료원, 국립의료원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SaaS형 병원정보시스템 도입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 필요)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성과) ①감염병관리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4.1~) ②감염병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기반 마련 및 개방('24.6~)
- (보완점)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 AI 기반 기능 탑재 필요

○ 정부 정보화 정책사업을 위한 지원

- (성과) ①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안정적 개통·운영('25.7월 진료기록 684개 이관('25.12월말 기준), ②희귀질환 등록관리시스템 서비스 개통 및 17개 전문기관 대상 등록자료 수집·검증
- * 2025년 목표 14,446건 대비 16,063건 등록(달성률 111.19%)

- (보완점) 시스템의 진료기록 이관·관리 범위를 의과에서 치과·한방, 영상까지 확대 필요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강화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기반 구축지원

- (성과) ①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대상으로 통합 DRB 서식 표준화 완료, ②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구축지원 7개 컨소시엄 및 43개 의료기관 참여
- (보완점) 데이터 활용성과 강화 필요
 - * 의료 AI 제품솔루션 개발 및 AI 알고리즘 성능향상 건수: '25년(8건), '26년(40건), '27년(50건)
 - * 매칭된 데이터 공급 기관 수: 25년(9개소), '26년(15개소), '27년(20개소)

○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성과) ①암 데이터 연계·결합 서비스 제공, ②8개 암종 임상 라이브러리 구축 완료('22~'25)
 - * (연차별 구축현황) '22년: 유방암, 위암, '23년: 대장암, 간암, '24년: 췌장암, 폐암, '25년: 신장암, 전립선암
- (보완점) 임상데이터의 상시 품질관리 및 임상 라이브러리 확대 구축 필요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운영

- (성과) ①공공기관(16개)에서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운영('25), ②병무청 데이터(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결과) 신규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10개* 기관 연계
 - * 국가데이터처, 병무청, 질병관리청,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재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 (보완점) 임상데이터 본격 개방에 대비한 플랫폼 성능 및 보안 인프라 추가 확충 필요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 (성과) ①유전체, 임상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추진('25.4~), ②참여자 관리시스템 개통('25.11), ③데이터* 관리 및 제공 체계 마련 추진
 - * 희귀질환(4.7만), 중증질환(14만), 일반인(58.5만) 데이터 모집(~'28년)
- (보완점) '26년 개방을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등 차질 없는 추진 필요

② 향후 업무추진방향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및 인증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개선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KR-CDI, KR-Core)을 적용하여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산 기반 마련
 -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국가표준 개발·운영 및 의료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하여 표준 확산 및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도모
 -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통합 돌봄 및 주치의 제도 등을 수행할 의료기관 연계 확산
 - ^{가칭}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개인 의료정보 관리, 진료기록 전송·공유 및 진료 활용 체계 마련 등 추진
 - * 계획(BPR/ISP) 추진('25.12월~'26.6월) → 1차 구축(~'27) → 시범사업 및 2차 구축(~'28) → 본 개통(~'29) → 확산(~'30)
- 디지털 기반의 헬스케어 신기술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고품질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의료데이터 활용 기회 확대*, 의료 AI 데이터 지원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확산 지원
 - *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산업활성화, 산업-의료 협력지원, 수요-공급 매칭, 바우처 지원
 - 공공·임상데이터 연계 확대하고 연구자 편의성 강화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운영 강화
 -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밀의료, AI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지원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법적 근거 확립, 안전한 보건의료정보 사업 추진 및 국민 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적극 협조

Ⅲ. 중점 추진과제

①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 생산 및 표준 기반 마련 (국정과제 32, 83)

□ EMR인증제도 운영개선

- EMR 인증기준 내 표준항목의 필수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현행) KR CDI, KR Core 참조기준 → (변경) KR CDI, KR Core 필수 전환 예정(~'28)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표준(KR CDI, Core)기반 EMR 인증기준 개선	EMR 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 EMR 개발사 수(10개 이상)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 치과, 한방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확대 기반 연구 진행
 -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치과·한방병원 등 EMR 인증제 제외기관 까지 단계적으로 인증 기준을 확대 적용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EMR 인증제 확대 기반연구	EMR 인증제 제외기관(치과, 한방) EMR 시스템 현황분석 및 유형별 특성에 맞는 인증 기준(안) 마련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 치과 한방병원(1차) → 정신, 요양병원 (2차) 단계적 검토를 통해 제도권 안착 추진

** 치과 한방병원 기반연구(26년) → 치과 한방병원 시범사업 (~'27년) → 치과 한방병원 기준 확장(~'28년)

□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확산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한국 핵심교류데이터(KR CDI)와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표준(KR Core) 개발

* 국가표준 확산 로드맵 수립 및 활용 선도사례 창출

- 의료 AI 개발 지원을 통해 의료데이터 표준 확산 및 활용을 촉진

* AI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자동·지능형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 개발 및 의료기관 확산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R&D)」 사업 과제('25~'29) 추진 중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자동 지능형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 파일럿시스템 개발	표준 통합 운영체계* 핵심 기능 설계 및 AI 기반 표준 세부사양 적용 자동화 SW 개발* *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의료용어, 비정형 데이터 (Freetext·이미지 등) 및 개인정보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①표준용어 매핑, ②데이터 구조화, ③가명처리 등을 통합 수행함으로써, 다기관 연계·연구·활용이 가능한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안전한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2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하고 정확한 연계·유통 [국정과제 32, 84, 86]

□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 운영기반 강화 및 서비스 확대

- (디지털헬스 산업육성)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 안정적 운영을 통한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 지원
 - 의료기관 제공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연계 의료 데이터 품질 및 신뢰성 확보
- (의료기관 확산) 통합돌봄 및 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공공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우선적 확산 추진
 -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군장병 대상 의료정보 공유체계 마련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의료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 통한 서비스 요청건수 향상	건강정보 관리를 위한 서비스 요청 및 본인 건강 의료 데이터 조회 건수 1,000,000건 이상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847,180건

- (홍보 전략 수립) ‘나의 건강기록 앱’ 가입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유관사업 협업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 체계적 홍보 전략 수립 및 이행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건강정보고속도로의 연계의료기관 확산 및 나의건강기록앱 사용자 확대 추진	건강정보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 신규 95개소 (누적 1,428개소) 확대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연계 의료기관 누적 1,333개소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용자 수 600,000명 확대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사용자수 413,960명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운영 활성화

○ (가칭)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진료정보교류와 건강정보고속도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가칭)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의료 데이터 통합 활용 기반 마련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전략 계획) 사업 완료 및 2개년 구축계획(안) 수립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지원 강화

-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등 협력기관 간 이송·전원시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필수의료 분야) 소아, 심뇌혈관, 모자의료, 응급 등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확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신규 300개소 확대 (누적 10,632개소)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참여 의료기관 누적 10,332개소

□ 공공병원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한 표준 확산

- (의료기관 확산)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SaaS형 병원정보시스템 도입 필요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MEDIRO) 안정적 운행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민원 적기대응, 편의기능 개선 등을 통한 시스템 사용자 (복지부 및 질병청 9개 국립병원 사용자) 만족도 73점 이상 달성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고객만족도 72.3점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SaaS형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협력 및 기획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산소관부처)와 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 기획 협의 추진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하고,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제공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민원 적기대응, 편의기능 개선 등을 통한 시스템 사용 자(보건소, 검역소, 시도 및 권역 센터 담당자 등) 만 족도 80점 이상 달성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고객만족도 78.38점

- 질병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과기부 주관 공공 AX 프로젝트 과제* 수행 지원
* ①역학조사 지원 ②위험평가 앙상블 ③방역 어시스턴트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역학조사 지원, 위험평가 앙상블 등을 위한 AX프로젝트 수행 지원	AX 프로젝트의 구축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기능 등)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운영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기능개선*

* ①진료기록보관시스템 연계 모듈 적용 EMR 확대(7→10개) ②한방·치과 등 이관·
발급 기능 구축 ③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안정적 운행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민원 적기대응, 편의기능 개선 등을 통한 시스템 사용자 (보건소 담당자) 만족도 84점 이상 달성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고객만족도 80.83점

- 휴·폐업 의료기관 전자·비전자 진료기록 이관 추진('26년 339개 목표)
* 2025년 사업 600개소, 2026년 사업 339개소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지원 단계적 확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지원 대상을 한의원 으로 확대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일반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 휴·폐업 의료영상 적용 방안, 치과·한방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6.2)

3]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강화 [국정과제 32]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기반 구축지원

- 고품질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
 - (거버넌스 체계 마련) 의료데이터 활용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데이터 및 활용 인프라·인력 등 지원체계 마련
 - (데이터 활용지원) 의료 AI 개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의료기관과 매칭하여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암 질환 대상 의료기관 임상 정보, 공공 기관 청구·검진·사망 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활용 추진
 - (공공) 공공기관이 수집·보유한 전체 암 환자 정보를 결합·개방
 - (임상) 주요 암 임상데이터를 암종별로 현행화
- 의료데이터 활용 기회 확대 지원
 - (산업 활성화) 재정 여력 등이 부족한 AI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의료기관 매칭 및 데이터 활용 바우처 제공을 통해 의료 AI 기술 연구개발 촉진
 - (산업-의료 협력 지원) 공모를 통해 바우처 수요기업(8개소)을 선정하고 데이터 공급기관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43개소)과 매칭 지원
 - (수요-공급 매칭) 의료기관별 보유 데이터를 연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기반 중개 포털 구축('26~'27)

○ 의료 AI 테스트 지원

- (기관 내 테스트) 의료 AI 솔루션·제품의 성능·효과 검증을 위한 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 AI 제품·서비스 테스트 후 실제 도입 여부 결정, 실증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기탁 또는 재활용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의료 AI·데이터 활용 플랫폼 사업을 통한 의료기관-기업 간 AI 바우처 지원 확대	의료 AI 기업-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및 실증환경 활용 매칭 및 협약 40건 체결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협약 체결 8건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운영 강화

○ 데이터 제공 기반 고도화 및 연구자 편의성 강화

- (데이터셋 확대) 임상·공공 분야별 수요를 반영한 표준화된 데이터셋 (72종)을 제공하여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자 맞춤형 신규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충

○ 공공·임상데이터 연계 확대 및 활용 범위 확충

- (연계기관 확대) 현재 10개 공공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 연계·결합·가명처리 체계를 기반으로, 임상데이터 연계를 포함한 통합 활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여 데이터의 범위와 다양성을 강화
- (임상데이터 개시) 공공데이터와 임상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 기반을 고도화하고, '26년부터는 임상데이터 제공을 본격 개시하여 정밀 의료·임상연구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및 6개 국립대병원* 임상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 ('26년)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27년)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 소통 강화

- (현장 소통 강화)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및 활용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혁신포럼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임상 및 공공 데이터 연계하여 활용 기반 단계적 확대	임상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연계기관 추가 3개소* 확대 * 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24) 9개소 -> ('25) 10개소로 확대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인프라 고도화)** 데이터 개방과 참여자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산 인프라 확충, 서버·스토리지 증설, 재해 복구체계 구축과 함께 단계별 시스템 감리를 통한 인프라 고도화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데이터뱅크 시스템 구축	참여자관리시스템 2차 구축 (데이터 자동 제공 지원 기능 등)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을 통한 민감정보 관리 체계 구축
- **(데이터뱅크 운영)** 업무매뉴얼 4종 개발*,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운영체계 고도화
* 참여자 정보 관리 및 데이터 등록·제공·파기 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 정립
- **(데이터 표준화)** 다기관 간 데이터구조 개선 및 세부 정의서* 제작 및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연계·수집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용 표준화 매핑 테이블 및 정의서 제작
-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 기준 수립 및 대외 인증 획득
- **(데이터 제공)** 데이터뱅크 제공체계 운영* 및 데이터 분석지원**
* Tier 분류(Tier1~3)에 따른 개방 데이터셋 구축제공 및 데이터 이용 성과관리 체계 수립·운영
** 데이터 제공 등급별 분석지원 환경 구성·운영, 교육용 데이터셋 개발

추진사항	2026년 성과지표
바이오 데이터 단계적 개방 및 활용 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26.10)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4 업무보고(12.16.) 지시사항

□ (주요내용)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의 업무성과 및 필요성 입증

-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은 1년 후 보고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성과를 통해 필요성을 입증할 것

* 2026년 1월말까지 기본계획 보고

□ (향후계획)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의 구체적인 업무성과 관련 구체적 이행계획·목표 (중간 목표)를 포함한 월별 진도표 작성

추진목표 및 일정	'26.1월				2월				3월				26.2분기 ~
① 현황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 중점 추진과제별 성과지표, 추진 방안, 타부처(기관) 협업 계획 등의 내용													-
- (전문가 참여) 전문가 자문 참여 추진													
②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													(~12월) ※중간 및 완료 보고는 4월 이후 일정 표기 예정
- (성과지표 추진 내용 점검) 월별 실적 및 성과 실적 현황 점검													
- (정기 점검) 월별, 분기별 추진 내용 점검 및 환류 체크													
- (수기 점검) 이슈 및 문제 발생 시 개선 점검													
③ 최종 보고 내용 확정 및 연간 성과 보고													(~12월) ※4월 이후 일정 표기 예정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1 안전 및 재난관리

- (재난대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 대응 및 신속복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즉시 가동하고, 복지부·국정자원·우리원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복구 기간 대폭 단축(당초6개월→3주), 7개 장애 시스템 전면 복구 완료^(10.31.)
- (재난관리) 민방위 훈련 및 재난 매뉴얼 개정 등 재난 대응역량 제고
 - 재난·공습·화재 등 체계적 민방위훈련(3회) 수행으로 구성원 재난대응 역량 제고
 - 재해·재난 분류별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정 등 원내 대응체계 고도화(~12월)
- (안전관리) 근로자 피해방지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
 - 장애인 근로자 안전 및 업무 편의성 등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실시 시행 및 보조공학기기 구매·지원(12월)
 - *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장애 친화적 편의시설, 안전 및 건강 등
 - 직무스트레스 측정(105명), 의료진 방문 건강상담(76명), 정신건강 특강(3회)·사무공간별 미세먼지·공기질 측정으로 건강한 직장 생활 토대 마련
 - 근골격계 유해조사^(8월) 및 위험성평가^(9월) 실시,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장 내 유해요인 순차제거^(12월)
- (정보보안) 안전한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 정보보안 감사 지적사항 개선*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정보보호 체계 강화 노력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 * 2025년 자체 감사 및 복지부 감사 결과 확인을 통해 이행률 74.07% 달성
 - 대외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 각종 평가에서 최고 등급 달성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80.58점(우수),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92.96점(S등급)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교류 및 봉사 강화
 - 지역내 독거노인 가정 방문을 통한 생필품 제공 및 말벗 되기 등 사회공헌 수행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 강화(1월)
 - 홀몸어르신 대상 후원품 전달 및 환절기 건강화재 예방 정보 제공 등 사회공헌활동 수행 및 지역사회 상생 도모(10월)
 -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산불피해 성금 모금(4월, 1,165천원), 기관 최초 헌혈행사(9월, 28명 참여)
- **(상생노력)** 사회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 정책구매 실적 모니터링 및 사회적기업 홍보 게시판 운영을 통해 경영평가 지표 대응 및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분기별)
 - 정부권장정책 구매 현황 모니터링 및 부서별 실적 공유(분기별)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홍보채널 다각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기관장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쇼츠 콘텐츠 제작 등 SNS 채널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합산 조회수 증가
 - 사회서비스망(SNS) 조회수 738%, 상호작용 수 251% 증가
 - * 2024년 조회수: 유튜브 15,935 + 블로그 12,396
 - * 2025년 조회수: 유튜브 109,865 + 인스타 119,784 + 블로그 7,961
- **(만족도 상승)** 고객 만족도 점수 85.2점 확보(전년대비 3% 상승)
 - PCSI* 2.0 기반 설문 항목(서비스 상품품질, 서비스 전달품질, 서비스 환경품질, 사회적 책임) 및 조사 방법으로 고객만족도 실시(25.2.)
 - * ('23년) 82.6점 → ('24년) 85.2점
- **(인지도 강화)** 공공서비스(디지털헬스케어) 부문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의료의 질 향상과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에 대한 국민 신뢰 기반의 기관 브랜드가치 제고 및 대외 위상 강화
- **(지면보도 활성화)** 전국 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및 경제 전문 일간지 등의 지면 보도 12배 증가('24년 1건 → '25년 12건)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국회)

- (AI 연구 인프라 관련)
 - (인프라 고도화 및 보안)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통한 국가 AI 연구 인프라 발전을 위해 GPU 등 데이터 분석 환경 및 데이터 질 개선, 개인정보 보호 필요
- (개선계획) 임상-공공 데이터 공동 활용 지원을 위한 고도화된 GPU 기반 클라우드 분석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요구(1,220백만원)

②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국회)

- (나의건강기록 앱 관련)
 - (앱 접근성) ‘나의건강기록’ 앱과 관련해 고령의 부모, 발달장애인, 치매 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가족 열람 기능 확대와 앱 접근성 완화 노력 필요
 - (앱 운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나의건강기록앱’ 서비스 중단 개선계획 및 재난상황 대비 안정적 운영체계 필요
 - (앱 홍보) ‘나의건강기록앱’ 저조한 설치율 관련 적극적 홍보 필요
 - (활용체계)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 필요
- (개선계획) 대국민 서비스인 나의건강기록 앱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건강관리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임
 -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족 건강관리 확대) 고령의 부모,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가족 중 보호자가 대신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와 제도적 근거를 검토 중임(~12월)

- (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 화재 등 비상상황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협력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운영 중임(연중)
 - (의료기관 지속 확대 및 홍보 추진)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앱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환자 대상 홍보부스 운영, 홍보 콘텐츠 개발, 박람회 참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 중임(연중)
 - (환자 의료정보의 효과적 활용기반 마련) 진료정보교류시스템과 건강정보고속도로를 통합하여 본인 주도적 의료정보 활용확대 등 환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한 BPR/ISP* 사업 추진 중임(~6월)
- *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③ EMR 인증사업 (국회)

○ (EMR 인증개선 방향 관련)

- (인증 개선)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절차 간소화,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표준(KR CDI, KR Core) 필수 적용 등 EMR 인증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인증 확대) EMR인증 관련 사용인증 확대보다 제품인증 확대 필요
- (관리·개선)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제 진료없이 EMR을 작성하거나 사후 수정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개선 필요

○ (개선계획)

- (인증 개선) 인증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①재인증 시 일부 인증기준은 서류·현장검증을 ‘자체점검(선언적 확인)’으로 전환해 인증절차를 간소화, ②표준(KR CDI, KR Core) 필수 적용을 위한 상호운용성 기준 마련 및 EMR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예정(~'26.12)

* 「보건의료정보 표준, 인증, 정보화사업간 연계 강화 방안 연구」('25.7~12)

- (인증 확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선(안) 마련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및 제도 시행 예정('26)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선 방안

- (현행) 제품/사용인증 → (개선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품인증)'으로 통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정의)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인증 신청기관이 개발 또는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매년 자체점검표 제출하고, 주요 기능 수정시 변경심사를 받도록 사후 모니터링 강화

- (관리·개선) 의료법*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에서 진료기록부 작성, 추가기재 수정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진료기록의 사후 수정 등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 논의 예정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F008. 접속기록 생성, F009. 의무기록 추가기재 수정·이력 관리, F010. 전자서명, F011. 백업 등

1 총괄 현황

지시제목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업무 보고		
지시계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지시일자	2025.12.16.
시달일자	2025.12.22.	처리시한	2026.12.31.
관련국정과제	32-2. 의료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리번호	03-22-033
부처담당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최경일 과장(044-202-2920)		
<지시내용>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년 후 보고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성과를 통해 필요성을 입증할 것 (2026년 1월 말까지 기본계획 보고)			

○ 11개 과제 18개 세부 추진 과제 수립

구 분	추진과제			훈시과제	합계
	신속이행	점검과제	제도개선		
완료	-	-	-	-	-
추진중	-	11	-	-	11
합계	-	11	-	-	11

○ 세부 추진계획(안)

추진목표 및 일정	'26.1월	2월	3월	26.2분기~
① 현황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 중점 추진과제별 성과지표, 추진 방안, 타부처(기관) 협업 계획 등의 내용				-
- (전문가 참여) 전문가 자문 참여 추진				
②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				(~12월) ※중간 및 완료 보고는 4월 이후 일정 표기 예정
- (성과지표 추진 내용 점검) 월별 실적 및 성과 실적 현황 점검				
- (정기 점검) 월별, 분기별 추진 내용 점검 및 환류 체크				
- (수기 점검) 이슈 및 문제 발생 시 개선 점검				
③ 최종 보고 내용 확정 및 연간 성과 보고				(~12월) ※4월 이후 일정 표기 예정

2 추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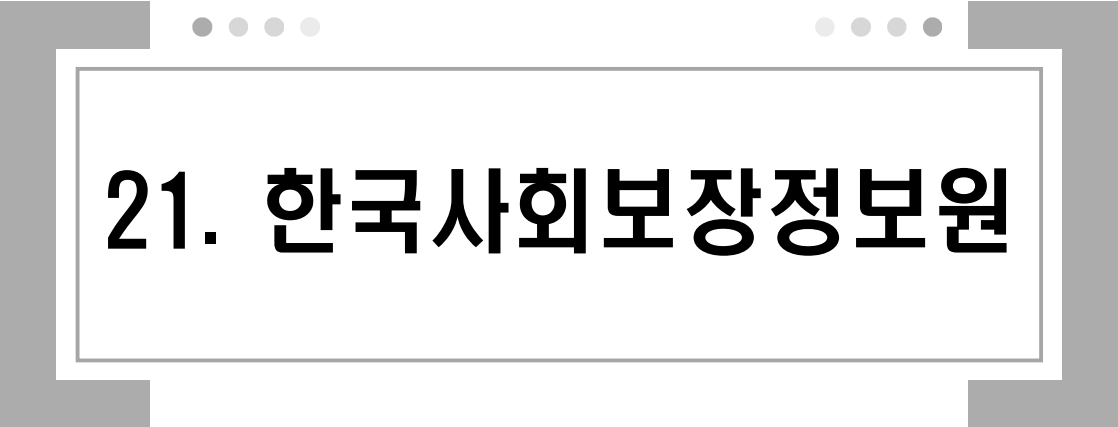
(1) 추진 중

□ 대통령 지시사항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 및 성과 목표 수립

○ 11개 과제 18개 세부 과제 수립 완료

연번	과제명	추진 사항	2026년 성과지표
1	EMR 인증제 개선	표준(KR CDI, Core)기반 EMR 인증기준 개선	EMR 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 EMR 개발사 수(10개 이상)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EMR 인증제 확대 기반연구	EMR 인증제 제외기관(치과, 한방) EMR 시스템 현황분석 및 유형별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안) 마련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2	보건의료 정보 표준화 확산	AI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자동 지능형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 파일럿 시스템 개발	표준 통합 운영체계 핵심 기능 설계 및 비정형 구조화 등 자동 지능형SW 개발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3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운영 기반 강화 및 서비스 확대	의료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 통한 서비스 요청건수 향상	건강정보 관리를 위한 서비스 요청 및 본인 건강의료 데이터 조회 건수 1,000,000건 이상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847,180건
		건강정보고속도로의 연계의료기관 확산 및 나의건강기록앱 사용자 확대 추진	건강정보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 신규 95개소 (누적 1,428개소) 확대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연계 의료기관 누적 1,333개소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용자 수 600,000명 확대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사용자수 413,960명
4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운영 활성화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확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신규 300개소 확대 (누적 10,500개소)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참여 의료기관 누적 10,200개소
		디지털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기획	디지털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전략 계획) 사업 추진을 통한 기획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5	공공병원	차세대 국립병원	민원 적기대응, 편의기능 개선 등을 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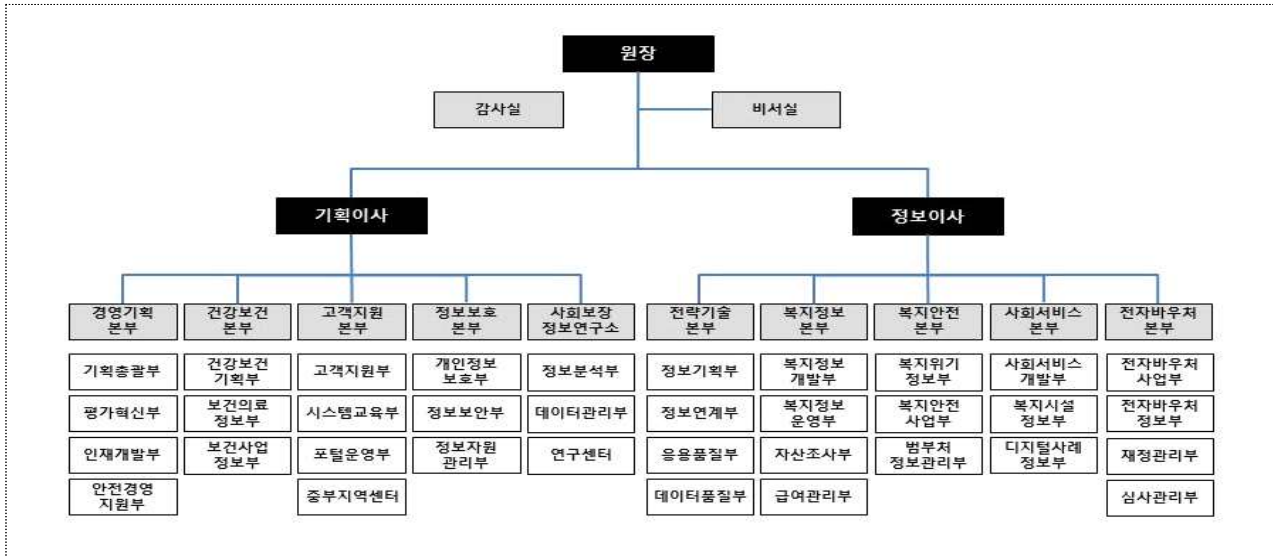
연번	과제명	추진 사항	2026년 성과지표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한 표준 확산	정보시스템(MEDIRO)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시스템 사용자(복지부 및 질병청 9개 국립 병원 사용자) 만족도 73점 이상 달성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고객만족도 72.3점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SaaS형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협력 및 기획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을 통해 시스템 기획 협의 추진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6	방역통합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민원 적기대응, 편의기능 개선 등을 통한 시스템 사용자(보건소, 검역소, 시도 및 권역 센터 담당자 등) 만족도 80점 이상 달성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고객만족도 78.38점
		역학조사 지원, 위험평가 앙상블 등을 위한 AX프로젝트 수행 지원	AX 프로젝트의 구축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기능 등)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7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민원 적기대응, 편의기능 개선 등을 통한 시스템 사용자(보건소 담당자) 만족도 84점 이상 달성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고객만족도 80.83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지원 단계적 확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지원 대상을 한의원으로 확대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일반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8	희귀질환 등록사업 수행	희귀질환 등록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민원 적기대응, 편의기능 개선 등을 통한 시스템 사용자(희귀질환 전문기관 담당자) 만족도 80점 이상 달성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9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기반 구축지원	의료 AI-데이터 활용 플랫폼 사업을 통한 의료기관-기업 간 AI 바우처 지원 확대	의료 AI 기업-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및 실증환경 활용 매칭 및 협약 40건 체결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협약 체결 8건
10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운영 강화	임상 및 공공 데이터 연계하여 활용 기반 단계적 확대	임상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연계기관 추가 3개소 * 확대 * 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참고 사항) - (전년 성과) ('24) 9개소 -> ('25) 10개소로 확대
11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데이터뱅크 시스템 구축	참여자관리시스템 2차 구축 (데이터 자동 제공 지원 기능 등)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바이오 데이터 단계적 개방 및 활용 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1차 개방 개시 ※(참고 사항) - (전년 대비) 신규 지표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thick, gray L-shaped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frame, at the top,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ay dots,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2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I. 일반현황

① 조직 : 2이사 9본부, 1연구소, 2실, 35부(센터)



② 인원 현황

(단위 : 명, '25.12월 기준)

구 분	직급별	계	임원	1.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 등	공무직
정 원		769	3	45	49	94	136	153	17	272
현 원*		745	3	44	47	91	132	153	15	260

* 6개월 이상 파견·휴직·공로연수자(24명)

③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125,790	138,206	12,416	9.9
1. 정부보조금	97,912	107,233	9,321	9.5
기관운영	67,723	73,897	6,174	9.1
정보화	30,189	33,336	3,147	10.4
2. 수탁사업비	27,669	30,759	3,090	11.2
3. 자체사업비	209	214	5	2.4

④ 기관 주요 임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국가 보건복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통계·연구 등 보건복지정책 개발 지원
- 보건복지분야 정보보호 지원 및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 방향

① '25년 추진성과

□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축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기 안정화

- AI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모형(24종) 운영, 위기정보 확대(21개 기관 47종), 위기정보 정합성 검증 등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 제고

* '25.11월 기준, 발굴대상자 8,761천명, 복지서비스 지원 4,161천명(지원율 47.5%)

-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5.5월), 시스템 1단계 구축('25.9~'26.3)*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전국 확대 기반 마련

* 읍·면·동 신청, 종합판정, 지원계획수립, 서비스 제공·의뢰, 모니터링 등

- 아동수당 확대·시행('26.1월), 국가 책임 입양체계 시행('25.7월)에 따른 지원시스템 적기 구축·운영 추진

- 취약계층 대상 AI·IoT 기술 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확대*,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26.1월) 등 취약계층 맞춤 지원기반 강화

* (대상자 확대) '24년 268,505명 → '25년 276,954명, 8,449명 증가

□ 사회재난(국자원 화재)에 신속대응·복구로 국민 불편사항 최소화

- '25.9.26. 대전 화재 발생 직후 비상연락망 가동(9.26), 경계경보 발령, 위기상황대응TF 구성(9.27) 등 피해상황의 철저한 대처로 신속한 복구*

* (자체복구) 행복이음 등 5개시스템(9.29), 국민불편이 큰 전자바우처시스템(10.10), 전소 2개 시스템(정신건강사례관리 10.24, 디지털돌봄 10.27) 자체복구 완료

□ AI 기반 정보시스템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 2015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으로 현재 9개 사업에 AI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업무효율화 추진

< 운영중인 AI 활용 사업 현황 >

연번	사업	주요 기능
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운영	· 머신러닝(ML), 빅데이터 분석 → 위기가구 정밀 발굴(24개 모형)
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 머신러닝(ML), 빅데이터 분석 → 위기아동 정밀 발굴(8개 모형)
3	AI활용 초기상담정보시스템 운영	· AI전화, 위기상황·복지욕구 조사 (STT, 시나리오AI, 음성인식)
4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시스템 운영	· 스마트폰-건강측정기 연계 건강관리 (IoT 센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
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AI케어콜	· IoT분석 AI케어콜 통한 위기가구 관리 (IoT센서, 음성AI, 패턴분석)
6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탐지시스템(FDS) 운영	· 머신러닝(ML), 이상 결제건 탐지
7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머신러닝(ML), 빅데이터 분석 → 개인정보 오남용 탐지
8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	· 머신러닝(ML), 빅데이터 플랫폼
9	생성형 AI,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개발·운영	· UI·UX 자동생성, 소스코드 자동생성, 연계환경 자동 구성 (LLM, RAG, on-premise AI)

- '25년도 신규 과제(16개) 발굴* 및 AI적용 전략 수립('2512월)

* 대국민 서비스(AI복지서비스 추천 등 5개), 데이터기반 분석·예측(고독사 위험군 발굴 등 3개), 업무자동화(시스템 운영 자동화 등 8개)

- 사회보장 분야 공공AX 전환 지원체계 구축·운영

- 사회보장 AI TF 구성('25.9월), 공공AX 프로젝트 과제 수행 전담 기관 지정('25.10월, 복지부), 사업수행 협약체결(사보원-NIPA-사업기관, '25.10월)

* (과제) 빅데이터 기반 복지행정 업무 지원 AI 개발(AI Agent) : 30억

- AX-Sprint 과제 수행 전담기관 지정('25.12월, 복지부), AI 적용 기술 검증 및 실증 인프라(AI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25.12월)

* (분야) ❶스마트홈 및 AI 기술과 재가돌봄서비스 융합 기술 상용화, ❷지역특화 복지 서비스 상담 솔루션, ❸고독사·고립예방 등 심리케어 솔루션 : 240억

② 보완점

□ 복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효율성 극대화

- 국민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시스템 개편 및 전자바우처,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개별시스템(13종)을 통합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선제적 사회보장서비스 지원체계 조기 완성 필요

- 한전 등 위기정보 제공기관의 위기징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강화 추진 필요

* 단순정보 연계 → 위기징후 분석(한전 전기사용량 “생활패턴 변동분석” 정보연계 등)

- '26.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지역보건, 희망이음, 전자바우처)간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추진 필요

- 취약·위기 아동·청년지원 관련 법* 시행에 맞춰 신속한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필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돌봄비 지급 및 고립·은둔 청년 맞춤지원 시행('26.3월), 대상자 발굴 시행('27.3월)

□ 재해·재난 등 대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재해·재난화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도 국가 주요 보건복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필요

* 사회보장·지역보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예산(377억: 사회 310억, 지역보건 67억) 미반영

□ 복지분야 AI 기술의 실증 지원체계 구축

- 민간의 AI 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해 사업기획, 기술 검증·평가 등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AI실증지원센터’ 구축·운영 필요

③ 향후 업무추진 방향

□ 데이터 기반 AI 복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고도화

- (찾아주는 맞춤형서비스 제공) 행복이음과 연계한 전자바우처,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개별시스템(13종) 통합 구축 추진
- (AI 기반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위기정보 입수 확대와 입수기준 정교화, 대화형 AI 상담 시범운영 등 초기상담 고도화 및 지원체계 연계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전국 확대) 신규서비스 확대에 따른 기관간 정보 연계 확대,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28년 시행)까지 단계적 대상 확대 적용
- (양육지원 강화) 아동수당 지급연령 및 지방우대*에 따른 시스템 적용 등 단계적 이행 추진

* '26.1월 '30년까지 13세 미만, ~'26년 하반기 지역별 차등지급

- (취약·위기 아동·청년 지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를 통해 위기청년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 관리체계 확립
- (취약계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도화) 대책장비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 마련

□ 디지털 플랫폼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 (재해복구체계 구축) 행안부 “행정·공공기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기준(예정)”에 따라 운영 시스템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AI기반 복지행정 효율화 지원) 민관협력을 통해 AI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설계, 개발·실증, AI 현장 적용 및 확산 추진
- (복지분야 AI 개발·상용화 지원) AI실증지원센터 구축·운영 추진

Ⅲ. 중점 추진과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신청에 의한 복지” 에서 “찾아주는 복지”, “자동지급 복지” 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① AI·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국정77]

□ 추진배경

- 공적급여 수급 탈락, 주민센터 방문 후 급여 미신청 등 기존 위기 가구 발굴시스템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지속 발생

* 강남 신사동 사망사건('25.3월), 익산 모녀 사망사건('25.5월)

□ 추진현황

- 개인의 채무·의료문제, 사회적 고립 등 위기정보 입수 확대를 통한 다각적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 활용·관리 강화* 추진

* 위기정보 관리(입수기준 개선, 정확성 확보 등)를 위한 정보제공기관 협의체 구성·운영('25.9월~)

- 반복 발굴자 등 고위험군 관리 및 '신청에 의한 복지' 한계 극복을 위해 사각지대발굴시스템, AI 상담시스템, 복지멤버십*, 복지위기알림, 수급이력관리제 정보를 활용,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체계 구축

* 가입자 정보(인적, 소득, 재산) 분석, 사회보장 수급가능 복지서비스안내(1,133만명 가입)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기검침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현장중심 위기 발굴·연계 강화

□ 향후계획

- 위기가구 예측모형 고도화('26년), 대화형 AI 초기상담체계 신규 구축('26~'27년)*

* ~'26.12월 대화형 AI 도입 및 시범사업(10개 지자체), ~'27.12월 상담시스템 신규 구축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조사 및 운영체계 확대

* (現) 나이등 자격변동 정보만 활용 → (改) 소득·재산 변동정보 추가, 수급가능여부 안내(연2회)
(안내사업) '25년 36개(163개) → ('26년 목표) 60개(223개), (안내채널) (現) 문자·이메일 → (改) SNS 알림톡 추가

-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험군 등 가구단위의 복합적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위기가구 통합 발굴·관리체계 마련*('26.12월)

* (위기정보 및 발굴대상자 관리 통합) '26년 고독사, 사각지대

②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국정78)

□ 추진배경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 3월)에 따른 돌봄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신청·운영 절차* 정보화 필요

* 읍·면·동 접수 → 조사/종합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

- (1단계, '25.~'26.6) 읍·면·동 신청(접수), 조사기관 판정, 시군구 통합지원계획, 서비스 의뢰 등 핵심기능 우선 구축('26.3월 개통)
- (2단계, '26.5.~'27) 서비스 의뢰·결과 연계 등 민간기관 지원(희망이음), 서비스의뢰 대상사업 확대, 사업 모니터링 등 기능개선 및 연계 확대

□ 추진현황

- 돌봄통합시스템 구축지원단(TF)* 구성('25.1월~),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1단, 2반, 4팀(전임 7명, 겸임 27명)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4.12~'25.5월),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근거 마련 및 복지부와 위탁계약* 체결('25.6.5.)

* (위탁근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자 선정('25.9월), 지자체 통합지원 업무 기능
분석·설계('25.11월), 시스템 화면 및 데이터 설계, 기능 구현 중('25.11월~)

* (사업기간) 2025.9.2.~2026.6.29.

- 조사 전문기관(건보공단, 국민연금)과 **시스템 연계 협의 및 개발**(~'26.2월)

□ 향후계획

-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시스템 개통·운영*(~'26.6월)

* (일정) ~'26.2월 개발·테스트 → '26.2~3월 사용자 교육 → ~'26.3월 시범운영 → '26.3월말 개통

- 통합돌봄 지원서비스 및 연계 확대를 위한 2단계 사업 추진('26년 下~'27년)

③ 아동 양육지원 및 취약위기 아동·청년 지원^(국정87, 89)

① 아동수당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 아동수당법 법률 개정(~'26.1월 예정), 하위법령 개정(~'26.3월 예정)

□ 추진배경

○ 아동수당 연령 확대 및 지역 우대 등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사회 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적기 개선 및 안정적 운영 추진

-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25년 8세 미만에서 '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 확대

* (특례) '17년생은 '26~'29년까지 만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

- 지방우대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우대·특별**) 추가급여 지급

※ 지역별 금액(月, 만원) : 수도권 10, 비수도권 10.5, 인구감소^{우대} 11 / ^{특별} 12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근거 5년 주기 지정(행안부·국토부) / 89개 시군구('21.10월)

**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지표(지방시대위), 예타 낙후도 평가(KDI)기준 분류(기재부)

□ 추진현황

○ '26.1월 제도 시행은 자체TF 운영('25.7월~)을 통하여 신속 지원, '지방우대' 제도는 단계적 추진(~'26.7월)

* 수탁협약(9월) → 사업준비(10월) → 사업발주(12월) → 본(재) 공고('26년 1월 4주)

□ 향후계획

○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필수기능(신청, 지급) 오픈('26.1월~)

○ 지방우대 추가 지급을 위해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6.7월)

* (일정) 사업자 선정(~'26.1월), 구축사업(~'26.7월) ※ 법령 개정시기에 맞춰 오픈

② 입양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배경

- 「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법」 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국내, 국제 입양체계 개편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25.7월)

□ 추진현황

- 입양아동 심의, (예비)양부모 관리, 결연 및 입양 절차 관리 등 제도 시행('25.7월)에 맞춰 1차 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공개 청구 기능, 입양 관련 복지급여 중복 예방 등 2차 시스템 기능 구축 추진(~'26.1월)

□ 향후계획

- 2차 시스템 오픈('26.1.16), 사용자 교육(~'26.3월), 모니터링 및 안정화

③ 위기청년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26.3월), 대상자 발굴 시행('27.3월)

□ 추진배경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26.3월)에 따라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현황

- 위기청년구축지원단(TF) 구성('25.7월)
-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사례관리기능 제공('25.6월), 시범사업 지원
-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 하위법령 제정 지원, 업무 프로세스 정립(~'25.12월)

□ 향후계획

- 업무정의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6.6월), 위기청년지원시스템 구축·운영('27년)

④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고립 대응^[국정91]

① 취약계층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ICT)로 응급·재난 상황 대응* 등 예방적 돌봄(Ageing in Place)을 위한 안전망 제공

* (서비스) 화재감지시 119 신고, 응급호출 및 신고, 활동량 감지 안부 확인

※ (근거)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등)

□ 추진현황

- 독거노인·장애인 서비스 대상을 '24년 268,505명에서 8,449명이 증가한 '25년 276,954명으로 확대

* ('26년 목표) 댁내장비 5차 사업 대상 90,000명

- 중앙모니터링센터 야간·휴일 응급상황 1차 대응('25년 157,614건) 및 재난 상황 발생 대상자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25.12월)

* (사례) 경북 대형산불('25.3월), 전국 집중폭우('25.7월), 국자원 화재('25.9월)

□ 향후계획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응급관리요원 역량강화 교육(공통, 신규) 및 중앙모니터링 지역센터 현장점검 정기적 시행(상시)
- 취약계층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해 신규 댁내장비 사업자 선정, 장비교체 및 서비스 개선(~'26.12월, 9만대)

②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배경

- 경제·인구·사회구조 변화(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 발생

* 1인 가구 비중(통계청) : '16년 27.9% → '23년 35.5% → '24년 36.1%

-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26.1월)

* (고독사 사망자수) '22년 3,559명 → '23년 3,661명 → '24년 3,924명

(고독사 중 자살자 비율) '22년 13.9%(495명) → '23년 14.1%(516명) → '24년 13.4%(526명)

□ 추진현황

- 위기가구 통합발굴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3.8월), 분석 및 설계('25.10월)
- 고독사 위험군 판단도구(복지부 권고안) 지자체 활용 실태조사, 기존 위험군 분류기준 개선안 마련('25.10월)
- 한국전력과 업무협약('25.9월)을 통해 전력 사용량 이상패턴 정보 연계

□ 향후계획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시범운영*(~'26.1월)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오픈('26.2월), 모니터링 및 안정화('26.2월~)

⑤ 재해복구시스템 및 보건복지 AI 클라우드센터 구축 [주요개혁 사항]

□ 추진배경

- 재해·재난 등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범정부적 차원의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대책 마련 필요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운영시설이 취약한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및 전산자원 통합관리 필요

□ 추진현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해복구 시스템(국자원 광주센터)이 구축되어 데이터 실시간 동기화 백업 진행
 - * 사회보장정보 통합업무(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 포털(복지광장), 정보시스템 등 연계
- 자체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재해복구시스템 미구축으로 원격지(안산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로 소산 백업(매월) 진행 중
- 복지부 산하 기관의 운영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한 AI 클라우드 센터 구축 예산 확보

□ 향후계획

- 사회보장 및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예산 마련·구축
 - 사회보장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시스템 선정을 위한 ISP 수립('26.1~6월), 대상시스템 선정('26.5월, 10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26.6~'27.3월)
 - * 대상시스템으로 선정 시 구축 가능, 구축방식·예산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협의
 - 지역보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67억) 마련(~'26.12월)
- AI 클라우드센터 공통기반 인프라 구축*('25.10~'26.6월), 입주기관 시스템 이전('26.9월~)**, 2단계 구축 예산*** 확보

* '26.9월 보완·네트워크 이중화, '26.12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무정전전원장치 증설

** '26.9월 입주기관(중앙의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스템 이전방안 마련 및 이전

⑥ 복지분야 디지털·인공지능 전환(DX·AI) 사업 운영 (신규사업)

□ 추진배경

- 신청, 조사, 결정 등 급여업무 전 단계에 AI기술 적용, 복지행정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 향상
- 심리케어·정보안내·생활안전 등 복지분야 AI 개발·상용화를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창출 및 확산

□ 추진현황

- AI Agent*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분석·설계·환경구축 등)
 - * 사회보장데이터 기반 사회보장급여 신청, 선정 등 복지행정 업무를 수행·대체
- 스마트홈 및 AI 융합 기술 상용화,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상담 솔루션, 고독사·고립예방 심리케어 3개 부문 참여
 - * AX-Sprint 사업 : KDI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 중, 우리원은 공모사업 기획·운영
 - 민간 AI 응용제품 상용화 검증 및 사업 관리를 위한 ‘AI실증지원센터 설립’ 연구 용역추진(‘25.12월) … 조직기능, 운영체계, 설치방식 등
 - 복지분야 AI기술 보유 기업의 과제공모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25.12월)
 - * 기업 수요조사(‘25.11~12월), 기업·기관 사업설명회(‘25.12월) 등 현장 소통 강화

□ 향후계획

- 공공AX 사업은 지자체 설명회(‘26.5월), 실증 및 활용 간담회(‘26.7월~) 추진
 - 학습데이터 구축 및 설계(~‘26.6월), 복지행정 AI Agent 개발(~‘26.9월), 현장 실증(~‘26.12월), 시범운영(‘27.1월~)
- AX-Sprint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5.11월~‘26.1월), 사업 설명회(‘26.1월), 공모사업 수행계획 수립(‘26.1월)
 - ‘26.2월 사업공고, ~‘26.3월수행기관 선정, ~‘26.9월AI실증지원센터 구축, ~‘26.12월 솔루션 개발 및 평가, ~‘27.12월확산 및 성과 모니터링
 - * 26년~‘27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240억원)

7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당면현안)

□ 추진배경

- 행복이음과 연계한 전자바우처,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개별시스템(13종)을 통합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선제적 사회보장서비스 자원체계 완성 필요

* (통합대상) 전자바우처, 아동(4개), 노인(3개), 장애인(3개), 정신, 자활, 통계 등

기존 시스템(차세대 이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플랫폼	개통 여부
복지로	⇒	국민용	대국민포털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	중앙·지자체 공무원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2차 개통('22.9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민간시설용(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전자바우처 등 사회서비스 개별시스템(13종) 및 통계정보시스템	⇒		3차, 4차 개통 추진(미완료)
			재추진 대상

□ 추진현황

-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 높은 PMO*, 사업자 선정 및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 수립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 :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 필요인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업체에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위탁관리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 정보 통합관리 기반 구축사업 추진('26.5~'27.12월)
 - 사업수탁('26.1월, 복지부), 사업관리 용역(PMO)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26.5월), 시스템 구축('26.5월~'27.12월)*

* 개별시스템 과제 규모, 시급성에 따라 순차 개통('26.12월), 전체 개통('27.11월)

⑧ **사·빅데이터 활용 정부정책 지원 (당면현안)**

□ 추진배경

-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혁신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추진

* (근거) 제1~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개방사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활용한 사업화(장애인편의시설 앱) 지원, ㈜윌체어

-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와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사회보장위원회)와 정보시스템 데이터(사보원)를 기반으로 통합 행정데이터 구축 필요

* 인구·가구 등 인적정보, 소득·재산정보 등 123개 사회보장제도 지원 현황 정보('20~'22년)

□ 추진현황

-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활용도 높은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수 등 194종의 공공데이터 개방, 통계 지원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에 데이터 제공(9종)

-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창업지원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진출,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23년), '우수상' 수상('24년)

- 사회복지분야 1호 '결합전문기관 지정('22. 4월)', 가명정보의 재사용·장기 보관이 가능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24.12월)'을 운영하여 연구자료, 시뮬레이션, 통계 등 정책 근거 제공

* 가명정보 제공·결합('25년 32건) : 예) 인구감소 시대의 노인 대상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재평가·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AI 기반 시뮬레이션 실험('25년, 서울대)

- 실증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연구추진(12건) 및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서울) 수탁 운영('25.12.1. ~, 사회보장위원회)

□ 향후계획

- 데이터 기반의 예측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역센터 중심 사회보장 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방안** 마련

* '26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마련, '27년 ISP 수립, 구축사업 예산 확보

'28년~데이터레이크시스템 구축, 공공 및 민간 활용 지원

* '26년 국책 연구기관 등 데이터 분석 수요가 높은 중부센터(오송)에 우선 확대

'27년~시·도 연구기관, 지역대학 등 수요 파악하여 순차적 확대(예산·인력 확보 추진)

9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당면현안)

□ 추진배경

-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AI기반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개인정보의 유출 예방 등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 필요
 - 복지부 소속·산하기관(40개) 개인정보보호 예방·지원(교육, 컨설팅 등) 및 민간의료기관(46개) 보안관제*를 통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필요
- * (우선가입 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306개 기관

□ 추진현황

- 운영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시스템 안전조치(개보위, 57개 항목)*’,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강화 ...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최고등급(S)’ 획득
- * 행복이음, 지역보건 등 10개 시스템이 집중관리 공공시스템으로 지정(‘23.9월, 개보위)
-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비하여 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조치*, 사이버 모의훈련** 등 대응역량 강화
 - 복지부 소속·산하기관(40개) 개인정보보호 예방·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오·남용 통합분석(27개), 역량강화 교육(29회),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컨설팅(19개)* 추진
- * (내용) 접근 통제, 접근 권한, 접속기록, 암호화 등 48개 항목
-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보안관제 가입 민간의료기관 확대(‘24년 35개 → ‘25년 46개), 소규모 의료기관 정보보안 지원을 위해 ‘온라인 취약점 점검 서비스’ 도입(21개)

□ 향후계획

- 관리시스템의 중·장기 보안취약점 개선 및 단기 조치 재점검(‘26.2~12월)
-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26.4월), 안전조치 의무이행 일제점검 및 관리(~’26.12월)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컨설팅·교육 및 개인정보 오·남용 통합분석 기관 확대(‘25년 27개 기관, 65개 시스템 → ‘26년 29개 기관 70개 시스템 예정) 추진
 - 중소의료기관에 적합한 보안관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6.3~6월)
- * (내용) 시스템 환경, 인력 분석을 통한 병·의원급 보안관제 모델 제시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 운영중인 공공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57개 항목) 및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강화 ...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최고등급(S)' 획득
 - * 행복이음 등 10개 시스템이 집중관리 공공시스템으로 지정('23.9월, 개보위)
 - 사이버 공격·위협 대비하여 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조치*, 사이버 모의훈련** 등 대응역량 강화
 - 복지부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통합분석(27개, 65개시스템), 역량강화 교육(29회),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48개 항목) 컨설팅(19개) 추진
 -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확대('24년 35개 → '25년 46개), 침해사고 조사·분석, 소규모 의료기관 취약점 점검(21개, 온라인)
- 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안전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
 - 전직원(협력사) 재난·사고대응 교육훈련, 건강검진 유소견자(직원 167명) 건강관리, 근골격계 질환예방 활동(교정테라피, 182회) 등 안전활동 강화
 - 지역주민과 취약계층 대상 화재 안전키트(스프레이 소화기 등, 190명), 복약 관리용품(약달력 등), 흡서기 무더위 쉼터(1층) 운영 등 안전문화 확산
 - 협력업체 대상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의무화, 협력사 안전점검(매월)등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무재해 달성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노력

- 소기업·중소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 지역사회 약자기업 공공구매상담회 개최(2회, 24개 기업 참여, 1.9억원 매출), 계약업체 인지세 비용 경감(50% 납부) 등 실질적 지원 강화

-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35백만원), 지역특산물(괴산 청천면)구매 릴레이(격월), 청년사장 네트워크 시식회(7개 업체, 400명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주민 문화복지를 위한 가을음악회 개최(800명), 강당 및 회의실 무료 개방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판로지원 및 ESG역량 강화

- **중소기업 기술마켓·기술임치제도 운영**으로 우수기술·제품 발굴, 중소기업 기술 보호-검증-사업화로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신기술 및 제품 대상 K-테스트베드 확대('24년 2건 → '25년 8건)
 * 중소기업 기술임치 : 7개사 11건, ** 보건·의료분야 제품 심의·인증 : 9개사 18개 제품
- 중소기업대상 혁신스쿨(기술보호교육 등), 기술마켓 인증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19개기업, 90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체, 상생스쿨 운영

③ 대국민 소통노력

□ 국민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 대국민포털 다문화가족 대상 다국어서비스 확대(71종)*, 국자원 화재('25.9월)에 따른 시스템 장애·복구상황의 신속 전파(기관 누리집)로 국민 혼란 최소화
 * (복지로) 63종 복지서비스, 6개 언어, (e보건소) 9종 보건서비스, 12개 언어
- 국민불편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반복·중복민원*을 해소하고 긴급민원 핫라인(2일내 처리)운영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 (민원처리) '24년 202건(92.7%) → '25.11월 323건(99.7%) 전년대비 61.4% 상승

□ 고객 접점 활동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고객의견 청취, 검토, 개선, 환류, 임원 주재 고객 만족도 점검체계 운영으로 **자체 고객만족도 향상**('25.7월 80.1점 → '25.10월 85.4점)
 * 고객상담센터 콜센터 품질지수(KS-CQI) 2년 연속인증, 위탁 콜센터 KS S1006 인증('25.11월) 획득으로 전문성 및 서비스 신뢰도 향상

□ 기관운영 성과 홍보 강화(누리집, 유튜브 등)를 통해 **국민인식도 향상**

- * (국민인식도) '23년 61.8점 → '24년 66.1점, 전년대비 4.3점 ↑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복지멤버십 개선 (더민주서영석 의원, 소병훈 의원, 국힘한지아 의원)

- (주요내용) 복지서비스 종류와 대상·범위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도를 나누는 등 복지멤버십 가입 목표의 현실화 필요
- (개선계획)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 취약계층 및 연령·지역별 가입 활성화(인센티브 확대, 홍보 강화 등), 안내사업·안내채널·동시신청** 확대
 - * (現) 나이 등 자격변동 정보만 활용 → (改) 소득재산 변동정보 추가 반영, 수급가능여부 안내(연2회)
 - ** (안내사업) '25년 36개(163개) → ('26년 목표) 60개(223개), (안내채널) (現) 문자·이메일 → (改) SNS 알림톡 추가 (동시신청) (현재)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3종 → (개선) 공통서식 이용 사업 단계적 확대

②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개선 (더민주김윤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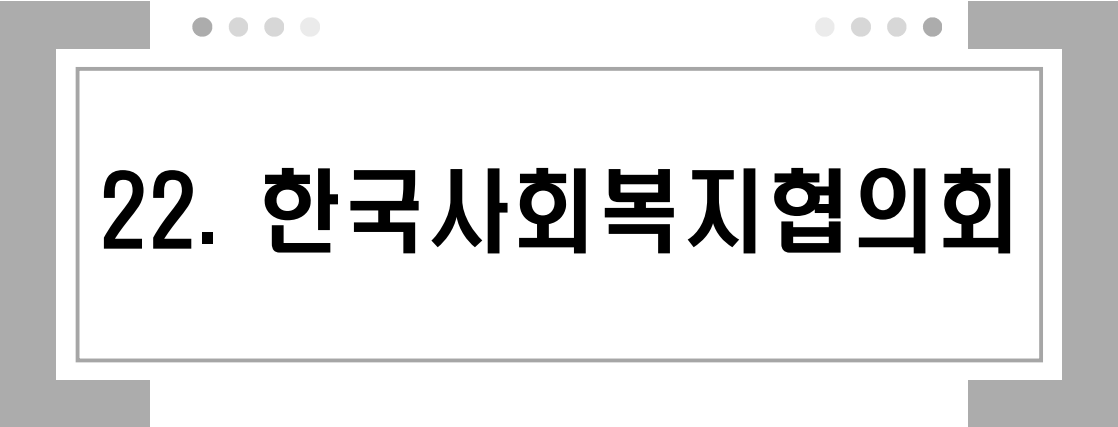
- (주요내용)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발급 아동의 아동수당 수급 누락
 - 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의 복지급여가 누락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
- (개선계획)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자의 복지사업별 수급 관리 강화
 - 번호 발급시 적정급여 연계 알림('25.9월), 전산관리번호 정기실태 조사 시스템 기능 구축, 수급 누락 방지('26.3월 예정)

③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비상매뉴얼 수립 필요 (국힘김미애 의원)

- (주요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관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활동 미감지 시, 대응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매뉴얼 수립 필요
- (개선계획)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디지털돌봄시스템 비상 긴급 매뉴얼'을 수립('25.11월)하여 지속 관리

4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확대 (국힘백종헌 의원)

- (주요내용) 민간의료기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개선계획)
 - (보안관제 가입 지원 방안) 보안관제 가입 유인책 마련을 위한 의료기관 주요 인증제도 보안지표 제안 등 제도개선 노력, 의료분야 협·단체 협력 추진, 소규모 의료기관 맞춤형 보안관제 방안 모색
 - (예산확보) 복지부와 협의하여 보안관제 초기구축비 지원예산 확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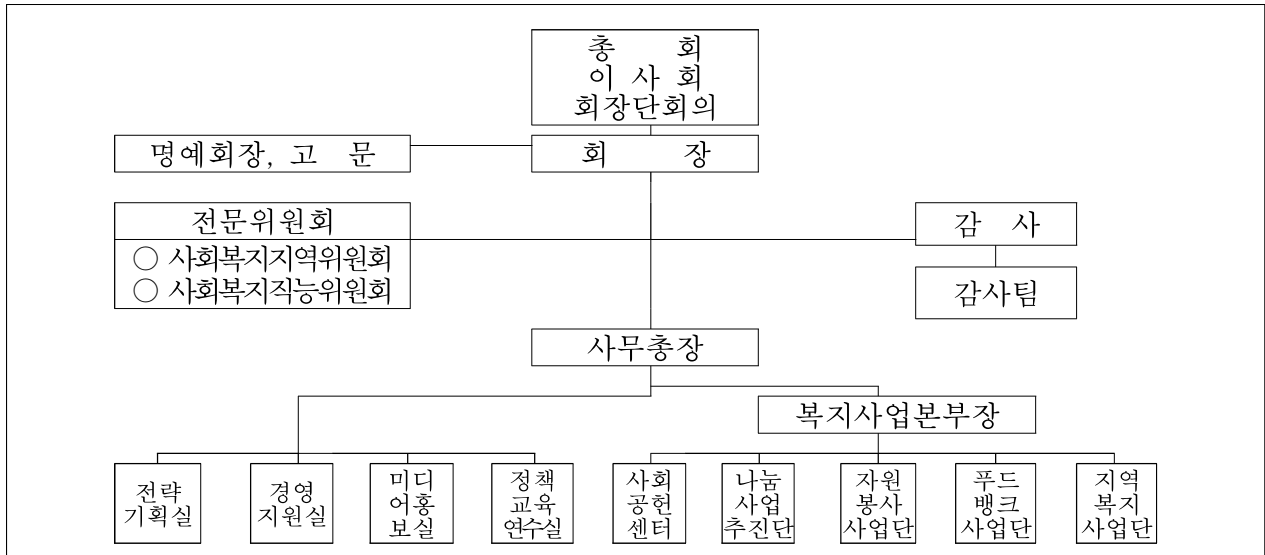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thick, grey L-shaped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frame, at the top,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ey dots,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separated by a gap. In the center of the frame is a white rectangular box with a thin grey border.

2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I. 일반현황

1. 기관 현황

① 기구 및 조직 현황 : 1본부 8실·단 1센터 2팀



② 인원 현황

구 분	직급별	계	별정직	별정직 또는 일반직	연구직				일반직				무기직	계약직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1급	2급	3급	4급~6급		
합계	정원	92	1	2	1	2	2	-	9	12	16	34	13	-
	현원	96*	1	1	-	2	1	-	8	10	16	33	9	15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단기사업) 인원 포함

③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68,770	72,072	3,301	4.8
○ 국고지원	13,198	15,231	2,033	15.4
-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2,405	3,434	1,029	42.8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지원	3,138	3,593	455	14.5
-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7,655	8,204	549	7.2
○ 민간위탁 등 자체사업	55,572	56,841	1,268	2.3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지원
 - (추진내용) 다양한 공공·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확대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 (주요성과) 자원봉사자가(일명 '좋은이웃들', 8만여명)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간 복지자원 연계*(18만여건) 하여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실시
 - * 현금 환산시 약 1백억원, 공공복지 예산 절감 및 복지안전망 보완
- '푸드뱅크' 사업을 통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
 - (추진내용) 기업·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생활용품을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
 - '25년 푸드뱅크 전체 기부실적 : 2,450억원('25.12 기준)
 - * 기부참여 기업 및 개인 : 기업 약 12,904개, 개인 약 964명
 - ** 푸드뱅크 이용자 : 취약계층 약 32.3만명, 사회복지시설 등 약 11,281개
 - (주요성과) 신규사업 '그냥드림' 시행 초기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추진내용) 별도 신청·소득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 및 서비스 연계하는 '그냥드림 코너' 운영
 - (운영현황) 시범사업 기간 '그냥드림 코너' 104개소 운영 확정(12.31. 기준) 코너 개소수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지속 독려
 - (서비스 제공) 원활한 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지침 마련, 현장의견 수렴, FMS(기부물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 실시
 - (민·관협업) 민·관협업 복지모델로 추진위해 민간재원 확보(47억원)
 - * 신한금융그룹(45억 원, '25~'27) 한국청과(2억 원, '26) 등 확보('25.12월 기준)

< 그냥드림 사업 개요 >

- ▲ (지원대상)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신청/소득기준 불요)
- ▲ (지원물품) 1인당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 원 한도)
 - * 표준 제공물품 3~4개를 기본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물품 선정
- ▲ (지원장소) 동주민센터·복지관·푸드뱅크 등에 그냥드림 코너 설치
- ▲ (이용절차) 처음은 그냥드림 → 2차 이용 시 의무 상담 및 복지연계
- ▲ (26년도 예산) 국비 74억 원

□ 민·관 협력 기반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 (추진내용) ‘제1차 민관 사회공헌 포럼*(10.31)’ 복지부 공동개최를 통해 ‘지속가능 사회공헌 문화’ 목표 4대 분야 과제 제시

✓ 지속가능 사회공헌 문화 과제 제시

① 수요-공급 매칭지원, ② 취약기관분야 집중지원 저변확대, ③ 사회공헌 인정받는 환경조성, ④ 사회공헌 활성화 기반 마련

* 한화, 카카오, 포스코, 유한양행 등 주요기업·재단 임원과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 법률 전문가 50여명 참석

- (주요성과) 정부주도의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및 사회공헌 논의를 위한 민관 사회공헌 협의체 구성 협력기반 마련

* 정부와 기업이 처음으로 공식 협력의 틀(포럼)을 통해, 사회공헌을 ‘단순한 기부’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만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연계·지원 확대

- 돌봄 사각지대 아동, 고립·은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
 - 복지소외계층은 물론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안전 및 생활지원 추진
 - 화재 위험이 있는 먼지 쌓인 전열기 청소 및 정비 등 자원봉사자 활용한 지원 추진
 - * 민간 자원과 더불어 화재경보기, 소화기, 맞춤형 식품 및 생필품으로 구성된 '아동 안전 꾸러미' 지원 예정(국고 총 462백만 원)
 - 복지위기알리미앱, 129보건복지콜 챗봇 상담 등 모바일과 AI를 활용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 검토
 - * 24시간, 36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상담체계 구축. 푸드뱅크, 자원봉사 등 지원 가능한 민간자원을 안내하고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국민 먹거리 기본보장을 위해 '그냥드림' 본사업 추진 지원

- (추진방향) 기존 푸드뱅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운영하여 예산 효율성 및 사업추진 속도 확보
 -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27년에 229개 시군구마다 코너 설치

	①시범 운영('25.12~)	②본사업 추진('26.5~)	③전국 설치('27년 이후)
단계	100여 개소 설치 (17개 시·도)	150여개소 설치 (17개 시·도)	전국 250여 개소 (17개 시·도)
의미	시범 운영/모형 보완	기존 인프라 활용 설치	전국 단위 시스템 도입
재원	민간 후원('25.12) 예산사업 + 민간후원('26.1~)	예산사업 + 민간 후원	

※ 현재 기준('26.1.2) 시범사업 65개 시군구 104개소 설치

- (민·관 협업 고도화) 지역사회 기부·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통해 '후원연계-물품조달-사례관리' 사업 전 과정에서 민·관 협업체계 구축
- (홍보 및 성과분석) 방송·언론·온라인 집중 홍보, 시범사업 데이터 기반 사업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본사업 계획에 반영

□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전략 및 실행 지원

- 사회공헌 정보 공유강화를 통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업·기관 참여지원을 통한 저변확대와 사회공헌이 인정받는 환경 조성 등 사회공헌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업, 공익재단 등 현장 의견

- 사회공헌 의지·재원은 있으나, 어느 영역에 사회공헌이 필요한지 정보가 부족
-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증제 시행, 정부포상, 세제혜택 등이 일부 존재하나 기업의 활동과 노력 등에 비해 혜택 등 인센티브가 불충분함
- 정부-기업-기관 사회공헌 협의체(고위급 포럼, 실무협의체) 운영, 온라인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제공, 컨설팅 및 교육, 인센티브 확충 등 일관된 정책추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범정부 거버넌스 및 인프라 구축

▲ (보건복지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문화 실현'이라는 목표 제시

- 기업 사회공헌은 단순한 선의의 기부를 넘어, 기업이 가진 핵심 역량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자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임을 강조
- 수요-공급 매칭 지원, 사회공헌 다변화, 사회공헌이 인정받는 환경 조성 필요성 강조

▲ (기업 및 재단) 현장의 생생한 사회공헌 추진 활동과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제시

- 보육과 의료, 인구문제 해결 보건헬스,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등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범부처의 협력과 지원 요구

▲ (학계 및 전문가) 사회공헌을 '단순한 기부'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업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기업의 핵심 역량을 사회문제 해결에 접목하는 전략적 경영과 다양한 주체 및 정부와 협력적 활동이 중요

Ⅲ. 중점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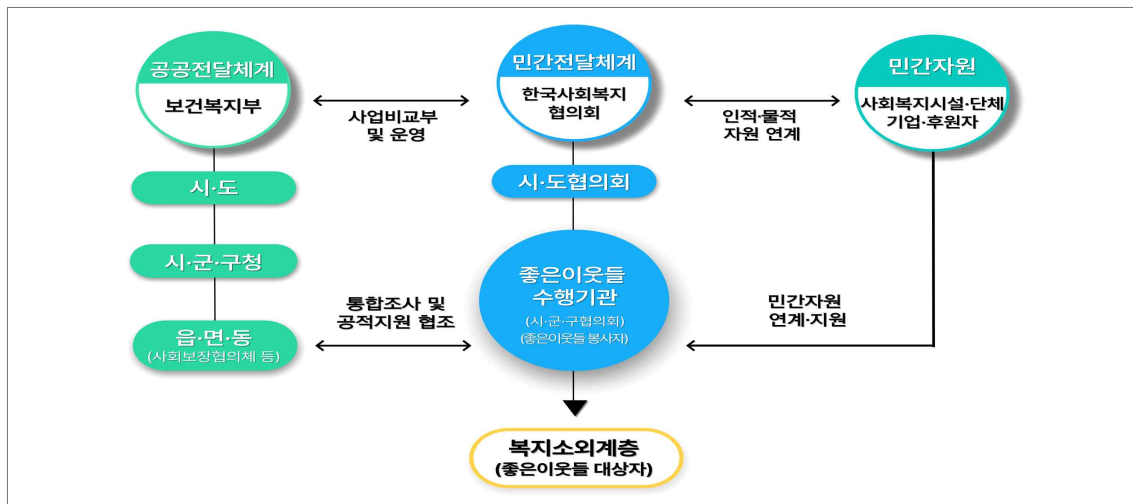
①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사업

□ 추진배경

- '11년 '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되어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필요성 제기
- 지역주민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된 복지소외계층에게 민간자원을 개발·연계해 지원

□ 운영체계

-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 민·관, 민·민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연계·지원체계 구축으로 공공 복지전달체계 보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사업 주체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역할	
중앙사무국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 수행기관 선정 · 평가 · 모니터링 - 수행기관 예산 · 인력 · 자원 지원 - 수행기관 교육 · 동기부여 등 - 좋은이웃들 사업 홍보 및 기관 연계	-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 관련기관 보고 및 협의 - 매뉴얼 개발 및 사업 활성화 연구 - 기타 사업 운영기반 구성 역할
수행기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140개소)	-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 및 보고 - 사업 예산·인력·자원 집행 및 보고 - 봉사자 구성·운영·관리·교육 등 - 복지소외계층 발굴·상담·지원·관리	-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원 - 공적자원 의뢰 · 연계 - 기타 수행기관 활성화를 위한 역할
좋은이웃들 봉사자	- 복지소외계층 신고 · 발굴 - 민간자원 개발 · 연계 · 지원 - 심리 · 정서적 상담 지원	- 좋은이웃들 사업 홍보 및 안내 - 기타 지역 내 활동 등의 역할

□ 서비스 제공 절차

-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봉사자인 지역 주민이 생업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 이웃의 실직, 이혼 등 환경변화나 위기상황 발생 시 좋은 이웃들 수행기관에 신고
- **(방문확인)**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담당자가 신고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진행
- **(지원)** 상담을 거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지원 후 지원심사회의에 보고, 긴급 지원이 아닌 경우 지원심사회의를 거쳐 지원
* 지원심사회의는 지자체, 지역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원내용 및 한도

-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위기구호비(국고, 60만원 한도)를 긴급 지원하고, 그 외 식품, 생필품,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개발해 지원
- 돌봄사각지대 아동, 고립·운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기가구에 대한 ‘아동 안전 꾸러미’ 등 민간자원 연계·지원

‘아동 안전 꾸러미’ 지원

- 돌봄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 등을 포함한 긴급지원 꾸러미 제작 및 전달과 지속적 모니터링 진행(국고 총 462백만원)
- 지역사회 민간자원 및 좋은이웃들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오래된 전열기 정비 및 청소 등 지원

□ 기대효과

- (공공복지 보완) 민간자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공공복지를 보완하는 역할
-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기능 강화
- (민·관 협력 활성화) 민간을 통해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공공과 함께 지원함으로써 민·관 협력에 기여

2 그냥드림 사업

□ 추진배경

- 코로나19 기간 생계형 범죄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일부 지방정부(서울·경기 등)의 먹거리 지원사업*을 전국 확대 추진
 -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끼니 해결조차 어려운 국민을 즉시 지원하여 범죄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연간 31만 4천명 이용, 후원금 33억 원 모금 배분
- 민·관 협력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 매트를 마련하여,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 보호 강화

□ 사업개요

- (주요내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설치하여 기본 먹거리·생필품 지원
 - (지원대상)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신청/소득기준 불필요)
 - (지원물품) 1인당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 원 한도)
 - * 표준 제공물품 3~4개를 기본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물품 선정
 - (지원장소) 동주민센터·복지관·푸드뱅크 등에 코너 설치
 - (이용절차) 1차 이용 시 간단한 개인정보 수집 후 물품 지원
→ 2차 이용 시 의무 상담, 필요 시 복지자원 연계·사례 관리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전국·광역 기부식품등지원 센터, 그냥드림 사업장 중심으로 민·관 협업 추진

<그냥드림 사업추진 체계도>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①기존 푸드뱅크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신속 시행,
②정부재원 뿐 아니라 기업 사회공헌 등 민간 후원* 활용(민·관 협업)

* 신한금융(3년간 45억원)·한국청과(연 2억원) 등 후원 확보('25.12 현재)

	①시범 운영('25.12~)	②본사업 추진('26.5~)	③전국 설치('27년 이후)
단계	100여 개소 설치 (17개 시·도)	150여개소 설치 (17개 시·도)	전국 250여 개소 (17개 시·도)
의미	시범 운영/모형 보완	기존 인프라 활용 설치	전국 단위 시스템 도입
재원	민간 후원('25.12) 예산사업 + 민간후원('26.1~)	예산사업 + 민간 후원	

※ 현재 기준('26.1.2) 시범사업 65개 시군구 104개소 설치

- (본사업 준비) '26년 5월부터 차질없는 본사업 시행 위해 사업준비 만전
 - 지방정부 및 푸드뱅크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 참여 지속 독려('25.12~)
 - FMS 기능개선, 사업지침 보완 등을 통해 현장 업무 부담 경감 추진
- (시범사업 점검) 원활한 초기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점검('25.12~)
 -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 ▲지침·시스템 보완사항, ▲상담·연계 및 위기가구 발굴 성과 등 확인
 - 방문 점검하여 현장 의견 청취, 지침 교육, 노하우 전수 등 실시
 - * 시범사업 시행 이후 수도권 및 부산·대구 등 현장 점검 실시 ('25.12)
- (민간 후원)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 재원 추가 확보 추진
 - 민·관 협업 사업으로서 총 47억 원* 민간재원 既확보 완료, 추가로 농협 하나로마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CJ 등과 협의 중('25.9~)
 - * 신한금융(3년간 총 45억 원), 한국청과('26, 2억 원) 후원 확정

□ 향후계획

- (언론 등 홍보) 언론사 MOU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유관기관 홍보 등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동아미디어그룹 홍보 협약 추진('26.1)
 - 홍보대사 위촉 및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TV, 전광판, 온라인 홍보 / '26.2)
 - '좋은이웃들' 사업 운영기관 및 복지관 등 취약계층 접근성을 고려한 홍보물 배포(~'26.2)
- (물품 확보) 후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기부기업 간담회 추진('26.1분기)
 - 임원급(사회공헌센터 연계, '26.2) 및 실무자 간담회('26.4)
 - 그냥드림 기부기업 MOU 및 릴레이 캠페인 등 추진('26.4)
 - 주요 기부기업(CJ, 대상, 농심, SPC 등) 방문 및 기부 독려('26.1)
- (사업장 확대) 본사업 150개소 이상 확대('26.2분기)
 - 권역별 사업 설명회 및 FMS(기부물품관리시스템), 기초상담 교육('26.2)
 - 시범사업 성과 분석 연구(~'26.4) 후 그냥드림 사업안내 개정
 - 지자체 및 기초사업장 참여 지속 독려

□ 기대효과

- (복지 사각지대 완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위한 촘촘한 먹거리 사회안전매트 구축
- (민관협력 활성화) 기업·비영리재단 및 지역사회 푸드뱅크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확대 및 기부문화 및 기업사회공헌(CSR) 활성화
 - 전국단위 新 민·관협업 복지모델 마련 → 복지 민관협력의 대표 사례로 확산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1 안전 및 재난관리

-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선제적 안전체계 마련) 선제적 안전체계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안전사고 사망자 창사 이래 Zero 달성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3회) 및 발견된 사업장 안전위험요소 개선(2회)
 - * 총 사업장 2개소(한국사회복지회관·기부식품등 중앙물류센터 등)
 - 근로자 자체 작업중지제도 마련 및 임직원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으로 임직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내재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수준 제고) 정보보안장비 교체,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 정보자원 이전 등
 - 노후 정보보호 장비 교체 및 침입탐지차단시스템 신규도입
 - 원격보안관제 추가도입을 통한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강화
 - *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 관제와 동시 운영
 - 공공시스템 개인정보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기능 강화 및 회원정보관리 프로세스 개선
 -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 안전한 정보자원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정보자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센터로 이전('26년 추진 예정)
 - * 기존 전산실은 사무실 공간 내 위치하여 운영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 대응 등이 어려움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상생·협력 우선구매 실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한 우선구매 실시
 - 중·소·소상공인 대상 물품 등 구매실적 총 5,052백만원 달성 및 사회적 기업 대상 구매실적 총 1,692백만원 달성
 - * '25년 법정 의무구매 비율 달성(중소기업 50%, 사회적기업 3% 이상 달성)
- (지역사회 협력모델 확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다수의 기업·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문제해결 및 상생협력 기반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25년 706개소 선정, 전년比 12.8%↑)
 -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교육·복지 연계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에 기여
 - ESG 기반 사회공헌 활동 심사지표 고도화, 인정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포럼·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기업 사회공헌 지원
 - * 2025 인정기업 주요사례
 - 선양소주 : '계족산 황톳길' 사업을 통한 황톳길의 관광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한국중부발전 :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니어 일자리창출 사업'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고객만족도 개선 성과) 국민 체감 만족도 제고 노력으로 고객만족도 점수 상승(고객만족도 85.6점, 전년比 1.8점↑)
 - 고객만족도 대상 주요사업 민원 응대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칭찬·격려게시판 운영 등 고객의견 수렴·환류 노력으로 국민 체감 만족도 제고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푸드뱅크 지역 불균형 해소

- (주요내용) 푸드뱅크 배분 지역불균형, 종사자 인력부족
 - 지역별 기부물품 1인당 지원금액 및 1개소당 지원금액의 편차 큼
 - 기부물품에 대한 수급조절의 역할 필요
 -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인력 확충 필요
- (개선계획) 연구 및 지침 개정을 통한 전담인력 처우개선 추진 및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 ‘푸드뱅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전담인력 확충 및 지역 불균형 관련 연구용역 완료('25.10)
 - * 광역 및 기초사업장 인력 및 시설(물류센터), 운영 예산 확보 등 노력 지속
 - 「2026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개정을 통한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 시설 인정) 추진('25.12)

② 케어뱅크 지속가능 대책 마련

- (주요내용) 케어뱅크 돌봄인력 감소 등 대책 및 사업 중단 시 이용자의 혜택 등 보상 방안 필요
 - 돌봄인력 감소와 재정 불안정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케어뱅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이행력 확보 필요
 -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적 보상 방안이나 제도개선 필요
- (개선계획) 예산 확보 및 사업 지속을 위한 운영 방안 마련
 - 케어뱅크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노력
 - * '26년 적용 : 수행기관 확대(55개소 → 60개소) 및 인건비 추가 확보(33백만원)
 - 케어뱅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돌봄포인트 활용 방안,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사업 운영 계획 마련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갑질피해 예방

-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갑질피해 예방 필요
- (개선계획)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대상 갑질예방 관련 교육 추진
 - (조치사항) 사회복지직능위원회('25.12.16)를 통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갑질문제 논의 및 교육 방향성 설정 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교육연수원을 통한 갑질예방교육 실시(준비 중)
 - * 갑질예방교육 교안 마련(~'26.1월), '26. 1분기 중 이러닝 서비스 개시 예정

④ 정보자원 시스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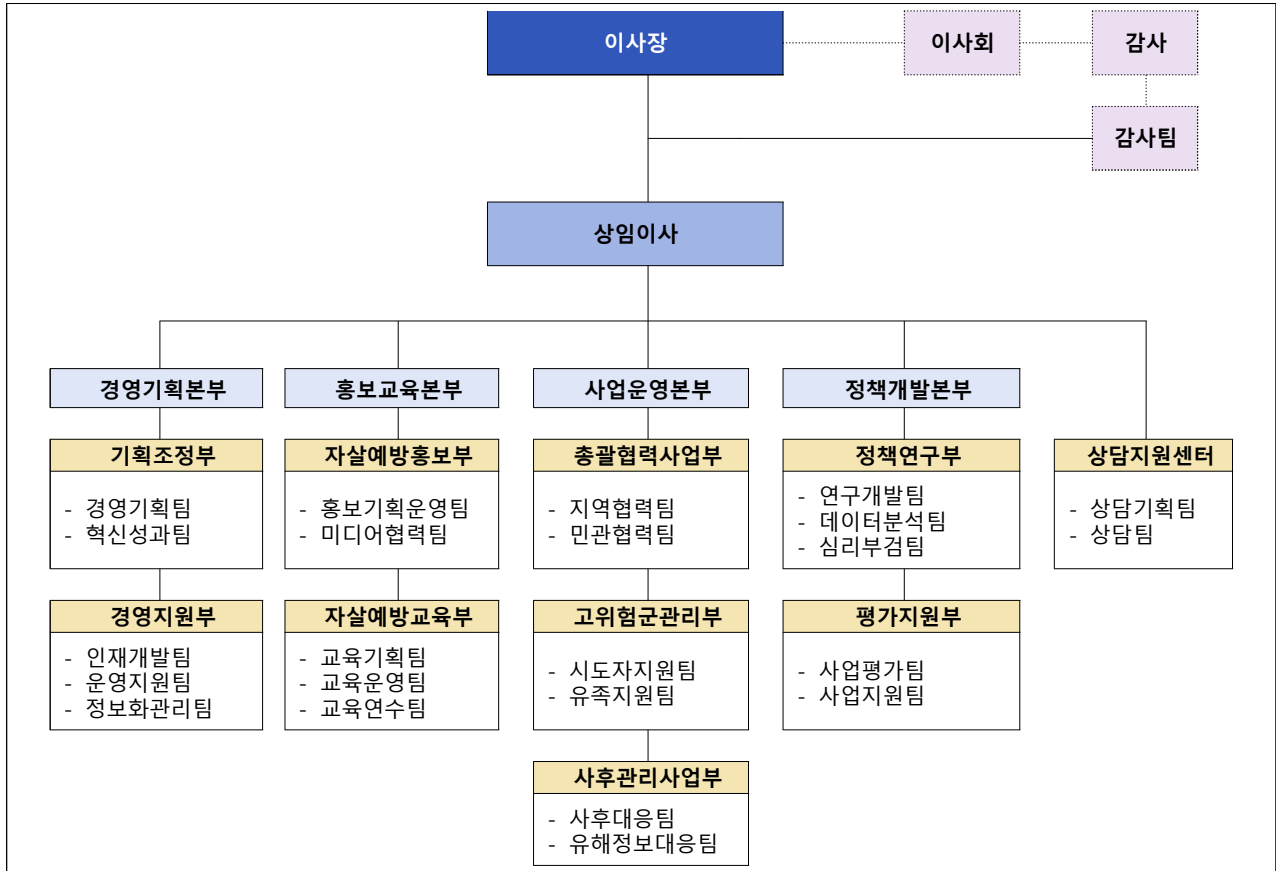
- (주요내용) 전산 시스템 장비와 전산실 노후화로 안전·보안 취약
 - 전산 시스템 하드웨어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비가 노후화 되었고, 노후화된 전산실의 경우 사무실전용 건축물에 시스템을 두고 있어 소방시설 등 구조개선이 불가한 실정
- (개선계획) 안전하고 신속한 정보자원 시스템 이전 추진
 - 정보자원 시스템 실사 후 연내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의를 거쳐 이전 완료
 - * 정보시스템 이관 예산 1,000백만 원 확보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thick, grey L-shaped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frame, at the top,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ey dots,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23.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2 인원 현황

(‘25.1.기준, 단위: 명)

구 분	직급별	계	임원	일반직				무기계약직
				1급	2급	3급	4급이하	
합계	정 원	220	2	4	11	24	91	88
	현 원	135	2	2	9	23	67	32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31,953	35,842	3,889	12.2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지원 및 확대 및 상담채널 확대
 - **[위기대응센터 확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대상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확대('24년 89개소→'25년 93개소)
 - **[지원확대]** 청년층 자살시도자의 소득조건 폐지를 통해 치료비 지원 확대, 유족수기집 발간을 통한 자살유족 인식개선활동 확대
 - **[상담채널확대]** 109자살예방상담전화 2센터 구축, SNS상담 '마들랜'을 통한 상담확대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 도입
- * 온라인채널을 통해 상담서비스(지속적돌봄)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의 악화 예방
- **[자살급증지역]** 지역사회내 연쇄한 자살발생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신설
 - **[급증지역알림]**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하여 기준월 자살자 수 5명이상, 전월 3개월 평균 대비 자살자수 50% 증가한 지자체 대상 알림 제공
 - **[대응전략컨설팅]** 지자체 담당자 및 관계기관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자살급증특성에 따른 단기 대응전략 수립 지원
- **[수단차단]**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확대 및 자살수단차단사업 확대
 - **[자살유발정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유발정보 모니터링·조치 의무화를 위한 법개정(25.11.11.시행) 및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 실시
 - **[자살수단]** '생명사랑실천기관*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공모제안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한 시니어 건물안전 점검단**'선정

* 일산화탄소, 농약 등 자살수단차단을 위하여 동참하는 시도 및 읍면동에 소재하는 점포

** 추락 취약환경 및 자살유해환경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26년 시범사업 예정(서울,인천)

□ **[인식개선]**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 체계 마련 및 홍보 확산

- **[교육의무화]** 의무화 추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자료 개발 및 자살 예방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승인 심사제도 마련
- **[홍보강화]** 중장기 온·오프라인 캠페인 ‘국민참여형 온정(溫情)캠페인*’ 개발 및 전국 확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 SNS상담 마들랜 홍보 확산

* 혼자라고 느끼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더해주는 자살예방캠페인

** '26년 포스터, 제61회 중앙광고대상 OOH(지속가능성)부문 선정 수상('25.12.16.)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지역·연령에 차별받지 않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지원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치료비지원을 위하여 전연령층 소득기준폐지* 및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전국 확대**
 - * 자살시도자 치료비지원 소득조건 폐지 ('25) 청년층 → ('26) 전 연령층
 - * 유족원스톱서비스 ('25) 12개 시도 → ('26) 17개 시도
- 취약계층 자살고위험군 연계를 위한 타분야와의 체계 구축
 -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기관 특성별 고위험군 선별도구 개발, 매뉴얼 개발, 교육 등 중앙단위에서의 협력체계 구축
- 자살급증 지역 대책 마련 과정에서 지역사회 리더의 참여 강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지역리더 양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연계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추진
-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AI 기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신속 탐지 및 삭제·차단·고발·구조요청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홍보 강화
 - '국민참여형 온정(溫情)캠페인' 전국 확대 추진 및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소개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Ⅲ. 중점 추진과제

① 자살예방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자살 고위험군 집중 대응 강화

- **[원스톱서비스 확대]** 자살 유족 원스톱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26.7월~)에 따라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컨설팅, 경찰청·법무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 (지원 내용) 일시 주거, 특수 청소, 사후행정, 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 심리상담 등

- (현황) 전국 12개 시·도에서 원스톱서비스 운영 중

* ('19년) 3개 시·도(인천, 광주, 강원) 시범사업 → ('22년) 6개 시·도(서울, 대구, 충북, 충남, 제주, 세종) 확대 → ('25년) 3개 시·도(대전, 경북, 경남) 확대

[사업효과]

- 자살유족 원스톱 제공 유족의 우울·자살생각·자살계획 등 호전
 - ▶ (자살생각) 유입 직후 11.2% → 3개월 후 6.4% → 1년 이후 0%
 - ▶ (자살계획) 유입 직후 3.2% → 3개월 후 2.1% → 1년 이후 0%
 - ▶ (우울) 유입 직후 27.8% → 3개월 후 6.5% → 1년 이후 3.8%

- (추진계획) '26년 신규 수행지역(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 대상 사업 수행(7월~) 지원을 위해 매뉴얼 교육(연 2회), 컨설팅(상반기) 및 모니터링(하반기) 등 추진

- **[위기대응센터 확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대상 단기 사례관리(4회) 후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확대('25년 93개소 → '26년 98개소)

- (현황) '26.1월 현재 93개소*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 중 → 지역응급의료기관 414개소 중 22.5%에 해당

[수행기관 현황]

기관 유형	1인 기관	2인 기관	3인 기관	24시간 기관	총계
기관 수	8개소	43개소	30개소	12개소	93개소

- (추진계획)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분기별 1회), 사업 수행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기관 평가(4~6월) 및 컨설팅(7~9월) 추진
- **(치료비 지원 확대)** 자살시도자 및 유족* 대상 **국비 및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활용 치료비**** 지원, 전 연령층 소득 조건을 폐지하여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 * (지원 대상) 자살시도자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자살시도자 중 서비스 동의자, 자살유족 : 사촌 이내 혈족 및 배우자
 - ** (지원 범위)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치료비·심리검사·상담비 등 지원
- (현황) 국비 및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활용하여 자살시도자 및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
 - * 국비 지원('23년~), 민간기금(자살시도자 : '16년~, 자살 유족 : '17년~)
- (추진계획) 자살시도자 및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1~12월), 1월부터 전 연령 소득조건을 폐지하여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 국비 1,373백만원, 민간기금 600백만원 / 총 1,973백만원
- **(자조모임 활성화)** 정기적인 현황 조사 및 컨설팅, 동료지원 활동가* 파견 등을 통해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지원
 - * 회복한 유족이 동료 유족을 돕기 위해 교육을 통해 동료지원 활동가를 양성하고, 자조모임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현황)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을 통한 자조모임 리더 양성 및 파견
 - * '26.1월 현재 자조모임 리더 48명 양성, 43명 활동 중이며, 전국에 164개 자조모임 운영 중
- (추진계획) 전국 자살 유족 자조모임 운영현황 조사 및 재단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1월, 7월), 자조모임 운영기관 대상 컨설팅 제공,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및 파견 지원(1~12월)
- **(제도개선)** 자살시도자 개입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의 정보 연계 대상을 경찰·소방에서 발견한 자살시도자에서 **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법개정}, 사례관리 미동의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근거 마련 등 법·제도개선 방안 마련
 - * 경찰·소방의 출동 없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 개입 강화(전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64.3% 수준, '23년)

- (현황) 자살예방법 12조의2에 따라 경찰·소방은 자살시도자의 4가지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
 - * 월평균 4,500건 의뢰, 서비스 동의 27.9%,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등록 5.6%
- (추진계획) 자살예방법 12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 기관에 응급실을 추가하여 자살시도자 정보가 자살예방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취약계층 자살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 **[범부처 연계]** 취약계층 지원기관 이용 대상자 중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척도 및 매뉴얼 개발·교육·시스템 개선(MHIS) 등 추진
 - * (현행)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간 정보연계 중 (개선)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대상기관 확대
- (현황)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매뉴얼* 마련(~'26.1월)
 - * 시스템 개선 이전에 매뉴얼·공문을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계획) 고용복지+센터 및 가족센터 연계* 기능 개통('26.上), 협업 기관 지속 확대를 위한 대상기관 발굴 및 기능 개발추진(계속)
- **[지역 리더 양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원을 중심으로 생명지킴이 역할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연계를 위한 관련 교육 추진('26.上)
 - (현황) 지역 리더 중심의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한 교육(안) 마련 및 시범운영*
 - *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기본과정,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위원 대상 실천과정 운영('25.12월)

[지역리더 생명지킴이 교육 모델(안)]

구분	Level 1. 기본과정	Level 2. 실천과정	Level 3. 리더과정
교육 목표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위험신호를 인식하고 대응, 연계 역량 습득	<실천역량 강화> 자살 위기자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사례 학습	<자살예방 리더 양성> 지역 내 자살예방 핵심 리더(준사례관리자) 양성
교육 대상	제한 없음	Level 1. 수료자	Level 2. 수료자
교육 시간	2시간	4시간	2일(집중과정)
주요 내용	<보고듣고말하기2.0> ·자살위험신호 이해 ·경청과 공감 ·전문기관 연계	<고위험군 자원 연계 실습> ·자살예방 체계이해 (고위험군 관련 지역 자원) ·자살 고위험군 개입 실제 (척도 활용 및 개입 방법) ·생명지킴이 연계 사례	<자살의 이해와 개입 ^{1일차} > ·자살 고위험군의 이해 ·안전한 개입과 지원 ·선별 척도의 활용 ·유형별 시도자 돕기 ·사례 슈퍼비전 <지역사회 이해 및 조직화 ^{2일차} > ·지역자원 이해 및 활용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지역맞춤형 고위험군 발굴 실행계획
교육 방법	온라인/집합	권역별 집합	권역별 집합
기타	‘생명지킴이’ 수료증 발급	‘생명지킴이 뱃지’ 지급	‘생명지킴이 리더’ 인증서 발급

- (추진계획) 교육자료 제작 및 강사진 구성(~2월), 레벨 2~3단계 교육 추진(3~7월), 교육 누리집 기능개선을 통한 교육 현황 관리(~12월)

□ 지자체 · 현장 전달체계 강화

- **[전담인력 확보]** 자살예방센터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소진예방교육 등 추진

* (현재) 센터당 2.6명 → ('26년) 센터당 5명 수준으로 확대

- (현황) '25년 추진한 「자살예방수행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

[개편 교육과정(안)]

구분	대상	내용	교육운영
실무기본과정	자살예방센터 및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실무자	자살 관련 기본 직무지식	12회(2일 과정)
실무역량과정		자살위기 상담 및 개입의 기초 및 심화과정 사례관리과정	14회(2일 과정)
실무관리과정		관리자 전문역량 강화	2회(2일 과정)
소진관리과정		자기돌봄역량 및 소진관리 능력강화	4회(1일~2일 과정)

- (추진계획)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안내(2월), 교육 추진(3월~12월), 소진예방교육(하반기, 4회),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협력을 통해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연계(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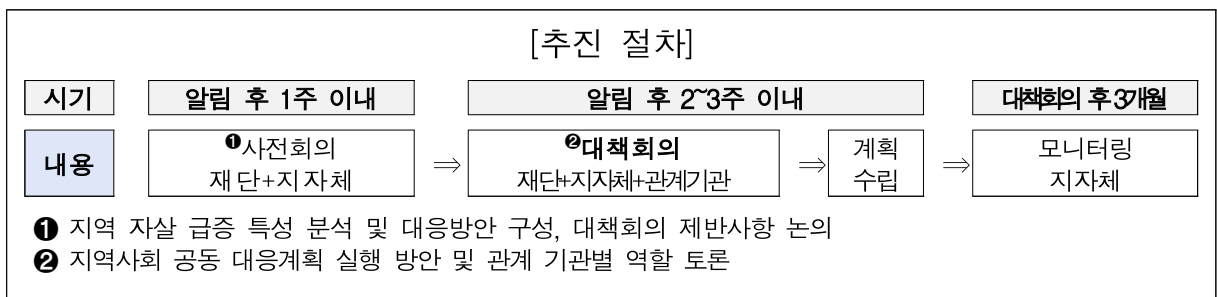
○ **[자살 급증지역 관리 강화]** 형사사법정보 등을 활용한 자살 급증지역 분석(매월), 해당 지자체에 정보공유, **대책회의***를 통해 **예방대책 수립 지원**(월 4회)

* 지자체 부단체장, 경찰·소방, 유관기관, 편의점, 농약 판매점 등이 함께 모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방대책 수립

- (현황) 자살사망자 발생지(읍·면·동) 기준 단기간 자살 증가 지역*을 분석하고 10곳을 선정하여 알림 제공(월 1회, 2개월 전 데이터 활용)

· 자살 급증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 추진(월 4회, 알림 후 2~3주 이내)

* 기준월 자살사망자 수 5명 이상 + 전월 3개월 평균 대비 자살사망자 수 50% 이상 증가한 지자체



- (추진계획) 자살 급증지역 알림 및 대책회의 추진(매월)

② 효율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 전략 마련

□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 추진

-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AI 기반 자살 유발·유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상시 모니터링 기능 강화 추진, 발견된 자살유발정보(자살방법 공유, 동반자살 모집 등)에 대한 삭제·수사 의뢰 등 사후관리 강화
 - (현황) 전담인력 4명, 국민 모니터링단(자원봉사자, '25년 1,278명 활동)이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요청 중이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AX 프로젝트를 통해 자살유발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중('25.10월~)

[자살유발정보 신고·삭제 건수]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고 건수	142,725건	234,064건	303,636건	401,229건	606,383건
삭제 건수	58,669건	64,213건	105,125건	61,598건	176,163건

- (추진계획) 국민 모니터링단을 통한 모니터링(상반기)에서 AI 기반 실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증* 및 운영체계** 마련(하반기)
 - * (1월~7월)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위험도 분류 모델 개발, (8월~12월)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AI 선별 데이터에 대한 검토 및 정확도 개선)
 - ** 운영 서버 마련, AI 솔루션 이관 방안 검토, 현장적용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한 사항 대처를 위한 부처 간 협의 등
- **[상담 지원]** AI 기반 전화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을 통한 위험도 평가로 빈틈없는 고위험군 발굴 등 효율적 상담 운영지원
 -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AX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반 솔루션 개발 중('25.10월~),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제공을 위해 자료수집·가공 완료
 - (추진계획) AI 기반 표준화된 상담 솔루션 개발 및 실증(~9월), AI 솔루션 현장적용 및 검증결과 모니터링(10~12월)

□ 근거기반 정책지원 강화

- **[청소년 심리부검]** 심리부검 면담자료를 활용한 정책 마련 강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 확대 시행, 심리부검 면담 자료를 활용한 연구 확산을 위한 데이터 개방 추진 등
 - (현황) '15년부터 현재까지 19세 이상 성인 자살사망자 1,410례에 대한 심리부검 시행, 데이터 개방을 위해 심리부검 데이터셋 구축 및 '15~'24년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추진
 - (추진계획) 성인 심리부검 지속 추진 및 연구용역을 통한 청소년 심리부검 신규 추진*
- * 청소년 심리부검을 위한 다부처 협력 간담회(1월), 청소년 심리부검 체계구축을 위한 표준 도구·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발주(1월), 교육부 MOU 체결(2월), 연구 계약 체결(2분기 내), 연구 최종보고(12월)
- **[데이터 연계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데이터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소득·재산·부채·질병·진료 이력 등과 연계한 분석 강화를 통해 자살사망과 관련된 복합적인 위험요인 규명
 - (현황)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형사사법정보 데이터 전처리 중
 - (추진계획) 경찰청 형사사법정보-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 연계를 위한 체계구축(1~2월), IRB심의(3~4월), 데이터 분석(7~9월), 연구보고서 발간(~12월)

□ 민·관 협업을 통한 인식개선

- **[민·관 협력]** 범사회적 민·관 협력 기구인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강화, 민간 부문 자살예방사업 추진 지원
 - (현황)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4기* 구성·운영 중('25.9.8~'27.9.7),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공모사업 참여(14개소)
 - * 정부(6), 종교계(7), 재계(2), 노동계(2), 언론계(7), 학계(5), 협력기관(14) 총 43개 기관
 - (추진계획)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1~2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9월)·실무협의회(3월, 12월)

- **[자살예방교육 확산]** 자살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살예방교육 우수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기준 마련, 자살예방 승인 교육 프로그램 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승인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급실적, 평과결과 등을 포함한 운영보고서 제출

- **(현황)**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131건 승인
- **(추진계획)**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상반기 중), 자살예방교육 승인·변경 심사(연 2회), 승인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모니터링 추진(1~3월)
- **[언론 인식개선]**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확산을 위한 미준수 보도 모니터링(상시) 및 기자·경찰·소방 등 교육 추진

[자살예방 보도준칙 4.0(‘24.11.6.)]

<전문>	<4대 원칙>
·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보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실천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황)** ‘자살예방보도준칙 4.0’ 확산을 위한 기자 교육, 언론 상시 모니터링 추진 중
- **(추진계획)** 자살 사건보도 일일 모니터링 및 준칙 미준수 보도에 대한 수정요청(상시), 유명인 등의 자살사건 보도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언론사 대상 협조문 발송 등) 추진(상시), 기자·경찰·소방 대상 보도준칙 교육(매월)

- **[홍보]**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도움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공익광고 등 추진
 - **(현황)** 자살예방 슬로건* 및 실천메시지** 개발,
 - * "사람을 더하세요"('22년 개발)
 - ** "자살생각하나요? 마음구조 109"('24~'25년),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26년)
 - **(추진계획)** 국민참여형 온·오프라인 캠페인 '온정(溫情) 캠페인' 전국 확산(17개 시·도, 연중), 커피·주류 등 생활 밀착형 기업과 협업을 통한 캠페인 추진(10곳),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 주요 자살예방정책(서비스)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추진

③ 자살예방사업 중추 기관으로서의 추진기반 강화

□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대응 가능한 조직 구조 확립

- **[구조개편]** 「2025 국가 자살예방전략」 이행 및 지원을 위한 재단의 중장기경영전략 재수립,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전략적 조직 구조개편

* (現) 기능 중심 조직 → ('26) 정책·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

- (현황) 조직진단 컨설팅('24년)을 통한 비전전략체계도 개편('25년)

- (추진계획) 「2025 국가 자살예방전략」 및 주요 자살예방정책을 반영한 재단 중장기 경영전략 재수립 및 조직개편(안) 마련(~6월)

* 연구 및 데이터 분석 기능 강화, 범정부 연계체계구축 등

- **[인재확보]** 범정부연계체계 구축, AI시스템 구축, 정책연구·데이터 분석 기능 강화 등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

- (현황) 범정부연계체계 구축,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 지역 사회 자살예방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25년 3명 채용 완료, '26년 7명 신규 채용 예정)

* 재단 정원 220명, 현원('26년 1월 기준) 135명

- (추진계획) 자살예방정책 수행을 위한 재단의 역할에 기반한 인력 운용계획 수립 및 '27년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 마련*(~5월)

*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보수 및 수당체계 고려 필요

- **[성과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조직운영 방향 전환

* (現) 호봉제 → (後) 성과연봉제 전환 검토

- (현황) 호봉제에 기반한 보수체계 운영 중

- (추진계획) 성과에 기반한 환류체계 마련을 위해 컨설팅을 통한 성과중심 보수체계 및 평가체계 구축(~12월)을 통해 성과급 및 성과연봉제 등 도입 검토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1 안전 및 재난관리

- (재난 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화재 진압 멀티탭, 모서리 보호캡 등) 구비

- (재난 대응체계 점검) 2025년 민방위훈련 실시하여 재난 발생 및 공습경보 발령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점검 및 대응역량 제고

-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제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하여 안전관리 인식 제고

* 체험형 안전체험교육 참여(50명, '25. 6월~10월)

**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139명, '25. 12. 31. 기준)

- (산업안전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센터 교대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 검진** 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 역량증진프로그램 운영

** 야간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야간작업근로자 대상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강화)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수검 및 취약점 조치*

* 정보보안 취약점(2월 45개 → 6월 5개), 개인정보보호 취약점(5월 15개 → 11월 6개) 취약점 미조치 사항들은 '26년에 지속 추진 예정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오남용 사업', '보안관제망 사각지대 장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 및 재단 네트워크의 침입 방지 솔루션 적용 완료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추진) 기관 소재 지역 내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통해 임직원의 지역 상권 이용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2025년 친환경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구매 계획에 따라 7개 부문 중 6개 부문* 실적 달성(녹색제품, 중증장애인생산물,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 미달성 부문: 창업기업제품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고객만족도 조사) '25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11~12월)했으며, “B” 등급 달성
- (생명지킴데이) LG 트윈스 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홍보 및 자살예방 응원 메시지가 담긴 포토존 설치·운영 등 ‘생명지킴데이’ 캠페인 실시('25.5.14.)
 - * 재단-LG 트윈스 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2년)에 따라 매년 프로야구 시즌 중 생명지킴데이 캠페인 실시
- (기념식 개최) 자살예방의 날('25.9.10.) 및 세계 자살유족의 날('25.11.20.~11.21.) 기념식 개최를 통한 자살 인식개선 홍보 실시
- (자살예방 콘퍼런스) 지역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및 지자체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대상 콘퍼런스 개최를 통한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실시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성별 특성에 따른 자살예방 연구·정책 개발 필요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성별에 따른 자살차이 규명을 위해 성별 특성에 기반한 자살예방 연구와 정책개발 추진 당부
- (개선계획) 성별 특성에 기반한 연구결과 도출과 정책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할 예정
 - 성별에 따른 자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등 성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 마련 예정

② 청년 소외계층 온라인 돌봄시범사업 전반 점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청년 소외계층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의 저조한 상담 진행률, 짧은 사업 기간, 맞춤형 홍보방안 모색 필요성 등 사업 전반의 점검 필요
 - *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외(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최소 8회기)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의 악화 방지('25.7월~, 2차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 (개선계획) 준비기간('25.7월~9월)을 거쳐 '25.10월부터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 진행률 향상, 상담기간 연장,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 등 사업 활성화를 지속 노력 중
 - (상담기간 연장) '26년 예산확보*를 통해 상담 기간이 '25.12월 → '26.12월까지 연장되어 상담 진행률 및 안정성 향상 기대
 - * ('25년) 426백만원(상담사 40명*4개월) → ('26년) 971백만원(상담사 40명*12개월)
 - (맞춤형 홍보 추진) 소외 청년 발굴을 위해 중앙청년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향후 서울청년기지개센터 등 홍보기관을 확대하여 상담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 확대 예정

③ 자살시도자 연계율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서비스 동의율, 지역사회 연계율 향상 필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당부

* 응급실에 내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25년 93개소) 자살시도자 대상, 치료 및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4회) 후 지역사회 연계('13년~)

- (개선계획) 사례관리자의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업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

- (서비스 동의율 제고) 사례관리 매뉴얼 제공, 교육 등을 통해 사례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고, '26년부터 치료비 지원* 시 소득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서비스 동의율 향상 기대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서비스 동의를 전제로 치료비 지원 중

- (지역사회 연계율 향상)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도록 법률(「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 추진 예정

④ 자살예방 전화상담 체계 점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민·관 전화 상담 협의체 구성, 연계시스템 구축, 연계율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자살예방 상담원 대상 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전화상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계 전반 점검 당부

- (개선계획)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5.10월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 개소를 통해 전화상담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운영과 현황점검을 통해 상담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

- 특히, 민간 자살예방 전화상담 운영기관과 자원 공유 방안을 논의하여 민·관 전화상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상담원의 소진예방을 위해 심리검사, 상담 등 심리지원 추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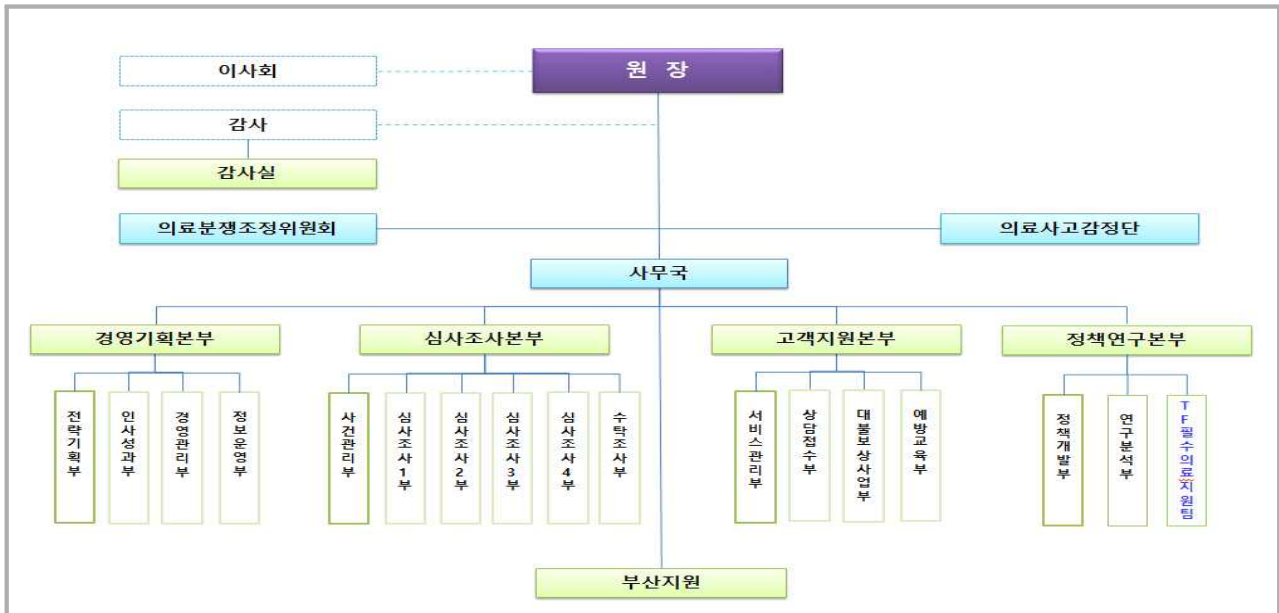
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 “1위원회·1단, 1국(4본부(16부), 1지원), 1감사실”의 조직으로 상근 인력 157명(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정원) 규모

* 상임 임원(원장) 1명, 비상임 임원(조정위원장·감정단장 등) 9명으로 이사회 구성



2 인원 현황('25.12.31.기준)

구 분	직급별	계	원장	상임 조정 위원	상임 감정 위원	1급	2급	전문직		일반직		무기 계약직
								심사관	조사관	3급	4급이하	
정 원(명)		157	1	7	10	1	4	23	39	6	33	33
현 원(명)		157	1	7	10	1	4	23	39	6	33	33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세입 계	23,828	25,044	1,216	5.10
정부출연금	21,834	23,135	1,301	5.96
자체수입	1,994	1,909	△85	△4.26
세출 계	23,828	25,044	1,216	5.10
인건비	12,011	12,740	729	6.07
사업비	8,145	8,266	121	1.49
관리운영비	3,338	3,691	353	10.58
예비비	334	347	13	3.89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상담) 연간 5만~6만여 건 의료분쟁 종합 상담(법률, 의료 등) 서비스 제공, 국민의 의료사고 고통 완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

- '25년 의료사고 상담 실적 62,594건(전년 대비 19.0%↑), 상담을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 갈등의 조기 종식 효과

(‘23~’25 상담일 기준, 단위: 건)

구 분	'23	'24	'25	전년 대비
의료사고 상담	54,222	52,589	62,594	19.0% ↑

- (조정개시) 피신청인의 동의로 조정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 협의·설명 등 지속적인 조정개시율('25년 65.6%) 제고 노력

(‘23~’25 사건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 분	'23	'24	'25	전년 대비
조정신청	2,147	2,089	2,605	24.7% ↑
조정개시	1,420	1,385	1,605	15.9% ↑
조정 개시율	66.8	67.9	65.6	2.3%p ↓

- 지역 및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 사건이 많거나 개시율이 저조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장, 법무·원무팀 면담 등 방문 설명회 실시

* 의료기관 방문 설명: '23년 61개, '24년 64개, '25년 63개 의료기관

- (감정) 프로세스 표준화 등 감정 처리기간 단축, 감정결과에 대한 당사자 설명 강화 및 법원·검·경 수탁감정 등 양질의 감정서비스 제공

- '25년 감정 처리기간 평균 52.7일 소요(전년 대비 5.3일 단축)

* 1건당 평균 감정처리기간 : ('24년) 58.0일 → ('25년) 52.7일

□ **(조정)** 긴 민사소송(1심 평균 26개월) 대비 단기간 내 조정절차 완료(최대 120일)로,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여 대체적인 분쟁 해결 기능 충실히 수행

○ '25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 **71.2%** 달성(전년 대비 3.3%p[↑])

* 의료분쟁 조정성공률: ('24년) 67.9% → ('25.11월 말) 71.2%

□ **(인력풀)** 비상임위원(법조·의료, 소비자대표 등) **교육모델 개발**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검토, 신규 **위촉·연임 평가제도** 신설 등 인력풀 관리

구분		인원	비고
조정 위원	상임	7명	법조인(7명)
	비상임	281명	법조인(65명), 의료인(132명), 소비자위원(42명), 대학교수(42명)
감정 위원	상임	10명	의료인(10명)
	비상임	272명	법조인(52명), 의료인(180명), 소비자위원(40명)
자문위원		752명	의료인(752명)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분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연평균 약 15건), 분만 의료기관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 상향**('25.7월 법령 개정)

*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 (기존)최대 3천만원 → (개정)최대 3억원

□ **(예방·공개)** 매년 의료분쟁 조정, 감정 및 상담 **다빈도 사례** 등을 분석한 의료사고 **예방자료*** 발간·배포, 대국민 **홈페이지 공개****(사례 검색 가능)

* 예방사례집(의약품 피해, 성형외과, 피부과 등), 상담 및 조정·중재 사례집

** 홈페이지 사례 공개: <https://www.k-medi.or.kr> (알림마당>>자료실>>의료분쟁 사례)

□ **(필수의료 지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국가(의료중재원, 보조사업자)가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 도모

○ 필수의료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 공모·선정('25.11월) 후,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토록 지원

- * (전문의) 분만 산부인과, 소아외과계열(외과, 흉부외과, 심장과, 신경외과)
(전공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 보험 가입자 모집('25.11.26~12.19), 보험 효력개시('25.12.20)

- (안전망 구축) 환자·보호자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속·공정한 조정·감정 제도적 기반 마련
 - 조정 조력인(환자대변인) 제도*를 신설('25.5월)하여 감정·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를 조력하는 기능 강화('25.12월 253건 조력인 배정)
 - * 자동개시 사건(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의 조정 신청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상담, 서면 작성 등 조정·감정 절차 전반에서 법률적·의학적 지원
 - 의료분쟁 조정제도 운영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개선을 위해 **옴부즈만**('25.12 구성) 신설하여 조정·감정 사업의 평가·환류 도모
 - 재(再)감정, 추가·보완 감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감정의 **공정성·객관성 및 공신력** 제고
 - * (재감정) 의료기록 재검토 필요 경우 등/(추가감정) 추가 쟁점, 중대 변화 발생 등
 - 조정 준비기일을 도입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고, 사안에 따라 조정 기일을 추가(1회→2회) 운영하여 조정 및 분쟁 종결의 기회 확대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상담, 감정 및 조정 등 고유 사업의 효과적 수행으로 국민 고통 절감
 - 조정·감정 등 '26년 사업목표는 전년 대비 110% 이상 수준으로 상향

구 분	상담	조정신청	조정개시율	감정처리	수탁감정	조정처리
2026년	65,000건	2,800건	68.0%	1,600건	700건	1,500건
전년대비	110%	110%	2.0%p [↑]	110%	107%	115%

- 의료분쟁 여부 판단, 감정·조정절차 안내, 의료·법률 상담 등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갈등의 조기종식 도모**
- 재감정, 추가·보완 감정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 감정 단계별 업무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감정 모니터링·환류 체계 구축**
- **법원·검·경 등 외부에서 의뢰한 감정**에 대해 세부 진료과목별 교차·복수 감정을 적용, **고품질 수탁감정 서비스 제공**
- **조정 조력인** 제도, 조정준비기일, 2차 조정기일, 추가감정 제도 및 간이조정 등 **당사자 소통강화로 조정결정의 공정성·수용성 제고**
- **부산 지원(支院)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제도 접근성 향상
 - * 지역별 사업량 : 수도권 57%, 영남권 25%, 호남권 8%, 충청·중부 10%
- 감정·조정 전문가로서 의료분쟁에 특화된 전문성 및 자격 유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비상임위원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증제 도입**

□ 환자-의료진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 개선 본격 추진

- **(조력 강화)** 상담, 검토, 자료제출 등 감정·조정 절차를 조력하는 ‘조정 조력인(외부 법률전문가)’ 대상 교육 과정, 평가제도 개발
- **(감정 신뢰도 제고)** 정확한 감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실체 규명이 가능하도록 감정보완 절차* 마련, 감정인력 pool 확충 및 업무 표준화
 - * (재감정) 의료기록 재검토 필요 경우 등/(추가감정) 추가 쟁점, 중대 변화 발생 등
- **(수용성 높은 조정)** 조정 준비기일 신설, 조정기일 확대 등 기회보장으로 당사자 참여를 통해 조정 결과 수용성 제고
 - * (現) 조정기일 1회 운영 → (改) 준비기일 신설 및 조정기일 다회 운영
- **(국민 옴부즈만)** 의료분쟁 감정·조정 관련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개선 사항 발굴·권고
 - * 환자·소비자 대표, 의료인 및 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 ('25.12월)

- (조정·감정 DB) 의료분쟁 조정·감정 결과 DB화 및 대국민 공개 추진

* '26년 조정·감정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예산 5.0억 원 확보

- (보상 확대) 해외사례 검토, 전문가 회의 등 통해 분만사고 보상 대상 확대(산모 중증장애) 추진

□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

- (전문의 지원) 산부인과(분만)·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의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소속 의료기관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분만실적 있는 의료기관(의원급+병원급)의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의(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심장)

** (지원내용) 고액배상 특화보험의 보험료 일부 국가지원

- (전공의 지원)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소속 수련병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및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 (지원내용) 전공의 특화보험의 보험료의 일부 국가지원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필수의료 의료진 보험료 지원으로 의료사고 부담 완화,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 ▶ (지원예산) ('25) 50억원 → ('26) 82억원
- ▶ (지원대상) 필수의료 전문의(분만수행 산부인과, 소아외과·흉부외과·심장과신경외과),
필수의료 전공의(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 ('26) 소아응급, 신생아분과 등 추가 추진
- ▶ (지원내용) 전문의 및 전공의 배상보험료 일부 지원
 - 전문의: 고액배상(2억원 초과 15억원, 보장 한도 17억원) 보험료의 일부(1인 150만원 상당),
 - 전공의: 배상(3천만원 초과 3억원, 보장 한도 3.3억원) 보험료의 일부(1인 25만원 상당)

Ⅲ. 중점 추진과제

① [국정과제 84 관련] 필수의료 분야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활성화

◆ 배상보험료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과제개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소송 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대상) 산부인과·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의* 및 필수과목 전공의**
 - * 분만 산부인과,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공의
 - (지원) 전문의 고액배상보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일부 지원
- (주요경과) 사업계획 수립·홍보, 보험사업자 공모 및 보험 통계관리
 - 보험사업자 공모 및 약정 체결('25.10월)
 -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정책 홍보사업 추진('25.11월)
 -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 회의체 운영 지원
 - 보험사업자 및 보조금에 대한 관리·점검, 보조금 교부('25.11월)
 - 수련병원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검증, 지원금 지급('25.12월)
- (중점추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
 -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배상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검토
 - * ('25년) 분만 산부인과,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 ('26년) 소아응급의학과, 신생아분과 전문의 등 추가('26.上)
 -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규정 등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추진 등

② [국정과제 83 관련] 조정 조력인(환자대변인) 제도 효과적 운영

◆ 조정 조력인(환자대변인) 운영으로 의료인·환자 모두의 실효적 피해 회복 지원

◆ 조정 조력인 필수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 개발

□ (과제개요) 의료사고 당사자가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법률·의학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정 조력인 제도 운영

○ (대상) 자동개시* 조정 사건의 환자

*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등 의료사고

○ (지원) 법률상담, 의료기록 및 쟁점사항 검토, 조정 전략 자문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 전 과정에 조력 제공

□ (주요경과)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56명을 조정 조력인으로 위촉('25.5월) 및 제도 시행('25.5.26.)

○ 제도 시행 후 조력인 신청 총 272건 접수, 그 중 조정인 배정 253건 완료, 조력인 매칭 중 19건('25.12월말 기준)

○ 신청 사건과 이해충돌이 없는 조력인(의료전문 변호사) 3인을 추천하고, 신청인이 1인을 선택하여 해당 사건의 조력인 매칭

○ 조정 조력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조력인 필수 교육 및 평가 체계 마련 등 연구용역 추진 중

□ (중점추진) 조정 조력인(환자대변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만족도 제고

○ 현재 조정 조력인 적용 대상 사건의 약 95%가 신청, 조력인의 배정 사건 과중(1인당 3~5건)으로 조력인 추가 위촉 등 인력풀 확대 검토

○ 조력인 교육·평가체계 개발 연구 및 운영,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추진 등

3 [국정과제 83 관련] 의료분쟁 조정 ombudsman 운영 지원

- ◆ 환자·의료인·전문가가 참여하는 ombudsman 도입으로 조정제도 신뢰도 제고
- ◆ ombudsman의 시정·개선 권고에 대하여 제도개선 계획 수립·이행

- (과제개요)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모니터링, 제도개선 발굴·권고 등 ombudsman 운영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구성) 환자·소비자 대표 2명,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당연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 (기능) 의료분쟁 감정·조정 관련 운영 전반 모니터링, 제도개선 사항 발굴·권고
- (주요경과)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ombudsman 운영을 주관하고, 중재원은 실무 지원 역할
 - 의료분쟁 조정 ombudsman 구성('25.10월) 및 1차 회의 개최('25.12월)
 - * ombudsman 1차 회의 : '26년 향후 ombudsman 운영 세부계획 등 논의
 - 고충 민원 처리 결과,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등 ombudsman이 제도 관련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 (중점추진) 감정·조정 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이행 철저
 - ombudsman의 감정부 회의 및 조정기일 참관 등 감정·조정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지원
 - ombudsman의 시정·개선 권고에 대하여 제도개선 계획 수립·이행
 - ombudsman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가·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분쟁 감정·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1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 정기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위해 요인 사전 발굴, 개선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 보안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 * '22~'24년 3년 연속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률' 100% 달성 완료
 - * 보안요원 신규배치('25년)를 통하여 내방고객 및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0건
- (재난관리) 중대재해·재난사고 관리체계에 따른 재난 신고, 대응, 복구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체계 강화
 - * '12년 개원 이후 무사고 달성, '25년 '청사관리' 복지부 장관 포상
 - *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안전예산 증액, '25년 안전예산 '24년 대비 167%↑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및 전직원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실시 등 노력으로 '22~'24년 3년 연속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A등급 달성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공정·상생)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 구매 비율 준수 등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 * '24년 '공공구매 촉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유일 수상)
 - * '24년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구매 비율 100% 달성

구분		목표(%)	실적(%)	구분	목표(%)	실적(%)
중소기업		50	100.0	중증장애인	1	4.3
기술개발		15	29.4	표준사업장	0.8	21.8
여성	물품	5	63.0	사회적기업·협동조합	3	15.7
	용역	5	22.3	자활용사춘	7	12.5
	공사	3	100.0	녹색제품	80	99.3
장애인기업		1	27.7	창업기업	8	69.0

- (지역교류 활동) 부산지원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지역 의료분쟁 갈등 해소 및 예방역량 제고
 - 부산시의료원 임직원, 부산여대 간호학과 학생 대상 의료사고 예방 교육 지원, 부산시치과의사학회 학술대회 교류 등

3 대국민 소통 노력

- (고객만족 강화) 의료분쟁 조정서비스 등 이용고객의 만족도 상시 모니터링, 진단·분석·환류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 CS역량 강화
 -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전화응대 모니터링 조사, CS 컨설팅 연구, CS 비전 선포, 임직원 CS 역량강화 교육* 등 체계적 실시
- * 임직원 CS 향상 교육, 고객접점직원 CS 힐링 교육, CS워크숍 등
- 의료중재원 서비스 이용단계별 자체 모바일 만족도 조사(상시) 및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연 1회) 실시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채널을 통한 민원사항(고객 불만 및 고충사항 등) 적시 대응 및 정기 민원분석·환류로 대응품질 향상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자체 만족도	80.8점	81.8점	82.5점	86.4점	85.5점(상반기)
공공기관 만족도	71.7점	73.0점	74.7점	77.6점	미실시
민원 처리	230건	228건	335건	361건	483건

- (국민소통) 의료분쟁 해결기구로서의 기관의 핵심 성과와 기능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신뢰도 제고
 - (온라인·디지털 홍보) 다양한 콘텐츠 제작(제도 및 사례 소개 등 431건) 및 주제별 영상 제작·배포(개정법률 등 36건)
 - * 블로그('25년 방문자수 전년대비 32.13% ↑), 인스타그램('25년 팔로워수 전년대비 460.6% ↑), 유튜브('25년 구독자수 전년대비 144.6% ↑)
 - (매체 광고) 옥외광고 및 전문지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로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기관 인지도 제고('25.12.)
 - * 옥외광고 : 서울(지하철 강남역), 광주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4회 운영
 - * 전문지 : 데일리메디, 메디칼타임즈, 라포르시안, 치의신보 등 18회 운영
 - 대외 홍보행사 운영 : 박람회 내 홍보부스 설치 및 제도 설명을 통한 대국민 쌍방향 소통 강화(2회)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조정 조력인의 이해충돌 방지 (더불어민주당)

- (지적사항) 조정 조력인(환자대변인) 중 일부가 의료기관 측 자문·고문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이해충돌 발생 우려
- (개선방안) 환자 측 선택권 부여, 이해충돌 방지책 이행 및 모니터링
 - 환자 측이 직접 조력인을 선택하도록 제도 운영, 조력인의 자문·고문 수행 여부에 대해 선택에 참고하도록 안내 중
 - 조력인의 윤리서약서 제출(위촉 시), 제척·회피제도 운영, 집체교육 등 이해충돌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의료분쟁 조정 ombudsman 등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 도출

②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제고 (더불어민주당)

- (지적사항)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이 진료과목별,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있어 개시율이 저조한 진료과목 및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 강구
- (개선방안)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등 맞춤형 조정 개시율 제고
 -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 현황 분석을 통한 개시율 제고 집중 관리대상 선별
 -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 방문설명회 실시, 조정제도 안내 서신 발송, 의료기관 포털시스템 운영 등 의료기관과의 다양한 소통 시도
 - 개시율이 저조한 진료과목의 경우, 진료과목별 학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조정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맞춤형 개시율 제고 추진

붙임 1

최근 3개년 주요사업 실적 현황

□ 연도별 주요사업 실적

(단위: 건,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의료분쟁 상담건수	54,222	52,589	62,594
조정·중재 접수건수	2,147	2,089	2,605
조정·중재 개시건수	1,420	1,385	(잠정) 1,605
조정개시율(%)	66.8	66.8	(잠정) 65.6
조정성공률(%)	69.1	67.9	71.2
수탁감정 접수건수	602	685	611

□ 외국인의 의료분쟁 상담 현황

('23. 1. 1. ~ '25. 12. 31. 상담일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중국	베트남	미국	몽골	러시아	필리핀	일본	홍콩	캐나다	기타
2023	146	78	3	23	2	2	0	7	1	4	26
2024	133	74	2	11	4	5	1	9	0	2	25
2025	191	97	4	23	6	4	1	11	0	2	43

* 기타: 인도, 영국, 우즈벡, 태국, 호주,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의원·치과의원·한방병원 상대적 저조)

('23. 1. 1. ~ '25. 12. 3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구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기타*
2023	접수건수	407	525	369	497	21	199	21	34	74
	참여건수	310	387	252	276	15	96	9	22	53
	참여율	(76.2)	(73.7)	(68.3)	(55.5)	(71.4)	(48.2)	(42.9)	(64.7)	(71.6)
2024	접수건수	308	559	401	466	46	203	12	32	62
	참여건수	246	389	272	253	32	119	8	20	46
	참여율	(79.9)	(69.6)	(67.8)	(54.3)	(69.6)	(58.6)	(66.7)	(62.5)	(74.2)
2025	접수건수	341	613	503	707	43	258	18	50	72
	참여건수(잠정)	254	428	332	344	24	142	8	21	52
	참여율(잠정)	(77.2)	(74.6)	(70.0)	(52.6)	(61.5)	(57.5)	(50.0)	(47.7)	(75.4)
합계	접수건수	1,056	1,697	1,273	1,670	110	660	51	116	208
	참여건수	810	1,204	856	873	71	357	25	63	151
	참여율	(77.8)	(72.6)	(68.7)	(54.1)	(67.5)	(54.8)	(53.2)	(58.3)	(73.7)

* 요양병원,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조산원, 정신병원

* 전체 접수 사건 중 보건의료기관 신청 건 제외

□ 의료기관 종별 자동개시(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사건) 신청현황

(‘23. 1. 1. ~ ‘25. 12. 3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상급종합	중합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기타*
2023	401	163	124	49	25	1	-	1	4	34
2024	359	112	146	43	28	-	2	-	1	27
2025	430	128	170	61	29	1	6	-	1	34
누계	1,190	403	440	153	82	2	8	1	6	95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약국, 요양병원, 조산원, 정신병원

□ 조정·중재 처리 현황

(‘23. 1. 1. ~ ‘25. 12. 31. 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종료	조 정							중 재			조정 성공률
			합의 조정	조정 결정			부조정 결정	취하	각하	화해 중재	중재 판정	종료 결정	
				성립	불성립	미확정							
2023	자동개시	402	196	38	56	-	53	57	2	-	-	-	58.5
	일반조정	1,059	709	59	103	-	67	113	7	1	-	-	73.1
	소계	1,461	905	97	159	-	120	170	9	1	-	-	69.1
2024	자동개시	406	198	21	36	-	57	92	2	-	-	-	54.2
	일반조정	1,058	735	37	61	-	78	145	2	-	-	-	73.1
	소계	1,464	933	58	97	-	135	237	4	-	-	-	67.9
2025	자동개시	324	171	3	16	11	48	74	1	-	-	-	55.8
	일반조정	1,066	773	23	55	12	71	127	4	1	-	-	75.8
	소계	1,390	944	26	71	23	119	201	5	1	-	-	71.2
계		4,315	2,782	181	327	23	374	608	18	2	-	-	69.3

* 조정성공률 산식 = (합의+조정·중재성립건수)÷(종료-각하-미확정건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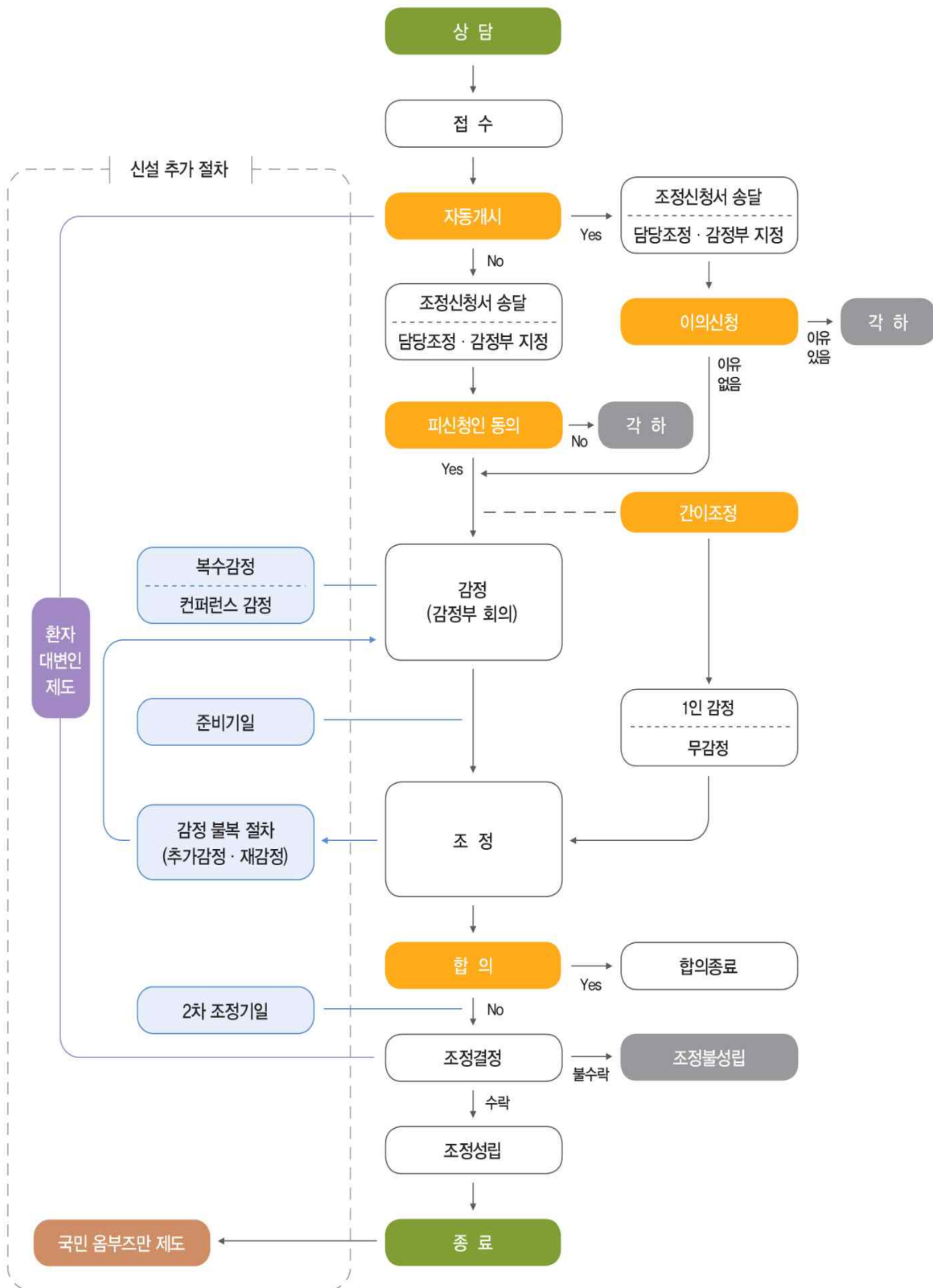
□ 조정합의 및 조정성립 금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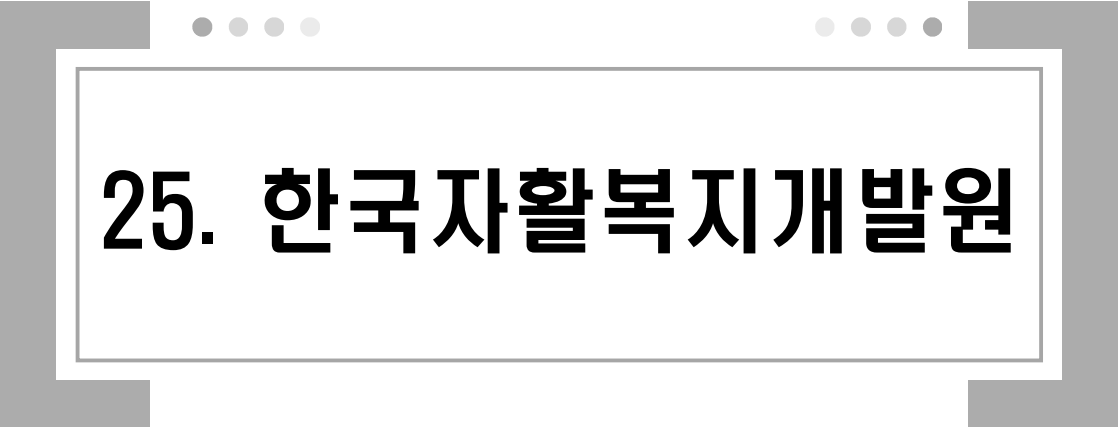
(‘23. 1. 1. ~ ‘25. 12. 31. 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합 계
건수	1,683	570	373	134	75	32	96	2,857
(비율)	(56.8)	(19.2)	(12.6)	(4.5)	(2.5)	(1.1)	(3.2)	(100.0)

* 최근 5년간(2020~2024) 연평균 조정성립 총액 : 100.2억 원

* 최근 5년간(2020~2024) 1건당 평균조정성립 금액 : 1,006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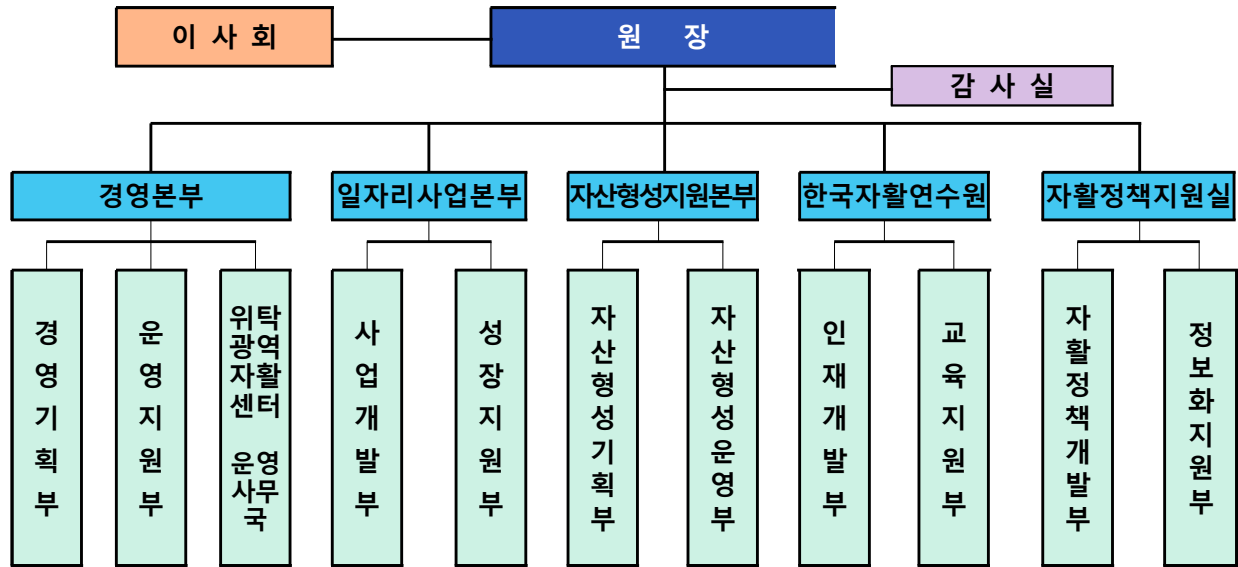


25. 한국자활복지개발원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 3본부 2실 1연수원 10부 1국



2 인원 현황

(26.1.1.기준)

구분	직급별	계	기관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무기직
합계	정원	102	1	2	4	6	10	19	15	45
	현원	100	0	1	3	6	8	21	16	45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감 (B-A)	(B-A)/A
계	374,218	379,381	5,162	1.38
운영보조금	18,116	16,544	△1,572	△8.68
수탁사업	355,326	362,001	6,674	1.9
자체수입	698	789	91	13.04
기타(기부금 등)	78	47	△31	△39.74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자활 적합 일자리 개발 및 보급 확대

○ 지역소멸,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활 적합 일자리 개발

번호	사업모델	주요실적
1	소방청 연계 '방화복 세탁 자활사업'	전국 124개 소방기관과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매칭
2	농촌소멸 대응 '자활 이동장터'	식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에 농촌지역 이동장터 사업모델 구축(강원, 경북)

○ 자활 집중육성 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 (다회용기 순환 사업) 지자체 행사, 야구경기장 등 다회용기세척 모델 보급과 위생품질 고도화,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25년 79개 자활사업단, 약 1,600명 일자리 창출

□ 맞춤형 일자리 대상 지원강화

-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사례관리사의 250개소 확대 배치에 따른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기획 및 현장 사례관리 지원강화를 위한 16개 광역 센터에 지역맞춤 현장지원사업 추진

☞ (보완점) 광역자활센터의 역량별 사업편차 발생, 신규 사례관리사 유입과 잦은 이직으로 인해 자활사례관리의 운영 노하우 축적 한계

- '참여자 맞춤형 지원강화' 실현을 위해 <청년자립도전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참여자 욕구 기반 자립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 (기본방향) 청년 참여자의 역량 및 욕구 맞춤형 참여 경로 설계, 교육 훈련 및 일 경험 기회 확대, 맞춤형 사업단 운영 지원 확대, 전문관리자 전문성 강화 및 체계 구축 등
· (사업기간) 2025.7.~12.(6개월간)
· (지원내용) 운영 프로세스 개선, 맞춤형 자립계획 수립 지원, 신규 지역 및 광역 사업단 개설 지원, 일 경험 기회 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등
· (참여실적) 지역자활센터 34개소, 광역자활센터 4개소 참여

□ 자활기업 창업 및 성장단계별 지원강화

- 경제위기 속에서도 생존율과 고용이 지속성장하는 건실한 경제조직으로서 「창업-성장-성숙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활기업 유지율 3년 연속 증가

* 자활기업 유지율(%) : ('23년) 86.8 → ('24년) 88.1 → ('25.11월) 89.4

- 기존 사업영역 확대 및 신사업 발굴 등 안정적 수익 구조 확보 지원으로 종사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자활기업 운영 규모 확대

* 자활기업 종사자 수(명) : ('23년) 7,888 → ('24년) 8,909 → ('25.10월) 9,612

□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 자산형성통장 가입자 통장유지율 93.40% 달성('25.11월)

* 가입자 통장유지를 위하여 청년금융특화서비스 운영, 콜센터·챗봇서비스로 가입자들이 필요한 문의 및 민원에 적극대응, 본인적금 미납 및 만기자 해지 안내 등

- 맞춤형 지원 서비스 기반 마련

*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참여 전후 재무관리 역량 2.0점 향상(재무상담 4.9점, 교육 1.3점)

* 2개 희망 지자체와의 계약으로 지역 기반 추가 지원금 도입의 초석 마련

□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역량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 참여자 기초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자활기업 창업지원 맞춤형 교육 확대

* (자립역량교육) 195회 5,694명, (자격취득) 14종 772명, (창업준비교육) 173회, 5,296명

- 자활정책·현장 성과 향상을 위한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 지원강화

* 사례관리 역량강화, 리더십 향상, AI 활용, 전문자격 등 직무교육 124회 6,371명

2 향후 업무 추진 방향

□ 자활 적합 일자리 개발 및 보급 확대

- (생산 위탁형 순환 체계 모델 개발) 대형 유통 채널 등 납품을 위한 전략 품목 선정하고 위탁생산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 생산공급 모델 개발
- (지역자활 로컬노미 「Local+Economy」형 사업화 추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활생산물 간 결합을 통한 지역 고유의 ‘자활 시그니처 신규 상품’ 개발 및 지역 브랜드화 추진

□ 맞춤형 일자리 대상 지원강화

- (청년자립도전 개선 사업 전국화)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전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운영 센터에 확대 적용하여 청년 개별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지원
 - * 전문 검사도구 활용 지원 확대(‘25년 무료 사용 검사도구 개발→’26년 전국 확대), 개인 및 집단 교육비 지원, 인턴 연계 인센티브 확대, 우수 자활기업 선정 시 청년분야 추가 등
- (청년사업단 활성화 노력) 중앙 차원에서 사회적기업·민간기업·공공기관 등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직무 캠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청년의 직무 역량과 일 경험 기회 강화
- (자활사례관리 표준화 및 체계화) 전문성 및 표준화된 사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전국 자활 사례관리사 네트워크 추진 및 우수 운영모델 확산을 통한 품질 고도화
- (자활사례관리 성과관리 기반 마련) 정서적 자활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와 현장 지원기능 정비, 현장의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 마련을 위한 광역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 자활기업 창업 및 성장 단계별 지원강화

- 자활기업 창업 전·후 지원강화*
 - * 창업컨설팅 필수 지원하여 초기 사업계획 완성도 제고
 - * 영세한 자활기업의 경영 전문 역량 보완을 위해 법인전환·안전관리·마케팅 등 다양한 경영관리 지원, AI등 최신기술 활용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 창업 후 매출 감소 등 경영 위기 기업 선제적 사전진단 컨설팅 실시*
 - * 기업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적절한 지원사업 매칭 방안 도출하여 생존을 제고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및 정책서비스 연계 사업 지원으로 자활기업의 틈새시장 개척 역량 확보*
 - * 폐자원 재활용, 통합돌봄, AI 기술 활용 양곡배송 최적경로 설계 등

□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관리, 자산형성 포털 기반 다채널 통합운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자산 형성 안정화 및 관리 강화
 - * 중도해지 대상 해지 요인 실태 조사, 가입자 중심 맞춤 개입 체계 강화
- 가입 대상 맞춤형 홍보로 신규 가입 유도,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확대, 지자체 추가지원금 신설 등 맞춤형지원 확대 및 효과성 검증
 - * 일부 지자체 자활기금 활용 추가지원금 도입, 자산형성지원 데이터로 성공 지원 검증

□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역량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 참여자 기초자립역량 향상 및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 자립역량: 의사소통,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관리, 문제해결능력 등
 - * 창업역량: 자격취득(국가: 도배, 도장, 세탁 등 / 민간: 바리스타, 청소, 세차 등), 창업 단계별(준비-실무-보수교육) 맞춤형 교육, 자활기업 경쟁력 향상 등
- 자활정책 및 현장중심의 종사자 직무단계별 맞춤형 교육 개발강화
 - * 직무역량교육: 사례관리 고도화, 청년자립도전사업, AI 직무역량, 안전경영, 통합돌봄, 직무별 전문자격, 온라인 콘텐츠 등

Ⅲ. 중점 추진과제

① 맞춤형 자활지원 체계 마련으로 탈수급 지원 강화 (국정과제 77)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

- (低역량 자활참여자) 장기수급, 고령, 건강·정신적 문제, 근로경험 단절, 낮은 근속성, 자활 의지 및 동기 취약한 참여자에게 자활사례관리 및 교육 지원을 통한 근로 의욕·자존감 고취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자활역량 평가 개편) 근로역량 평가 개편('24년)을 통한 자활목표 다변화 및 역량별 맞춤 지원 확대
 - (자활 사례관리사 배치) 참여자의 자립 의욕 고취, 자립 장애요인 제거 및 정서적·경제적 자립 성과 도출을 위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배치 및 표준화, 체계화 지원
 - (지역 맞춤 현장 지원) 광역자활센터를 통한 전문가 슈퍼비전, 사례관리 운영체계 컨설팅, 종사자 사례관리 역량강화, 참여자 프로그램 등 현장 사례관리 체계 지원 강화
- (高역량 자활참여자) 근로능력 및 근속이 높고, 취업 경험 보유 및 숙련 가능자에게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및 인턴형 사업 등 취·창업 지원을 통한 단기 자립 전환 지원
 - (일자리개발 및 연계·보급 확대) 공공·민간 연계 일자리 개발, 집중육성 사업 진행 등을 통한 신규 자활사업 아이템 개발 및 보급
 - * '24년 13개 공공기관, 7개 민간기업 연계를 통한 2,9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집중육성 사업을 통한 72개 사업단, 1,149명 신규 일자리 창출
 - (자활생산품 판로 지원) 자활 상품 개발 및 품질개선 지원, 판로 개척, 우선구매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 * '25년 기술개발지원 및 디자인 개선(74건) 지원, HACCP 등 공인인증 지원(30개) 지원, 공동 브랜드 개발(16건) 지원

□ 맞춤형 사례관리 교육사업

- 사례관리 기능 재구조화에 따른 표준화, 직무역량 등 실무 기반 교육 강화
 - 게이트웨이 단계 프로그램 표준화를 위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
 - * 게이트웨이 담당자과정(2회, 60명): 표준 정서적자활 프로그램 적용 기술
 - 사례관리 추진절차에 따라 명확한 직무별 역할 정립을 위한 교육 설계
- 자활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
 - 자활사례관리 체계 변화에 따른 지식공유 온라인 및 세미나 실시
 - 지역·광역자활센터 직무·경력별 신규 교육자료 및 콘텐츠 개발·제공
 - * 참여자 집중관리 대상 사례관리 스킬 향상 등 현업 활용도구 개발 및 제공

② 자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확충 [국정과제 77]

□ (창업)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 단위 창업 초기 단계 지원 강화

- 운영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 지원·모니터링으로 초기 사업체의 안정성 확보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확장, 자생화 단계로까지 로드맵을 제공하고 경영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확보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 단계에서부터 시장에서 생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확보를 위한 사업아이템 발굴 지원,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등

□ (성장) 매출 기반 강화로 시장경쟁력 제고

- 자활기업의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가 장비 도입 지원을 통해 전통적인 자활사업 업종을 넘어선 혁신 도모*
- * 친환경 청소 약품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등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활기업의 구조적 한계 보완을 위해 전문인력 참여를 지원하여 전문 경영 역량 확보 촉진

□ (성숙) 자활기업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업 등 사업영역 확장으로
성숙단계 진입 지원

- 최신 기술(AI 등) 활용,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협업 등 자활사업을
넘어선 혁신 지원*

*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위한 AI 활용 돌봄 플랫폼 도입

- 자활기업 노하우 축적 분야(집수리, 청소, 돌봄 등)와 통합돌봄 등
정책사업 결합하여 연계 비즈니스 모델 지원으로 자활기업의 지역
사회 기여도 제고*

* 일상 돌봄 자활기업의 사업 영역(반찬, 청소, 정리, 병원 동행 등) 확대를 위한
돌봄-의료 통합 지원 및 표준 서비스화 지원

③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 대규모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관리

- 수급가구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등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다양한 통장 유형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관리*

* 국고·지방비 매칭 예산 3,036억원 집행, 대상자별 정책 추가지원금 100억원 매칭

□ 가입 대상 맞춤형 홍보로 신규 가입 유도

-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하여
신규 가입 목표 달성 촉진, 기존 가입자 대상 저축 유지 독려*

* 전국 주민센터에 신규 모집 홍보물 조기 배포·청년 대상 온라인 다채널 홍보 운영

□ 사용자 친화적인 자산형성 포털 리뉴얼로 가입자 접근성 강화

- 가입자 본인적금 납입현황 조회부터 의무교육 이수까지 한 번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와 포털 기반 정보 제공으로 정확성 확보*

* 웹 접근성 지침 준수, PC-모바일 최적화 강화, 가입자 대상 단계별 교육 이용

□ 탈락 위기 가입자 집중 관리 및 미납 방지

- 연속 미납자 관리 강화, 실직 등 위험 요인 발생 시 적립 중지 등 유지 제도 안내로 중도해지 감소*, 적립중지 해제 자동알림 기능 마련
- * 중도환수 해지자 실태 및 원인 분석 조사로 중도해지율 감소 방안 마련

□ 고객 문의 대응 다채널 통합 운영 및 매뉴얼 개편으로 정확성 확보

- 자산형성 콜센터 주축으로 전화응대·챗봇·포털 1:1 문의 등 다채널을 통합 운영하고, 매뉴얼을 포함한 지침 개정으로 응대의 일관성 강화*
- * 상시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문의 대응 체계 확립, 콜센터 운영 안정화 추진

□ 지자체 자활기금 활용한 추가지원금 신설과 비재무적 서비스 제공

- 희망 지자체(서울 강남구·경북 상주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원금 사업 도입*으로, 초기 체계 정비해 안정화 후 전국 확대
- * 민간 재원으로 가입자 생애 이벤트(졸업·취업·출산 등) 기반 격려 물품 제공

□ 청년 금융 특화서비스 이용자 확대 및 품질 제고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대상 교육·재무상담을 통해 기본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지원*
- * 16개 광역자활센터·국민연금공단(노후준비서비스)·청년 금융교육 전문기관 연계로 예비 만기자 대상 '자금사용계획' 설계 코칭·참여 전후 성과지표 측정해 효과 명확화

□ 가입자 자립역량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의무교육 이수 관리

- 차상위 및 청년 가입자의 요구 분석에 따른 신규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교육* 관리를 통해 만기 지급 요건인 교육 이수 지원
- * 오프라인 교육 병행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이수 조건 충족 지원

□ 가입자 관리 담당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강화

- 가입자 직접 대면 지자체 및 지역(광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정비 및 교육 확대*
- * 실무 중심의 온라인 직무교육 콘텐츠 개발, 해석 혼선 방지 지침 정비, 소진 예방 등

□ 데이터 기반 참여형 환류 시스템 구축 및 정책 효과성 검증

- 자산형성지원 데이터 분석과 참여형 소통 채널을 활용한 실무적 환류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 품질 강화 및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마련, 상시 담당자 피드백 소통채널 마련, 전문가 회의 운영

4 데이터기반 자활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국정과제 77)

□ 탈수급 이후 재진입 참여자 증가 및 탈수급을 하락 추세에 따라, 자활 참여자의 기존 근로활동·수급 이력·탈수급 경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계획수립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탈수급 방식 지원 연계

- 취·창업 이력, 각종 연금 및 보험 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등 연계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 (1차 구축) 정보화 기반 구축: 원천 데이터수집 및 정제단계

○ 연계시스템 구축

- * 참여자 근로 활동, 소득 정보 등 자활사업 운영 필수 데이터 자동 수집 체계 구축
- * 원천 데이터의 안정적 확보 기반 마련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외부 기관 연계 데이터 포함,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제 작업 수행
- * 정제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 다양한 분석 활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용이성 확보

○ 통계 포털 서비스 구축

- * 자활사업 정보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통계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 정확하고 통합적인 통계 및 심층 분석 정보 One-Stop 제공
- *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및 다양한 시각화 기능 지원

□ (2차 구축) 정보서비스 안정화: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데이터 분석 고도화 기반 마련

- * 빅데이터 솔루션 도입을 통해 1차 구축을 통해 확보된 자활사업 데이터를 활용한 심층 분석 연구기반 마련
- * 통계 분석, 머신러닝 등 기계 학습 모델링 적용 가능성 검토 및 기반 환경 구축
- * 데이터 기반 향후 예측 분석 및 패턴 발견

○ 분석 데이터 시각화 및 인사이트 제공

- * 분석 결과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기능 강화
-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핵심 인사이트 도출 및 제공

□ (3차 구축) 시스템 지능화: AI기술을 활용한 고도 분석

○ AI 모델 구축

-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통계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 * 자활사업 특성 및 수요에 맞는 AI 모델 개발

○ AI 기반 고급 분석 정보 활용

- * 구축된 AI 모델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분석 정보 및 예측 결과 제공
- * 정책 결정, 사업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기반 정보 활용
- * 미래 자활사업 운영 방향 설정 및 효과 극대화 지원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로드맵(안)>

추진단계	1단계 (1차년도)	2단계 (2차년도 상반기)	3단계 (2차년도 하반기)
추진목표	정보화 기반구축	정보서비스 안정화	시스템 지능화
업무시스템 영역	- 정보제공 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 통계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통계분석시스템 활용 극대화 추진	- 지능형 분석 시스템 적용 추진 - AI 시스템 구축
정보 인프라 영역	- 자활지원사업 통계 정보서비스 인프라 구축 - 운용 장비 구축 및 이중화	-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인프라 안정적 운영 및 관리
보안체계 영역	정보보안 관리체계 정립	사용자, 서버, 네트워크 영역 보안 강화	지속적인 통합보안체계 강화
정보운영 및 관리 영역	운영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운영 조직 및 인력 확충	조직 전문성 강화
연계대상 기관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국세청,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가보훈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방부(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 국토교통부, - 교육부, - 공무원연금공단, - 대한상공회의소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1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경영)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 'Zero'*

* 대국민 이용시설(한국자활연수원) 설립('15년) 이후 중대재해·안전사고 발생 '0건'

- (전략)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기반 안전경영 내실화 사업·캠페인 수행**

* 기관장 100% 참여 및 안전경영 실천 강조, 월·분기별 안전점검 및 조치 실행

** 국정자원 화재발생 시 UPS실 긴급 특별점검 등 재난재해·안전사고 예방 점검

- (대국민) 자활사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250개 지역자활센터, 16개 광역자활센터 등 대상 매뉴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 (정보보안)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역량 강화 및 임직원 보안 교육 강화

- 지속적 보안 교육 및 훈련으로 해킹 메일 열람율(3.93% → 1.44%)을 낮추고 신고율(93.3% → 100%)을 높여, 임직원의 실전 보안 대응 역량을 전년 대비 대폭 강화

- 교육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작년 대비 100% 증가한 13개 위탁광역 자활센터 임직원 보안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환경 구축

- 이용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 신청 시 승인절차 체계 마련

- 이용기관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점검기능 제공

- 인사정보DB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연동

* 인사정보 등록자에게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 부여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우선구매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 확대 및 지역상권 소비 촉진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추진

* 구매·계약 매뉴얼 마련, 관련 업체 발굴, 적극적인 구매관리로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등 8개 항목 구매 목표 달성('25.11월 기준)

-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 * 경영평가 성과급 및 맞춤형복지제도 활용 온누리상품권 구매 총 25,390천원('25.11월 기준)
- 권역별 자활생산물 판촉전 개최 지원(6개 권역)
- **(지역 상생형 자활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자활사업 개발
 - **(농촌형 이동장터)** 식품 사막화 문제 해결 및 돌봄 기능 수행 가능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 강원 동해, 경북 봉화 지역 시범 사업 추진 완료(26년 전국 확산 예정)
 - **(자활청년자립특화 지원)** 청년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 사업 추진*
 - * 9월 시범사업 지역형 33개소, 광역형 사업 4개소로 전체 참여자 6,675명에서 8,426명으로 26.2% 증가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 활용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업 지원 강화
 - 자활기업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총 184명('25.12월 기준) 고용 창출
 - 자활기업 간의 규모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전략업종 사업화 추진 지원
 - * 총 24개 컨소시엄 중 8개 사회적기업 참여('23년~'24년)

3 대국민 소통 노력

- **(인지도 제고)** 정기 홍보 간행물 발간 및 대국민 접근성 높은 SNS 활용 대국민 자활 챌린지 이벤트 진행 등 미디어 홍보 적극 추진*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언급 게시물 건수 ('24) 1,488건 → ('25) 1,684건
 - * '자활사업' 언급 게시물 건수 ('24) 3,681건 → ('25) 4,754건
- **(고객만족도)** 서비스 품질 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
 - * 기획재정부 주관 조사 결과: ('22) 74.220점, ('23) 80.430점, ('24) 78.400점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맞춤형 자활지원 체계 강화

- (주요내용) 기준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자활조건부 수급자(근로가능 조건부 수급자)증가 상황에, 정부 차원의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신설 또는 제도화 계획
- (개선계획) 자활 참여자별 근로 능력에 큰 차이가 있어 맞춤형 자활을 이상적 모델로 설정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시장 취·창업이 어려운 참여자에게는 사회참여형 제도로 자활의 역할을 설정하고 사례관리* 등 지원 강화

* 250개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 배치,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사례관리의 표준화, 전문성, 실효성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 등

② 취약계층의 자활기회 확대 지원 방안

-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자활 기회를 넓히기 위한 지원방안 및 보완 대책 마련
- (개선계획) 근로역량이 낮고 복합적인 자립 장애요인을 가진 참여자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해 참여 기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

③ 자활사업 청년층 자활 성공률

- (주요내용) 자활사업 청년층 감소의 원인과 청년층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 (개선계획) 청년자활 참여자 수 감소*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년 비중

증가, 그리고 전담관리자 처우 열악으로 인해 잦은 교체와 역량 부족으로 체계적 진단 및 자립계획 수립·이행에 한계 발생, 현재 청년자활사업단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관리자 전문교육 및 처우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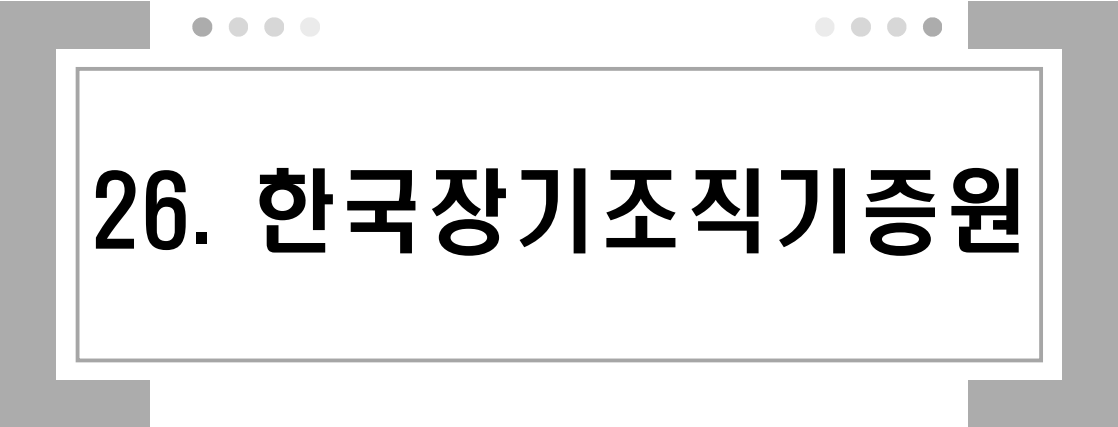
* 청년자활 참여자 (‘22년) 1,616명 → (‘24년) 1,120명

4 자활성공률 감소 원인 및 성공률 기준 개편

- (주요내용) 자활성공률 감소 이유와 취·창업률만 자활성공률로 보는 구조 개편 필요성
- (개선계획) 근로 역량이 떨어지는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많이 유입되어 성공률 감소, 자활참여자의 복합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원화된 트랙으로 정서적 자활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추진 할 수 있도록 4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7-29)에 수립 시 적극 검토

5 자활사업 성과향상 구조개선

- (주요내용) 자활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안 마련
- (개선계획) 자활사업의 경우 취·창업 및 탈수급이라는 경제적 성과와 자활의지 향상(정서·사회적 성과)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향후 참여자의 근로의지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서적/교육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기업 창업 시 자금 지원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별 자활성공률 편차 축소를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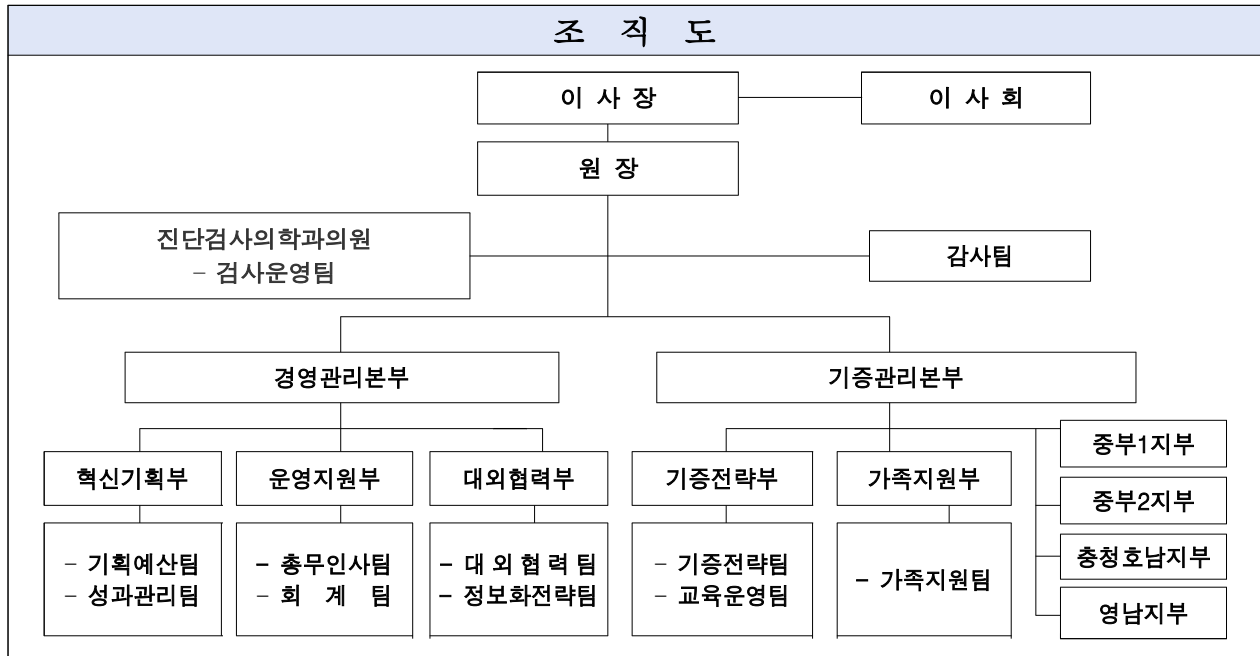


26. 한국장기조직기증원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2026.1. 기준)



2 인원 현황

(단위: 명 / 2026.1. 기준)

구 분	직급별	계	원장	별정직	1급/ 개방직	2급	3급	4급	5급	6급	공무직
합계	정 원	127	1	4	1	9	14	25	65		8
	현 원	117.625	1	2	1	8	13	23	53.625	9	7

* 현원: 정규직 알리오 공시기준(6개월이상 육아휴직자 제외) 및 단시간 근로자 전일제 환산

* 계약직: 장애인 등 한시적 고용(10명)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15,351	16,851	1,500	9.8%
국고보조금	10,109	11,663	1,554	15.4%
자체수입금	5,242	5,188	△54	△1.0%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기증관리사업

○ 뇌사기증 발굴 확대

- 뇌사기증의 시작은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신고임. 뇌사추정자 신고제 시행 5년 경과 시점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17~'20년) 신고는 2,325명 수준
- **(성과)** 기증활성화프로그램(DIP) 운영병원 및 EMR(전자의무기록)연계 문자 자동 통보시스템 확대등 노력으로, '23년 이후 신고 수 23.2% 증가
- **(보완점)** 의료질평가 '뇌사추정자 신고 수' 시범지표 도입('23)후 대형병원 신고율 82% 증가. 기증 선진국은 신고율 100% 목표로 국가적으로 관리하기예, 의료 질 평가(뇌사추정자 신고 수) 본 지표 도입 지원과 뇌사추정자 신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기증자 관리·지원체계 강화

- **(성과)** In-house 코디네이터* 배치 확대로 '상시 기증 면담' 체계 구축 및 뇌사 관리 업무협약 확대, 공공 이송서비스 도입 등 기증관리 노력으로 연간 1,500명의 환자가 뇌사 장기이식 혜택 수여
- * In-house 코디네이터: 기증선진국 스페인의 중환자실내 적극적 기증자 발굴, 기증면담 활동 수행
- 인체조직 기증자는 의료기관 대상 원스톱 채취 협약 확대, 동의 제고 등 노력으로 180명('17년 이후 최고치)을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 연계
- **(보완점)** 뇌사판정기관으로 지정받았더라도 병원 여건상 기증관리 거부 및 절차 지연 발생, 이에 공공 병원을 “기증관리 거점병원”으로 지정·운영 필요
- 국내 기증체계는 뇌사판정 후 기증만 가능하기예, 가족 동의 후 평균 60명 환자에서 기증 관리가 중단됨. 이에,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체계 도입 필요

○ 신속·정확한 이식 검사체계 강화

- (성과)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12년 연속 획득

* 뇌사검사 점유율 80.60%^{'24년} → 86.49%^{'25년}

- (보완점) 24시간 응급 검사 시행을 위한 안정적 장비 관리 필요

□ 기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사업

○ 지자체와의 협력 및 민간 봉안당 협약 확대

- (성과) 지방자치단체 장기등 기증 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2회), 민간 봉안당 추가 협약을 통해 기증자 안치 역량 확대
- (보완점) 단발성 간담회를 벗어나 지자체 협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전국적 예우 문화 확산 방안 마련 필요

○ 기증자와 이식수혜자 간 교류 강화

- (성과) 서신 교환용 리플릿 고도화, 가입안내 영상 제작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콘텐츠 강화 추진^{(우체통 신규 가입자 247명('24년)→296명('25년))}
- (보완점) 서비스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혜자 및 기증자 유가족 참여 확대 전략 강화 필요

□ 기증인식 제고를 위한 생명나눔 교육·홍보사업

○ 의료진 및 기증종사자 교육·홍보 강화

- (성과) 전문학회·보수교육등 연계로 의료진 교육 강화, 기증종사자 대상 심화교육·사례 공유등으로 상담역량 강화
- (보완점) 권역별 학회 전문 세션운영으로 의료진 교육 참여율 제고, 기증종사자 대상 의사소통등 전문 연계 교육으로 상담역량 강화
- * 의료진교육: 497회(7,178명 이수), 신경외과응급의학과신경중환자학회내 장기기증 세션 운영

○ 대국민 생명나눔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확대

- (성과) 다양한 채널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노력으로, 언론소통 활성화 전년대비 20% 증가(720.8점^{'24년})→865.2점^{'25년}, 청소년 교육 전후 대비 생명나눔 인식개선 향상도 100점 유지
- (보완점) 신뢰도 제고를 위한 허위 정보 대응 강화 및 교육 의무화 운영 필요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기증관리사업

○ 뇌사기증 발굴 확대

- (동의제고활동 강화) 의료기관 협력 하 In-house 코디네이터 및 기증활성화프로그램운영, 전문학회 세션운영, 기증원 코디네이터 상담역량 강화 교육으로 기증상담 및 동의율 제고
- (의료 질 평가 본지표 도입) ‘뇌사추정자 신고수’ 본지표 도입 위한 정부·유관 기관 협력 및 지원
- (뇌사추정자 신고종합정보시스템)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신고 누락 최소화 및 의료진의 신고 편리성 증진을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연동하여 기증원으로 자동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증자 관리·지원체계 강화

- (기증관리거점병원 지정·운영)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기증 절차 진행이 지연·중단되지 않도록 국립병원·지역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 대상 기증관리거점병원 지정
☞ 기증관리 전문 인력,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및 역량 집중 지원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 지원) 현재 뇌사자 외 기증자 범주 확대를 위해 장기이식법 및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 개정 이후 세부 업무 지침 마련, 적정 수가 반영 등 추진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연명의료중단결정자가 연명의료중단으로 사망 후 장기기증
- (인체조직기증·이식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선노력)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협력 하 식약처에 한국형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개선 촉구 지속

○ 신속·정확한 이식 검사체계 강화

- 신속·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한 검사 품질관리 및 질향상 활동 지속 추진, 우수검사실 인증평가 및 국내·외 신빙도 조사 사업 참여

□ 기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사업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기증자 예우 확대

- 지자체 간담회 정례화 및 우수사례 적극 발굴을 통해 지자체 협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전국적 예우 문화 확산

○ 기증자와 이식수혜자 간 서신 교류 강화

-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서신 교환 활동 지원
- 기증자와 이식수혜자 간 서신 교환 우수 사례 공유 및 유가족 및 이식의료기관 대상 홍보를 통한 회원가입 활성화

○ 기증자 유가족 간 교류 활성화

- 기증자 유가족 간 정서적 교류 활성화와 자조 모임 강화를 통해, 유가족의 예우 체감도를 향상하고 기증 후 만족도 제고

□ 기증인식 제고를 위한 생명나눔 교육·홍보사업

○ 대국민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저변 확대

- (청소년 및 일반인) 온라인 교육 및 교육 재신청 학교 확대로 생명나눔 인식 제고
- (생명나눔 전문강사) 생명나눔 통합 강사 육성으로 전문성 있는 현장 지원 강화

○ 대국민 홍보를 통한 생명나눔 가치 확산

- (기증희망등록 접근성 강화) 온라인 상담 강화 및 신분증 발급 기관 기증희망등록 안내 확대
- (누리소통망 및 언론홍보 강화) 온라인 홍보 확대로 국민 점점 생명나눔 문화 조성

Ⅲ. 중점 추진과제

① 기증관리사업

□ 뇌사 기증 발굴 확대·관리 기능 강화

- (EMR 연계 통보시스템 확대) 뇌사추정자 발생하는 300병상 이상 전국 의료기관 대상 전자 통보시스템 구축까지 연차별 확대* 지속('20~)

* 시스템 운영기관: 6개^{'20년} → 26개^{'22년} → 46개^{'24년} → 51개^{'25년}

- (장애요인) 기증원-의료기관 간 일대일 협약, 의료기관 전산 환경, 참여 의지 등에 따라 시스템 확대 제한

- (대응계획)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K-net)* 통한 뇌사추정자 신고시스템 운영 협의후 및 신고 기능 구축과 EMR 인증기준** 신설

*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식 대기자 등록, 기증자 정보 등록 등 장기·조직·혈액 정보 통합 관리

** EMR 인증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품질 및 보안성을 갖추도록 국가가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공공정보연계 필수항목으로 현재 감염병, 예방접종, 연명의료결정, 마약류 투약이력 등 인증기준 운영

- (응급실-중환자실 기증 연계 표준화) 응급실 내 기증자 발굴 업무 표준화 및 전과에 따른 진료의 간 '기증 업무 커뮤니케이션' 표준화 추진('26~)

- (장애요인) 응급실 내 긴박한 환경 및 낮은 의료진 관심도

- (대응계획) 응급실 맞춤형 기증자 발굴 업무 및 진료의 간 '기증 업무 커뮤니케이션' 표준화로 의료진 참여율 제고

- (의료질 평가 지표 도입) '뇌사추정자 신고 수' 시범지표 도입('23년 실적부터 평가)후 확연한 뇌사추정자 신고율*증가,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신고율 제고를 위해 본 지표 전환 추진 지원(~'27)

* 500병상 이상 병원 신고율 36.6%(22.1명^{'21~'22}→35.1명^{'25}), 1,000병상 이상 병원 신고율 66.2%(29.0명^{'21~'22}→52.8명^{'25})까지 증가

- (대응계획) 의료기관 의견 수렴을 통한 지표 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협의 등 지원 강화

□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 **(운영기관 확대)** 기증 과정 중 저해 요인 파악 및 개선 활동, 진료과·중환자실 대상 간담회 등 기증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병원 중심에서 2차 병원까지 협약 단계적 확대 지속('12~)
 - ※ 운영기관: 26개^{'12년} → 61개^{'15년} → 76개^{'20년} → 94개^{'25년}
- **(대응계획)** 준종합병원 대상 의료 환경, 잠재 기증자 발생 등 잠재력 분석으로 신규 운영병원 선별·협약 추진, 기증활성화 위원회 개최로 의료진, 행정가 등 의견 수렴으로 의료 현장 중심 전략 수립·시행
- **(In-house 코디네이터 확대)** 진료과-기증원 상시 기증 면담 프로그램 기능 강화를 위해 거점병원 대상 상주 코디네이터 배치 단계적 확대 지속('23~)
 - ※ 운영기관: 14개^{'23년} → 21개^{'24년} → 29개^{'25년}
- **(대응계획)** 주요 거점병원의 잠재 기증자 신고·기증 면담률 등 기증 단계별 성과 분석하여 환류 활동 및 배치 확대 추진
- **(기증활성화 워크숍)** 장기·인체조직 공통 현안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권역별 의료기관에서 전문학회, 공공조직은행 등 관계기관까지 연차별 워크숍 추진 지속('23~)
- **(대응계획)** 권역별 특성에 따라 뇌혈관 전문병원, 뇌혈관외과·외상외과 등 전문학회, 공공조직은행 등 실무 특화 워크숍 추진

□ 기증자 관리·지원체계 강화

- **(기증관리 거점병원 운영)** 기증 동의 후 뇌사판정 및 기증 수술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뇌사판정기관 대상 뇌사관리 업무협약* 확대('11~)
 - * 뇌사관리 업무협약: 뇌사판정기관(101개) 대상 80개(79.2%) 협약 확대
 - ** 협약 기증률: '17년 41.6%(515명 중 214명) → '25년 81.9%(370명 중 303명)
- **(장애요인)** 현행법상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뇌사판정의료기관이더라도, 의료 인력·병상 부족 등 병원 여건에 따라 기증 절차 진행할 수 없거나 지연 사례 발생

- **(대응계획)** 종합계획 추진 과제에 따라 365일 24시간, 뇌사판정대상자를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5개 공공의료기관을 단계적 지정하여 전문 인력, 시설·장비 등 인프라 집중 지원 및 적정 보상 지급(~'30)
- **(공공이송서비스 지원)** 2차 병원에서 뇌사판정기관으로 기증자 이송 과정에 지자체 중증환자 공공이송사업 활용(서울시→경기도 확대) 24시간 신속·안전한 기증자 이송체계 확충('24~)
 - **(장애요인)** 현재 운영 지역이 서울시·경기도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 사업 여건·예산 편성 등 운영 상황에 따라 지역 확대 운영 제한
 - **(대응계획)** 서울시·경기도 중심 병원별 공공이송 연계 확대, 지자체 간담회 등 우수사례 공유 확산으로 공공이송사업 활성화 추진
- **(장기·조직 원스톱 기증 확대)** ‘기증자 이송’, ‘신체 훼손 거부감’ 등 조직기증 거부 건 감소를 위해 의료기관-기증원-공공조직은행 간 뇌사자 장기·조직기증 원스톱 협약 연계 강화('17~)
 - **(대응계획)** 뇌사 기증 시, 부분 조직기증(혈관, 피부, 심장판막 등) 장려, 조직기증 전담 인력 배치 및 기증 적합군 확대(고령, 폐렴, 외국인 등) 등 조직기증 확대
 - * 원스톱 업무협약: 13개^{'17년} → 43개^{'21년} → 65개^{'25년}
 - ** 인체조직기증자 수: 111명^{'17년} → 114명^{'21년} → 180명^{'25년}
- **(디지털 의료정보 교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활용하여 기증 절차상 기증자 관리병원(뇌사판정기관)과 이식의료기관 간 뇌사판정대상자의 진료정보(진료정보·영상정보 등) 제공·공유 체계 마련('26~)
 - **(장애요인)** 현 진료정보교류 업무 체계는 환자 진료를 위한 의뢰·회송을 전제로 하여, 기증 절차상 뇌사판정대상자의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별도의 업무 처리 절차 마련 필요
 - **(대응계획)** 진료정보교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우선 참여시켜, 업무 담당 부서 지정, 정보 제공·공유 절차 등 표준화하고, 뇌사 관리 단계부터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정보교류 추진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 현재 뇌사자 외 기증자 범주 확대를 위해 장기이식법 및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 개정 후 추진('26~)
 -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연명의료중단결정자가 연명의료중단으로 사망 후 장기기증
- (장애요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연명의료결정 등에 관한 절차’가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입법화되어 있으며,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자의 장기기증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상 쟁점 요인* 발생
 - * 쟁점요인: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즉시 이행하도록 규정하나,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중단 이행 전 기증 동의, 이식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사·처치 등 필요
- (대응계획) 연명의료결정법과 장기이식법 동시 개정을 위해 입법 심사자료, 공청회 등 적극 지원, 법률 개정 이후 세부 업무 지침 마련 및 적정 수가 반영 등 추진

② 기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사업

□ 기증 중 유가족 예우

- 기증 현장 속 기증자 예우 활동
 - 장기기증자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올림길(Honor walk)* 및 생명 나눔 안내 방송 시행
 - * 올림길(Honor walk) : 기증자의 마지막길(중환자실→수술실)에 의료진 참여 추모식
- 기증 중 지원
 - 유가족 대상 상담, 기증자 혜택 안내, 장례 절차 및 행정처리 지원
- 기증자 장례식장 이송 지원
 - 기증 수술 후 유가족이 원하는 병원 외부 장례식장까지 기증자 인도 지원

□ 기증 후 유가족 예우

- 유가족 심리상담 및 사후 지원프로그램 연계
 - 가족지원서비스에 동의한 유가족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정서적 지지 및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유가족 심리 회복 지원 강화('26년~)

- 유가족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 심리상담 지원 확대(기존 10회→20회)
- 사별유형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 지지 및 회복 강화

○ 자조모임 운영 다각화('26년~)

- 기증자 유가족(당사자) 중심의 자조모임 운영
- 유가족 가족 구성원과 함께하는 모임 (지역별 1회) 운영

○ 기증자와 이식수혜자 간 교류 확대

- 전국 이식의료기관 유가족-수혜자 간 온·오프라인 서신교환 지원
- 웹 접근성 개선, 홍보·교육을 통한 운영 활성화 추진

□ 기증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업 추진

○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생명나눔 기증자에 대한 지역별 지원 수준 편차 존재하여 형평성 있는 예우 제공 체계 마련 필요
- (근거)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2026~2030), 20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 추진 방안

- 지자체별 예우 격차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지원 확대
- 장사시설 등 지역 기반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기증자 예우 현판 설치 및 활용
-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우수사례 전파

□ 가족이 없는 장기등 기증자 장례서비스 등 예우 지원 (~'28년)

○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생전 기증희망등록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하여 가족이 없는 장기등기증자의 기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부재로 장례 진행이 어려운 기증자의 예우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근거)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2026~2030)

○ 장애요인 및 추진 방안

- (장애요인)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유족에게만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규정
- (추진방안)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의 협의를 통한 법령 개정 추진 및 사업 구조 정비를 병행하여 제도적 기반 확보

3 기증인식 제고를 위한 생명나눔 교육·홍보사업

□ 의료진 및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홍보 강화

○ (의료진 및 기증종사자 교육·홍보)

- (의료진 교육) 병원별 교육외 보수교육·전문학회 연계로 기증 실무 교육 확대
- (기증종사자) 의사소통등 상담역량 강화위한 전문 연계 및 심화 워크숍등 전문 지식 습득으로 실무역량 강화

○ (장사 시설종사자 교육) 장사시설 종사인력 연간 교육과정에 인체조직 기증 교육 신설 추진으로 사후 인체조직 활성화 기반 확대

- (장애요인) 장사시설 종사자 교육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근거 하 한국장례진흥문화원에서 시행. 인체조직기증 교육을 위한 협약 및 교육 근거 마련 필요
- (대응계획) 교육 근거 마련과 관계 기관 협약 Two track으로 장사 시설 종사자 교육 추진

□ 대국민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저변 확대

○ 교육지원 체계 구축

- 생명나눔 특화 전문강사 양성 및 대국민 대상 오프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 생명나눔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의무(학교, 기관 등)교육 도입 및 시행(현재 학교장 및 기관장의 재량으로 운영)
- 생명나눔 특화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학습과 소통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심화학습 강화

○ 온라인 교육 확대

- 대상별(일반인, 청소년 등) 맞춤 온라인 교육 콘텐츠(AR/VR, AI 등) 제작 및 확산으로 교육 접근성 제고
-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개설 및 체계적 관리
 - 성공적인 교육 제공 및 확대를 위해 정책적(제도 정비, 재정 지원 강화 등)지원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긍정 문화 형성 필요

□ 대국민 홍보를 통한 생명나눔 가치 확산

○ 사용자 친화 콘텐츠 제작으로 미디어 플랫폼 반응 지수 강화

- SNS 광고, 협업 콘텐츠, 이벤트 연계 등을 통한 콘텐츠 활성화
- 매체별 맞춤 콘텐츠 제작으로 콘텐츠 다양화

○ 온라인 플랫폼 활용 협업 강화를 통한 콘텐츠 대국민 접점 확대

- 매체별 콘텐츠 게시 확대로 언론보도 확대 및 허위 정보 확산 방지
- 블로그(파워콘텐츠) 광고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
- 포털사이트 알고리즘 변화, 주요 키워드를 고려한 콘텐츠 제작으로 기관 SNS 노출 제고

○ 언론보도 및 허위정보 대응 강화

- 생명나눔 보도 활성화로 기증 인식 개선 창구 역할 강화
- 기증 및 기관 보도자료 발굴 확대를 통한 긍정 기증 인식 확대
- 허위정보 매뉴얼 체계화 및 예방 활동 강화

○ 민관 협업 범국가적 생명나눔 캠페인 내실화

- 생명나눔 정보 강화를 통한 생명나눔 희망의씨앗 캠페인 질 강화

○ 온라인 챌린지 및 플랫폼 연계 생명나눔 활동 정례화

- 대국민 온라인 걷기 캠페인 등 기증원 고유 캠페인 개발로 기증원 브랜딩 및 생명나눔 인지 효과 강화
- 의료기관 협업 강화로 의료진 온라인 캠페인 활성화

○ 지자체, 민간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지자체) 생명나눔 동행 콘서트 확대로 대국민 생명나눔 인식 강화
- (민간) 생명나눔 가디언스 활용 확대로 대국민 접점 강화
- (의료기관) 포럼, 학술대회 등을 통한 최신 기증 현안 논의 등 소통 강화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보건경영체계 기반의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인프라 관리 및 활용으로 안전보건 향상 및 안전사고 Zero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개최 정례화
 - 임직원 산업안전보건 의무교육 100% 수료, 상시 재난대비 훈련 실시, 기타 안전보건관련 교육 실시
 - * 심폐소생술, 유해화학물질관리, 위험성평가, 교통사고 예방, 소방안전 교육 등
 - 지역 보건소 연계 대사성 이동검진 프로그램 운영(반기별), 직종별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
- (사업장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장 집중 안전 점검과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보장
 - 사업장 집중 안전점검 24회 실시, 위험성 평가 결과 유해·위험 요인 선제적 관리 및 100% 개선
 - 지역별 코디네이터 면담 확대 및 전 지소 비대면 점검 병행
 - 안전 점검 체계 개선 및 비상 대피 안내 영상 제작·활용
 - 근로자의 산재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물품 지원
 - * 안전화 및 보건화, 가운, 저온장갑 등 각종 보호구, 근골격계질환 예방 물품 등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및 정보보안 솔루션 도입을 통한 정보화 인프라 강화
 - * 개인정보 처리 방침 현행화 전년대비 300% 상승('24년 1회 → '25년 4회)
 - * 정보보안 솔루션 도입(위협탐지솔루션, 패치관리솔루션, 보안 USB, EOS 방화벽 교체 등)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지역사회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생 확산으로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
 - 기관 창립기념일 워크숍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소화기 점검, 환경 정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추진('25년 4월)
 - 공공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간 협업을 통한 서대문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지역사회 응급상황 역량 강화 지원('25년 11월)
 - * 일반시민 등 총 35명 참석, 프로그램 만족도 90.5점 달성

- (상생·협력적 구매)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 인지세 분할 납부 시행 및 공공조달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로 중소기업인 상생 강화
 - 정부권장정책 이행 강화 및 내부 공모전 시행 등을 통해 정부 구매 실적 3년 연속 100% 달성
 - 지역시장 농산물 구매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등 지역사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
 - * 농산물 9,420천원 , 온누리상품권 30,530천원 구매

③ 대국민 소통 노력

- (상담 채널 확대 및 접근성 개선) 기증희망등록 상담 채널 다양화 및 대면 상담 채널 확대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수어 통역 서비스^{신설} 등 다양한 상담 채널 운영 및 구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업을 통한 지자체, 운전면허시험장 등 기증희망등록 안내 및 상담 창구 마련^{신설}
 - * 상담 창구 11개 마련
 - * 「장기법」제6조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 국립장애인도서관 협업을 통해 생명나눔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용 사례집(PDF 포맷 변환)마련
- (대국민 소통 강화) 대면, 온라인 홍보 다각화로 대국민 소통 점점 확대
 - 뇌사장기기증 안내서, 콘텐츠 등 영문판 제작 및 재한 외국인 대상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시행
 - 부정 뉴스 확산에 따라 SNS 활동 강화, 이벤트 및 온라인 광고 강화로 정확한 정보 제공
 - * 기관 누리집 방문자 전년대비 56.5% 상승('24년 146,868명→'25년 229,893명)
 - * 언론보도 전년대비 20.1% 증가('24년 2,423건 → '25년 2,910건)
 - * 언론소통 활성화 실적 전년대비 20% 증가('24년 720.8점 → '25년 865.2점)
 - 청소년 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기증 정보 전달
 - * 청소년 교육 전년대비 138% 확대 ('24년 81,819명 → '25년 112,865명)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국정감사] 장기기증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필요[김예지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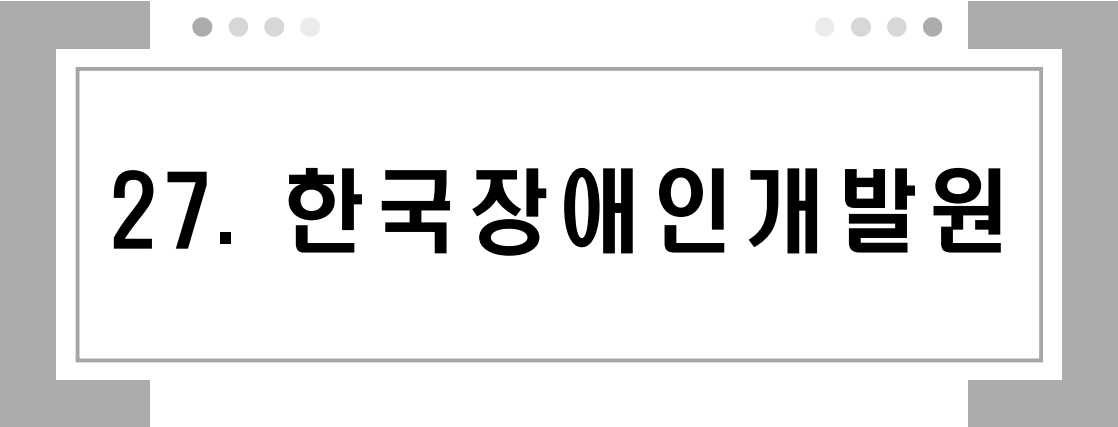
- (주요내용) 온라인상 유포되는 기증 관련 허위 사실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기증 의사를 저해함
- (개선계획) 매일 1회 이상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사적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인들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② [국정감사] 장기기증 활성화 및 동의율 제고 방안 마련[소병훈 의원]

- (주요내용) 뇌사 장기기증자는 감소하는 반면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낮은 기증 동의율을 극복하고 기증을 활성화할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됨
- (개선계획) EMR 기반 전자 통보 시스템을 확대하여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스페인의 In-house 코디네이터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상주 코디네이터를 거점 병원 배치를 확대하여 ‘진료과 설명-상시 기증 면담’ 체계를 강화하겠음

③ [국정감사] DCD(순환정지 후 기증) 제도 도입 및 인식 제고[서영석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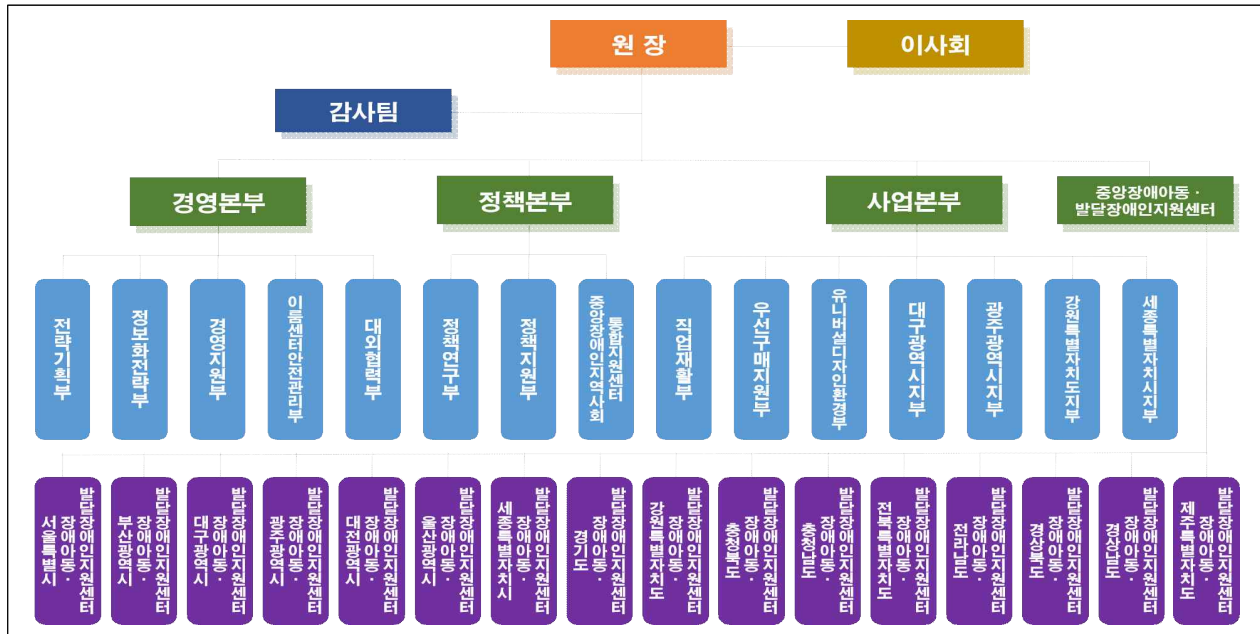
- (주요내용) 새로운 기증자 범주 확대를 위해 DCD(순환정지 후 기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명의료 중단 과정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이 필요함
- (개선계획) 장기이식법 및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를 지속하고, DCD 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 마련, 시범사업 추진, 적정 수가 반영 및 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thick, gray L-shaped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frame, at the top,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ay dots,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27. 한국장애인개발원

I. 일반현황

① 기구 및 조직 현황 : 3본부 2센터 10부 4지부 16지역센터



□ 인원 현황 : 현원 512.5명

(단위 : 명, '25년 12월 기준)

구분		계	원장	별정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무기직	운영직	기간제
정원	계	461	1	1	2	7	8	21	32	16	365	8	-
	본원	214	1	1	2	7	8	21	32	16	118	8	-
	지역	247	-	-	-	-	-	-	-	-	247	-	-
현원	계	512.5	1	1	2	7	8	19	26	12	331	8.5	97
	본원	227.5	1	1	2	7	8	19	26	12	111	8.5	32
	지역	285	-	-	-	-	-	-	-	-	220	-	65
여성	계	333.5	1	0	1	3	5	10	16	6	221	2.5	68
장애	계	24.5	1	1	0	1	1	3	1	0	10	1.5	5

※ 여성 직원 비율: 65.1%, 장애인고용률: 7.45%(중증장애인 2배수 환산 적용)

③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80,893	89,034	8,141	10.1
보조사업(고유)	11,581	12,963	1,382	11.9
보조사업(수탁)	61,025	68,637	7,612	12.5
자체사업	8,287	7,434	-853	-10.3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 맞춤형 장애정책 확산

- (정책연구 및 개발) 장애인 표준소득과 소득불평등 지표연구, 주거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맞춤형 재난재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장애인 정책연구* 선도
 - * 연구보고서: '21년 39건 → '22년 34건 → '23년 41건 → '24년 38건 → '25년 42건
- (데이터 개방·활용)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통한 장애통계 플랫폼 구축 등 주요정책 근거자료 생산에 기여
- (돌봄통합사업)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 시범사업 진행 중, 본 사업 지침 및 매뉴얼 개발 중
- (지역사회 자립지원) '21년 수립된 탈시설로드맵에 따라 '22년 9월부터 만 3년간 시범 사업 중('25년 현재 시설 및 재가장애인 대상 35개 지자체 457명 서비스 제공, 32명 지원종료, 현재 425명 시범사업 참여 중)

□ 자립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직업재활강화 및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직업재활강화)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카페(I got everything) 및 편의점(CU장애인편의점) 안착*
 - * '25년 12월말 기준 장애인 카페 114호점, 편의점 4호점 개소
 -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통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보장
 - * '24년 기준 814개소 생산시설 지정·운영 / 전체 공공기관 합산 총 7,896억 원의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선구매비율 1.09% 달성(법정 의무구매비율 1%)
-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물리적 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
 - (UD인식확산) 체험 중심의 UD(Universal Design) 공감주간 운영*, 역대 최고 국민 참여 수 기록으로 UD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대 지원
 - * '24년 UD공감주간 참여자 수 총 2,847명 참여 → '25년: 총 6,418명 참여로 작년 대비 200%이상 증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개별시설물에 대한 BF(Barrier Free)인증*을 통해 접근·이용·이동 등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
 - * '24년 720건(예비인증 434건, 본인증 286건) → '25년 12월 626건(예비인증 290건, 본인증 336건)

□ 체감도 높은 권리보장 강화

○ 발달장애인 활동 및 돌봄 서비스 기반 조성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전국 17개 지역센터 설치·운영,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독서,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 제공

- (발달장애인 돌봄) ①보호자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최종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2개소) 추가 설치, ②고난이도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최종증통합돌봄사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적·통합적인 돌봄 지원체계 강화

○ 형사사법절차 등 권리구제

- (권익·안전망 강화) 후견인 선임지원을 통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법률행위 지원하고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안전망 구축

* 권리구제 :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사소통 지원, 심리적 안정 지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 체계 강화

- (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돌봄서비스 인력풀 확대를 위해 제공인력 처우개선('24년 시급 12,140원 → '25년 시급 14,140원)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자격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제도 실시

2 보완점

- (맞춤형 장애정책 확산) AI(Artificial Intelligence),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를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정부정책이 장애인복지 현장에 적시 반영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자립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BF인증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환경 조성
- (체감도 높은 권리보장 강화)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수요자(부모) 욕구를 고려한 사업으로 돌봄 경감과 국가책임 강화

3 향후 업무추진방향

1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강화

- 국정과제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인정책 관련 이슈를 반영한 연구*로 국가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 고령, 여성, AI기술, 문화예술, 고용, 돌봄 서비스, 재난, 안전, 건강, 사업평가 등

- 장애계 현안에 대한 당면과제 맞춤형 연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정책개발 제도설계,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실시

2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 일자리, 활동지원 등 사회참여 기반 지원

-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주거전환 사업, 직업재활지원사업, 공공일자리, 우선구매지원사업 등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소득보장, 접근성 보장을 위한 BF인증 및 운영기관 내실화

3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서비스 강화

- 발달장애인 수요자(부모) 욕구를 고려한 24시간 통합돌봄사업 등 사업대상자 확대를 통한 돌봄 경감과 국가책임제 안착 지원

-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긴급돌봄지원사업과 최종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2개소) 안정적 운영으로 국가책임 강화

4 장애아동 가족지원 체계 강화

-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유관기관과(건강보험공단 등)의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사·도 의무설치 및 국비 지원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24.12.21) 및 시행('25.12.21.)

- '26년 상반기 공공기관 수시증원 요구를 통해 장애아동지원센터 담당 인력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

Ⅲ. 중점 추진과제

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강화 [79]

□ 수요자 중심 연구·통계DB(Date Base) 내실화

- 국정과제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법률 제·개정 등 장애인정책 관련 이슈를 반영한 연구의 연속적 수행으로 정부정책지원 강화
 - (정책연구 강화) 고령, 여성, 정신장애인, 문화예술, 고용, 돌봄 서비스, 재난, 안전, 건강, 사업평가 등
- 장애분야 AI 및 고령 장애인 관련 주요 현안 대응 정책연구
 - (AI 기술) 시각장애인 AI 기술 이용경험과 AI 기술을 이용한 정보 접근성 개선방안 및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 현황 관련 연구 수행
 - (고령장애인) 초고령사회에 따른 고령장애인의 복지 실태 및 돌봄 통합지원 관련 연구 수행
 - (정신장애인) '21년 법개정, 정신장애인의 단계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신장애인 가족지원방안 연구 수행을 통해 자립생활 증진 및 사회통합
 - (돌봄) 장애인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 수행

□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강화

- (콘텐츠 개발) 장애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매뉴얼 개정 및 반기별 재난 상황(폭염·태풍, 한파 및 폭설 등)을 반영한 카드뉴스 보급
 - 특히, 시각장애인용 점자 매뉴얼 개발 및 동영상 제작 추진
- (교육사업) 재난상황에 대한 중증장애인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소방본부), 장애 전문가와 함께하는 방문 교육 확대 시행
- (재난안전 연구 지속수행) 국가별 장애인 포괄 재난안전 정책 비교분석, 재난 안전 정책 자료 마련, 장애전문가 및 당사자 간담회 지속 추진

□ 장애 통계 데이터 기반 강화

-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및 정책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통계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4차 년도)
 - (공공데이터 개방) 장애인 삶 패널조사(1~7차) DB 중심의 통계 아카이브 구축으로 장애통계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정책연구성과 확산) 제6회 장애인 삶 패널조사 데이터 설명회,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 **국내 장애복지연구 학술지 발간 및 국외(동아시아) 학술네트워크 운영**
 - 장애인복지연구(등재학술지) 연 2회(6월말, 12월말) 발간, 국내 장애인 복지학회 학술대회 공동운영 및 해외학술대회 참석·발표(2026 동아시아장애학 포럼)를 통한 국내 장애복지연구 확산

②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79]

□ 4차년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정적 추진('22년~'25년)

- 35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및 총 457명 자립지원('25.10월 기준)
 - * '25년 자립지원 600명 목표, '26년 자립지원 800명 목표
 - ** 기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서 보호자의 장기부재 등으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까지 지원범위 확대
- 시범사업 참여 지역 대상 매입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국토부(LH)와 지속 협의(국토부 매입임대 협의 및 특화형 공모 참여 등)
 -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욕구상담 운영계획 수립 및 자립조사 교육**
 - 시설 폐지, 규모 축소 등에 따른 시설 장애인 자립욕구 상담 지원 등
- **지역사회로 주거 전환 및 서비스 연계**(총 425명)
 - 전담인력 149명 재직 및 배치(장애인 2.9명당 전담인력 1명)
 - 소득지원(생계, 주거), 추가활동지원(집중지원형 월 200시간), 일자리, 건강검진, 보조기기 지원 등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

○ 장애인 자립지원 본 사업 및 제도 기반 마련 정책연구 등

-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사업* 추진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주거생활서비스 등의 자립지원 운영 방안 연구 등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5.3.18.) 및 시행(‘27.3.19.)

□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직업재활강화 및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직업재활수행기관(총 159개소,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 수행기관 평가(유형별 3년 주기) 및 컨설팅, 사업수행인력 역량강화교육 등 실시하여 직업재활서비스 품질 제고
-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및 편의점사업(CU장애인편의점) 활성화

○ 장애특성,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해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안정화와 확대 추진

* '25년 신규 직무 3개 ❶알기 쉬운 자료 감수(발달장애 특화), ❷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고령장애 특화), ❸홍보 지원 업무(정신장애 특화)' 3개 시범 운영 → 직무적합성 판정 후 직무매뉴얼 책자, 영상 배포 → '26년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로 도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품목 발굴 및 생산설비 지원, 판로확보 등 원스톱 구매 인프라* 구축

* 신규품목 제안 공모, 신규품목 인큐베이팅 사업 생산화 생산시설 선정, 신규품목 홍보 및 마케팅, 판로개척 등 안정적인 시장 정착과 지속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

- 수의계약 대행, 마케팅 강화를 통한 공공 판로 확대 추진
- 플랫폼 제휴(우체국쇼핑몰 등), 박람회 부스운영, 사립학교(2,163개소) 홍보 등을 통한 민간 판로 확대 추진

□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물리적 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

○ UD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강화 및 UD환경에 대한 영향력 확대

- UD전시·체험, UD국제세미나, UD국제 아이디어 대전 운영 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기관 역할 수행
 - BF인증 제도이해 제고 및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BF인증 관련 연구 진행
 - BF인증기관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인증절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BF인증기관 합동 사후관리 조사 수행 등

3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서비스 강화 (79)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강화

- **(발달장애인 활동)**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지원)**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발달장애인 돌봄)** 긴급돌봄지원 및 최종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안정적 운영
 - 고난이도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최종증통합돌봄사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적·통합적인 돌봄 지원체계 강화
- **(부모·가족 지원)** 보호자에 대한 ①생애주기(영유아기·성인전환기·성인권)별 양육기술훈련 및 부모교육 제공, ②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제공 등

형사사법절차 지원 등 권리구제 강화

- **(공공후견지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법률행위 지원을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 공공후견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대기 방지 및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지원*
 - * 피후견인 타지역 전입 등 후견인 변경, 법률관계 복잡 등 난해사건에 대하여 중앙센터 소속 변호사 위임을 통한 직접 청구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방문 → 피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 및 재판 출석 시(가해자, 피해자 모두 해당) 수사절차부터 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절차 지원*
 -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뢰관계인 동석(의사소통지원, 심리적 안정지원)

4 장애아동 가족지원 체계 강화 [79]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전국 18개 사업시행기관 운영 지원 및 관리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방안 강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9개 영역)

- 장애아동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원 강화

-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유관기관과(건강보험공단,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원 체계 구축 및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시도 의무설치 및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24.12.21) 및 시행('25.12.21.)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17개소 신규 설치를 위한 2026년 정부 예산 5,853백만원 반영
지역센터 17개소 5,224백만원(국비50%), 중앙센터 629백만원(국비100%)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안전 최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안전경영책임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재난대응체계 내실화로 산업재해 ZERO
 - (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25.11),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25.12)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시설물 및 근로자 안전 확보) 안전관리·감사 부서 합동 점검, 위험성 평가('25.11.)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 완료(180건)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노력) 사이버 재난 대응 및 보안 인식 강화
 - (규정·내부지침 정비) 사이버위기 대응실무 매뉴얼·정보보안 업무지침·암호 키 관리 지침 등 매뉴얼 및 지침 개정
 -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체계 확립) 2·4분기 사이버 위기대응·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25.5., '25.11.)
 - (보안 인식 제고) 기관 주요 장소에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 홍보용 포스터 배치 및 홈페이지·웹진에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 홍보 진행('25.9.)
 - (개인정보보호 교육) 업체('25.6.), 전 직원('25.7. ~ '25.11.), 중간관리자('25.7. ~ 8.), 개인정보취급자('25.9.)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진행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기업과의 연대로 장애인일자리 신규 창출
 - (CU장애인편의점) BGF리테일과 함께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 실현
 - * 모두가 편리한 장애물 없는 편의점 개소(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외 3개소)
 - (지역사회 장애인일자리 창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33,546명('25.)의 일자리를 창출, 전년 대비 6.4%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 기업과의 상생·협력)**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및 판로지원 강화
 - **(판로 다각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 품목 아이디어 공모* 및 우선 구매 박람회를 통해 혁신품목 발굴 및 시장 진입 지원
 - * (신규품목) 태양광 도로 표지병, 드론(고정익, VTOL) 제작 KIT 등 5개 품목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선도)** 구매율 8.43%('24년 기준)로 법정 기준(1%)을 8배 이상 초과 달성*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기관 총구매액의 1.1%(~'24,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3 대국민 소통 노력

- **(대국민)** 정부의 국민 참여·정부 혁신 기조를 반영, 사업 및 경영 전 과정에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혁신성과 창출 노력
 - **(내 용)** 공익광고 등 연중 대국민캠페인 진행, 전국민 대상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에 국민 참여 유도, 국가정책에 대한 전사회적 공감대 조성
- **(미래세대)** 장애 관련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장애인 청년 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 **(오프라인)** 장애인정책 청년 모니터링단 운영('25.4 ~, 50명)
 - **(내 용)** 청년기자단 코디Y* 활동, 챗코디** 모니터링 등 활동을 통해 장애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현장의 의견 또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온라인 캠페인 등 추진
 - *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에 기여
 - **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 기능을 챗코디(CHATKODDI)에 구축, 대국민 손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함(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25.6.)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① 장애인 재난 안전대책 강화 ('25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장애인 재난 대응, 안전가이드 제작에 그쳐선 안되며 면밀한 분석과 제도개선 필요
- (개선계획) 장애인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방문형 장애인 재난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대응 지침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정책 개선연구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 고도화뿐만 아니라 면밀한 기초자료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를 수행하여 장애인 재난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②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통합사업 ('25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장애인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확보 필요
- (개선계획) '26년 돌봄통합 전문인력 6명 및 사업 예산 505백만원 확보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준비 중
 - '26년 사업추진 현황 및 모니터링을 통해(지자체 사업실시 현황 및 참여인원 등), '27년 필요예산 및 인력 증원 등 고려

③ 형사사법절차 지원 등 권리구제 강화 [’25년 국정감사 국민의힘 개혁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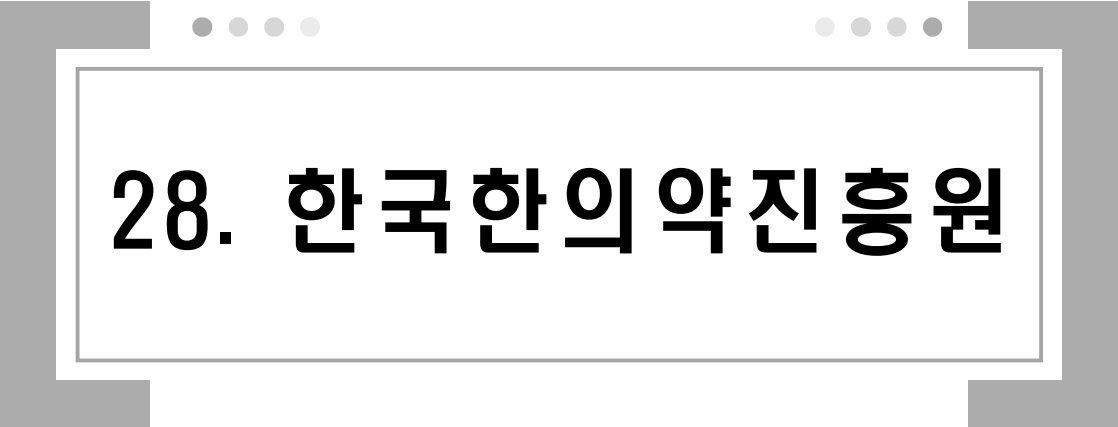
-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전문가 확충 및 센터별 기준인력 준수 필요
- (개선계획)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지역센터별 최소 4명 이상의 담당 인력 확보(변호사 등) 등을 통해 형사사법절차 지원, 수사재판과정 지원 등 발달장애인 권리가 보장 강화

④ BF인증운영기관 역할 강화 [’25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장애인개발원은 BF인증운영기관으로 인증제도를 총괄하고 사후관리, 인증기관 관리 등 인증운영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필요함
- (개선계획) ’24년 8월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되고 3억원의 예산확보를 통해 합동사후관리, 인증지표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전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현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전문가 양성 등 인증운영기관으로써 재역할 수행을 위해 ’27년 사업예산 9억 6백만원 확보 필요

⑤ 무기계약직 고용 편중 [’25년 국회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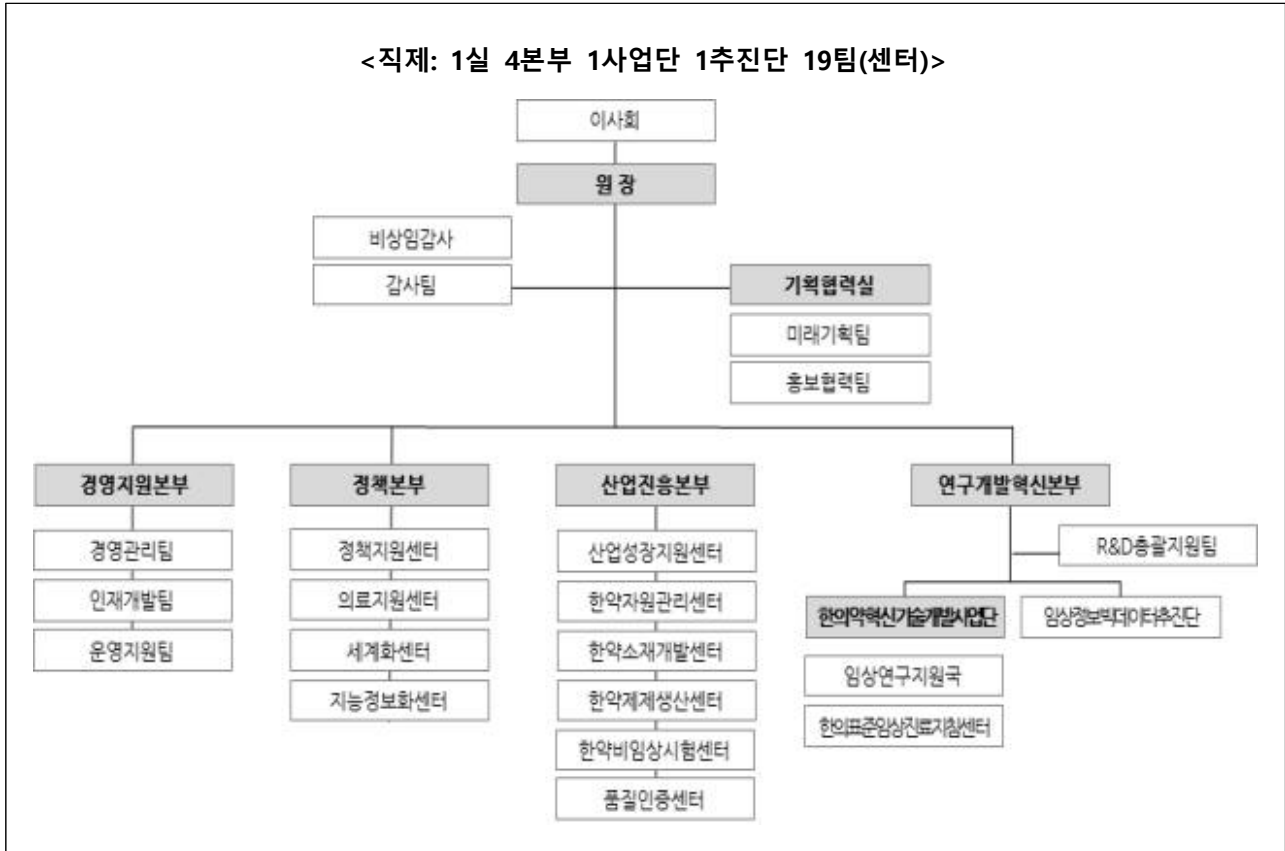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무기계약직 고용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사업 중심 인력 구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탁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개선계획) ’27년 예산요구서 제출 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상시적(장기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세부사업으로 통합추진 예정
 - 세부사업 예산 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 예정

A decorative frame consisting of two large, thick, grey L-shaped bracket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Inside the frame, at the top, are two sets of four small grey dots,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In the center of the frame is a white rectangular box with a thin grey border. Inside this box is the text "28. 한국한의학진흥원" in bold black font.

28. 한국한의학진흥원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2 인원 현황

<단위: 명, 기준일자 2026. 1. 12.>

구 분	직급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무기
정 원		147	1	2	2	4	16	27	30	13	52
현 원		141	0	2	1	3	15	27	29	13	51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운영보조금	9,659	10,191	532	5.5%
사업수입금	33,341	31,413	△1,928	△5.8%
사업외수입금	120	120	-	-
기타수입금	168	167	△1	△0.6%
전기이월금	20	20	-	-
합계	43,308	41,911	△1,397	△3.2%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기관은 「한의학 육성법」 제13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한의학 분야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법상 수행기능을 한의학분야의 정책, 산업육성, 연구개발 지원, AI, 해외진출로 구분하고 기관 운영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한의학정책분야) 국정과제를 연계·반영한 한의학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공·AI 추진과제의 체계적 기반 마련
 - (성과①) 제5차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제4차 종합계획 성과를 점검하고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지역·공공·AI 추진과제 기반 확보
 - (보완점) 기존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과는 달리 국정과제 연계하여 작성, 이에 따른 국정과제 연계된 성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 추진체계 필요
 - (성과②)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 수립 지원(맞춤형 컨설팅, 작성지침 제공 등)
 - * 지역계획 제출 지자체 수 확대: '24년 165개 → '25년 188개(+23개, +13.9%)
 - (보완점) 지역균형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사업모델 개발 및 제공
 - (성과③) 한의학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모니터링 및 질 관리
 - * 한의학 건강돌봄 제공 지역 수: '24년 38개소 → '25년 72개소(+34개소, +89.5%)
 - (보완점) 한의학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 필요
 - * 한의학 건강돌봄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교육, 컨설팅 강화

- (성과④) 조제한약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 확대
 - * 인증 공동이용탕전실 수: '24년 21개소 → '25년 25개소(+4개소, +19.0%)

- (보완점) 공동이용탕전실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개선 필요

- * 관련 지침 개선, 평가인증 제도화 및 고도화 등

□ (한의학산업육성분야) 전주기 기업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및 한약재 공급·안전관리를 통한 한의학 산업 활성화 기여

- (성과①) 한의학 기업 전주기적 성장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기여

- *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창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3개 새싹(창업) 기업 발굴[※]
- * '25년 한의학 산업 분야별 제품화 지원을 통한 4개社 제품화(건기식, 연고 등) 완료 ('24년 3개社 → '25년 4개社(+1개社, +33.3%)) 및 한의 의료기기 2개社 제품 의료기관 입점 완료('24년 1개社 → '25년 2개社(+3개社, +100%))

- (보완점) 수요 맞춤형 기술 중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금 확대 필요

- * 새싹(창업) 기업 발굴을 통한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금 확보
- * 제품화 지원에서의 개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기간, 지원금 확대 필요

- (성과②) 한약재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한 한약재 수급 안정

- * 국산 한약재 품질관리·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설치한 전국 5개 지역 한약재유통 지원시설 운영 지원
- *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에도 제조업소의 경제적 이유로 미생산된 소량소비 한약재 공급 지원: '24년 15품목 → '25년 21품목(+6품목, +40.0%)

- (보완점) 국산 한약재 생산 확대를 위한 재배 활성화 지원 마련 필요

- * 국내 한약 재배 농가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 열세, 한약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점차 재배를 포기하고 타 작물로 전환하고 있어 한약재 수입의존도가 심화

- (성과③) 중소기업 제품 원료 소재 대량 생산 및 기술 지원으로 기업 매출 증대

- * (우수사례) 지원 중소기업 (주)바이노텍 영업이약: '24년 21.8억 → '25년 29.2억(+33.5%)

- (보완점) 적극적 홍보 및 인지도 제고활동을 통한 기업지원 확대 필요

- * 한의학소재은행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업지원 역할 확대

- (성과④) 한약제제 지표성분 설정 및 성분프로파일링을 통한 품질동등성 기술 향상
 - * 원생약과 한약제제의 동일한 지표성분 설정 및 성분프로파일 비교를 통하여 원생약의 지표성분이 한약제제로 잘 이행되는 것을 확인·개선
- (보완점) 한약제제 품질규격 표준화를 위한 영세제약사 지원 필요
- (성과⑤) 조제한약 품질 모니터링, 사후관리, 사례집을 통한 안전관리 인식 제고
 - * 모니터링(529건) 결과 원인분석, 개선 등 사후관리(87건), 조제환경 관리 등 안전관리 지원
 - * 조제한약 품질 모니터링 참여 공동이용탕전실: '24년 30기관 → '25년 33기관(+3기관, +10.0%)
- (보완점) 모니터링 참여 및 결과 개선조치 등 환류 위한 제도적 보완
 -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등 제도적 보완으로 품질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 (한의학 연구개발 지원분야) 한의학 R&D 기획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 (성과①) R&D공모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한 수요자 참여형 기획아이템 78건 확보[※]
 - * 한의학 연구개발 기술기획공모전(4건 선정) 16:1 경쟁률
- (보완점) 체계적인 기획 방법론 교육 제공을 통한 기술기획 질 제고 지원
 - * 연구자, 한의사 등 수요자 맞춤형 기획워크숍(교육) 프로그램 정례화 추진 예정
- (성과②) 한의학혁신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70개 지원, 신규과제 30개 선정 및 지원을 통한 안정적 관리
 - * 연구비: '24년 19,730 백만원 → '25년 21,879 백만원 (+2,149 백만원, +10%)
 - *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24년 26개 → '25년 30개 (+4개, +15%)
- (보완점) 연구 성과 확산 및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강화
 - * 2단계 협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24~'26) 대상 질환의 근거 연구 부분적 지원 중
- (성과③)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인증 및 보급·확산을 위한 전주기적 활동 추진
 -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추진: '25년 말 누적 61건('25년 7건)
- (보완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방법론 최신화
 - * WHO 전통의학 진료지침 개발 매뉴얼·개발 템플릿으로 현 매뉴얼 활용 예정

□ (한의학 AI 분야) 국가 차원의 한의학 AI 연구 기반 마련

- (성과①) 한의학AI사업단TF 신설(8.18.) 및 한의학 AI 추진계획 수립
 - *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학: AI와의 동행 토론회」 개최('25.9월)
- (보완점) 추진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과제 정교화 필요
 - *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기술·데이터·정책 측면의 구체적 로드맵 보완
- (성과②) 한의학 특화 챗봇 시스템 시범 구축
 - * 사용자 질의 의도를 분석하고, 시나리오-RAG에 기반한 대화형 챗봇 구현(1건)
- (보완점) 한의학 지식정보 기반 맞춤형 응답 서비스 정확도 제고 필요
 - * 외부 사용자 대상 인터뷰 및 사용성 검증 등을 통한 요구사항 체계적 수집
- (성과③)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 구축
 - * 한약 실험정보 DB, 네트워크 분석(한약재-질병 네트워크 탐색, 유전자 집합 기능 분석 등)(1건)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건수: '24년 429건 → '25년 534건(+105건, +24.5%)
- (보완점)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고도화 필요
 - * 한약 실험정보 관련 주요 기능 확장(예: 한약-성분-질병 네트워크 시각화 등)
- (성과④) 한의학 표준 EMR 프레임워크 기반 API 구축 지원
 - * '24년한의학 표준 EMR 입력도구 개발(1건) → '25년한의 의료기관 확산을 위한 표준 임상 정보 API 개발(1건)
- (보완점) 개발된 API의 의료기관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 한의 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 등)에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로드맵 수립

□ (한의학 해외진출분야) 한의학 해외수출 및 해외환자유치 기반 확대

- (성과①) UAE 한국 한의사 면허 인정에 따른 한의학 해외진출 기반 마련
 - * UAE 통합면허관리규정(PQR) 내 한의사 면허(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가 등재됨으로써 UAE 내 한의사 면허 인정 공식화
- (보완점) UAE 내 성과를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UAE 내 활용모델을 구체화하여 중동권 한의학 진출 기반 강화 필요

- (성과②)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허혈성 뇌경색예방제(1건)’ 미국 수출 확대
 - * 미국 아마존(온라인) 등록 완료('25.12) 및 약국(오프라인) 판매 확대
 - * 라디오(라디오서울, 라디오코리아), 신문(미주중앙일보, 미주한국일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광고·인터뷰 진행
- (보완점) 한의약 제품 수출의 질적·양적 확대 필요
- (성과③) 중국·일본 환자 유치 지원과 유치 국가 다변화(중동·동남아 등) 실현
 - * 지원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전년대비 20% 이상 상승(^{24년}4,276명 →^{25년}5,132명 예측)
- (보완점) 다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효율성 제고
- (성과④) WHO 본부 TCIM(전통·보완통합의학) 협력센터 재지정 완료
 - * WHO 협력센터 업무 및 성과 측정을 위한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협력센터 임무수행 4개년 로드맵' 도출
- (보완점) 한의약의 위상 강화 및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주변국과 협력 증대 필요
 - * 인도 모리총리 주도로 WHO글로벌전통의학센터 설립('22년) 및 WHO TCM 부서 통합('26년 예정)

□ (기관 운영분야) 대외 기관평가 우수등급 유지 및 국민소통 활성화

- (성과①) '25년 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5년 연속 A등급 달성
 - * 경영관리·한의약 정책 선도·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우수 평가
- (보완점) 우수등급 달성에 따른 내부 임직원의 금전 및 비금전적 동기부여 방안 마련으로 지속적인 성과향상 체계 마련 지원 필요
- (성과②) 한의약 육성 관련 정부정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운영 등 대국민 소통 강화
 - * (온라인) SNS 39회 13,594명 / (오프라인) 지역문화축제 연계 홍보부스 4회 9,800여 명 참여
- (보완점) 정보 전달을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양방향 소통 확대 및 ‘일상 속 한의약’ 브랜드 경험 확산 필요
 - * 국민 참여 콘텐츠 다각화, 확대 운영으로 국민의 능동적 참여 유도

2 향후 업무추진방향

- **(한의학정책분야)** 국정과제를 연계한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가동
 - 정부의 제5차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공표 후, 부처별 성과평가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추진체계 구축 지원
 - 지자체의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 수립 지원체계를 적극 운영하여, 지자체 수립 100% 달성
 - 한의학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 * 한의학 건강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및 지자체 맞춤 컨설팅 강화, 우수모형 발굴·확산 등
 - *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자 교육 강화, 한의학 건강돌봄 품질 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근거 구축
 - 한의주치의 등 한의 일차의료 지원체계 구축(**국정과제 85 연계**)
 - * 한의 노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고도화 및 조제한약 안전관리 제도개선 지원
 - * 공동이용탕전실 관련 지침 개선, 평가인증 제도화 및 고도화 등
- **(한의학산업육성분야)** 안전한 한약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및 한의학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성 강화
 - 한의학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맞춤형 지원
 - * 새싹(창업) 기업 발굴, 특허 기술이전 상용화 지원금 및 제품화 단계별 지원 체계 마련
 - * 한의학 산업 분류 체계 개선 및 통계 구축을 통한 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소량소비 한약재 공급 등을 통해 공급체계 구축
 - * 미생산 한약재 규격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유통 한약재 정보제공을 통해 한약재의 국민 신뢰 확보로 산업 확대
 - 한의학소재은행의 고도화된 정보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한의학소재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 * 소재 분양 기업의 매출 증가, 수상실적, IND승인 등의 사례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 입증

- 공공 GMP 운영을 통한 한약제제 품질 표준화 및 한약제제 산업 지원
 - * 공공 GMP 시설 활용, 위탁생산 수수료 감면, 제조공정 최적화, 품질규격 표준화 등 산업분야 지원
- 조제한약 품질 및 안전성 이슈 대응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 * 위해물질 등 안전성과 성분, 안정성 등 품질관리 위한 데이터 구축 및 제도화 방안 도출

□ **(한약 연구개발 지원분야)** 한약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성과 (인증·확산) 전주기 체계 고도화 추진

- 한약 연구 기획 지원 및 한약 기술 아이템의 체계적 관리 추진
 - * 기획워크숍(교육) 프로그램 개최(상반기),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공모전(하반기) 정례화
 - * 한약 연구성과 활용 및 신규 사업 도출을 위한 한약 기획 기술 DB 구축
- 한약혁신기술개발사업(~'29) 수행 및 연구성과 활용·확산 추진
 - * 한의 임상연구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타 보건의료 데이터와의 결합 및 2차 활용 추진을 위해 한의 데이터베이스 기반 구축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인증 및 보급·확산을 위한 전주기적 활동 강화
 -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품질 제고를 위한 27종 검토 실시 및 9종 공식 인증 절차 지속 추진
 -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 ver.3 개정을 통한 신뢰성 제고 및 글로벌 표준 부합성 강화 추진

□ **(한약 AI분야)** 임상, 비임상, 보건의료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 강화

- 한의 임상데이터의 통합 및 활용 기반 강화
 - * 비대면 진료, 한의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등 임상근거 기반의 한의 진료 체계 지원
- 한약 실험정보 데이터 및 지식체계 정립
 - * 네트워크 약리학 분석, 안전 사용정보 등으로 비임상 데이터 생산·활용 기반을 강화
- 한약 정보 간 연계 체계 마련을 통한 AI 생태계 조성
 - * 진료정보교류, 건강정보고속도로, EMR 인증 체계 등 인프라 연결, 고성능 컴퓨팅 등을 통한 대규모 한약 데이터 분석 환경 마련

- **(한의학해외진출분야)**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 다각화로 글로벌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원센터 구축 및 지자체 협업으로 한의학 해외진출을 총력 지원
 - 실행력 강화: 단계별 지원·맞춤형 컨설팅 및 ‘한의학 해외진출 지원센터’ 구축
 - 시장 선도: 유치 의료기관 질적 성장 지원, 교육 정례화 및 글로벌 홍보 다각화
 - 자원 극대화: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자원 활용 및 종합 지원체계 마련

- **(기관운영분야)**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및 성과중심 사업관리체계 구축
 - 123대 국정과제 및 제5차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 시행(’26년~)에 따른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 및 전략체계 재정비를 통해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지원체계 구축

Ⅲ. 중점 추진과제

① 한의약 정책지원

- (개요)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한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개발 및 종합 계획 수립 지원
 - 한의약 관련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수요 분석 및 한의약 정책의 생산성·즉시성·현장성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지원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모니터링 강화
 -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지원
 - *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성과진단 모니터링 및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원 등
 - 한의약 정책기초자료 생산, 한의약 정책 연구 및 논의체 운영 지원
 - * 한의약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위한 기초·기반자료 축적 및 활용, 한의약산업 현황 파악,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효율화 모색 등 근거 기반 확보
- (기대효과) 한의약 정책 수립 근거 마련 및 정책 기반 강화
 -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적시성을 높이고 한의약 산업의 변화를 상시 진단하여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및 목표 달성 도모
 - 한의약 정책 수립 기반자료 마련을 통한 과제 발굴 및 활용함으로써 한의약 정책수립 확대와 한의약 산업 육성 도모

② 어르신 한의주치의 지원체계 구축

- (개요) 국정과제 85번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원
 - * (장애요인) 시범사업의 정착·활성화·고도화를 위한 독자적 사업 체계 및 예산 지원 필수적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추진('26) 지원

* 한의계 강점 질환 중심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행 세부 추진계획 마련 연구용역
- 실무 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 **(기대효과)**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한의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수명 및 삶의 질 향상,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여 국가 보건의료 재정 절감

- 국정과제에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건강수명 및 삶의 질 향상

3 **공동이용탕전실 품질관리 및 평가인증**

- **(개요)** 공동이용탕전실 안전관리 강화

- 국정감사를 통한 공동이용탕전실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법적근거 미흡, 규격품 한약재 사용 관련, 한약사 적정조제건수, 약침의 안전성 문제 등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공동이용탕전실 관리 강화

- 공동이용탕전실 관리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및 평가인증 고도화
- 공동이용탕전실 제도화 기반 마련
-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 개선 지원

- **(기대효과)** 공동이용탕전실 법제화를 통한 평가인증제 근거 마련

- 공동이용탕전실 관리 강화를 위한 조제한약 안전성 제고
- 공동이용탕전실 법제화를 통한 평가인증 근거 마련

4 한의약 산업(기업) 특수분류 체계 개발 및 실태조사 실시

- (개요) 한의약 산업(기업) 특수분류 체계 개발을 통한 통계의 명확화 필요
 - * 기존 산업 분류체계는 한의약과 의약 산업을 구분하지 못하여 정확한 한의약 산업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신기술 등 산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분류 기준이 미흡하여 이를 반영한 한의약 산업의 특성과 범위를 반영한 분류체계 개발 필요
- (현황) 한의약 산업 관련 국가승인 통계 2종(2년 단위 조사)
 - * 한약소비실태조사(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실태조사(한국한의학연구원)
- (필요성) 한의약 산업 범위, 대상 정의 및 식별, 모집단 구분 등 분류 체계 어려움이 있어 통합된 한의약 산업 통계 구축 필요
 - * 한의약 산업 전반(제조, 연구, 유통, 관광 등) 일반산업 코드에 포함되어 시장분석 제약
 - ** 한의학적 원리를 활용한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정보서비스 등 신기술 도입으로 관련 업계에서 분류체계 개선 요구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한의약 산업(기업) 특수분류 체계 개발 및 실태조사
 - 통계청과 협업을 통한 한의약 산업 특수분류 체계 개발 추진(예산확보 필요)
 - * 한의약 산업 범위 재설정 및 분석 등을 통한 한의약 산업 특수 분류체계 개발
 - 한의약 산업 특수분류 체계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예산확보 필요)
 - * 통계청의 “한의약 산업 제정 고시”에 따른 명확한 한의약 기업 실태조사 추진
- (기대효과) 정확한 한의약 산업(기업) 통계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참고 한의약 관련 통계현황>

○ 국가승인통계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한국한의약진흥원수행): 일반국민 및 한약소비기관 대상, 의료이용 소비·처방 현황 및 인식 등 조사
- 한의약산업실태조사(한국한의학연구원수행): 제조업·소매업·보건업 대상, 경영 및 연구개발 현황 등 조사

○ 한국한의약진흥원 통계 생산

- 한의약산업 통계집: 정부부처별 행정통계를 수집·가공한 데이터 제공
- 한국한의학연감: 한의약 관련 행정, 교육, 연구, 산업 전반의 종합 통계 제공

5 한약재 공급체계 개선

□ (개요) 한약 유통 체계 선진화를 통한 한약재 산업 기반 마련

- 한의약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 추진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안정적인 한약재의 생산과 공급 체계 개선

- 소량소비 규격품 안정적 공급 환경 마련

- * 미생산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 처방권 보호

- ** (대상품목 한약재) '24년 경천, 낙석등 등 15품목, '25년 고목, 길초근 등 21품목, '26년 20개 품목 한약재 규격품 추진

- 한약(재) 정보제공 시범사업 추진 중('25~)

- * (사업내용) 한약재의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정보(제품명, 한약재명, 원산지 등)를 한방의료기관에서 QR 등을 제공하여 최종소비자(국민)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 3개 사업단(광덕, 농림생약, 씨케이) 다빈도 한약재 69품목 정보등록(한의IN)

- ** (쟁점사항) 한약 유통 관련 업계의 정보 공개 사업 반대(인건비 등 한약재 원가 상승 우려)로 인한 사업 추진 어려움

- 국산 한약재 산업 보호

- * 5개 지역별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활성화, 수입대체 한약재 발굴 및 수급조절 제도 운영 규정 개선으로 국산 한약재 재배 기반 조성 및 보존·육성

- ** (수입대체 품목) 수입의존도 높은 25년 5개 품목(반하, 시호, 절파모, 황금, 백출)
'26년 신규 품목 5개 선정 (진흥원 장흥, 옥천 및 제주 재배 지역 식약처 협조)

□ (기대효과) 한약 소비 활성화 및 국민 신뢰 회복

- 한약재 공급체계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한약 신뢰도 제고에 기여

6 공공인프라 기반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

- (개요) 공공 GMP 시설 활용 한약제제 개발 및 생산 지원체계 구축
 - 제약사, 한방병원 등 민간에서 신규 투자가 위축되어 개발되지 못하는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을 지원하여 GMP 공공성 강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한약제제 신규제형 개발 및 한약제제 산업 지원
 - 한약제제 신규 제형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
 - * 한약제제 복용 편의성 향상 및 치료 효과 극대화 등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GMP 신규 제형 개발 선도적 추진
 - ** (신규 제형) 트로키정, 구강붕해정 등 식약처 품목허가 시 임상자료 필요
 - 공공 GMP 시설 활용을 통한 한약제제 산업 지원 강화
 - * 공공 GMP 시설 활용을 통한 신규제형 개발, GMP 시설활용 수수료 감면, 제조 공정 최적화, 원료(표준탕액) 품질 규격 지원 등 한약제제 생산 지원체계 마련
 - 다양한 원료의약품 생산을 위한 한약(제제) 원료의약품 생산체계 마련
 - * 한약제제 원료의약품 생산 활성화를 위한 유기용매 추출물 생산시설 필요
- (기대효과) 한약제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제약산업 활성화 지원
 - 한약제제 신규 제형 시장공급 및 영세제약사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7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한약 안전성 평가 전문 기관 운영

- (개요) 한약을 이용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안전성 평가 전문 기관 운영
 - 한약 사용 시 지속적인 안전성 이슈 제기
 - * (한약성분 지속적 문제제기) 다이어트 한약의 '이 성분'... 10년째 의사·한의사 논쟁 중. 주간조선. 2025.11.09.
 - * 다이어트한약의 주요 한약인 마황의 에페드린 복용량에 대한 논쟁으로 의사·한의사 간 이견

- 한약을 이용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 개발 시 축적된 안전성 시험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 업무 수행 필요
 - * 다성분을 포함하고, 시기별, 산지별 한약 특성 정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성 평가 전문 기관 운영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한약 원료 성분 검사부터 한약 독성시험 정보 구축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한약 전문 안전성 평가 기관 운영

- 다빈도 한약 원료 성분 검사, 실험동물을 이용한 한약 복용량 및 안전 사용량 근거에 대한 연구 수행
 - * 고도화 장비를 이용한 한약 미량성분 검사 가능, 실험동물을 이용 한약 안전 사용 가능 복용량에 대한 연구 수행

- 영세 기업 지원을 위한 한약 성분검사 안전성 시험 수행
 - * 한약관련 업체의 영세성 고려 한약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 **(기대효과)** 한약 안전사용 근거 제공으로 한약 소비 견인

- 한약 안전성 정보 구축을 통한 한약 사용 확대 견인
 - * 한약을 이용한 제품 개발시 한약 안전성 정보 활용으로 개발 기간 단축
-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
 - *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약 안전 정보 제공

8 한의약연구성과확산지원

□ **(개요)** 한의약 연구개발(R&D) 사업 성과의 확산 및 환류(기획·인증) 추진을 지원하는 한의계 유일의 사업

- 연구성과 확산 체계 구축을 통한 한의약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확산 및 한의 R&D 성과 인증·지원 기반 조성
 - * R&D사업 대비 가용 자원(예산, 인력 등) 투입 부족으로 인한 추진범위 축소 불가피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조성 및 성과의 인증 프로세스 추진

○ (기획 지원) 한의약 연구성과 활용 및 신규 사업 도출을 위한 한의약 기술 DB 구축

* 한의약기술수요조사(6월, 10월), 기획공모전(8월) 및 간담회(연중) 등 수요자 기반 참여형 기술 기획 아이템 확보

○ (교육 지원) 한의약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예비 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방법론 교육(5월, 8월, 10월/연3회) 실시 및 전국 한의과 대학생 인턴쉽(5월/연1회) 운영

○ (플랫폼 운영) 성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한의 성과 확산 포털(NCKM) 및 기관 통합 교육홈페이지(한e캠퍼스) 운영(연중)

○ (성과 확산) 수요자(임상가, 학생 등) 맞춤형 확산을 위한 연구성과 재가공

* 성과확산을 위한 주력 분야 설정(4월) 및 관련 콘텐츠 제작(10월), 대외홍보 추진(연중)

○ (성과 인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인증을 위한 전주기 프로그램 운영



*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R&D)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인증 (2월, 7월, 11월/연3회) 및 검토평가위원회 관리(연중)

□ (기대효과)

○ 연구 성과물의 수요자와 수혜자 특성에 맞게 파급 경로를 구축하고, 연계·확산 및 후속 사업 추진 활성화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적 엄밀성 제고 및 국내외 근거기반 한의학의 우수성 입증

9 한의약 AI 기본계획 수립 및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 (개요) 한의약 AI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 구체화, 한약실험정보관리 시스템(KLIMS) 고도화
 - 기술·데이터·정책을 포괄하는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여 한의약 AI 추진의 중장기 방향성 확립
 - * (현황) 한의약 데이터 활용·AI 기술 접목을 위한 추진 전략 간 연계성 부족
 - 한약 실험정보 DB 서비스, AI 모델 활용 서비스 등 기능 확장
 - * (장애요인) 데이터 추가 확보 및 인프라 지속 운영·고도화를 위한 예산 부족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한의약 AI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스템 확장으로 비임상, 임상 정보 등 연계 기반 마련
 - 한의약 AI·빅데이터 분야의 중장기 전략과 핵심 과제 도출
 - * 정책적 연속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전략 제시
 - 단기적으로 법적·제도적 제약이 낮은 비임상정보 등*을 중심으로 AI 기술 발굴 및 연구 추진, 임상정보는 중장기적인 AI 적용 추진
 - * 한약 실험정보, 임상 연구 데이터, 한약재 안전사용 정보(부작용 등) 등
- (기대효과) 한의약 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및 AI 기술 기반 강화
 - 과학적 근거 기반 AI 서비스 모델 발굴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 부처·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한의약 AI 연구 간 연계성 강화 및 성과 확산
 - AI 기반 네트워크 분석 기능 등 확장으로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
 - * 한약재, 유효성분, 유전자(단백질), 질환 등 상호 연관성 규명 가능

10 한의약 해외진출지원센터 구축

- (개요) 한의약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한의 의료기관 및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진출 국가별 시장 조사 기초 연구 및 정보 등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현지 의료기관-인력 연계 가능성 탐색 협력 모델 발굴 등 지속 가능한 진출 생태계 조성지원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해외진출 기반 조성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 해외 진출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
 - * 주요 국가 및 세계 전통의약 시장 기초연구(조사범위 및 방법체계 등) 추진
 - * 진출 대상국의 전통의약 제도·인허가 정보 구축 및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 도출
 - * 현지 및 국내 파트너 발굴을 통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우호적 진출 환경 조성
 - 의료기관 및 기업대상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 * 진출 희망 기관·기업 대상 전문가 자문 및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 최신 정보를 반영한 국가별 진출 가이드북 고도화 및 보급
- (기대효과) 한의약 진출 협력모델 발굴 등 지속적 진출 생태계 조성
 - 한의약 진출의 질적 성장과 양적 확대의 통합적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진출 생태계 조성

IV. 기관별 경영관리실적

① 안전 및 재난관리

- (無재해 기관 운영) 산업재해 Zero 유지 및 보다 적극적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자율안전보건체제 강화, 기관장 안전경영 천명 및 안전 최우선 가치 실천
 - (근로자 피해방지) 근로자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로 내일이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 근로자가 행복한 근무환경 마련
 - * (주요 추진실적) '24.11월 안전보건경영방침 공표(최우선 가치 선언)→'25.6~7월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유해·위험요인 자체 발굴 및 개선)→'25.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 기관장-직원 합동 산업안전보건활동 추진→'25.12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연구실 재해 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25.12월 '26년 관리감독자 지정(근로자 중대재해 예방 책무 고지 및 안전의식 제고)+^{상시}월별 정기 전문의료인 건강상담(검진) 프로그램 운영, 특수건강 검진 실시 등 근로자 직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권 보호
 - (사업장 안전관리) 노후 시설물 개·보수 및 위험시설 지정·고지로 사업장 안전 확보, 설비 정기점검 및 현장 훈련으로 자연 재난, 사회 재난 대비 체제 강화
 - * (주요 추진실적) '25.5월 재난대비 강화 차원 관리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25.6월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자체 발굴 및 개선)→'25.8월 작업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노후 파티션 교체 등)→'25.11월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자 전문교육(집합) 강화 실시
-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운영)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최소화, 접근통제 중심의 관리체계 정착
 - * (주요 추진실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연 1회 점검·관리(일괄 권한 부여·변경·말소 처리), 관리자 계정에 대해 IP 제한을 적용하여 외부침입 차단, 연2회 개인정보 일제 정비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장기 미사용 개인정보 파기
 - (사이버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인프라 고도화
 - * (주요 추진실적) 정보보안 책임·역할 기반 내부통제체계 구축, 지침 매뉴얼 정비를 통한 보안 거버넌스 체계화, 전 직원 대상 보안교육·모의훈련을 통해 인적 보안 수준 강화, 망분리 기반 업무환경과 민간클라우드 보안통제 체계 도입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

- (상생협력·동반성장 실천)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정부권장 정책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ESG 경영 실천

* (주요 추진성과) '22~'25년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목표대비 초과 달성

<'24년 대비 '25년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실적>

구분(목표율)	2024년(실적율)	2025년(실적율)	증감
중증장애인생산물(1.1%)	119,604천원(1.8%)	186,168천원(2.7%)	66,564천원(0.9%p) 증
장애인표준생산물(0.8%)	117,396천원(1.8%)	198,436천원(2.9%)	81,040천원(1.1%p) 증
사회적기업(3.0%)	180,538(천원)(2.7%)	309,335천원(4.4%)	128,797천원(1.7%p) 증
사회적협동조합(0.1%)	9,850천원(0.15%)	43,339천원(0.65%)	33,489천원(0.5%p) 증

- (청렴계약·공정사회 실현) 계약체결 신뢰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로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 및 공정사회 실현

* (주요 추진실적) '25.12월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서약서 공포, 상시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자체 체크리스트 작성 관리 강화, 쏘 부서 계약담당자 및 부서장 대상 청렴서약서 징구로 청렴 계약 문화 확산

3 대국민 소통 노력

- (고객만족도조사) '25년 조사결과 89.3점(최근 3년 평균 88.8점)

- (고객만족경영 시행) 기관 차원 고객만족 경영계획을 연 단위 수립. 이행을 통해 추진사업의 국민 체감 서비스 수준 제고 노력
- (고객만족경영 환류) 조직성과관리(KPI)를 통해 부서 고객만족 경영 시행 결과를 외부위원 평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 (국민소통) 수요자 중심 한의약 홍보 콘텐츠 확산 및 양방향 소통 강화

- (콘텐츠 다양화) 국민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경험을 채널별 최적 콘텐츠* 제작 및 확산(한의학 협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콘텐츠 구성) 세대·계절별 다빈도 질환 중심 한의 건강정보 제공, 한의약 관련 인물·기업 소개 및 의료서비스 이용자 수기 등 활용, 한의약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월별 정기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양방향 소통 및 국민 참여 이벤트 활성화

* (온라인 참여) '24년 7,045명 → '25년 13,594명(+6,549명, +92.9%)

** (오프라인 참여) '24년 약 5,100명 → '25년 약 9,800명(+4,700명, +92.2%)

- (성과 및 환류) 대국민 기관 인지도 제고 및 국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구축

* (인지도) '24년 66.0% → '25년 71.6%(+5.6%p) (1,628명, 온라인 조사)

* (국민의견) 건강보험 확대, 한약재 성분표시, 공공의료 분야 한의약 서비스 확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 중심 체험형·교육형 콘텐츠 등 사업 반영 예정

V.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 20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및 개선계획

① 한의약 육성 전략 전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주요내용) 한의약 육성 전략을 조제 한약 중심이 아닌 한약제제 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개선계획) 조제한약 뿐 만이 아니라, 한약제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

② 한약재 정보제공사업 개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주요내용) 한약재 정보제공 사업 목적과 대상 명확화 및 의견수렴과 소통 필요
- (개선계획) 정보공개범위 및 시스템 확대·개편(안) 등에 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및 수시로 관련 협회와 실무회의 진행 예정

③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주요내용)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의 배정 공정성 확보 필요 및 국산 수매 실적 증빙 인정 기준 개선 필요
- (개선계획) 운영규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하고 수급 조절 운영위원회를 통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예정

④ 기업지원 기준 개선 필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 (주요내용) 한의약사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품목허가 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개선 필요

- (개선계획) 한의약 제품개발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분야 및 단계 등을 세분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및 선정 기준 명확히 수립하여 지원 예정

5 한약소비실태조사 개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 (주요내용) 한약소비실태조사에 조제 전담인력 배치 항목 복구 및 전수조사 필요
- (개선계획) 한약조제 전담인력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 수립하여 추진 예정

6 약침의 제약화 및 허가제 전환 검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 (주요내용) 주사제와 유사한 약침의 제약화 및 허가제 전환을 적극 검토
- (개선계획) 약침 안전관리 정책 지원 및 약침을 포함한 조제한약 안전성·유효성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해 조제한약 제형별 표준운영절차(SOP), 약침 조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 확대 등 추진 예정

7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개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주요내용)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을 위해 관리규정 재정비하고 마일리지 활용하도록 노력 필요
- (개선계획) 국외 출장 시 항공마일리지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분에 대해 사회공헌 활동 할 수 있도록 규정 재정비하겠음.